

민주화운동 연구보고서 2006

6월 항쟁과 넥타이부대

-80년대 금융·사무직 노동운동을 중심으로
한국민주주의연구소

6월 항쟁과 넥타이부대

- 80년대 금융·사무직 노동운동을 중심으로 -

책임연구원 김국진

연구원 이상재

연구원 정일영

< 차 례 >

들어가는 글

1. 넥타이 부대란?
2. 넥타이부대는 어떤 세대였나?
3. 넥타이 부대의 연구현황

제 1 장 넥타이부대의 등장배경

제 1 절 사무직 노동운동의 역사

시련의 역사

사무직노동운동의 명맥 - 전국금융노동조합연맹
노동운동의 변방에서 일어난 금융노동자

제 2 절 어둠을 헤치고

탄압 속에서도 노동조합은 건설되고
해고나 다름없는 충격적인 대량강제전출 - 한국자동차보험노동조합
금융인의 양심은 절규한다. - 한일투자금융노동조합
노동조합상담조차도 처벌의 대상이었다

제 3 절 재벌의 벽을 넘어

척박한 땅 현대에 노동조합의 씨를 뿌려 - 현대해상화재보험노동조합
노동조합 포기하면 원래대로 해줄게. - 동양화재해상보험노동조합
'빨갱이'가 들어와서 회사를 망치려한다 - 고려화재해상보험

제 4 절 노동조합끼리도 뭉쳐야 산다

조직이 작다고 회의참석도 못해서야 -- 금융노련 규약개정운동
뭉쳐야 산다. - 보험단협의회 및 연합협의회
집단 생리휴가와 구사대 출현 - 현대해상화재보험
조합원간의 교류가 연대활동이자 정치의식의 시작이었다.
화이트칼라는 노동자인가?
노동조합민주화는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제 5 절 노동조합결성의 확산

봉건적 회사경영을 뚫고 - 유화증권
재벌은 근로조건 개악도 마음대로였다 - 범한화재해상보험노동조합

비폭력, 평화적 투쟁 단식투쟁 - 대한보증보험
경영자율 의치며 - 비시카드노동조합
시키는 대로 일하고 주는 대로 받아라 - 신동아화재
해고자를 복직시켜라 - 범한화재해상보험
새로운 흐름의 배경

제 2 장 넥타이 부대의 합성

제 1 절 4.13호헌조치 반대성명

노총의 독재자 옹호 역사는 또 다시 반복되었다 - 노총의 호헌지지 성명
구로동 자취방에서
언론보도가 무엇보다 중요하였다.
민주화의 본고장 광주
노동조합 소식지를 통해서
주례를 바꿔서 결혼식을 치러야 했다
4.13호헌조치 반대성명의 의의

제 2 절 명동넥타이부대'의 출현

'불씨'를 살리려는 간절함으로
명동은 전투 중, 주먹을 불끈 쥐고 오른팔을 펴고
명동성당에서 배운 것을 가리봉오거리에서

제3장 직장 민주화를 위하여

제1절 노동조합민주화실천위원회

"사회의 민주화는 직장의 민주화로부터"

노동조합민주화실천위원회 발족취지문

노동법 개정안(요약)

노총의 폭력성에 대한 우려와 노총간부들의 집권 민정당원으로서 정치권력지향 성향

9월 18일 '현대중공업 사태와 9월 5일 임시각의 허위보고를 규탄한다

10월 26일 '노동법 즉각 개정하라! 노동조합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노민위는 노동조합의 대표자만으로 구성되는 단체가 아닙니다

노민위의 한계

제 2 절 들불처럼 퍼져가는 노동조합 건설

제 3 절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의 출범

권위주의와 불신의 시대를 청산하고 빛나는 민주의 새 역사를 열면서
한국자유금융노동조합연합 창립의 뜻
우리가 찾은 革命을 마지막까지 이룩하자
11,946명 중 9,608명이 찬성
보험업종 노동조합의 분열과 자유금융노련의 합법화과정
합법성 쟁취를 위한 9개월간의 투쟁일지
개정된 노동법의 허와 실
조직현황

제4절 전국보험노동조합연맹

제2금융권의 분열 - 통합노력도 수포로 돌아가고
노총의 개혁활동과 신생업종연맹과의 교류
89년 보험노동조합 임투공대위- 분열은 되었지만 투쟁은 공동으로
보험노동조합 분리해소 활동-통합만이 살길이다

제 5 절 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

1988년 11월 26일 서울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
언론의 역사적·사회적 책임을 깊이 인식하여
보도자유와 민주언론 실천에 진력한다
“악법은 어겨서 깨뜨려라. 불법으로 투쟁하리라.

제 6절 전국병원노동조합연맹

열악한 노동조건 개선과 평등의료 실현을 위해 병원노동조합의 깃발을 높이 들었다
노동자 대투쟁의 바람이 병원까지 거세게 불었다.
노조 결성 후 곧바로 병원자본의 탄압에 정면으로 맞서다!
연대투쟁의 성과로 ‘병노협’이 건설되다!
병노협 출범으로 본격적인 연대투쟁이 시작되었다!
병노협 운동의 성과를 한 단계 더 발전시켜 ‘병원노련’을 건설하다!
병원노련 합법성 쟁취! 산별노조를 향해

제7절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민족·민주·인간화 교육 실천을 위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결성-
87년 <6월 항쟁>, 교사운동에 기름을 붓다
탄압과 저항, “89년은 전교조의 해”
굴종의 삶을 떨치고 참교육 깃발을 휘날리다

제8절 국전문기술노동조합연맹

87년 6월 항쟁과 민주노조운동의 부활 (전문노련)

연구전문기술노동자들의 노조 결성과 활발한 활동
빠져리게 각성하여 전문기술노동자로서 사회적 역할과 역사적 책임을 깊이 자각

제9절 전국건설노동조합연맹

1988년 전국건설노동조합협의회(건노협) 태동
연대의 중요성 자각, '건노협' 결성으로 이어져
1989년 12월 16일 낮 12시,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 강당
건설노련 결성 배경

제10절 전국대학노동조합협의회

대학노동조합의 결성배경 -대학행정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쟁취하자
87년 8월 21일 한신대 노동조합이 대학노동조합의 효시
대학노동자들의 최초 전국조직 전대노협의 결성
전대노협의 활동 -직장민주화와 사회 민주화 양검을 들고서

제11절 업종회의까지 사무직노조의 연대활동 개괄

동지를 찾아가는 신설 노조들
투쟁이 있는 곳에 연대가 있다.
어렵고 힘들었던 시절이 연대를 불렀다.
투쟁은 연대를 낳고 연대는 투쟁을 낳는다

마무리하면서

1. 한국 민주화 운동사에서 넥타이부대의 의미
2. 마치는 글

들어가는 글

1. 넥타이 부대란?

‘넥타이’라는 용어가 금융노동자를 지칭하는 말로 쓰인 데는 유래가 있다. 그 유래를 보면 넥타이 부대의 의미가 어느 정도 설명될 수 있다.

1972년 은행원을 중심으로 조직되어 있던 금융노동조합이 임금인상과 관련하여, 전국의 은행원들이 일제히 넥타이를 풀어 버리는 단체행동을 감행하여 사회적 파문을 일으켰다. 이 단체행동을 주도한 금융노동조합 간부들은 중앙정보부에 끌려가 손톱을 뽑히는 등 혹독한 고문을 당했던 것으로도 널리 알려져 있다. 이를 ‘넥타이 파동’이라 지칭하면서 ‘넥타이’라는 용어가 금융노동자를 지칭하는 말로 인연을 맺는다.

그 후 1987년 전두환 군사정권의 4.13호헌조치에 반대하여 일어난 6.10항쟁에서 명동지역에서 넥타이를 맨 사무직 노동자들이 학생들의 시위대열에 대거 동참함으로써 ‘명동넥타이부대’라는 이름으로 다시 언론에 등장한다. 은행을 비롯하여 증권, 보험, 투자금융 등 금융기관의 본사는 대부분 명동을 중심으로 시내 한 복판에 자리 잡고 있었다. 그 이전까지 금융노동자를 비롯한 사무직노동자들은 정치적 견해에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경제적으로는 지배계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고소득의 안정희구세력으로서 사회 변혁을 가로막고 있다고 인식되어왔다. 이러한 예상을 뒤엎고 6.10항쟁에 대대적으로 참여하여 6.29선언을 이끌어내는데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되면서 넥타이부대의 움직임은 민심이반의 척도를 나타내는 풍향계 역할에 비유되기 시작하였다.

‘넥타이 부대’의 이름은 6월 항쟁 이후 10년이 지난 1997년 초 김영삼 정권이 개악된 노동법을 야음을 틈타 국회에서 날치기 통과시켰을 때에도 다시 한 번 등장한다. 민주노총이 총파업을 선언하고 나섰을 때 한국노총 소속 연합단체로는 유일하게 금융노련이 여기에 동참하고 민주노총소속의 사무노련과 탐골공원에서 공동으로 규탄집회를 개최기로 했을 때였다. 방송에서는 우리나라 최초의 금융기관이라 할 수 있으며 마침 창립 100주년을 맞은 조흥은행을 예로 들며 ‘조흥은행 100년 만에 파업’이라는 헤드라인 뉴스와 함께 ‘무엇이 이들을 100년 만에 처음으로 파업을 하게 만들었는가?’라는 해설을 덧붙이고 일간신문들도 머리기사에 일제히 ‘넥타이 부대’라는 이름으로 금융노동자의 파업동향을 보도하였다.

이들은 김영삼 정권의 날치기통과를 배신행위로 규탄하고 87년 6월 항쟁에 참여했던 ‘넥타이 부대’의 이름으로 김영삼 정권을 퇴진시키자고 주장하며 다시 한 번 서울 도심에 가득 메운다. 오만하게 버티던 김영삼 정권도 ‘넥타이부대’가 정권퇴진을 주장하고 나서자 노동법을 재개정하겠다고 선언하였다. 파업을 주도한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조합 지도부는 한 사람도 구속되지 않았다.

이처럼 ‘넥타이’라는 용어는 ‘넥타이파동’, ‘넥타이부대’ 등에서와 같이 금융노동자를 포함하여 사무직노동자들을 지칭하는 말로 쓰이게 되었다. 지금은 너무나 일반화되었지만 1980년대 까지만 하여도 작업복이 아닌 양복에 넥타이를 매고 근무하는 직장인이 일반인에게는 선망의 대상이기도 하였다.

민심은 천심이라고 했다. 그동안 권력자들은 ‘넥타이들’까지 자신들의 퇴진을 주장하고 나설 때, 비로소 민심의 이반정도가 심각하다는 것을 깨달았는지도 모른다.

2. 넥타이부대는 어떤 세대였나?

1987년 당시 넥타이를 맨 젊은 직장인들은 대부분 1950년대 또는 1960년대 생으로 6.25전쟁 이후에 태어나서 이승만 정권을 퇴진시킨 1960년의 4.19혁명을 의거로, 독재정치 특히 장기집권은 나쁘다고 교과서에서 배운 세대이다. 1961년 5.16군사 쿠데타로 등장하여 대통령을 한 번만 더 한다고 약속했던 박정희가 죽을 때까지 물러나지 않고 장기집권을 꾀하다 1979년 10.26으로 비극적인 막을 내리는 것을 지켜보았다. 1980년 서울의 봄, 어둠 속에서 고개를 내밀던 민주주의가 5.18광주 민주화 운동의 탄압과 함께 군홧발에 또다시 짓밟히고 어둠의 제5공화국으로 접어들며 민주주의의 이름조차도 부를 수 없는 어처구니없는 시절을 지낸다. 이 세대는 유신정권과 5공 정권의 공통점으로 독재자들은 장기집권을 획책하며 거짓말, 부정부패와 폭압적인 정치를 동반한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게 된다. 더구나 북한과의 긴장관계나 화해무드를 일부러 조장하기도 하고 그마저도 일관성 없이 독재정권의 편의대로 해석하여 정권유지를 위해 악용한다는 것도 알았다. 그 세대들 중 일부는 유신체제와 제5공화국을 거치면서 민주주의를 주장하다 학교에서 쫓겨나고 감옥살이를 한다.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진출하여 금융기관 등 국가경제의 관리분야에서 생업을 영위하던 이 세대의 ‘넥타이’들은 국영방송과 4대 일간지 등 통제된 언론밖에는 이렇다 할 대중매체가 없이 독재자들의 선전매체만 홍수를 이루는 시기에다 다양한 매체를 통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었다. 따라서 독재자들의 선전매체에 쉽게 현혹되지 않았고 역사적 진실과 거짓선전을 구분할 수 있었다. 일정한 숫자감각을 통해 자료를 분석하여 자신들이 배우고 경험한 역사의식에 근거하여 사리를 분별하여 판단하는 지식인의 범주에 속한다고 할 수 있으며 업무의 대부분이 각계각층의 사람들과 직접 접촉하는 것으로 한편으로는 여론형성층을 이루고 있기도 하였다.

5공화국이 등장하여 국민의 눈과 입을 틀어막고 있는 가운데 장영자 사건 등 국가경제를 뒤흔드는 대형금융부정사건이 불거지고 86년도의 부천시 성고문사건이나 87년 초 박종철 고문치사사건 등 독재정권의 타락상이 끊이지 않자 각계각층에 스며들어있던 이 세대들은 여론형성에 그치지 않고 학생들의 독재타도 시위에 동참한다.

6.29선언을 기점으로 독재자의 항복을 확인한 ‘넥타이’들은 대부분 각자의 생업으로 되돌아갔다. 1997년 김영삼 정권의 노동법개악책동을 분쇄하기 위해 다시 나타났던 그들은 언제 또 다시 나타날지 모른다. 넥타이부대의 주류라 할 수 있는 금융노동자는 IMF시대를 맞아 30% 이상의 동료들을 함께했던 직장에서 떠나보내야만 하는 아픔을 겪기도 하였다.

이보고서는 1987년 6.10항쟁 당시의 넥타이 부대에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한 일부의 조직적인 참여가 있었다는 것을 설명할 뿐 전체 넥타이부대를 설명하는 것은 아니다. 넥타이부대에는 각계각층에서 말없이 비조직적으로 참여한 넥타이들이 절대다수였기 때문이다. 더구나 일부의 조직적인 참여가 전체 넥타이부대를 조직해내거나 움직였던 것도 아니고 대부분이 학생들의 시위에 분산적으로 동참하였기 때문이다.

3. 넥타이 부대의 연구현황

6.10항쟁 20주년이 되는 지금까지도 언론이나 출판물에 가끔 오르내리기는 해도 넥타이 부대에 관해 정리된 내용은 현재까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이 연구보고서는 1987년 6.10항쟁에서 학생들의 도심시위에 합류한 직장인들 즉 명동 넥타이 부대에 관한 것이다. 화이트칼라 또는 넥타이부대라 일컬어지는 사무직 노동자들은 지배계층이나 권력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집단으로 여겨져 사회 변혁과 관련하여서는 세간의 관심에서 제외되거나 평가절하 되어왔고 심지어 그들의 활동내용이 사실과 달리 알려지거나 그것에 대한 평가나 해석이 분분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6.10항쟁 당시 넥타이부대의 주요활동내용을 노동조합활동을 중심으로 정리하여 넥타이부대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연구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이 보고서는 20년이 지난 일들이라 당시 참여자 중에는 고인이 된 경우를 포함하여 연락이 두절된 경우가 많았으며 기억이 잘 나지 않거나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고 당시 처해 있던 위치나 보는 시각에 따라 해석을 달리하여 언쟁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너무나 부족하지만 독재타도를 위해 고통을 겪은 수많은 넥타이들의 충정을 헛되지 않게 해야겠다는 심정으로 연구라기보다 보다 많은 사람들의 기억을 더듬는 자료 수집에 노력하였다.

이 보고서 중 일부 자화자찬하는 듯 하는 표현이 곳곳에 기술되어 있는 것은 아직까지 정리된 자료나 객관적인 평가가 별로 없는 상태에서 내부적·주관적 평가만 반영되었기 때문이며 한편으로 6.10항쟁에 참여했던 자들이 직접 기술하였기에 상황설명을 좀 더 자세히 하기 위한 것이라 양해하여주시기 바란다.

이글은 독재정치를 타도하기 위해 6.10항쟁에 참여하여 최루탄 연기 속에 눈물을 흘리며 고통을 같이 했던 절대다수의 이름 모를 참여자들과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밑거름이 되어주신 선열에게 바친다.

제 1 장 넥타이부대의 등장배경

제 1절 사무직 노동운동의 역사

시련의 역사

사무직 노동운동이 처음으로 부각된 것은 60년 4.19 직후였다. 4. 19는 학생들의 주도하에 실업대중과 도시 소시민대중의 참여로 일어났다. 초기에는 반독재 민주화라는 요구가 주요한 것이었는데, 점차 민족통일과 생존권의 요구로 발전하면서 노동운동이 급격히 고양되었다. 어용노동조합 간부를 반대하는 노동조합 민주화 운동, 신규노동조합 결성투쟁 등이 광범위하게 제기되었다. 이 가운데 교원, 언론인, 금융인 등도 노동조합 결성을 위해 투쟁하였다.

먼저 교원노동조합의 결성과 활동을 보면 자유당 치하에서 교육공무원법에 의하여 자신들의 권익옹호를 위한 단체조직을 제약받던 교원들이 4.19이후 기존의 대한교련에 반대하고 학원의 자유와 부정부패 제거를 위한 운동을 전개하였다. 대구를 중심으로

중·고등학교 교원들에 의해 1960년 4월 20일 교원조합이 결성되고, 서울 부산 등 전국의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의 교직원 3백여 명이 모여 60년 5월 22일 한국교원노동조합연합회로 발전하였다. 이에 대하여 당시 장면 정권은 교원노동조합에 대하여 해체 명령을 내리고 불법화하려 하였다. 그러자 60년 8월 20일 대구 달성공원에서 교원노동조합원 3천여 명이 참석하여 교원노동조합탄압반대 전국조합원 총궐기 대회를 열고 8만여 교원 중 무려 4만 여명이 단시일 내에 교원노동조합에 가입함으로써 투쟁의 불길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뿐만 아니라 체신, 철도, 전매, 해운, 전력 등 생산직 노동자들과 학생들이 지지투쟁을 벌이자 장면정권은 교원단체는 허용하되 그 행동권을 제약하는 조건을 달아 회유하였다.

합법성을 쟁취한 교원노동조합은 1961년 국가보안법 개정안 및 데모규제법 제정에 반대투쟁을 주도하였다. 또 61년 3월말 교원노동조합의 중심지인 경북 대구에서는 ‘2대 악법 반대 경북 정당 사회단체 노동단체 학생단체 공동투쟁위원회’가 경북교원노동조합을 중심으로 결성되었다. 그러나 교원노동조합의 투쟁은 61년 5월 16일 군부 쿠데타 이후 대부분의 교원 노동조합지도자들이 체포되고 노동조합은 해체되고 말았다.

그 다음으로 금융노동조합을 보면 60년 6월 1일 조흥은행노동조합의 결성을 필두로 상업은행노동조합(6월 8일) 제일은행노동조합(6월 11일) 한일은행노동조합(6월 11일) 서울은행노동조합(6월 18일) 등이 잇달아 결성되었으며 같은 시기에 대한증권거래소 노동조합(5월 28일) 제일생명노동조합(6월 18일), 한국무진(현재국민은행)직원노동조합(6월 18일) 등이 결성되어 금융계 노동조합결성 운동에 합류하였다. 이후 60년 7월 23일 조흥은행 본점 강당에서 전국은행노동조합 연합회를 결성하였다.

5. 16 쿠데타 이후 은행노동조합은 군부정권과의 정면충돌을 피하려고 결성 초기의 목표인 ‘금융질서의 자율화와 민주화 및 민주적 인사제도의 확립’을 고수하지 못하고 단순히 근로조건 개선만을 추구하게 되었다.

세 번째로 언론노동조합을 보자. 1960년 5월 15일 대구일보에서 노동조합이 결성되고 6월 17일에는 연합신문이, 6월 22일에는 평화신문이 각각 노동조합을 결성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기자들의 적극적 참여와 호응을 얻지 못하고 공무과 직원들만으로 구성된 약점을 가진 채 5.16 쿠데타로 해체되었다.

언론노동조합운동은 1974년 유신체제 하에서 다시 태어났다. 당시 언론계는 유신치하에서 점점 더 어용적 성격의 보도를 강요당하게 되어 젊은 기자들과 언론기업주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

동아일보·동아방송의 경우 1974년 3월 6일 ‘언론인으로서의 신분보장 및 최소한의 생활급보장’을 요구하는 노동조합의 취지에 대해 1백 60여 명의 편집국, 출판국, 방송국기자, 프로듀서, 아나운서 등이 적극 지지하여 가입하였다. 그러나 사주와 당국의 방해와 탄압으로 노동조합 신고서를 받지 못했다. 그 후 74년 10월 기자들은 자유언론실천운동으로 전환해 갔으나 75년 3월 기자, 프로듀서, 아나운서 1백 30여명이 회사로부터 축출되는 수난을 겪게 되었다.

한국일보의 경우도 74년 12월 10일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1백 47명이 조합원으로 가입하였으나 결국 좌절되었다.

사무직노동운동의 명맥 -전국금융노동조합연맹

60년대와 70년대의 사무직 노동운동은 탄압과 좌절의 연속이었으며 그나마 금융노동조합만이 명맥을 유지해 왔다. 5. 16 쿠데타 이후 은행노동조합은 군부 정권과의 정면충돌을 피하려고 결성 초기의 목표인 '금융질서의 자율화와 민주화 및 민주적 인사제도의 확립'을 고수하지 못하고 4. 19 직후의 진취적 경향이 약화된 채 단순히 근로조건 개선만을 추구하게 되었다.

1980년 5공화국은 산별형태의 노동세력을 약화시키고 분산시키기 위해 노동관계법을 개정하여 기업별 노동조합 형태로 변경하였으며 설립요건도 조직대상 근로자의 1/5 이상 또는 30인 이상으로 강화하여 노동조합 설립자체를 어렵게 했다. 노동쟁의조정법에서는 냉각기간을 연장하여 일반사업에 대한 직권중재 확대 등으로 단체행동권을 사실상 봉쇄시켰으며 더욱이 제3자 개입금지 조항을 신설하여 기업별 노동조합을 외부의 지원과 연대에서 완전히 고립시키려는 조치를 취하였다. 이러한 국가권력과 자본에 의한 극심한 탄압으로 83년 말에 이르기까지 노동운동의 침체국면은 지속되었다.

노동운동의 변방에서 일어난 금융노동자

83년 11월 금융노련 대의원대회에서 민요기 위원장 집행부가 새로 탄생한다. 그는 취임과 함께 금융노련 산하의 뜻있는 간부들로 새로운 집행부를 구성하였다. 그 중에는 윤완섭, 이남순, 이호식, 이한순, 서수철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민요기 위원장은 조직 확장사업에 주력하면서 재벌기업에 노동조합을 설립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였고 노동조합을 파괴하려는 부당노동행위에 단호히 대처하였다. 금융노동조합연맹의 새로운 투쟁은 그의 취임과 함께 태동하였다.

84년 2월 한국자동차보험의 해고나 다름없는 대량강제전출에 맞선 대규모 농성투쟁과 그해 6월 한일투자금융노동조합의 위원장 징계철회를 위한 농성투쟁 등 금융권노동조합의 새로운 움직임은 눈에 띄기 시작했다. 그 이전에도 간헐적인 투쟁사례들이 많이 있었으나 이보고서에서는 생략하였다.

85년 2. 12 총선을 전후한 간빙기를 틈타 현대해상화재보험노동조합이 결성되었고 이어서 한진그룹의 동양화재해상보험, 쌍룡그룹의 고려화재해상보험 등 재벌기업의 노동조합결성에 성공하면서 재벌과의 전선이 형성되었다.

85년 1월 결성된 현대해상화재보험노동조합에 대하여 86년 3월 구사대를 동원한 현대그룹의 노동조합와해 공작을 단위사업장을 뛰어 넘는 연대투쟁을 통하여 분쇄하였다. 이어서 범한화재해상보험노동조합이 럭키그룹의 노동조합파괴공작으로 조합간부가 해고되는 위기에 처하자 87년 3월 60여개 금융노련 산하 노동조합이 연대하여 사상유례가 없는 6박 7일간의 끈질긴 투쟁으로 해고자를 복직시키는 등 현대그룹과 럭키그룹을 상대로 한 재벌과의 투쟁에서도 계속하여 승리하였다.

이와 같은 연대투쟁은 단위노동조합체제로 노동조합의 힘을 약화시키려고 제5공화국이 제정한 노동약법 ('제3자 개입금지' 조항과 '단체행동금지'조항)을 무색케 하는 대담한 투쟁으로 85년 구로동맹파업을 무자비하게 탄압한 노동당국을 경악케 하였다.

87년 한국노총이 4.13호헌조치 지지성명을 발표하자 한일투자금융노동조합을 비롯한

금융노련 소속 13개 노동조합이 이를 반박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이를 섬유노련, 화학노련, 금속노련 등의 노동조합으로 까지 확산시키기도 하였다. 노동운동의 변방 또는 노동운동의 범주에서 제외되기 까지 했던 금융노동자들의 활동은 이때부터 노동계는 물론 세간의 눈길을 끌게 되었다.

87년 6.10항쟁에서도 금융노동자들은 학생들의 시위에 일찌감치 동참하였고 명동성당에서 농성하던 학생들이 6월 15일 철수하자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 노력하는 등 민주화운동에도 지속적으로 참여하였다. 6. 29이후에도 노동조합 조직 확장에 박차를 가해 거의 전 조직에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새로운 연합단체를 탄생시키는 등 직장 민주화를 위한 발걸음을 지속하였다.

금융노동자들이 당국의 탄압을 피해갈 수 있었던 것은 금융계가 산업에서 차지하는 지정학적 위치가 크게 작용했다고 할 수 있다. 국가경제에서 금융기관의 역할이란 신체에 혈액이 공급되는 혈관에 비유된다. 금융기관의 업무는 서로 연관되어 있어서 어느 한 쪽의 파국이라도 전 금융계는 물론 전 산업에 파장을 미치며 그 파장의 정도가 대단히 크다.

금융노동자들은 투쟁시기선택에 있어서도 정치적 상황을 백분 활용하여 85년 2.12총선을 앞둔 시기에 한일투자금융노동조합의 징계철회투쟁을 결행하였고 현대해상노동조합을 결성하여 현대그룹에 노동조합의 교두보를 구축하였다. 노총의 양심적인 간부들과 때마침 탄생한 금융노련의 의욕적인 집행부의 도움 아래 당시는 많은 이들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합법적인 공간을 통한 투쟁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확인해낸 것이다.

구로동맹파업의 무자비한 탄압을 지켜본 금융노동자들은 투쟁 강도에 있어서도 합법적인 투쟁을 주로 하며 간헐적으로 노동악법의 굴레를 뛰어넘는, 즉 합법과 불법의 경계선을 넘나들며 당국의 탄압을 피해가는 게릴라식 투쟁으로 새로운 형태의 투쟁을 통해 승리를 이끌어내고 그것을 기초로 한 단계 더 높은 차원의 투쟁을 조직하였던 것이다. 그야말로 민주주의의 학교에서 한 발씩만 앞서 간 것이다. 이리하여 작은 승리를 이룰 때마다 참여조합과 참여조합원이 점점 늘어나고 연대전선은 더욱 강화되어 갔다.

노동운동의 사각지대에서 신기원을 이루어 낸 금융노동자들은 6. 29선언 직후 87년 7월 12일 홍사단 강당에서 6.10항쟁에 참여한 전국의 노동조합을 한데 모아 '노총위원장을 내손으로'라는 슬로건을 앞세우고 노동조합민주화실천위원회(약칭 '노민위')를 발족하여 노동조합 민주화를 위한 활동을 전개한다. 노민위는 노총의 어용성을 맹렬히 공격하면서 상급노동단체의 민주화를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노동법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는 한편 7, 8월 대투쟁기간 내내 폭발적인 노동조합의 신규결성을 지원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조직운영방식과 내부결속에 문제점이 드러나고 일시에 양성화된 각종 노동단체의 지지를 얻지 못한 채 그 활동과 지도력에 한계성을 드러낸다. 특히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분열된 민주화세력이 몰고 온 침체분위기와 함께 참여노동조합의 저변확대에 실패한 노민위는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한 조직 활동으로 되돌아가 사무금융노련을 탄생시키고 합법성 쟁취를 위한 투쟁에 몰입하면서 사실상 그 수명을 다한다.

제 2 절 어둠을 헤치고

탄압 속에서도 노동조합은 건설되고

1980년 초부터 83년 말 소위 유화국면까지의 정부의 노동정책의 중심은 노동운동에 대한 탄압과 새로 개악된 노동법에 알맞은 노동조합 조직 및 노동행정의 확립에 있었다. 따라서 노동법 개정 이후 정부의 입장을 악용해 전국적으로 부당노동행위가 악랄하고 교묘하게 자행되었다. 특히 영세한 사업장을 중심으로 해고나 노동조합결성을 저지 및 파괴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 부당노동행위 사례가 급증하였다. 금융에서도 예외는 아니었다. 특히 81년 이후 새로 설립된 신용금고나 증권업 그리고 보험업계에서 이 같은 부당행위가 많이 자행되었다. 탄압 일변도의 5공화국 노동정책으로 많은 노동조합이 와해되는 결과를 낳았으나 역설적으로 무자비한 탄압정책은 다음에 노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좋은 밑거름이 되었다.

1980년 5월 6일 신용보증기금의 노동조합(유원한) 결성을 시작으로 은행, 상호신용금고, 증권, 특수은행, 보험업종에서의 노동조합 결성이 꾸준히 진행되었다.

1980년 5월 8일 부국상호신용금고(김용택), 5월 12일 국일증권(이주홍), 5월13일 주택은행(김성철), 맨트러스트은행(최희달)

1981년 2. 27 하트포드화재보험(김효준), 3. 21 부민상호신용금고(윤관중), 4. 13 대한증권업협회(김성일), 12. 15 대보증권(강희철), 한국금융연수원(김태원)

1982년 1. 29 한국외환은행(김항년), 2. 20 아세아종합금융(박광우), 11. 29 신한은행(신동선), 12. 23 수출입은행(신유순)

1983년 1월 20일 한국증권대체결제(송기형), 2. 3 장기신용은행(김광득), 6. 2 한일투자금융(정일영), 6. 15 스미도모은행(조주원), 6. 22 노바스코셔은행(이호영), 8. 2 한국산업리스(김성태), 9. 27 대한상호신용금고(민권)

1984년 2월 6일 일신상호신용금고(이강), 5. 24 전국어음교환관리소(이무홍), 7. 3 한국개발리스(이강우), 7. 26 국민투자신탁(유창익), 12. 5 ABN은행(이상은)

1985년 1. 30 현대해상화재보험(곽태원), 3. 2 저축추진중앙위원회(하균홍), 3. 15 한미은행(김명준), 4. 22 몬트리올은행(이태욱), 6. 13 의료보험연합회(조우현), 7. 18 다이너스클럽(김동곤), 9. 13 동양화재해상보험(이동진), 10. 11 고려화재해상보험(전광우)

1986년 5. 7 유화증권노동조합(정부기), 5. 28 범한화재해상보험(박이준), 12. 22 비스카드노동조합(남을우)

1987년 1월 23일 신동아화재해상보험노동조합(허장)이 건설되었다.

해고나 다름없는 충격적인 대량강제전출 - 한국자동차보험노동조합

한국자동차보험에서는 84년 2월 9일 490명의 직원을 그룹계열사로 전출시키고, 노동조합 간부 및 직원 30여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금융기관 직원이 일반 그룹계열사로 강제 전출되는 것은 사실상의 해고라 할 수 있는 것으로서 이러한 사실상의 집단해고는 전례가 없는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이 사태를 접한 자동차보험노동조합 권세원 위원장은 급히 민요기 금융노련 위원장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제5공화국이 제정한 노동관계법은 상급단체인 연맹도 제3자로 규정하여 개입을 금지하고 있었다. 유신과 5공의 격동기 속에서 산별체제의 금융노동조합 제일은행 지부장과 금융노련 부위원장을 지낸 바 있는 민요기 위원장은 누구보다도 노동운동이 겪고 있던 시련을 잘 알고 있었다.

연락을 받고 달려온 민요기 연맹 위원장은 몇 가지 사항을 권세원 위원장에게 유의시킨다.

무엇보다 먼저 국영기업을 인수한 재벌이니만큼 정치권력과 결탁한 힘이 있는 동부그룹과의 투쟁은 쉬운 싸움이 아니므로 자신과 같이 구속을 각오하고 투쟁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다음으로 대의원대회를 즉시 소집하여 투쟁을 결의하고 강제전출자, 징계자 모두 강당으로 집결시키고 가족들도 최대한 동참시킬 것 등 몇 가지를 당부하였다. 이에 노동조합은 대의원대회에서 과업을 결의하여 3월 5일부터 회사강당에서 철야농성에 돌입하였다. 아기를 등에 업은 가족들까지 동참한 이 농성은 3월 9일까지 지속된다.

상급단체까지도 제3자로 규정하여 개입을 차단한 노동관계법을 들이대며 안기부, 노동부 등 관계기관은 민요기 금융노련 위원장을 이 투쟁에서 격리시키려고 온갖 회유와 협박을 다 하였다. 1972년 산별체제의 금융노동조합에서 넥타이 파동을 주도하였다 중앙정보부에 끌려가 혹독한 고문을 겪은 채규대 위원장을 들먹였다. '제2의 채규대팔 난다.'는 협박과 함께 심각한 사태를 우려하는 주변의 만류도 심상치 않았다. 5공 등장 이후, 서울 한복판에서 5백여 명이 며칠간 철야농성을 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힘든 일이었다.

절벽에 선 노동조합의 저항이 금융노련 위원장의 결연한 의지와 함께 물러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장기화 되자 관계기관과 회사는 한 발 물러섰다. 회사는 조합간부 및 조합원에 대한 징계를 철회하고 계열사 전출을 무효로 하며 이 사태에 대하여 노동조합에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합의서에 서명하기에 이르렀다.

한국자동차보험노동조합의 투쟁은 재벌기업이 국영기업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영 합리화라는 미명 아래 대량해고를 자행하여 야기되는 노사분규의 한 전형으로 재벌의 횡포에 맞서 싸운 투쟁의 대표적 사례가 되었다. 또한 사무직 종사자도 대량해고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경각심을 불러 일으켜준 사건이기도 했다.

민요기 금융노련 위원장은 5공이 등장하면서 노총이나 연맹까지도 제3자로 규정하고 단체행동을 금지시키는 등 노동운동에 채운 족쇄를 무력화시키고 금융노련에서 새로운 흐름이 등지를 틀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하였다. 이 사건은 그가 연맹위원장으로 취임한 지 불과 두어 달을 넘어서면서였다. 자동차보험노동조합의 투쟁은 5공 탄생이후 최대 규모의 단체행동이라 할 수 있으나 민요기 금융노련 위원장의 결단에 힘입어 한 명의 구속자도 없이 해결되었다.

금융인의 양심은 절규한다. - 한일투자금융노동조합

한일투자금융주식회사는 82년 10월 19일 창립된 금융기관이다. 서울 명동에 위치한 이 회사는 투자금융회사(흔히 '단자회사'라고 불림)설립자유화의 일환으로 출범하였고 이 업종은 금융업 중에서도 최고 임금지대에 속해 있었다. 이 회사에서 노동조합을 만든 직접적인 동기는 자신들의 임금인상이나 복리후생증진을 위한 것이 아니라 회사의 금융부조리를 반대하면서 시작되었다. 국가경제를 뒤흔든 권력형 금융부정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위에서 시키는 대로 했다가 희생양이 되어야 하는 금융인의 불만과 사건의 실체를 은폐하려는 수사당국의 행태에 국민의 불신이 극에 달해 있을 때였다.

처음에는 부장 과장급 등 금융기관 출신의 고급 간부들이 회사의 정상적인 운영을 요구하고 나섰다. 신입사원들을 중심으로 한 평사원 17명은 그 해 4월 '한우회'라는 친목단체를 만들어 우의를 다지고 있었다. 간부사원들의 요구사항과 회장의 약속 불이행을

지켜본 한우회는 5월 10일 선배들의 주장을 회사가 받아들일 것을 요구하며 17명 전원이 서명한 건의서를 회사에 제출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상황에 회장은 회사의 많은 문제점을 인정하고 퇴진 의사를 표명하였다. 그러나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금융노련을 찾아가 지원을 요청한 이들은 83년 6월 2일 퇴근 후 명동의 중국집에 41명이 모여 노동조합 결성대회를 개최하였다. 일부 간부사원들의 간곡한 만류를 뿌리치고 대리 이하 직원의 약 3분의 2가 참여하여 전국 32개 단자회사 중 최초로 노동조합을 결성한 것이다. 위원장에는 정일영, 부위원장에 안세준, 김성인, 회계감사에 이강서, 양영규가 선출되었다. 평사원을 중심으로 결성한 노동조합이 회사의 일방통행을 견제하고 나선 것이다. (87년 6·29 이후까지 한일투자금융 노동조합은 업계유일의 노동조합으로 외로운 투쟁을 계속해야 했다.)

곧이어 노동조합은 조합 활동보장을 골자로 하는 단체협약 체결을 요구하며 이를 거부하는 회사에 맞서 마감시간 지키기와 여직원 유니폼착용거부 등 합법투쟁을 전개하였다. 그것은 회사에 큰 타격이었으며 직원들의 일사불란한 행동통일에 당황한 회사는 단체협약 체결에 응하였다. 비좁기는 했지만 노동조합 사무실이 마련되고 여성이 결혼하면 당연히 퇴직한다는 회사 취업규칙조항이 삭제되어 여성결혼정년제가 폐지되었다. 노동조합의 설립과 합법적인 투쟁까지는 간부 사원들의 선행활동과 암묵적인 지원으로 큰 어려움 없이 해결될 수 있었다. 노동조합은 상당한 수준의 단결력을 유지하고 간부 사원들의 우산 역할에 힘입어 대리이하의 모든 직원이 가입하고 이어서 과장급도 대다수가 가입하는 등 탄탄대로를 걷는 듯 했다.

다른 회사에는 없는 노동조합이 업계에서 유일하게 결성되어 있어 부담을 느끼던 회사는 향후 조합의 실력행사에 대비하고 와해할 방법에 골몰하고 있었다. '노동조합을 깨지 못하면 차라리 회사를 깨라'는 최고위층의 지시가 있었다. 고급간부사원을 연고자 중에서 채용하는 정실인사를 통해 회사의 주요업무에 배치시키고 감시체제를 강화하였다. 다른 한편으로는 일선 영업부서의 노동조합 간부를 후선 부서로 이동시켜 조합이 실력행사를 하더라도 일선 업무에 타격이 적도록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수신전담반'이라는 부서를 새로 만들어 신분상의 불안감을 조장하였다.

기회를 엿보고 있던 회사가 어느 날 탄압의 신호탄을 올렸다. 먼저 간부사원들의 회사정상화 요구에 앞장섰던 박대식 부장을 부하직원에게 통솔력이 없다는 명분으로 직위해제하여 수신전담반으로 발령을 냈다. 이에 흥분한 다수의 직원들이 다함께 사표를 쓰자며 이를 속속 실행에 옮겼다. 합법적인 투쟁으로는 가장 극단적인 마지막 수단이었다. 이를 자살행위로 우려하는 직원도 있었지만 너무 자신 만만해 하는 다수의 분위기에 휩쓸려 대세를 이루지 못했다. 회사는 직원들의 사표를 기다리고 있었다. 회사의 계약에 말려들고 있다고 생각한 것은 나중이었다. 십여 명의 직원이 제출한 사표를 급히 회수하였다. 그러나 과장 두 명의 사표는 회수하지 못했고 반려를 요구하자 회사는 이를 거부하였다.

회사는 사표를 냈다가 회수한 이동길 부위원장, 도석록 총무부장, 우경오 쟁의차장, 김복영 교선부장 등 조합간부 4명에게 다시 사표를 내라고 종용하였고 이에 응하지 않자 곧바로 대기발령을 했다. 뒤이어 노동조합 사무실의 전화기를 철거하는가 하면 장소제공을 불허하여 결국 노동조합총회도 무산시켰다. 2월 25일 대기발령상태에 있던 4명의 조합간부에게 선처하겠다고 경위서 제출을 재차 요구하여 이에 응하자 대기발령을 해제하면서 동시에 정일영 위원장을 비롯한 양영규 회계감사, 이호용 쟁의부장, 원선희

과장 등을 노동조합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는 이유로 징계에 회부하였다. 노동조합 간부를 징계 회부하는 반면 노동조합 활동에 소극적이거나 회사의 노동조합 탄압에 협조적인 직원을 중심으로 전체 직원의 절반에게는 대규모 특별승급을 실시하는 조합분열책도 병행하였다. 조합을 와해시키기는 아직 이르다고 판단한 회사는 특별한 사유도 없이 징계절차를 지연시키다가 두어 달이 지나서야 조합이 약화되었다고 판단한 틈을 이용하여 4월 11일 위원장만을 정식으로 징계에 회부하였다.

이 때 회사는 하루에 한 건 이상의 인사폭격을 하겠다고 하였다. 계속되는 인사폭격은 다소 효과를 거두었다. 84년 1월 말 61명이던 조합원수는 점차 감소하여 40명으로 줄어들고 회사에 충성심을 보이려는 직원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위원장의 결혼 휴가 중 때마침 실시된 회사의 휴일숙박연수의 참가여부를 두고 조합간부들 사이에 분열이 일어나 행동동일에 차질을 빚었다. 신혼여행을 마치고 5월 1일 출근한 위원장에게 회사는 '6개월 감봉'이라는 징계처분을 하였다.

노동조합은 즉시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위원장을 구제하기로 하고 5월 21일 월급차액 62,000원과 6월 1일 정기상여금 차액 270,000원을 모금하여 전달하는 한편 6월 15일에는 조합원 32명이 서명한 징계철회요구서를 사장에게 제출하였다. 공포분위기 속에서도 모금에는 조합원 모두가 참여하였고 징계철회 서명도 생각보다 많이 참여한 것이다.

사장에게 대화를 요청했으나 피하기만 하였다. 관계요로에 회사의 부당함을 호소해 보았으나 회사의 입장만 두둔하였다. 마감시간 지키기, 여직원 가운착용거부, 집단사표 등 합법적인 방법에는 이를 경험한 회사가 역이용할 태세를 갖추고 있었으며 다수의 조합원이 공포분위기에 휩쓸려 이를 실행할 경우 오히려 노동조합의 분열상만 드러낼 것 같았다. 이를 돌파할 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은 이제 없었다. 파업이나 농성은 노동쟁의 조정법이 금지하고 있었다. 회사는 노동조합이 합법적인 범위에서만 행동할 것이라 생각하고 있었다.

84년 6월 18일 월요일, 대한적십자사 남한강 수련원에서 1박 2일간의 노동조합 수련회를 마친 다음날 아침 9명의 조합간부가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무기한 농성에 돌입하였다. 이강서, 이호용, 양용식, 우경오, 이동길, 김성인, 김은효, 김영숙 그리고 정일영이었다. 출입문에 책상과 서류함 캐비닛 등을 연결하여 바리케이트를 치고는 금융노련, 중부경찰서, 노동부 등에 전화로 농성사실을 알렸다.

10시 정각 애국가를 시작으로 머리에 구호를 쓴 띠를 두르고 창밖을 내다보며 구호를 외쳤다. 11시 바깥의 인적이 많아질 즈음 창밖으로 현수막을 늘어뜨렸다.

"금융인의 양심은 절규한다."

"위원장 징계 철회하라."

"조합활동 보장하라."

회사가 현수막을 뜯어버렸다. 종이로 다시 만든 현수막을 건물 외벽에 붙였다. 회사는 이내 긴 장대로 뜯어 버렸다. 이호용은 밧줄에 몸을 의지하고 다시 만든 종이 현수막을 건물 외벽에 청테이프로 꼭꼭 붙였다. 옥상에서 물을 흘러내리며 뜯어내려 하였으나 창틀을 빼내 붓는 물을 막았다. 종이 현수막은 힘차게 버텼다. 오후 4시쯤 농성 조합원들은 사무실의 창문을 모두 뜯어내고 바깥의 시민들을 향하여 노동조합파괴 공작을 중단하라는 플래카드를 흔들어 보였다. 지나가던 시민들이 회사건물아래 운집하였다. 시민들을 향하여 구호를 외치고 단결의 함창을 불렀다.

‘큰 힘주는 조합’
‘우리 승리하리라’

더 많은 시민들이 몰려들었다. 주변의 건물과 지나가는 시민들이 손을 흔들어 격려하기도 하였다. 준비해 두었던 ‘금융인의 양심에 호소함’이라는 유인물을 건물 아래로 뿌렸다. 회사는 시민들의 접근을 막으려고 정문을 닫아 버렸다. 그러나 회사는 정문을 다시 열지 않을 수 없는 금융기관이었다.

노동조합 사무실 바로 옆에 숨겨진 녹음기가 작동하며 농성장의 대화내용을 몰래 녹음하고 있었다. 중부경찰서 정보과 형사들의 소행으로 보였다. 진압경찰을 실은 경찰 버스 몇 대가 건물 옆에 배치되고 군화발소리가 건물 안 복도를 쿵쿵 울리고 있었다. 중부경찰서 정보과 형사가 무전기로 강제진압을 암시하며 농성자들을 은근히 위협하고 나섰다.

"회사가 요구조건을 안 들어 주면 어떻게 할 것이냐?"

"죽을 때까지 계속하겠다."

"차라리 여기서 건물 밖으로 뛰어 내리겠다."

"치~익, 칙, 칙 여기 …… 오버!"

학생들의 교내시위에서나 볼 수 있는 장면이 가장 높은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서울 한가운데 위치한 금융기관에서 일어나고 있었다. 농성에 참여한 대부분이 신입사원들로 유신과 5공을 거치면서 학창시절을 보낸 사람들이었다. 학생시위의 대부분이 교내에 은신하고 있던 특수경찰에 의해 순식간에 진압되는 것만 보아왔던 터라 이 농성도 진압되어 다 같이 강제 곧 바로 이행될 것이라 생각만 하였다. 그 중 일부가 구속되면 남은 동료들이 구속자의 가족과 함께 2차, 3차 투쟁을 하기로 되어 있었다. 따라서 아무것도 준비된 것이 없었다. 바깥의 조합간부들이 갖다 주는 김밥과 우유로 모두들 때늦은 점심식사를 하고 위원장은 단식을 계속하였다. 취재차 바리케이트를 넘어 농성장으로 들어온 중앙일보 기자는 자신이 피다 반 정도 남은 담배를 주고 갔다. 3명의 여성을 포함하여 9명이 앉아 있기도 비좁은 공간에는 화장실이 가장 큰 문제였다.

김영숙의 가족과 약혼자를 데려와서 농성을 해산하려고 하였으나 가족들을 잘 설득해서 돌려보냈다. 이후 각자들 집으로 전화를 하여 회사의 연락에 현혹되지 말라고 당부하였다.

회사와의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오후 7시 쯤 금융노련 민요기 위원장이 연맹간부들을 이끌고 농성현장에 도착하였다. 마침내 나타난 우군이였다. 금융노련 간부들은 안타까운 눈초리로 바리케이트 너머로 고개를 내민 농성자들과 몇 마디를 나누었다. 회사의 입장을 두둔하는 관계기관의 담당자들과 노동조합의 정당함을 주장하는 금융노련 사이에 심한 입씨름이 벌어졌다. 민요기 위원장은 은행출신으로 평소 안면이 있던 회사 사장에게 위원장의 징계철회를 요구하며 금융노련의 운명까지 걸겠다고 공언하였다. 그러나 회사는 요지부동이었다.

갑자기 태도가 누그러져 회사가 대화를 요청해온 밤 10시 쯤 대화요청이 연행을 위한 기만책일 지도 모른다는 우려 속에 농성장을 빠져나간 위원장은 금융노련 간부들과 함께 사장실로 가서 교섭을 시작하였다. 밖에는 관계기관의 인사들과 몇몇 보도진이 사무실을

가득 메우고 있었다. 농성을 강경 진압하려던 관계기관이 그럴 경우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며 회사에 대화를 중용하였던 것이다.

한 밤을 넘긴 새벽 1시 30분 금융연맹 간부들의 단호한 의지와 농성자들의 생사를 건 투쟁에 회사는 물러나 위원장에 대한 징계를 철회하고 향후 노동조합활동을 보장하기로 하는 노사합의서에 서명하였다.

징계가 철회되고 감봉분의 임금을 한꺼번에 받은 위원장은 이를 다시 조합원들에게 하나하나 나눠 주며 감사의 인사를 하였다.

이 투쟁은 85. 2.12 총선을 8개월 정도 앞둔 시점을 택해 탄압을 피해갈 수 있었고 조합간부들에 대한 강제연행이나 구속은 없었다. 이 투쟁은 자동차보험의 투쟁에 이어 법률이 금지하고 있던 단체행동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한 투쟁으로 노동계에 널리 알려졌다.

당시 여러 일간지에서 취재는 하였으나 한 줄도 보도하지 않았다. 그 만큼 노사문제에 관한 보도는 언론에서 철저히 통제되고 있었던 것이다. 해를 넘긴 1985년 2월 월간지 현대노사는 이 사건을 ‘금융인의 양심은 절규한다.’는 제목으로 상세히 보도하였다.

노동조합상담조차도 처벌의 대상이었다

사무직의 노동조합은 생산직과 다르다는 생각에서 대부분의 노동조합들은 금융노련을 중심으로 한 조합활동에 머물렀다. 따라서 투쟁에 있어서도 합법적이고도 온건한 수단이 보통이었다. 그러나 점차 열악해지는 근로조건과 지능적인 노동조합파괴공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보다 투쟁적인 수단이 필요할 때였다.

이 때 쯤에는 각종 노동상담소와 상급단체의 뜻있는 노동운동관계자들이 새로운 움직임을 보인 사무직 노동운동에 관심을 가지고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고 신뢰를 구축하게 하는 기회를 만들어 주기도 하였다

또한 어려움에 처한 노동조합이 항상 찾을 수밖에 없는 노동상담소는 이들의 투쟁에 가장 믿을 수 있는 후원자였다. 석탑 노동상담소나 노총의 교육부, 정책실, 노총의 안양상담소, 카톨릭노동상담소 등은 제한된 여건 속에서도 이들을 돕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 당시 노동관계법의 ‘제3자 개입금지’ 조항은 노동조합에 관한 상담조차도 조종·선동하였다 하여 처벌의 올가미에 집어넣곤 하였다.

한일투자금융노동조합 간부들은 자신들의 당면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여러 상담소를 찾아다니면서 그 해법을 찾았다고 한다.

제 3 절 재벌의 벽을 넘어

척박한 땅 현대에 노동조합의 씨를 뿌려 - 현대해상화재보험노동조합

『1983년 10월 17일 라이프그룹의 동방화재해상보험(이후 현대해상화재보험으로 변경)이 현대그룹으로 인수되면서 회사는 일대 전환기를 맞게 된다. 회사의 주인이 바뀌면 항상 따르는 현상이기는 하지만 회사 직원들은 미래를 확신할 수 없는 가운데 불안한 나날을 보내지 않을 수 없었다. 우선 임원 및 부장 등 몇 명이 사직하였고 그 이후로도 여러 가지 이유로 떠나는 직원들이 많아졌다. 공교롭게도 그해 대졸 공채 입사자들이 그

전과는 달리 38명씩이나 되었다(그 전에는 6~7명 정도였다). 많은 수이다 보니 당시 회사취업규칙 개정의 부당성을 동기생들끼리 문제삼다보니 단결된 힘이 나타나게 되었다. 당시의 회사취업규칙에는 입사 후 3개월이 경과하면 상여금을 전액 지급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1983년 3월경) 상여금 지급규정이 입사 6개월 이후 1년 미만인 경우에는 50%, 1년이 경과한 후에는 100%를 지급하는 것으로 바뀐 것이다. 이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된 당시 공채 입사자들 38명은 급히 동기회 모임을 갖고 문제점을 토의하였다. 그 결과 회사취업규칙 개정의 부당성 및 상여금 감액지급(당시 3, 6, 9, 12월에 연간500% 지급기로 되어 있었으나, 회사취업규칙개정으로 200%밖에 수령하지 못할 상황이었음)에 대한 불합리를 시정하기 위해 대표를 선정, 당시 전무이사에게 항의하기로 결정한 후 시정이 안 될 경우 단체로 사표를 제출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러한 노력의 대가로 회사취업규칙은 다시 개정되었다. 그 내용은 약간 완화된 것으로 입사 3개월 이후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지급액의 50%, 6개월이 경과하면 100% 지급기로 되었다. 그것으로 일단 사건은 마무리되었으나 그것이 노동조합 결성의 원인이 되었던 것이다. 그 사건을 통해 사용자의 부당한 처우에 대하여 직원 개개인의 힘으로는 고칠 수 없으나, 단결된 힘을 통해서만 개선할 수 있다는 귀중한 교훈을 얻게 된 것이다. 입사 동기생들이 의기투합하는 기회를 가짐으로써 상상도 할 수 없었던 현대그룹 내에서의 노동조합 결성의 싹이 움트기 시작하게 되었다.

1984년 10월 중순 경, 당시 총무부 인사과에 근무하고 있던 김형철을 중심으로 홍순계, 광태원 등 3명의 동기생이 만나 노동조합의 필요성에 관해 토론을 하였고, 그 시점부터 노동조합을 결성하는 준비에 착수했다. 직장의 안정성 추구하고 직장의 민주화 실현이라는 목표를 설정한 후 조합 결성에 필요한 법적 요건과 현실적 여건을 나름대로 면밀히 분석하고, 우선 가장 시급한 인원 확보를 위한 활동을 개시했다. 노동조합법상 30명 이상의 발기인이 필요한데 30명을 비밀리에 규합하기는 무척이나 힘든 일이었다. 동기생들 위주로 은밀하게 노동조합의 필요성을 설득하며 동지를 규합하는 노력을 해 보았으나 일은 뜻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필요성은 공감하면서도 앞에 나서기가 어렵다는 이유와 현대그룹은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고정관념 때문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개월여에 걸친 꾸준한 노력으로 약 40여명의 참여 가능한 인원을 확보하게 되었다.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노동조합에 참여하고자 하는 인원은 7~8명에 불과했으나 노동조합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결성대회에 참여하겠다고 약속한 인원은 약 20명 가까이 되었다.

1985년 1월 초순경부터 김형철, 홍순계, 광태원, 최광일 등 추진위원 4명은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그해 2월 12 일은 국회의원 총선거가 있었다. 정치적인 상황도 최대한 이용하자는 의견을 모아 D-day를 1월 30일로 정하고 참가할 인원에 대한 점검에 전력했다. 그러나 대회 전날까지도 확실히 입장을 밝힌 사람은 20여명에 불과했다.

결성 당일 전국금융노동조합연맹 회의실에서 오후 7시로 예정되어 있던 결성대회는 인원미달로 시작할 수 없었다. 참가인원이 28명뿐이었다. 추진위원에 뒤늦게 합류했던 최광일이 같은 부서에 근무하는 후배, 동기생 등 5명을 데리고 참여한 것은 1시간 30분이 지난 8시 30분! 그 시간이 마치 몇 년이나 되는 것 같았다. 창립대회는 33명의 발기인이 참석한 가운데 일사천리로 진행되어 잠시 후인 8시 40분에 마쳤다. 위원장에 광태원, 부위원장에 홍순계, 회계감사에 최광일이 선출되었다.』¹⁾

1) 김형철, 1991.1.30, 「척박한 땅 현대에 노동조합의 씨를 뿌려」, 『활동보고 1985.1.30~1990.12.31』, 현대해상화재보험노동조합, 28~29쪽, 『녹진글방2 화이트칼라 노동조합론』, 도서출판 녹진

이 과정에서 인사과에 근무하던 김형철은 회사에서 노동조합 가입대상자 자격문제를 들고 나와 역지를 쓸 것에 대비하여 일단 조합에 가입하지 않았다.

실로 어렵고도 힘들었던 조합의 출범이었다. 울산에서 현대그룹 노동조합이 본격적으로 출범하기 2년여 앞서 현대그룹에 노동조합이 탄생한 것이다.

현대왕국에서의 노동조합의 설립은 역시 쉬운 일이 아니었다. 노동조합이 설립되자 회사는 노동조합 설립자체를 무산시키기 위해 설립신고증이 교부되기 전에 창립대회에 참석했던 조합원 8명을 다음날 밤부터 일요일인 그 다음날 새벽까지 별관 5층에 붙잡아놓고 탈퇴서 제출을 강요했다. 이것이 실패로 돌아가자 노동부로부터 설립신고증이 교부된 이후에도 조합원의 대부분이 여직원인 점을 악용하여 소속 부서장을 동원, 온갖 회유와 협박을 하며 노동조합 탈퇴를 종용했다. 또한 인사과 직원으로서 노동조합 결성을 주도한 김형철을 그룹계열사인 현대중공업으로 발령하는 등 공포분위기를 조성하고 노동조합 와해를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회사의 이러한 불법행위로부터 조합원을 보호하고 노동조합을 지켜내기 위해 2월 21일 12시를 기해 노동조합 탄압중단을 요구하며 집행부 12명이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이 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가운데 금융노련이 개입하고 노동부가 적극적인 조정에 나서자 회사는 더 이상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지 않겠다는 합의서에 서명하였다. 이 사태로 회사의 이재희 대표이사가 모든 책임을 지고 사임하였다.

여러 가지 회사 측의 교묘한 탄압으로 인해 조합은 일상활동에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조합소식지를 배포하면 과장급 이상 관리자들이 은밀하게 회수하여 총무부에 제출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와 같은 억압적인 분위기에서 직원들은 애써 조합을 외면하려 들었고 조합원에 가입시키기가 무척이나 힘들었다. 조합간부들도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회사 측의 교묘한 탄압에 점차 힘들어 하고 있는 분위기였다. 소수 간부의 희생적인 투쟁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악조건은 조합의 일상활동의 약화로 이어졌다. 일상활동의 약화로 인한 결과는 1985년 12월 6일 개최된 제 2년차 조합원 총회에 나타났다. 200여명의 조합원 중 80여명 정도만 조합원 총회에 참석함으로써 의결 정족수에 미달하여 무산되었다. 드디어 조합원 총회조차 개최할 수 없는 참담한 지경에 이른 것이다.

노동조합 포기하면 원래대로 해줄게 - 동양화재해상보험노동조합

동양화재해상보험은 보험업계 최고의 역사를 가진 회사로 한진그룹 계열사에 속해 있으면서 평등한 노사관계는 고사하고 재벌특유의 수직적 권위주의적인 직장문화가 팽배해 있었다. 3저 호황이라는 당시의 경제 환경에서도 정부는 임금동결정책을 유지하고 기업주들은 초과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경영합리화라는 미명하에 노동자의 일방적 희생만을 강요하였다. 그룹에서 보낸 사장이 새로 부임하면서 경영내실을 기한다며 종업원의 동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개악하면서 종업원들의 분노를 샀고, 그 분노는 결국 노동조합의 탄생으로 이어졌다.

1985년 7월경 동양화재 기획실에 근무하던 황원래는 회사로부터 퇴직금누진제를 없애고

* 이 글을 인용하면서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단순제로 규정을 바꾸라는 지시를 받았다. 그러나 입사 후 3년째 근무해 오면서 그 해 3월에도 년·월차 규정을 개정하라는 회사지시를 그대로 따랐다가 주위동료들로부터 호된 원망과 비난을 받았던 기억을 떠올렸다. 며칠을 두고 고민하던 끝에 직속상사인 조근 기획실장에게 직원 사기저하와 장기 근속직원들의 임금을 깎는 잘못된 지시라고 설득하자, 기획실장도 황원래의 주장에 동의하며 사장의 지시를 거부했다.

그러자 회사는 기획실장을 배제한 채 총무부 인사과에 지시를 다시 내려 퇴직금누진제를 폐지시킨다. 년·월차규정 개정엔 이어 퇴직금누진제까지 개악하자 회사 분위기는 일순간에 술렁이기 시작했고 종업원들의 불만이 증폭되었다.

황원래는 인사과에 찾아가 항의 등 개인적 저항을 하다가 혼자 힘으로는 역부족을 느끼고 노동조합을 결성하기로 결심한다. 해상항공부의 이동진과 뜻을 모으고 두 사람은 비밀리에 사람을 모으기 시작했다. 기획실 윤순구, 구기배, 해상항공부 김용구, 이용규, 장기업무부 김성욱 사원 등 모두 13명이 노동조합결성 준비를 위해 은밀히 여의도 고수부지에 모였다. 회사에 정보가 새 나갈 수 있으므로 다음날 곧바로 노동조합 결성을하기로 결의하고 각 자의 역할을 나누어 맡았다. 당시의 노동조합법상 종업원의 1/5이상이거나 30명 이상을 모으기 위해서 각자가 2명 이상씩을 조직하기로 하고, 이동진 대리가 제일 선배사원이므로 위원장에, 노동관계법과 회사정보가 많은 황원래, 여직원 회장과 친해 같은 부서에서 조직동원에 유리한 김성욱이 부위원장을 맡기로 하고 회계감사는 양윤모가 맡기로 하였다.

9월13일 금요일 저녁 7시, 노동조합설립 소식을 듣고 회사를 빠져나와 금융노련 회의실에 모여든 인원은 총 71명이었다. 노동조합 창립총회는 대성공이었다. 다음날 노동조합결성 소식이 알려지자 대리이하 500여명 가입대상자중 350여명이 하루 만에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가히 폭발적인 호응이 일어났다.」

직원들의 전폭적인 지지로 노동조합이 결성되자 당황한 회사 측은 노동조합간부들을 상대로 개악시킨 노동조건을 다시 원상복구해 주겠다고 노동조합해산을 설득하려 들었다. 노동조합은 즉각 근로조건 개선만이 노동조합 설립목적이 아님을 밝히며, 그 동안 회사의 일방통행식 권위적인 직장문화를 바꾸기 위해 직장 내에서의 의사소통과 민주화, 그리고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증진이라는 목표를 향해 종업원들의 자주적 단결체로서 나아가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천명하며 노동조합탄압을 중지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이에 회사 측은 소속 부서장들에게 각각 책임을 맡겨 노동조합 임원들을 회유, 설득시켜 노동조합 해산을 종용했으나 이를 거부하자 그 지휘책임을 물어 징계하였다. 노동조합 집행부의 기세를 꺾고 활동을 위축시켜 무력화하고 중국에는 와해시키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그리고 회사의 사우회 규정을 바꿔 운영위원을 20명이상으로 늘리고 사우회가 직원들의 의사를 대변하는 기능을 갖게 하는 등 말하자면 짝퉁노동조합을 만들겠다는 시도를 하였다. 이것마저도 직원들의 신랄한 비판과 저항에 부딪쳐 뜻대로 되지 않자 회사는 이번에는 그 과정에서 저항한 고참 부장급 2명을 해고함으로써 인사권을 휘둘러 노동조합의 의지를 꺾으려 들었다. 그리고 과장급 이상의 간부직원을 회사강당에 모아놓고 노동조합에 동조하는 어떠한 행위도 용납 않겠다는 엄포와 함께 직원들 간의 분열을 꾀했으나 직장민주화에 대한 전 사원들의 열망과 저항의지를 꺾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끊임없이 계속되는 사측의 집요한 노동조합탄압에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했다. 사측은 노동조합위원장에 대한 노골적인 혐오감을 드러내며 그 소속 부서장을 해고하여 심리적 압박감을 주는 한편 일체의 대화를 기피하고, 각 부서장에게도 노동조합탈퇴의

지침을 내려 노동조합을 와해시키려는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해 나갔다. 사측의 이러한 탄압이 지속되자 조합원들은 총회나 각종집회 등의 공개적인 활동을 점점 꺼려하게 되었다. 노동조합활동에 참여했다가 불이익을 받을까 걱정하여 탈퇴자도 점점 늘어났다. 노동조합 창립 발기인이자 중책을 맡고 있던 노동조합간부까지 사퇴서를 내면서 아예 노골적으로 사측에 투항해 배신행위까지 하였다. 조직이반 현상이 나타났고 이런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해 노동조합은 조합원 임시총회를 소집하였으나 성원이 되지 않아 대회가 무산되는 참담한 실패를 맛보기도 했다. 이동진 위원장이 더 이상 조합원의 기대와 열망을 충족시키지 못해 자신의 능력으로는 한계를 절감한다며 사퇴를 표명하였다. 노동조합의 위기였다.

집행부 내부의 토론이 벌어졌다. 며칠간의 격론 끝에 황원래를 위원장으로 추대하기로 하고 조합원들의 힘을 재결집해서 회사 측에 대항할 새 지도부 구성을 위한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하였다. 노동조합 출범 6개월 만에 위기를 맞이했으나 창립멤버의 대부분이 다시 힘을 결집했다. 새 집행부를 맡은 황원래 위원장과 간부들은 흐트러진 조합원을 다시 구축하기 위해 일과시간 중 노동조합활동을 가로막는 회사의 탄압에는 년·월차휴가와 휴일을 이용하여 전국을 동분서주하며 탈퇴서를 냈던 조합원을 다시 모으고 조직을 복원해 나갔다. 그리고 복원된 조합원의 단결된 힘을 바탕으로 다시 사측에 교섭을 요구하였다. 아무리 탄압을 해도 다시 일어서는 노동조합, 그 저항이 1년이 넘도록 계속되자 사측도 마침내 단체교섭석상에 나올 수밖에 없었다.

노동조합 결성 1년 만에 노동조합을 인정하였다.

‘빨갱이’가 들어와서 회사를 망치려한다 -고려화재해상보험

1985년도 봄 민주화 시위가 전국적으로 일어나는 그 시절 전광우는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5·3인천사태를 인천시민회관 안에서 직접 보았다. 독재정권과 결탁한 자본가들이 노동자들에게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시대에 노동자들의 권익과 가치를 찾기 위하여 노동조합이 필요하다고 절실히 느끼게 되었다. 노동운동을 불온시하여 노동운동에 참여하면 ‘빨갱이’로 매도하는, 탄압이 극심한 시기였다.

노동운동에 관심을 갖게 된 전광우는 비밀스럽게 노동운동 선배들을 찾아다녔다. 노총 이성균 차장의 소개로 노총의 교육부장으로 근무했던 천영세로부터 노동운동에 대한 여러 가지 조언을 받게 되었고, 또 석탑 노동상담소 장명국 원장으로부터 노동조합에 관한 조언과 함께 노동조합 참고자료를 구해 노동조합에 대한 공부를 하였다.

전광우는 노동조합을 결성하기 위한 인원도 규합하기 시작하였다. 뜻을 함께 공감하는 동지를 규합하던 중 인천에 살고 있던 윤여각 (나중에 노동조합 총무부장)과의 만남은 노동조합 설립을 위한 최초의 의기투합이었다. 그와 함께 동지들을 규합하는 도중에 뜻에는 공감하지만 노동조합 설립에는 빠지겠다는 이들도 많았다. 그 당시 회사 경영자들은 흑자경영으로 전환하기 위해 직원들의 임금마저도 손쉽게 삭감하였고 자신들은 자리를 지키기 위하여 끼리끼리 편가르기도 하였다. 85년 10월 11일을 D-Day로 정하고 노동조합설립에 필요한 동지들을 규합하기 위해 열심히 노동조합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다녔다. 그러나 이 사실은 곧 회사에 적발되었으며 그동안 애써 확보한 인원중의 일부가 실패할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이탈하기도 하였다.

곧바로 우리는 노동조합 설립을 결행하였다. 직원들의 공감대 속에서 124명이 노동조합

결성에 참석하였다. 위원장에는 전광우가 선출되었다. 노동조합결성에 참석한 인원 가운데는 회사에서 조합결성을 방해하라는 지령을 받고 그 자리에 온 직원들도 있었음을 나중에 알게 되었다. 노동조합이 결성되자 사측은 노동조합을 탄압하기 시작하였다. 회사는 노동조합설립에 참여한 개개인들의 약점을 악용하기 위해 철저히 개인들의 뒷조사를 하면서 ‘빨갱이’가 들어와서 회사를 망치려한다는 등 터무니없는 소문을 퍼트렸고, 조합결성에 참여한 직원들에게는 상급자들을 시켜 지속적으로 탈퇴를 강요하는 등 한 때 분위기가 살벌하였다. 일부 지점은 집단으로 탈퇴했다 다시 가입하기를 반복하였으며, 직원들끼리도 엘리베이터를 탈 때 함께 타지 않고 피하기까지 하였다. 그러나 노동조합 설립 초기의 동지들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 회사의 조합탈퇴 강요와 압박에 굴하지 않고 더욱 열심히 조합원을 전국적으로 늘려갔다. 노동조합의 의연한 대처와 끈기 앞에 회사는 노동조합 파괴기도를 포기하고 대화의 길을 선택하게 된다. 곧이어 노동조합 사무실도 확보하게 되었다.

제 4 절 노동조합끼리도 뭉쳐야 산다

조직이 작다고 회의참석도 못해서야 --금융노련 규약개정운동

1980년대 초에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체제로 전환과 함께 제정된 금융노련규약은 조합원이 5천명에서 1만 명에 이르는 은행을 비롯한 대형조직을 중심으로 만들어져 애초부터 태생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대형 노동조합은 대체로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 새로 생겨나는 중소형의 노동조합들은 온갖 회사의 방해공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기존의 대형노동조합 입장은 자신들이 납부한 연맹 의무금으로 중소형의 노동조합을 지원하는 데만 몰두한다고 불만이었고 새로 생겨나는 중소단위노동조합은 금융노련의 더 많은 지원을 바라고 있었다. 금융노련 집행부는 자신을 뽑아준 조직의 요구를 외면하기도 엄청난 탄압을 받고 있는 산하조합을 내버려 둘 수도 없는 어려움에 처해 있었다.

제2금융권 노동조합들은 그 수가 점차 늘어나면서 금융노련의 의결기구에 자신들의 참여기회를 확보하거나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전개한다. 조합원이 최소한 400명이 넘어야 대의원을 배정하고 그 이하의 노동조합은 여러 개의 노동조합이 연합하여 대의원을 배정하여 어떤 경우는 10개가 넘는 조합에 겨우 한명의 대의원이 배정되는 경우도 있었다. 조직이 작더라도 금융노련 대의원대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약을 개정해 달라는 것이었다. 85년 11월 개최된 금융노련의 대의원대회에서 대의원들에게 배포한 제안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 현재 금융노련 산하에는 80개의 회원조합이 있다. 이중 대의원이 소속되어 있는 조합은 절반에도 훨씬 못 미치는 33개 조합에 불과하다. 47개 조합은 대의원대회에 표결권은 물론 발언권조차 없는데 반하여 불과 10개의 대단위 조합이 전체 대의원의 3분의 2를 넘는 숫자를 차지하고 있다. 더구나, 단독으로 대의원을 선출할 수 있는 단위노동조합은 전체 회원조합의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25개 조합으로 많이는 11명, 적게는 1명씩 선출하며, 이 25개의 조합 이 총 129명의 대의원 중 93.8%에 해당하는 121명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무려 55개나 되는 나머지 조합은 연합으로 전국은행

하나에서 선출하는 대의원수에도 못 미치는 겨우 8명의 대의원을 선출할 뿐이다.

.....

민주주의는 참여에서 이루어진다. 독립된 단위 노동조합에게는 규모의 대소를 불문하고 최고 의결기관에 대한 최소한의 직접 발언권과 표결권이 주어져야 한다.

..... 비록 업종을 달리하고 단위조직을 달리할 지라도 우리는 뭉쳐야 한다는 지상명제 하에서 동지애와 조합정신에 호소하며 아낌없는 지지를 바란다.

군소단위 노동조합에 대한 최소한의 직접발언권과 표결권 부여는 노동운동 일선에서 고군분투하는 군소단위 노동조합의 조직강화에 음으로 양으로 힘이 될 것이며 금융노련 조직확산과 활성화를 위한 초석이 될 것이다. 업종을 초월하고 규모의 대소를 극복하여 각기 힘찬 모습으로 함께 어깨 걸고 나아갈 때 우리 금융노련 나아가 한국노동운동의 무궁한 전진은 기약될 것이다.

전국금융노련 민주주의 만세!

한국노동운동민주주의 만세!』

노련규약개정추진위원회를 발족하고 서명작업이 시작되었다. 대단위 전국은행노동조합 설득은 권세원, 김영택의 후원아래 대한보증보험 김국진과 한국증권금융 김영근이 맞기로 하고 특수은행은 장기신용은행 이태규가 맡기로 하였다. 서명을 받는 일은 보험단은 현대해상 광태원, 증권단은 증권예탁원의 송기형, 연합협의회는 은행연합회의 이연조가 담당하고 외국계은행은 한일투자금융 정일영, 지방의 단위노동조합들은 부국상호신용금고의 김범기가 맡기로 하였다. 일사불란하게 진행된 서명에 86개 노동조합 중 대단위 은행 노동조합을 제외한 70여개의 단위 노동조합이 예외 없이 서명하였다.

85년 11월 개최된 금융노련 전국대의원대회에서 11개 노동조합에 1명 배정된 대의원으로 선출된 정일영이 연맹규약개정안을 통과시켜줄 것을 간곡히 호소하였으나 강 건너 불 보듯 하는 대형 노동조합 대의원들의 무관심 속에 안건상정조차도 실패하였다. 노동조합에서도 득권을 지키려는 현실의 벽은 그 만큼 높았던 것이다.

금융노련의 규약개정운동은 노동조합의 상급단체의 의결기구에 직접 참여하기 위해 기존의 제도를 변화시키려는 노력이자 단위노동조합체제로의 전환이후 단위노동조합간의 교류나 단결을 봉쇄하려는 기업별노동조합체제에 대한 한계를 극복하려는 노력의 일환이었다. 이 활동은 합법공간에서 합법적인 소재를 가지고 참여를 통한 변화를 시도하는 아주 낮은 단계의 저항이었다. 따라서 제2금융권의 노동조합 대부분이 예외 없이 참여하는 대규모 서명운동이 가능하였던 것이다.

뭉쳐야 산다. - 보험단협의회 및 연합협의회

현대해상화재노동조합을 필두로 재벌기업의 노동조합결성이 잇따라 성공하자 보험단을 포함한 제2금융권 노동조합들은 무척이나 고무되었다. 금융노동자들의 노동조합 활동은 이미 재벌그룹이라는 커다란 벽을 뛰어넘고 있었던 것이다.

86년 1월 6일 기존의 6개 보험노동조합과 새로 탄생한 3개 보험노동조합이 연대하여 ‘보험단노동조합협의회’(의장 권세원)를 출범시켰다.(한국자동차보험권세원, 한국화재보험협회 김영훈, 대한보증보험 김국진, 제일생명보험 조태문, 흥국생명보험 최은석, 동방생명보험 권상열, 현대해상화재 광태원, 동양화재해상보험 이동진, 고려화재해상보험 전광우) 사실상 정

부소유였던 은행노동조합에 비해 재벌그룹에 속한 보험회사들의 노동조합 탄압은 극심하였다. 회사의 탄압에 공동으로 대처하고 보험업계 근로조건을 공동으로 개선하기 위한 자주적인 노동조합협의회가 출범한 것이다.

한편으로 연합협의회(의장 최재호)가 설립되어 정기적인 모임을 갖고 상호간 교류를 강화한다. 같은 업종의 노동조합이 1-2개에 불과하거나 조직이 100명 내외로 모든 것이 취약하여 조직활동에 어려움을 겪던 노동조합들은 자연스럽게 업종을 초월하여 같은 입장의 노동조합들과 단결을 추구하게 되었던 것이다. (은행연합회 이연조, 금융결제관리원 김은규, 금융연수원 임찬호, 부국상호신용금고 김범기, 한일투자금융 정일영, 한국산업리스 최재호, 비시카드 남을우, 저축추진중앙위 하균홍, 한국개발리스 강운중)

기업별 노동조합체제하에서 대규모의 노동조합들이 자체 조직 관리에 큰 비중을 두어야 했던 반면 소규모 사업장의 노동조합은 생존을 위해 자연스럽게 상호 교류하면서 연대활동에 한발 앞서갔다. 노동조합에 대한 업무검사권을 가진 행정관청은 주로 대규모 노동조합의 조합비지출을 문체 삼으면서 그 발목을 잡기도하였다. 소형 노동조합들은 조합비 규모가 작아 흠 잡힐게 상대적으로 적어 그런 제약에서는 훨씬 자유로웠다.

집단 생리휴가와 구사대 출현 - 현대해상화재보험

노동조합 설립과정에서 금융노련 집행부를 매수하거나 개별적인 회유와 협박을 통해 노동조합을 와해하려던 기도가 실패하자 현대그룹은 일단 물러섰다가 직접적인 조직와해를 위해 금융노련 사무실에서까지 폭력을 행사하는 본격적인 탄압을 시작했다.

86년 3월 17일 노동조합 와해를 노려오던 회사는 홍순계 부위원장을 서울에서 제주도로 보내는 것을 포함 조합간부들은 지방 지점으로 대의원 대다수를 수도권 지점으로 발령하는 등, 조합간부 및 대의원 32명을 포함한 57명의 직원에 대하여 인사발령을 낸 것이다. 교통상황이 좋지 않던 당시로서는 개인 개인의 생활기반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것이었다. 노동조합이 또 다시 위기를 맞았다.

다음날 3월 18일 오전 중에 준비한 성명서를 전 직원에게 배포하고 퇴근 후 전 조합원 임시총회를 금융노련 사무실에서 개최함을 알렸다. 회사 내에서는 모이기도 힘든 상황이었다. 오후 8시경 금융노련 회의실에서 120여명의 조합원이 모여 열띤 토론을 한 결과 여성조합원 120명은 일제히 생리휴가를 내기로 하는 한편 30여명의 조합원들도 이에 가세하기로 결의했다. 위원장은 여성조합원들의 휴가원을 가지고 회사로 들어가 수시로 상황을 전달하였고 금융노련에 남은 간부들은 2개조로 나누어 한 조는 여성 조합원들을 관광버스 2대에 분승시켜서 시내를 돌아다니는 한편 나머지 한 조는 회사 내에 근무하고 있던 남자조합원들에게 연락하여 오후 2시까지 새로 이전하는 금융노련 사무실로 오도록 전달하였다. 오후 2시 30분경 이사하느라 어수선한 금융노련 사무실에 150여명의 조합원이 모여 대책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2시간여의 열띤 토론 끝에 회사 측에서 성의 있는 답변을 할 때까지 무기한 농성에 돌입하기로 결의했다. 회사 측에 농성돌입 사실을 알리는 한편 금융노련 간부들의 지원을 얻어 각 관계기관에도 회사 측의 부당노동행위를 고발했다.

바로 그 날 저녁, 회사간부들로 구성된 100여 명의 구사대가 금융노련으로 쳐들어왔다. 말로만 들어왔던 구사대가 이 동네에도 등장한 것이다. 그들은 금융노련 사무실까지 들어가 테이블 유리를 발로 짓밟아 깨뜨리는 등 온갖 행패를 부렸다. 대부분이 여성으로

구성된 현대해상화재의 남자조합원은 모두 29명 이었다. 거기에다 금융노련 상근간부, 보험단 및 여타 노동조합 간부 등이 20여명으로 모두 합해 보아야 50명도 채 안되었다. 덩치 크고 풍채 당당한 구사대를 이들이 대적해야 했다. 고려화재 전광우, 윤여각, 대한보증보험 김국진, 흥국생명 최은석, 한일투자금융 정일영 등이 앞장서서 밀고 밀리는 몸싸움을 벌이며 그들을 간신히 금융노련 밖으로 밀어낼 수 있었다. 구사대는 물러가지 않고 금융노련을 에워싸고 있었다. 구사대의 봉쇄로 금융노련에 들어가지 못하자 중국집 철가방을 들고 짜장면 배달부로 위장하여 농성장에 나타난 남자 조합원에게 박수가 터져 나왔다.

구사대를 밖으로 몰아내고 한숨을 돌리고 있는 순간 또 다시 새로운 난관에 부딪혔다. 조합원 가족들이 몰려오고 있었다. 한 여성조합원의 오빠가 여동생을 보자마자 다짜고짜 뺨을 후려치고 잡아끌며 막무가내로 집으로 가자는 것이었다. “당신 딸이 결혼을 하고 여러 남자들과 혼숙하고 있다. 집에 가고 싶어도 감금되어 못 가니 직접 데려가서 내일은 꼭 출근시키라”는 회사의 연락을 받고 부리나케 현장으로 달려온 것이었다. 아무 얘기도 들으려 하지 않았다.

모두들 난감해 하는 와중에 금융노련 간부들이 나서 가족들을 설득하였다. 우선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대화의 자리를 갖고 그 결과에 따르기’로 가족들과 합의하였다. 첫 번째로 나선 여성조합원이 자초지종을 또박또박 설명하고 있었다. 그 때 옆에서 듣고 있던 그녀의 부서장이 느닷없이 호통을 치며 물 컵으로 탁자를 내리치는 것이 아닌가! 유리컵과 탁자유리가 박살이 났다. 이를 지켜보고 있던 주위의 노동조합 간부들이 한 마디씩 거들었다.

“현대그룹에는 법도 없나?”

“부모님께서 보고 계시는데도 저러는데, 평소에는 직원들을 사람 취급이나 하겠습니까?”

“백 몇 십 명이 이렇게 모여 있는데 혼숙은 무슨 혼숙입니까?”

“문제해결을 위해 가족들도 함께 나서서 도와주셔야 합니다!”

농성해산을 종용하러 왔던 가족들은 하나 둘 집으로 돌아갔다. 한 아버지는 노동조합에 “파이팅”을 당부했다.

다음날인 3월 20일에는 일간지에 보도되었다. 언론보도는 노동조합에는 큰 힘이자 회사에게는 가장 두려운 것이었다. 아니 취재만 하더라도 노동조합에 큰 힘이 되었다. 전날 기자들에게 ‘인권이 짓밟히는 상황을 취재만하고 현대에 매수되어 보도는 하지 않는 기자들을 수치스런 역사에 남기겠다.’며 취재기자들의 얼굴을 카메라로 찍어두는 등 간절한 당부와 위협(?)을 하였던 것이다. 얼굴을 가리기도 하는 취재하는 기자들을 거꾸로 취재한 것이다. 노사문제에 대한 보도는 언론에서도 상당히 통제받고 있어 노동운동을 불순세력으로 몰아 악선전 하는 기사는 대단히 크게 실렸으나 노동조합이 탄압받는 내용은 보도 자체가 어려웠다. 신문기자들의 용기가 필요한 시절이었다.

조합원들의 강고한 투쟁과 여론에 힘 입어 갈수록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자 회사는 대화에 임하였다. 노동부 조정국장, 안기부 사회과장, 남대문 경찰서장, 종로 경찰서장 등이 입회하고 금융노련 위원장 등 간부들이 배석한 가운데 흥순계를 제주도에서 수도권으로 다시 발령하는 등 노사 쌍방이 한 발씩 양보한 타협안에 서명함으로써 2박 3일간의 어렵고 힘들었던 농성투쟁은 부분적인 승리를 거둘 수 있었다.

현대해상화재의 이 투쟁은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기 위해 구사대를 동원하고 가족들을 악용하여 노동조합활동을 위축시키려던 회사의 기도를 극복하였고 노동조합에 대한

가족들의 인식과 역할이 중요함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때부터 금융권 노동조합들은 이웃 사업장의 문제에도 공동으로 참여하고 힘을 합쳐 해결하려는 연대의식이 자리 잡기 시작하였다.

조합원간의 교류가 연대활동이자 정치의식의 시작이었다.

노동조합의 탄압을 극복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금융권의 노동조합 간부들은 의례적인 행사가 아닌 일상 활동을 통해서도 교류를 활발히 해나간다. 상호교류는 학연 지연 등을 서로 확인하면서 한층 돈독한 우의를 다지게 하였다.

앞서 가는 노동조합을 같이 찾아다니며 일상 활동으로 무엇을 하고 있는 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직접 가서 보고 배웠다. 주로 대학공부를 했다고 자부심을 느끼던 금융노동자들은 산업현장을 돌아다니며 겸손해지지 않을 수 없었고 진정 자신들이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인지 누구로부터 배울 것인지를 책을 통해서가 아닌 자신들의 눈을 통해 직접 보면서 깨닫게 된다. 노동운동에서 한 발 앞서 있던 일선 생산직 노동자들의 노동조합활동이 금융노동자들에게 산교육의 배움터가 되었다.

서강대학교 산업문제연구소의 경인지역 노동조합 간부교육과 노총 새마을 교육은 인적교류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특히 조합원수가 적은 제2금융권 노동조합의 경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대내적으로 조합원의 질적 향상에 주력하고 대외적으로는 동종업종 노동조합과의 교류는 물론 여타 노동단체나 우의단체와의 교류를 통해 고립을 탈피하고 연대를 강화해야 했다.

한일투자금융노동조합의 투쟁에서 ‘금융인의 양심은 절규한다.’는 유인물 배부를 부탁받은 광산노련 홍성진은 서강대산업문제연구소 교육생들에게 이를 배부하였다. 이 소식을 들은 교육생들이 다음날 농성을 격려하기위해 대거 현장을 방문하였다. 농성이 끝난 다음이긴 하였지만 ‘제3자 개입금지’의 위협을 무릅쓴 분규현장방문과 강의 시간중의 투쟁경과가 발표를 통해 ‘금융노동자도 신분의 위협을 받는 똑같은 노동자라는 사실을 서로 확인하였음은 물론 그 후 지속적인 교류가 이루어지고 6.10항쟁에도 함께 하는 계기가 되었다.

앞서가는 노동조합의 단합대회에도 따라다녔다. 세진전자노동조합이 단합대회로 등산을 갈 때, 대한보증보험, 한일투자금융, 현대해상화재보험의 남자조합원들이 동참하였다. 여성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세진전자노동조합에서 차례로 소개된 총각(?)들은 열렬한 환영을 받았고 오고 가는 관광버스 안에서 문광주 사무국장이 가르쳐준 단결의 노래와 레크레이션 진행에 관한 테크닉은 그 후 노동조합 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대우어패럴에서 개최된 구로지역 노동조합 탄생 1주년 기념식에 현대해상노동조합의 홍순계, 김형철, 박태원, 한일투자금융의 이호용, 정일영 등이 함께 참여하여 외빈으로 소개받고 함께 뛰고 즐기면서 향후 금융권에서도 그와 같은 행사를 개최하자고 다짐하였다. 이 행사의 진행과정을 몰래 지켜본 관계기관은 금융노련을 통해 이 행사에 참가한 금융권노동조합 간부들이 누구인지 색출하려고 무진 애를 썼다.

85년 구로지역노동조합의 동맹파업에도 금융권의 간부들은 현장으로 달려갔다. 함께할 수도 달리 도울 방법도 없이 발만 동동 구르며 멀리서 지켜보기만 해야 했다. 그러나 향후 자신들이 해야 할 일과 가야할 방향에 대해 고민하는 계기가 되었다.

현대해상노동조합과 한일투자금융노동조합의 여성 조합원은 여성민우회나 여성의전화 등의 여성단체에서 주관하는 각종 교육행사에 함께 참여하면서 서로 친해졌다. 언제 다시

탄압을 받게 될지 모를 이들은 서로에게 반갑기만 한 진실한 동지가 되었다. 남자 조합원의 부인들도 함께 참여하였다.

현대해상화재의 홍순계를 비롯한 일부 금융권노동조합간부들은 여성단체에서 주관하는 교육행사에 강사로 참여하여 밀즈의 주장대로 ‘사무직은 노동자’라는 점을 강조하며 자신들의 사업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무직 노동운동 사례를 발표하였다. 이러한 노동조합간의 조합원교류를 통한 활동과 조합원가족의 참여는 대표자 또는 소수간부 위주로 활동해 오던 노동조합 활동에 새로운 장을 열어가고 있었던 것이다.

화이트칼라는 노동자인가?

80년대 후반에 들어 ‘화이트칼라’ 라고도 불리는 사무직 노동운동이 급격히 활성화된 것은 무엇 때문일까? 해석은 여러 가지로 가능하겠지만 우선 원론적으로 화이트칼라의 저자로 유명한 밀즈의 주장을 빌어 우리나라 사회에 비교하여 설명하여 보자.

『화이트칼라는 고도성장과 함께 그 숫자가 점차 늘어나고 희소성은 줄어들었다. 또한 블루칼라 즉 생산직 노동자는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직접 고위층과 교섭을 하면서 지위가 상승하는 반면 고위층이 화이트칼라에게 위임했던 권한은 크게 줄어들면서 이들의 지위는 크게 떨어진다. 한편으로 화이트칼라가 수행하고 있는 업무는 사무자동화를 통하여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업무로 단순기능화 되고 따라서 이들은 신분불안에 처하게 된다. 특히 이 계층에 주어지던 고임금은 불황이 오면 제일 먼저 삭감대상이 되고 이들은 제일 먼저 실업의 위협에 직면하게 된다. 이 때 화이트칼라는 자신들이 노동자임을 자각하게 된다.』

밀즈의 주장은 한국사회에도 그대로 들어맞았다. 우리나라는 60년대 이후의 성장정책으로 자본주의 발전이 가속화되어 왔다. 70년대만 하더라도 사무직 노동자들은 대가도 지불되지 않는 연장, 휴일근무도 감수하면서 직위상승과 출세를 향해 가고 있었다.

그러나 80년대 들어서면서 상황은 달라진다. 우리나라가 경제성장추세가 둔화되는 시점에 등장한 제5공화국은 기업의 임금비용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으로 ‘임금동결’ 또는 ‘대졸초임 동결’을 강조하였다. 그 중에서 ‘대졸초임동결’은 바로 사무직의 임금동결을 의미한다. 사무직의 임금은 호봉상승이나 직급상승을 근간으로 하여 사다리처럼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어느 곳을 동결시켜도 전체가 동결된다. 당시 인플레이션률이 4~5%이고 근로자 생계비상승율이 7~8%에 이르렀으니 임금동결은 실질 임금 삭감을 의미했다.

사무직 노동조합의 설립통계에서도 어느 정도 이 사실은 웅변되고 있다. 87년 말 서울시 집계에 따르면 6.29선언 이후 대통령 선거가 끝난 12월 19일 까지 서울 시내 각 사업체에서 결성된 노동조합은 모두 2백 75개소인데 이중 81.7%인 2백 10개 업체가 제조업 분야의 노동자가 아닌 3차 산업(운수포함) 노동자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정부의 임금동결정책에는 재벌소유의 기업들이 앞장을 섰고 사무직의 임금은 동결되었고 전문직종의 장기근속을 장려하기 위해 시행하던 퇴직금누진제마저 폐지되는 등 노동조합이 거의 없던 사무직종에서는 모든 것이 손쉽게 삭감되었다.

그러나 금융기관의 경우는 사정이 다소 달랐다. 사실상 정부소유였던 은행을 비롯한 제1금융권에는 거의 모든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활동하고 있었고 이를 배경으로 하여 제2금융권에도 다수의 노동조합이 자리를 잡고 있었으며 그 활동영역을 넓혀가고 있었다. 이와 함께 재벌소유의 금융기관에도 노동조합이 점차 자리를 잡고 재벌들의 횡포에 제동을 걸기 시작하였다.

회사 구성원의 분포에 있어서도 대체로 회사의 지침이나 상사들의 지시에 순응하기만 하던 선배 사무직 노동자들 속에 학창시절 반정부투쟁에 직간접으로 참여하면서 권력의 위협에 쉽게 굴복하지 않는 후배 사무직 노동자들이 새로이 유입되고 있었다.

유신말기의 긴급조치와 80년 서울의 봄과 제 5공화국의 폭압정치와 투쟁하면서 그 이전세대보다 다소 발전된 학생운동을 경험한 이들은 강한자의 위협이나 탄압에 쉽게 굴복하지 않고 투쟁에 있어서도 좀 더 역사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을 강구하면서 점진적으로 앞으로 나아갔던 것이다.

노동조합민주화는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구로동맹파업의 여파로 수많은 노동조합이 파괴되고 노총의 뜻있는 전문위원이 해고되거나 사표를 내면서 합법적인 노동조합활동을 통한 민주화기여가능성에 회의를 품게 되었다. 특히 노총 하의 합법적인 노동조합활동으로는 올바른 노동운동이 불가능하다며 노총에 대한 개혁노력마저도 포기하는 분위기였다.

이러한 시기에 가칭 '노동조합민주화추진위원회'가 노동조합 민주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가늠하던 가능성에 기대를 걸고 모임을 시작하였다. 노총 박기학의 주선으로 노동조합 상급단체에 근무하던 전문위원을 중심으로 모임을 갖고 수차례 모여 스터디와 토론을 가졌다. 이 모임에는 노총의 박기학, 화학노련의 김귀균, 김성식, 김상현, 섬유노련의 이원보, 정이환, 금속노련의 노진귀 등 노동조합 전문위원과 한일투자금융의 정일영이 참여하였다. 바로 지금이 대중혁명의 성숙기라 주장하며 집회중심의 운동을 펼쳐야 한다는 김상현과 구로동맹파업의 탄압이후 노동조합 현실은 노동조합민주화를 추진할 수 있는 중심세력이 없으므로 그 세력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앞서가는 노동조합의 활동적인 간부들을 규합하거나 자신들이 직접 나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으로 먼저 입장을 정리하고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의견을 모으는 데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박기학의 주장이 극명하게 대립되었다. 토론과 스터디를 반복하며 어느 한쪽의 희생적 양보를 통해 합일점을 찾고 실천하려 하였으나 구체적 실천에 이르기도 전에 제헌의회 사건으로 김성식에 이어 김상현이 구속되고 정이환까지 연행되면서 이 모임은 와해되었다.

그 후 박기학과 정일영은 이 모임의 재건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신분이 정보기관에 노출되어 활동에 제약을 받고 인원규합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 노력은 수포로 돌아갔다.

제 5 절 노동조합결성의 확산

봉건적 회사경영을 뚫고 - 유화증권

1986년 5월 7일 유화증권노동조합의 결성은 부당해고나 근로조건 악화와 같은 다른 사업장에서의 원인과는 달리 인간미 없고 비전 없는 기업문화에서 기인하였다.

대주주의 독주로 인해 회사 조직원간의 의사소통이 가로 막히고 오직 대주주의 지시에 의해 주요업무는 물론 사소한 일까지도 따라야 하는 전근대적인 경영을 하였다. 그로인해 기존 직원들은 물론이고 새로 들어온 신입사원들마저도 봉건적 회사경영에 반발하였다.

몇 개월 동안의 준비 과정을 거쳐 신입사원 2명 포함하여 총 7명으로 노동조합 설립추진위원회를 만들었다. 비밀을 유지하며 최대한 많은 인원으로 노동조합을 결성하기 위해서 추진위원들이 빈틈없는 역할분담을 하여 속전속결로 처리기로 했다. 우려와는 달리

조합결성 때까지 40명 전원이 완벽하게 비밀을 유지했다. 연고를 통하여 직원을 채용하고 전 직원이 100여명 정도인 소규모 회사에서 비밀을 유지하기는 장담할 수 없는 일이었다.

노동조합은 설립하였으나 회사는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았다. 노동조합의 자체역량만 가지고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것은 요원한 일로 생각되었다. 다행스럽게도 노동조합 부위원장인 유동조는 노동운동에 이미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학생운동의 경험도 있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조합 활동의 방향과 당면한 문제에 대한 극복방안에 대한 의견을 시원스럽게 개진하였다.

하지만 대다수의 노동조합 간부와 조합원들은 노동조합의 필요성은 느끼면서도 노동조합 활동을 어떻게 해 나가야 하는지는 잘 알지 못했다. 또한 회사가 여의도에 있었던 터라 금융권 타 노동조합과의 교류도 쉽지 않았다.

그러한 와중에 최근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진 한일투자금융노동조합을 찾아가 의견을 구했다.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설명을 듣고 정부기는 유화증권노동조합의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 단체협약의 체결보다도 노동조합의 단결력을 높이는 것임을 절감하고 우선 간부들만이라도 현장경험을 쌓도록 노동조합 활동을 이끌었다.

무엇보다도 시간을 벌 수 있도록 사측과는 큰 충돌이 없는 선에서 관계를 유지하도록 하고 장정에 부위원장, 유동조 부위원장 등과 함께 외부 노동운동 단체와의 교류를 확대해 갔다. 특히 다른 노동조합의 투쟁에는 조합원과 간부를 섞어 10명씩 조를 짜 참여하기로 하고 실천하면서 조직의 결속을 다져갔다. 각종행사나 농성투쟁에 참가하면서 노동가도 배우고 다른 노동조합의 활동경험도 전수받았다. 무엇보다도 유화증권 조합원들이 투쟁에서의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금융노련의 연대투쟁을 학습의 장으로 활용하였다. 다른 노동조합의 투쟁의 장에 함께 참여함으로써 노동조합의 단결력과 투쟁력을 높여 갔다.

제별은 근로조건 개악도 마음대로였다 - 범한화재해상보험노동조합

범한화재해상보험노동조합은 85년 5월 1차 노동조합 1차설립 실패와 85년 9월 2차 설립 실패 이후 1986년 5월 28일 늦은 저녁시간에 전국금융노동조합연맹 사무실에서 발기인 31명으로 설립되었다. 새로 럭키그룹에서 부임한 부사장은 정년이 임박한 고참 부장 4인의 책상을 사무실에서 치워버리고, 종업원들의 기본임금을급여를 기본급과 시간외 수당으로 분리하여 결과적으로 기본급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상여금을 삭감하였다. 이로 인해 회사 분위기는 일상적인 신분불안과 임금삭감에 따른 불만으로 가득 찼다. 당시 범한화재에는 회사취업규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서장급 이상 간부들의 철제 책상서랍 속에 자물쇠로 잠겨 보관되고 있어, 근로기준법에 종업원에게 비치하도록 되어있으나 일반 종업원들은 취업규칙의 의미와 존재 자체에 대해서도 알지 못했다. 이를 악용하여 회사는 연·월차 휴가수당의 폐지, 퇴직금 누진제 폐지 등 계속적인 근로조건 개악을 자행하였다. 노동조합을 설립하자였으나 회사는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고 부당한 인사조치와 탄압으로 일관하였다.

보험단노동조합협의회가 86. 6. 17일 범한화재해상노동조합 탄압행위에 공동으로 대처하기로 하고, 조합활동을 방해하는 부당노동행위를 즉각 중지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하였다.

비폭력, 평화적 투쟁 단식투쟁 - 대한보증보험

86년 6월 17일 2/4분기 노사협의회를 앞두고 망원동의 위원장 하숙집 집들이라는 명목으로 운영위원 분회장 약 25명이 모인 단합대회가 개최되었다. 80년 5공의 등장과 함께 취임한 군 출신 사장은 중임 임기 만료를 앞두고 3연임을 위해 노력한다는 풍문이 돌고 있었다. 그에게는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노사협의회였고 직원들은 그의 3연임을 우려하고 있었다. 권위적인 사장은 취임 이래 노동조합 상근간부 1명을 일방적으로 축소시킨 상태였다. 은행과 같은 수준에 맞추어 지급하기 위해 예산에 책정해 놓은 체력단련비를 지급여부는 사장의 고유권한이라면서 2년씩이나 지급하지 않았다. 모든 간부들이 내심으로는 사장의 횡포에 분개하고 있었으나 쟁의를 통해 해결하자는 제안에는 모두들 머뭇거렸다. 결자해지라고 이번 기회가 아니면 다시는 기회가 없다는 위원장의 간곡한 설득에 모두들 한 번 해보자고 하였다. 직원들의 폭넓은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쟁점사항을 정리하여 노사협의회에 상정하여 관철되지 않으면 단체행동을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노동법상 합법적 쟁의는 사실상 봉쇄되어 있었다. 공안당국의 부당한 개입을 피하기 위해서는 규약과 단체협약, 사회 상식에 입각한 가장 합리적인 투쟁 방법을 채택하기로 하였다. 조합원의 참여를 위해서는 임시조합원총회 소집과 준법투쟁으로서 정시 출퇴근 운동을, 위원장은 비폭력 평화적 투쟁의 상징인 단식투쟁을 도입하기로 결정하였다.

6월 24일 노사협의회는 결렬되었고 경과보고를 위한 임시조합원총회가 개최되었다. 임시조합원 총회에서 1)노동조합 상근간부 1명 추가, 2)위로휴가 연중실시, 3)하계 단련비 지급, 4)임금에 관한 보충협약 체결(상여금 지급 기준 변경이 주요 내용)등 4개항이 관철될 때까지 위원장은 단식농성을, 조합원은 준법운동을 지속하기로 결의하였다. 정시 퇴근 후 개최되는 임시총회는 경과보고를 위하여 격일 간격으로 정회 및 속개가 거듭되었고 원거리 지방점포는 준법운동만 하였다. 단체행동은 일사불란하게 진행되었다.

그러나 사장은 노동조합간부들을 개별적으로 불러서 회유하는 등 노동조합의 분열만 획책하고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하였다. 주요 관심사항에 대한 회사와 조합의 입장표명을 비교하는 유인물을 전 조합원에 배포하면서 조합원의 열기는 더욱 높아갔다. 민요기 금융노련 위원장도 장기 단식 농성사태에 대하여 회사를 항의방문하고 회사의 무성의한 대화 자세를 질타하였다. 관계기관에서도 조사를 나왔다. 7월 2일 사건이 외부에 확산되는 등 사태가 악화될 조짐을 보이자 회사는 타협안을 제시하였다. 결국 요구사항 중 노동조합 상근 1명은 즉시 충원하고 위로연성휴가는 연중 실시키로 하였으며 하계단련비 지급과 상여금 지급기준 변경의 긍정적인 검토를 회사는 약속하였다. 난상토론 끝에 그 정도 선에서 8일간의 단식은 마무리되었다. 3연임에 실패한 사장은 퇴임하기 일주일 전에 갑자기 노동가요를 가르킨 신진영 쟁의부장은 울산으로, 노동조합 와해 지시를 눈물로 거부한 황민연은 포항으로 전근 발령했다. 그러나 회사의 권위적인 분위기는 본래의 분위기로 다시 회복되었다.

경영자율 외치며 - 비시카드노동조합

비시카드사는 5개 은행들이 신용카드 업무를 각각 수행할 경우에 처리의 비효율성과 전산 시스템 등의 투자 중복을 막고자 5개 시중은행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협의회 성격의 신용카드 업무 프로세싱 대행 회사이다. 따라서 주주은행의 저축부장이 돌아가면서

비상임 대표이사를 맡는 경영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그 당시 금융권 전체적인 측면에서는 관치금융에 대한 저항이 거셀 시기였기에 관치금융의 연장선에 있는 비시카드의 경영자을 쟁취를 주된 목적으로 하여 노동조합의 결성을 시도하였다. 회사는 전무이사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었지만, 5개 은행의 책임자들이 모여 경영과, 업무의 중요한 결정을 하는 “운영위원회”가 실질적인 주도권을 가지고 있어 심지어는 대리 한명을 승진시킬 T/O결정도 운영위원회의 승인이 있어야 하는 등 회사 경영의 자율성이 극히 제한되어 있었다.

86년 12월, 초대 위원장인 남을우가 노동조합을 결성하기 이전에도 몇 차례 노동조합결성 시도가 있었다. 그러나 초기 비시카드는 임직원의 연고를 통하여 지인들로 알음알음 입사한 직원들이 많아서 노동조합결성을 위한 사전 모임들이 곧바로 하루도 못가서 회사에 알려져 번번이 노동조합결성이 실패하였다. 이러한 회사의 분위기를 감안해 남을우는 노동조합 설립 6개월 전부터 전 직원을 일대일로 극비리에 직원들의 사전 동의를 구해 놓고 실행하는 일만을 남겨두고 있었다. 1986년 12월 22일, 그날은 운영위원회가 열리고 있었다. 운영위가 끝나고 나면, 의례적으로 회사 간부들이 운영위원들과 함께 저녁 회식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그날을 D-Day로 했다. 노동조합결성을 함께 주도한 주요 간부들에게 5~6명씩 책임을 지게하고, 설립총회 장소를 광화문의 지하식당 “영도”에서 했는데 놀랍게도 사전 섭외한 직원들 중 지방출장중인 직원 1명을 제외하고 전원이 참석하는 기적을 보였다. 이러한 감동과 함께 비시카드 노동조합은 탄생을 했다. 그런데 문제는 설립 이후 회사의 반응이었다. 노동조합을 대화의 상대로 인정하지 않음은 물론, 직원 개개인을 상대로 조합 가입신청서는 초대 위원장인 남을우가 강요해서 억지로 쓴 것으로 하라며 회유를 하고, 노동조합에서 탈퇴할 것을 가족들까지 동원하여 협박을 하는 등 설립초기부터 탄압이 시작되었다. 이에 몇몇 노동조합간부를 중심으로 노동조합 자진 해산결의를 하자는 의견이 나오면서 조합의 위기상황이 진행되고 있었다. 그런데 초기 여성 부위원장 김승자와 여성부장 권선자 등 여성 조합원들이 오히려 회사의 회유를 거부하고, 당당히 맞서 주어 다른 조합원들에게까지 버티는 힘을 주어 회사의 노동조합 해산공작이 수포로 돌아가게 하는 장한 일들을 해 주었다.

하지만 회사경영진은 전임자 인정은커녕 노동조합사무실 공간조차 마련해주지 않았으며, 심지어 위원장에 대한 해고 위협도 서슴지 않아 노동조합을 파트너로 제대로 인정을 해주지 않아 회사 일과 조합 일을 동시에 해야 하는 2중고를 견뎌내야만 했다. 노동조합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노동조합간부들과 참다운 노동조합을 건설하기 위하여 각종 교육프로그램을 구상하고 조합원 집회를 통하여 노동조합의 중요성과 노동자 간의 유대의 필요성에 대한 교육과 함께 각종 노동가요와 노동법 관련 교육을 진행하였다.

그러나 민주화의 화신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 확인되면서 정국이 격랑으로 치닫고, 서울시청 광장에서 을지로, 명동 성당에 이르는 민주투쟁 현장을 여러 조합 동지들과 함께 참여하며 넥타이 부대의 한 일원으로서 열심히 투쟁하던 중에 6.29선언이 나왔다.

비시카드의 조합에도 반전의 분위기가 살아났다. 사무실과 함께 전임자를 인정했다.

비시카드의 숙원이었던 자율경영, 그 쟁취를 위한 긴 여정이 비로소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시키는 대로 일하고 주는 대로 받아라 - 신동아화재

87년 1월 19일 조동조합설립 준비 팀이 금융노련을 방문하고 이어 16인으로 구성된 조합설립준비위를

구성한 후 동년 1월 23일 오후 8시 금융노련 사무실에서 발기인 40인으로 노동조합을 결성하였다. 익일 노조임원진의 사장 면담에서 노동조합 설립취지를 설명하고 경영회의에서 사장의 적극적인 노조지원을 약속받았다.

그러나 사측은 2월 2일 부서장 1인은 부서원 전원이 노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관리부서 과장 2인은 노조 결성을 사전에 막지 못했다는 조합설립에 따른 관리자에 대한 인사보복을 자행하였다.

이에 신동아화재 노조는 2월 3일 '조합원에게 드리는 글'을 발표하고 인사조치의 철회와 노동조합의 단결만이 자신과 관리자를 보호할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전략)우리 회사는 오랜 동안의 침체에서 벗어나 물량 면에서 많은 성장을 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거기에는 직원들의 일방적인 권리 침해가 있어온 것도 또한 숨길 수 없는 사실이다.

어느 날 갑자기 상여금이 없어지고 연월차 수당이 깎이고 직급 수당이 깎이고 근무시간이 늘어나는 등의 불이익 조치를 한마디 말도 하지 못한 채 감수해왔다.

경영진의 논리대로 회사가 어려웠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흑자기조로 돌아선 올해부터도 노동조합이 필요 없다는 이유는 무엇인가? 경영진의 논리는 흑자만 나면 노조 측에서 요구를 안 해도 복리증진을 해주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근로자는 회사 측에서 주면 주는 대로 받고, 안주면 체념하고 마는 기계이며 노예인가? 우리가 원하는 바는 평등한 인격을 가진 근로자로서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요구하는 것이지 회사 측의 은전을 구걸하는 것이 아니다.

과연, 우리는 요 몇 년 사이에 이 회사에서 얼마나 인격적인 대우를 받아왔으며 회사의 주인 대접을 받아왔는가? 오로지 지시와 명령·복종관계만이 있는 숨 막히는 독선체제아래 있어오지 않았는가? 우리는 회사가 어려우면 어려운대로 잘되면 잘되는 대로 서로 대화와 협조로서 우리의 일터를 가꾸어 가자는 뜻에서 노조를 결성했으며, 경영진에서도 우리의 뜻을 받아들여 우리의 정당한 활동을 인정하였다. 이것이 바람직한 노사협조 관계가 아니겠는가?

그러나 작금의 사태는 과연 회사 측에서 이러한 약속을 이행할 의사가 있는지의 여부를 의심케 하고 있다.

3. 일부 부서 및 지점의 노조 가입 방해 행위에 대하여

알려진 대로 몇몇 특정 부서 및 지점에서는 각 부,지점장 및 총무들을 동원하여 결사적으로 직원들의 노조가입을 방해하고 있다. 이것은 1월 27일 경영평가 회의에서의 사장님 지시사항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며, 노동조합법 제39조 부당 노동행위 금지법에 저촉되는 것이다. 어떤 부서에서는 여직원 화장실 가는 것까지도 감시를 하고 어떤 회의에서는 책임자급의 참석을 금지하며 노조가입원들의 약점을 잡기위해 자료를 수집하는 등 웃지 못할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이러한 작태들이 회사의 인화단결에 어떠한 도움을 주며 회사발전에 무슨 영향을 끼치겠는가? 대체

노조가 결성된 이래 회사에 요구한 것이 무엇이 있으며 무슨 불법 활동을 한 것이 있는가?

우리는 회사 측에 이러한 부당노동행위를 즉각 중지할 것을 촉구하고 이러한 행위가 계속될 시 우리가 수집한 자료에 의거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로 고발할 것을 경고한다.

4. 2월 2일의 인사조치는 보복 인사조치이다. 즉각 철회하라.

2월 2일 순환보직에 따른 인사조치라는 이름으로 부장 1명, 차장 1명, 과장 3명 등에 대한 인사조치가 있었다. 이 중 차장 1명은 공석을 메우기 위한 것이며 과장 1명은 예정된 인사였다는 점에서 논외로 할 때 부장 1명, 과장 2명에 대한 인사는 누가 보아도 노조결성에 따른 보복인사라는 감을 짊어진다. 부장 1명은 그 부서원 전원이 노조가입을 했다는 이유로, 관리부서 과장 2명은 노조 결성을 사전에 막지 못했다는 책임을 물은 것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그들이 노조결성과 무슨 관계가 있으며, 또한 조합활동에 따른 책임을 져야할 이유가 무엇인가? 더군다나 사용자의 책임자 급도 아니고 실무 과장급들에게 책임을 물었다는 것이 직장 윤리상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우리는 이번 인사조치의 근본 이유가 중간간부(부실, 차장, 과장)들에 대한 간접적 압력에 있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기존 노조가입원의 소속부서장에 대한 문책인사의 예고이며, 앞으로 노조가입원이 있을 시 책임을 물겠다는 경고의 의미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렇게 부서장과 각 부하 직원들 간에 감시하고 반목하는 사태를 만들어야 회사가 발전하는가? 이것이 상하간의 의사소통 원활을 위한 조치이며, 상하 간에 존경심과 애정을 가지고 일 할 수 있게 하는 조치인가? 왜 중간 간부층들이 그들의 능력밖에 있는 사유로 부하직원들의 정당한 행동에 대한 속죄양이 되어야 하는가? 중간간부층이 사원들에 대한 감시자인가?

그들의 고민과 고충을 풀어줄 능력을 가진 해결사인가? 우리는 이러한 조치가 회사 발전과 노사협조에 하등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지적하며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5. 우리의 단결만이 우리 자신과 우리의 부서장을 보호할 수 있는 길입니다.

우리는 위와 같은 그리고 예상되는 부당한 조치를 당하지 않으려고 노조를 결성했습니다.

우리의 힘은 오로지 우리의 단결에서 나옵니다. 친애하는 사우 여러분 용기를 가지고 동참합시다. 그 길만이 우리가 살고 회사를 살리는 길입니다。」²⁾

이후에도 사측은 계속적인 노조탈퇴 등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였다. 이에 위원장은 노동부 중부지방 사무소를 방문하여 근로감독관을 면담하고, 사측의 상무를 만나 탈퇴권유행위 및 부당노동행위 중지를 촉구하였다.

2) 신동아화재해상보험노동조합, 「신동아화재 단식을 끝내면서」, 『활동보고 1987.1.23~1992.12.31』, 주야인쇄기획, 118쪽

이런 과정에서도 부산, 부산중부지점 40여명이 조합에 가입하였고, 금융노조 위원장, 노사대책국장이 사장과 면담하여 노조에 대한 협조와 탈퇴권유 등 부당노동행위를 중지할 것을 촉구하였다. 2월 13일 위원장은 보험단노동조합협의회에 참석하여 신동아, 범한화재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대책을 협의하였다.

최초의 사장의 약속과는 달리 교묘하고 지속적인 노동조합 탄압과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해온 사측은 3월 중순 노동조합 운영위원인 고태직 동지를 연고도 없는 벽지로 발령 조치하였고, 이에 노동조합은 수차례에 걸쳐 인사발령철회 및 재고를 요청하였으나 거절되었고 고태직 동지의 담당임원은 적반하장으로 인사발령에 대한 재고를 요청하려고 자택을 방문한 위원장과 간부에게 오히려 고문행위라느니, 죽여버리겠다는 등 폭언과 협박을 서슴지 않았다.

「(전략) 그동안 평화적인 대화와 노사 간의 신뢰와 협조관계를 위해 인내로 노력해온 우리노동조합은 이제 흑자결산과 단식을 끝내면서(중략) 일체의 법적·도의적 책임을 전적으로 회사 측에 있음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1. 부당노동행위를 즉각 중지하고, 부당조치들을 원상 복구시킬 것
노조설립이후의 일련의 부당인사발령조치, 조합가입의 탈퇴강요 및 가입자 명단파악과 불이익 예고 등 공포분위기 조성, 가입방해행위, 폭언, 폭행, 회유, 감시.
2. 정상적인 노동조합활동을 보장할 것
전임간부 및 사무실 배정 등 실질적인 활동보장에 협조할 것
위원장의 지방지점 분회출장을 저지, 휴가원처리거절, 무단결근 처리 등은 정상적인 노조활동을 방해하는 처사임
3. 단체교섭과 단체협약체결에 성의 있게 임할 것
사장이 공석에서 친명한 약속이 수일 만에 일방적으로 파기되어 노조탄압을 자행하는 등 상호불신풍토에서는 대화와 교섭이 이루어 질수 없다, 향후 노사쌍방 간에 상호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성의 있게 교섭과 단체협약체결에 임해야 할 것이다.」³⁾

이에 노조는 위와 같이 요구하며 3월 16일~17일에 걸친 위원장 단독 철야농성과 이어진 다수의 조합간부들이 함께한 16일간의 중식 단식농성을 결행하고 4월 1일 단식투쟁을 마무리하였다.

신동아화재 노동조합 위원장 허장의 별명은 “이것 보세요”였다. 사장과 회의석상에서 늘 “이것 보세요”라고 서두를 꺼내면 다른 사람이 말할 틈을 주지 않고 집요하게 설득하려고 달려드는 허장 위원장의 탁월한 재주에 사장은 기겁을 하곤 했다고 하였다.

해고자를 복직시켜라 - 범한화재해상보험

86년 12월 31일 노동조합 쟁의부장 이상재가 해고되었다. 회사의 치밀하고 지속적인 분열공작 속에서 노동조합 간부들조차 심한 분열양상을 보이고 있었다. 해고자복직투쟁을 우선 해결하자는 박이준 위원장의 주장에 동조하는 간부들이 오히려 소수파로 전략해 있었다.

금융노련의 경고와 보험단협의회의 강력한 항의성명에도 회사측이 완강히 버티고 자체

3) 신동아화재해상보험노동조합, 『활동보고(노동조합창립 6주년을 맞으며 1987. 1.23~1992. 12.31)』, 주야인쇄 기획, 118쪽

노동조합간부들의 분열상이 극에 달하여 자체조직의 힘으로는 더 이상 희생의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뜻을 같이 하고 어떠한 행동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은 박이준 위원장, 김광성 회계감사, 해고자 이상재, 송해주 쟁의차장 정도였다. 그냥 불씨만 살아 있는 정도였다.

투쟁에 즈음하여 주변을 정리하여 보면 다음과 같았다. 현대해상노동조합 투쟁을 열심히 지원하였고 의욕적인 활동을 하고 있던 보험단노동조합협의회가 강력한 지원세력으로 역할을 할 수 있었다. 금융노련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보험단 의장인 자동차보험 권세원과 연맹 회계감사를 맡고 있던 대한보증보험 김국진이 있었다. 금융노련은 투쟁적인 면모를 보이기는 어려웠으나 당국의 강권발동을 억제하고 당국의 추이를 적절하게 통보하여 주어 투쟁의 수위조절을 가능케 하였다. 그리고 연합협의회가 다음의 후원자가 될 수 있었다. 연합협의회 의장인 산업리스 최재호 위원장은 반백의 머리로 연합협의회의 중심역할을 맡고 있었다. 석탑노동상담소 장명국 원장은 노동법관련은 물론 모든 투쟁에 대한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특히 그는 여성단체 정강자씨 등에게도 연락하여 지원을 당부하였다. 다음은 스타디그룹이 있었다.

비밀스럽게 운영하고 있던 스타디그룹에서 도움요청을 받고 범한화재 해고자 복직투쟁의 참여여부를 의제로 상정하였다. 2월 중순 명동 YWCA골목의 음식점에서 전재주, 정일영, 홍순계, 곽태원, 현기대, 유동조, 이상학은 이상재를 참석시켜 그 동안의 경과를 들어 본 후 노동조합을 통한 투쟁은 대중 동력을 발굴하고 성장시키는 데에 중요하므로 이에 적극 참여하자는 결론을 내렸다. 그리고 우선 노동조합 간부인 정일영, 홍순계, 곽태원, 현기대, 유동조가 복직싸움에 적극 참여하기로 하였다.

87년 3.1절 공휴일의 휴식을 일찍 마친 이들은 김광성의 집에 모여 저녁식사를 하고 신림동의 여관으로 갔다. 각오를 흐트러뜨리지 않도록 함께 자고 다음날 곧바로 금융노련으로 향하기로 약속되어 있었다. 당사자인 범한화재의 박이준, 김광성, 이상재, 송해주, 현대해상의 김형철, 홍순계, 고려화재의 전광우, 윤여각, 한일투자금융의 정일영 등 10여 명은 늦게까지 내일 할 일을 점검하고 자정을 훨씬 넘겨 서너 개의 방에 나뉘어 잠을 청하였다.

그러나 대부분 온갖 걱정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다. 노동쟁의조정법 제3차 개입금지 조항이 이들을 위협하고 있었기 때문만은 아니었다. 실패할 경우 무엇보다도 조직과 동료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주기 때문이었다. 구로연대투쟁으로 많은 노동자들이 구속되고 여러 개의 사업장이 폐쇄되었으며 노동조합도 파괴되는 것을 일찍이 보아왔던 것이다.

신림동의 여관에서 함께 밤을 지내고 다음날 담담한 마음으로 금융노련으로 향해 각자 맡은 일을 시작하였다. 박이준 위원장이 범한화재 본사에 혼자 들어가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가는 취지의 성명서를 배포하였고 나머지는 바로 옆 건물에 있는 금융노련 사무실에 들어갔다.

범한화재노동조합을 희생시키기 위해 농성을 시작하겠다고 하였으나 금융노련은 노동관계법이 규정하고 있던 사업장내 쟁의를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미 노동조합간부에서 마저 불과 4명 미만의 소수로 전락해 버린 범한화재 노동조합으로서 가능하지도 않았으며 현대해상의 경우 백 명이 넘는 조합원도 사업장 내의 구사대를 이겨낼 수 없지 않았던가? 더구나 다른 노동조합 간부들이 범한화재 사업장에 들어가 농성을 하는 것도 더

어렵지 않은가? 얼마 전 현대해상쟁의를 지원하며 관계기관으로부터 과격한 노동조합들을 양성한다는 소리까지 들어온 금융노련 윤완섭 위원장은 금융노련을 투쟁장소로 선택하는 데 흔쾌히 동의하지 않았다. 이전부터 연대투쟁에 참여키로 했던 이들이 하나 둘씩 차례로 도착하였다. 창문 쪽에 앉아 있던 이한순 여성부장이 눈을 깜박거렸다. 계속 버티라는 신호였다.

금융노련 간부들과의 여러 가지 상황점검과 분석을 포함한 줄다리기는 12시쯤 되어서야 끝이 났다. 금융노련 윤완섭 위원장이 마지막 결단을 내리고 연맹에서의 투쟁이 시작되었다. 당사자보다도 제3자가 더 많이 참여한 그야말로 연대중심의 투쟁이 시작된 것이다.

박이준 위원장과 이상재는 계획된 단식을 하였다. 김광성과 송해주는 먹으면서 힘을 비축하여 뛰기로 하였다. 사후에 소식을 듣고 방문한 보험단 노동조합과 연합 노동조합 간부들이 하나둘씩 들러 농성자를 격려하며 뜻을 같이 했다.

농성장의 벽에다 지난 1월 발표된 보험단노동조합협의회의 성명서를 붙였다. 바로 그 옆에는 연합협의회 소속 8개 노동조합 대표자들이 보험단협의회 성명을 지지하고 이에 동참할 것을 밝히는 성명서가 나란히 붙여졌다. 연합협의회 의장을 맡고 있던 산업리스 최재호 위원장의 연락을 받고 달려온 것이다.

성 명 서

우리는 전국금융노동조합 회원조합으로서 범한화재해상보험 노동조합에 대한 범한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1987년 1월 발표된 보험단노동조합협의회 성명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며 이에 적극 동참할 것을 성명한다.

1. 범한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는 부당해고를 즉각 철회하고 노동관계법령에 의거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하라.
2. 전국금융노동조합 연맹과 노동부는 노사합의 사항을 무시하는 범한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라.
3. 우리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는 어떠한 세력과도 끝까지 투쟁한다.

1987년 3월 2일

(한국산업리스 최재호, 은행연합회 이연조, 금융결제관리원 김은규, 금융연수원 임찬호, 부국상호신용금고 김범기, 한일투자금융 정일영, 비시카드 남을우, 저축추진중앙위 하균홍, 한국개발리스 강운중, 유화증권 정부기)

농성 다음날은 박종철 49제였다. 박종철 49제를 앞두고 농성을 선택한 것은 시국사건과 연관시켜 회사와 관계기관에 은근히 부담을 줌으로써 짧은 시간 내에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전술이었고 처음부터 정보기관과의 보이지 않는 신경전이 벌어졌다.

간부사원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구사대를 동원하여 금융노련 출입을 봉쇄해 놓고는 “극소수의 주장이다. 노동조합의 다른 동조자가 없지 않느냐?”고 회사 측이 주장하는 가운데 시국사건과 관련될 것을 우려한 관계기관은 범한화재 당사자 4인과 상급단체인

금융노련 간부를 제외한 나머지 '제3자'들을 밖으로 내보낼 것을 금융노련에 종용하였다. 87년 들어서는 연맹이나 노총은 '제3자'의 범위에서 제외되어 있었다. 그 전에는 연맹이나 노총도 법률적으로 '제3자'였다. 이날 오후가 되면서 '종철이를 살려내라!'는 학생 시위대들의 구호가 농성장 안에까지 들려왔다. 금융노련 김성철 부위원장은 관계기관의 눈을 피해 보험단 간부들에게 범한화재 조합원을 농성에 합류시킬 것을 은밀히 부탁하였다. 석간 중앙일보에 처음으로 기사화되었다. 현대해상노동조합 농성 이후 작게나마 언론에 보도되는 것은 노동조합에 큰 힘이 되었고 신문을 스크랩하여 여러 사람이 돌려보곤 하였다.

농성이 3일째 장기전으로 접어들면서 바깥의 조합원을 농성장 안으로 진입시키는 일이 중요한 관건이 되었다. 우선 농성장 주변에까지 와서 서성이던 범한화재 구사대를 몸싸움을 벌여 연맹로비에서 건물 밖으로 밀어냈다. 이 때 기동경찰 300여명이 출동하여 농성을 강제 진압할 듯 무력시위를 하였으며 범한화재 회사 측은 금융노련 주변경비를 더욱더 강화하였다. 이날은 9개 보험단 노동조합과 16개 금융권 노동조합이 동조농성에 참여했다.

농성참여자를 늘리기 위해 평소 직원들과의 접촉을 많이 해온 박이준위원장과 김광성은 지속적인 전화통화를 하여 농성지지 성명을 이끌어 내고 이경숙 등으로 하여금 참여의사가 있는 조합원을 규합하게 하였다.

범한화재 지방 7개지부에서 단식투쟁을 격려하는 전문이 도착했다. 점포관리업무를 했던 박이준 위원장과 지점업무를 해왔던 김광성 회계감사가 지속적인 통화를 해 온 결과였다. 이들은 계속하여 회사의 조합원들에게 전화연락을 하며 농성에 동참할 조합원을 규합해 달라고 당부했다.

같은 어려움을 겪어 본 현대해상노동조합의 이영희도 학교 선후배관계 등으로 평소 안면이 있는 범한화재 내의 조합원들을 설득하여 범한화재 조합원들이 투쟁에 동참할 것을 독려했다. 다른 노동조합 간부들도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범한화재 본사직원들의 여론을 공략하였다.

서울지역 지점의 여직원회 '수목회' 회장을 맡고 있던 진정선이 13명의 지점조합원을 규합하여 농성에 동참하겠다고 알려왔다. 고려화재의 총무부장 윤여각이 만날 시간과 장소를 정하고 그들을 데리러 갔다. 윤여각이 전광우의 승용차로 두 번에 걸쳐 10명의 조합원을 지하주차장을 통하여 엘리베이터로 9층 농성장까지 진입시키는데 성공하였다. 승용차 트렁크와 뒷좌석에 바짝 몸을 숨겨 삼엄한 경계망을 뚫고 여성조합원 13명 중 10명을 동참시킨 것이다. 그러나 3명은 밖에 남겨둔 채 구사대에게 들키고 말았다. 이를 눈치 챈 구사대가 지하주차장으로 이목을 집중한 사이 이번에는 기습적인 정문돌파를 시도하여 나머지 3명을 진입시키는 데에도 성공하였다. 김국진, 전광우, 윤여각, 황원래 등이 앞장선 이 몸싸움에서 김국진이 손에 부상을 입기도 하였다. 회사는 금융노련 주변을 그야말로 철통같이 에워쌌다. 속속 농성합류를 희망하는 조합원이 늘어났으나 더 이상 금융노련 진입이 쉽지 않았다.

지점조합원 13명의 농성합류로 농성조합원이 크게 늘어나고 이 소식을 접한 본사의 조합원이 동요하기 시작하자 회사는 크게 당황하였다. 당황한 회사는 금융노련 간부들이 모두 자리를 비우고 최소한의 인원만 남아 있는 점심시간을 택해 농성 강제해산 작전에 돌입하였다. 손에는 가죽장갑을 끼고 빠루, 망치 등으로 중무장한 70여명의 구사대는 걸어 잠가 놓은 농성장 출입문을 부수고 쳐들어왔다. 박이준 위원장, 김광성, 송해주, 현대화재

김형철과 고려화재 전광우가 팔이 등 뒤로 꺾이거나 네다리가 바짝 들린 채 끌려 나가거나 납치당했다. 이상재는 엘리베이터로 끌려 나가다 도중에 빠져 나와 계단으로 다시 뛰어 올라갔다. 고려화재 윤여각과 보증보험 김국진 등 거구들은 납치를 면했다. 13명의 여성조합원들은 “흔들리지 않게”를 부르며 스크림을 짜고 버텨서 그 중 11명은 납치를 면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여성조합원 전정의가 실신하고 김광성은 빠루에 맞아 을지병원에 입원하였다. 이러한 백주대로의 납치사태를 경찰은 그저 지켜보기만 했다.

이 만행에 대해 금융노련은 분개했다. 범한화재 구사대의 금융노련 난입난동 사실을 전 조직에 알리고 연맹사무실 난입난동 규탄대회 개최를 전 조직에 하달하는 등 총력투쟁을 결의하였다.

이에 앞서 농성에 동참하겠다고 알려진 조합원은 박이준 위원장과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던 김진희를 포함하여 모두 8명이었다. 고려화재 전광우와 한일투자금융 정일영은 이른 새벽 날이 밝기 전 을지로 입구와 외환은행 앞에서 이들을 만나 한일투자금융강당에 조용히 숨겨두고 있었다. 오전에 전광우와 함께 2명을 트렁크에 실어 진입을 시도하였으나 워낙 경계가 삼엄하여 중간에 되돌아오고 말았다.

회사 강당에 대기하고 있는 범한화재 여성조합원 8명에게 김밥과 빵 우유 등으로 점심식사를 제공하고 잠시 조합사무실에 들른 정일영에게 금융노련 사무여직원이 다급한 목소리로 구사대의 난입소식을 알려왔다. 일부 구사대가 한일투자금융으로 갔다는 말도 덧붙였다. 강당으로 뛰어 올라가 여성조합원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는 금융노련으로 달려갔다. 농성장에는 박이준 위원장을 비롯하여 대부분이 끌려 나간 채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고 납치를 면한 조합원들도 허탈한 표정을 하고 있었다.

이 와중에서 이상재는 정일영에게 8명의 조합원을 이끌고 노총에 가서 농성을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회사로 돌아온 정일영은 이호용 부위원장에게 금융노련의 구사대 난동사태를 전달하고 이상재가 노총에서의 농성을 부탁한다고 전하며 의견을 구하였다. 그는 노총에서의 농성에 반대하며 힘을 한 곳으로 모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동아투자금융을 통한 농성장 진입을 결행하자고 하였다. 회사 일을 잠시 접어 둔 그는 금융노련 반대쪽 출입구를 통한 금융노련 진입작전을 진두지휘하였다. 동아투자금융 친구한테 부탁하여 임원실 통과를 양해받고 조합간부 몇 명을 불러 모았다.

“한명씩 팔짱을 끼고...”

“고개를 숙여 들키지 않도록 조심해...”

“분산해서 알았지....”

건물 2층까지는 뛰고...

임원전용 엘리베이터로 7층까지

거기서는 다시 계단으로 9층까지 뛰어 가서

안에서 문을 열어 주어야 농성장으로 진입할 수 있었다.

“하나 둘 셋 넷

“다 왔어?”

“응 언니!

“광광!!

신동아화재의 허장 위원장이 안에서 문을 열어 주었다. 안도의 한 숨이 나왔다.

다시 8명이 더 합류하자 농성장은 다시 활기를 되찾았다. 납치를 모면한 여성조합원들과 이들은 서로 열싸안으며 바깥의 조합원들에게 동참을 호소하는 성명서를 눈물로 써

내려갔다.

범한노조 조합원 동지에게 보내는 성명서

3월 2일 박이준 위원장은 이상재 쟁의부장의 복직과 단체교섭체결, 시말서 무효를 목적으로 함께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이에 우리는 본사노조의 외면에 통탄하며 중부, 남부, 서부, 동부지점 여직원들은 간부들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악랄한 임원진의 탄압 및 철저한 경계망을 뚫고 농성장으로 진입하였다. 농성장소로 들어선 우리는 외부의 소문과는 달리 박 위원장과 쟁의부장은 4일째 단식으로 탈진상태에 있었고 더구나 600여명 조합원들의 협조가 없음에 더욱 의욕을 잃고 있는 상태였다. 그러나 일차 13명의 참여는 박 위원장과 김 감사님, 이 쟁의부장님, 송해주씨에게 힘을 줄 수 있었고 이에 합세하여 범한노동조합은 어떤 압력에도 굴복하지 않고 몇몇이 설 때까지 무기한으로 공동투쟁할 것을 다짐했다. 농장에 들어선 우리가 더욱 놀란 것은 노조원의 무관심에도 불구하고 전국금융노조산하 노동조합은 200여명이 참석하여 함께 연대투쟁을 벌이고 있는 일이었다. 그 상태에서 범한노조원이 한명도 참석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은 어떻게 변명할 수 있겠는가? 범한노조원의 양심은 매도되었단 말인가? 초창기의 단결과 의협심은 누구에게 넘어갔는가? 3월6일 오전 12시 40분경 모두 철야농성으로 피곤, 잠들고 있는 틈을 타서 모집인까지 7·80명이 완전 무장(장갑착용 및 빠루(쇠파이프))하고 들어와 이제까지 우리가 알고 존경해왔던 그들이라고 상상할 수없는 만행을 저질러 박 위원장은 끌려 나가 자택에 감금되었고 김광성 감사와 송해주씨, 여사원 2명(조경란, 최원희)이 끌려가 봉고차에 실려감으로 행방을 알 수없는 상태가 되었으며 남부지점 전정의가 기절, 의사를 요청했으나 회사의 사주를 받은 경찰관은 이를 무시하고 밖으로만 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우리는 아래의 사항을 요구하며 이에 서명한다.

1. 금융노조 대책위원회 노총위원장 및 노조대표는 구자경 회장의 공개사과를 요청하라.
2. 전 임직원은 자진사퇴하라.
3. 폭력을 휘두른 자는 처벌하라

이경숙, 강미이, 조혜정, 이봉조, 김도현, 허영란, 김재연, 김옥련, 오영화, 원종숙, 김진희, 김영순, 박점순, 김재연, 전정의, 구명숙, 조혜자, 최원희, 정 숙, 진정선, 허선자, 조경란

모두 협조합시다.

함께 살고 함께 죽읍시다.

범한의 의식 있는 조합원은 전원 동참하라.

눈물로 호소한다.

회사의 무자비한 탄압에도 끝까지 노동조합은 투쟁한다.

1987. 3. 6

범한화재노동조합일동

추신: 김광성 감사님은 현재 빠루에 맞아 을지병원에 입원중이라는 소식 접했음.

그 날 오후 납치되어 자택으로 강제귀가 당했던 박이준 위원장이 농성장으로 돌아오려 했으나, 구사대의 금융노련 포위로 돌아올 방법이 없었다. 부득이 고려화재 전광우의 승용차를 다시 이용하여 위원장을 트렁크에 싣고 금융노련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려는 순간 이를 눈치 챈 구사대가 차위에 드러누우며 겹겹이 포위하였다. 이 때 조합간부들이 우르르 몰려갔다. 백주에 도심의 대로에서 사람을 트렁크에 태운 차량을 사이에 두고 구사대와 노동조합 간부 간에 밀고 밀리는 쟁탈전이 벌어졌다. 금융노련 인근의 국민은행, 산업은행, 상업은행, 한일투자금융 등 산하 노동조합 간부들이 속속 가세하면서 사태가 심각해지자 경찰이 개입하여 위원장을 트렁크에 실은 채 차량을 남대문경찰서로 호송하였다. 박이준 위원장은 나중에 경찰의 호위 하에 농성장에 합류할 수 있었다. 한편 회사는 농성가담이 예상되는 서울 중부, 남부, 서부, 동부 지점 소속 여성조합원 20여명을 교육을 빙자하여 반도유스호스텔에 사실상 감금하였으나 이들은 식사를 거부함으로써 투쟁에 동참하였다.

그 날 퇴근시간이 되자 금융노련 농성장에 산하 노동조합 간부와 조합원 수백 명이 몰려들었다. 금융노련 출입구에서 도로까지 2중 3중으로 당당하게 도열하여 서서 범한화재 조합원이 택시로 건물 앞에 내리기만 하면 감싸 안아서 농성장으로 합류시켰다. 구사대와 몸싸움에서 이제는 거뜰히 이겨낼 수 있었다. 금융노련 농성장의 기세가 드높았다. 기관의 농성와해 공작도 계속 되었다. 농성대오를 지휘하던 정일영을 연행하려는 정보기관의 움직임이 포착되었다. 금융노련 오승일 차장은 이를 이상재에게 귀띔하여 주었고 정일영은 몸을 숨기며 이에 대비하였다.

여성조합원들은 당시를 다음과 같이 기억하고 있다.

우선 진정선은 당시 이들을 보살펴준 여성민우회 정강자씨의 고마움을 잊지 않으며,

“아무런 준비 없이 무작정 기습적으로 농성에 참여하다 보니 한두 가지 곤란한 것이 아니었다. 갈아 입을 속옷은 물론 잠자리뿐만 아니라 단식중인 이들 옆에서 식사를 해야 하는 등등, 무엇보다도 힘들었던 것은 회사의 연락을 받은 가족들의 설득이 가장 힘들었다.”

김진희는 말했다.

“본사에서는 여직원회 간부와 선배 여직원 일부가 이미 반대파쪽에 가세하고 있었고, 본사 근무 여직원 몇몇과 이 문제를 얘기해 보았으나 대부분 혼란스러워하고 있어, 평소 회사 일에서 남달리 헌신적이었던 박이준 위원장과 송해주의 농성소식을 듣고 혼자라도 동참해야겠다고 생각하고 농성에 참여하였다.”

가장 어린 막내로 농성에 가담한 김재현도

“어머니는 그런대로 이해를 하였지만 아버지는 끝내 낙담하셨다. 그러나 이미 농성에 참여하고 있던 때라 어차피 실패하면 많은 사람들이 해고될 것이라는 생각으로 끝까지 버텼다.”

규탄의 목소리가 럭키그룹 총수, 이를 방관한 경찰과 행정당국으로 번져가는 등 상황이 견잡을 수 없이 악화되자 관계기관은 회사 측을 압박하여 사태해결을 종용하였고 6박 7일간의 투쟁 끝에 회사는 마침내 무릎을 꿇었다. 이때가 토요일을 넘긴 3월 8일 일요일 새벽 1시였다. 금융노련 윤완섭 위원장의 입회하에 안기부, 보안사, 치안본부, 노동부 등으로 구성된 관계기관대책회의에서 회사는 해고자 이상재의 복직에 합의하였던 것이다.

이 연대투쟁은 그 자체가 참여 조합원의 교육, 훈련장이 됨으로써 원래 농성목적보다 더욱 소중한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

투쟁에서 승리하였다고 하여 범한화재 사업장이 정리된 것은 아니었다. 무엇보다도 농성으로 갈가리 갈라진 사업장 내부를 수습하는 것이 급선무였다.

새로운 흐름의 배경

이러한 투쟁의 배경에는 유신과 5공 정권하에서 학창시절을 보내면서 반독재투쟁에 직·간접으로 참여했던 이들이 생업을 위해 금융기관에 취업한 후 노동조합 활동을 통해서 만나 자연스러운 신뢰와 공감대를 형성하면서부터 노동운동의 새로운 흐름에 일조하였다.

여대를 졸업하고 크리스천 아카데미 활동을 했던 금융노련의 복지부녀국 차장 이한순은 중매를 서는 등 이들을 서로 소개시키고 연결하는데 적극적이었다. 71년 위수령으로 대학시절 제적되었던 김국진은 금융노련 회계감사로 활동하면서 금융노련이 방패역할을 하게하는 하는 한편 기존 노동조합간부들과 신진세력을 연결·융화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그 외에 대학시절 학내시위를 주도한 후배의 도피생활을 도와주다 안기부에 끌려가 며칠 동안 곤욕을 치렀던 한일투자금융 정일영, 대학 시절 야학에 참여하고 구로지역에 위장취업하였던 현대해상화재 홍순계, 대학 재학 중 80년 5월 23일에 광주관련 유인물을 배포하다 계엄포고령 위반으로 구속되었던 이상재, 76년 시위주동으로 대학에서 제적되었으며 민청련 활동을 했던 외환은행의 전재주, 대학 재학 중 80년 계엄포고령위반으로 수배되었던 이상학 등이 있었다.

86년 초여름 전재주의 제안으로 정일영, 홍순계와 함께 스타디그룹을 시작하고 여기에 이상학, 현기대, 광태원, 유동조 등이 함께하며 의식적인 민주화 세력을 넓혀갔다. 이 모임은 범한화재 해고자 복직투쟁이나 4.13반박성명에 적극 참여하였다. 6.29이후 노동조합활동방향을 두고 향후노동조합의 활동방향에 대한 의견조율에 실패하면서 스타디그룹은 활동이 위축된다. 비교적 오랫동안 노동조합활동을 같이 해온 일부 구성원이 관념적인 논쟁을 배제하고 중립적인 입장을 지키며 명맥을 유지하다 노동조합민주화실천위원회 창립과 사무금융노련의 설립을 계기로 공개적인 활동으로 흡수되면서 스타디그룹은 사실상 활동이 정지된다. 6. 29이후 압제기에서 벗어나 공개적인 활동이 활발해져 비밀모임의 필요성이 적어진 것이 그 원인이라고 할 수도 있다.

스타디그룹을 비롯한 기술에서 이들은 학생운동을 비롯한 자신들의 과거 경력에 대하여 이 글을 쓰면서 밝혀진 것이 대부분이다. 참고로 김국진이 위수령으로 제적되었던 사실이나 전재주가 민청련활동을 했다는 사실 등 여러 가지 과거 경력에 대하여는 이 글을 쓰면서 서로 확인한 사실이 대부분이다. 금융권의 당시상황은 그걸 먼저 밝히고 활동을 할 경우 대중으로부터 유리되거나 기피인물이 될 가능성이 컸으며 노동운동을 탄압하는 치안당국의 악선

전에 이용될 수도 있었기 때문에 또는 조직 보호 차원에서도 도움이 될 수 없었음을 참고하여야 한다.

제 2 장 넥타이 부대의 함성

제 1 절 4.13호헌조치 반대성명

노총의 독재자 옹호 역사는 또 다시 반복되었다 - 노총의 호헌지지 성명

87년 4월 13일 전두환 정권은 전 국민의 대통령 직선제 개헌요구를 묵살하고 대통령 간선제를 고수하겠다는 호헌선언을 발표하였다. 제도권 내 각종 단체는 앞 다투어 지지성명을 발표하였다. 한국노총도 김동인 위원장을 포함한 당시 16개 산별연맹 대표자 공동명의로 호헌조치를 찬성한다는 지지성명을 발표했다. 4월23일 갑작스럽게 서울 어느 음식점에서 있었던 이헌기 노동부 장관의 노총위원장, 16개 산별연맹 위원장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이장관이 4월 13일 발표된 대통령 호헌조치에 대한 지지성명을 강력히 요구하자 노총 측이 부랴부랴 “대통령특별담화는 사상 초유의 평화적 정권이양과 88올림픽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시의적절한 결단이라고 사료되어 환영한다. 또한 정국안정과 정치발전이 국민경제 발전과 민생치안에 절대 필요불가결한 일로 구태의연한 정쟁을 일삼는 정치인들의 맹성을 촉구한다”는 내용의 성명 문안을 작성하여 발표하면서도 “가급적 지지성명을 언론에서 다루지 말라”는 주문을 하였다.

4.13호헌조치 발표 후 이헌기 노동부 장관의 강압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이는 당시 대부분의 노동조합 간부와 조합원의 뜻과는 전혀 부합되지 않는 노동조합 최상층부의 일방적 반조직적 돌출행동이었으며, 또한 이것은 상층부 중심의 권력에 의존하는 노동운동의 한계를 보여주는 한심한 일이었다.

한국노총과 금융노련은 성명서 발표 직후 지지성명 발표에 대한 비난으로 몸살을 앓았다.

구로동 자취방에서

4.13 호헌조치 발표 이후 이상재는 한국노총이 호헌지지 성명을 발표하자 정일영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냥 있을 수 없지 않느냐는 것이었다. 그날은 슈어프러덕트 노동조합 행사가 예정되어 있었다. 그 행사에 유화증권 정부기, 현대해상 홍순계, 저축추진중앙위 하균홍, 신동아화재노동조합 허장 등을 비롯한 몇몇 금융권노동조합간부들이 같이 참석하기로 예정되어 있었다. 이상재를 그 쪽으로 오라고 하였다.

정일영은 이상재의 제안을 받고 현재의 조직역량과 결부시켜 여러모로 생각해보았다. 4.13조치에 관해서야 누구나 마음속으로 반대하고 있었지만 누가먼저 희생을 감수하고 행동할 수 있느냐와 얼마나 많은 조직이 참여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었다. 많은 노동조합이 참여하면 성공하겠지만 소수로 그치면 85년의 구로동맹파업처럼 무자비한 탄압을 불려와 조직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힐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행사가 끝나고 김경자의 자취방에서 모두 모였다. 4.13호헌조치 반대성명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했다.

“말보다 실천이 중요하다.”

낙서처럼 반대성명 문구를 써내려갔다. 노총의 4.13지지성명에 분노하고 격앙된 심정을 옆에서 불러주는 그대로 쓰고 모두들 장난처럼 서명하였다.

슈어프러덕트 김경자, 장복식, 박임순을 포함하여, 한국화장품 문춘화, 삼정필프 황대현, 금융의 이상재, 허장, 하균홍, 정부기, 홍순계, 정일영 등은 격하고도 장황한 내용의 성명서에 모두 서명하였다.

그러나 다들 속으로는 자신이 속한 조직의 사정과 결부시켜 생각해보았다. 다음에 어떻게 서명을 확대할 것인지와 절차상의 문제에서는 각기 의견이 달랐다. 대체로 산업별로 추진하자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다음날 스타디그룹에서도 이 문제를 더욱 심도있게 검토하였다. 정일영, 이상재, 홍순계는 전재주와 함께 성명발표에 따를 모든 상황에 대해 면밀히 분석해 보았다.

당시 스타디 그룹을 주도하고 있던 전재주는 4.13 호헌 반대성명 과정에 대하여 이렇게 쓰고 있다.

“87년 4월 13일 전두환 정권은 국민적인 대통령 직선제 개헌요구를 묵살하고 대통령 간선제를 고수하겠다는 호헌선언을 발표하였다. 당시 제도권 노동조합인 한국노총에서는 호헌지지성명을 발표하였다. 이때 정일영과 이상재가 호헌반대 성명을 조직하였다. 외환은행 후문까지 나를 찾아와 보여준 성명서의 초안은 상당히 길고 격했다. 정일영과 이상재는 이 성명서를 발표하고 체포되는 것을 각오하고 있었다. 데모를 주동하는 학생 때의 열의와 같았다. 그러나 나의 생각은 달랐다. 나는 당시와 같은 폭압적인 시기에 내부조직역량을 모두 노출시키고 일거에 붕괴시켜 버릴 수 있는 기명방식의 성명서 발표에 우려를 표명하였다. 아직 금융권 민주역량은 미약하고 겨우 4-5명의 각성된 활동가를 확보한 수준에 그치지 않는 상황에서 기명성명을 하는 것은 모험주의적인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당시 금융권에서 언더조직으로 운영하고 있던 스타디그룹이 민주화운동을 조직적으로 담당해 낼 유일한 비밀조직이었다. 나는 이 모임이 나중에 더 큰 역할을 해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 중에서도 정일영은 제2금융권 내에서 많은 사람들을 연결하고

동원하는데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었으며, 범한화재노동조합의 해고자 복직투쟁 과정에서도 주변 노동조합 간부들의 동원과 연대투쟁을 이끌어내는데 많은 역할을 감당해내면서 이미 상당히 노출되어 있었다. 나는 정일영이 성명서를 내고 구속되는 것은 당시의 역량으로는 큰 손실이 될 것임을 우려하였다. 나는 직장이라는 대중조직을 기반으로 투쟁하려 하는 우리가 학생운동과 같은 방법으로 투쟁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었다. 더구나 외환은행의 상황은 노동조합민주화 추진 세력을 확보하고 훈련하는 초기 단계였을 뿐 아직 노동조합 집행부를 장악한 상태도 아니었다. 우리가 해야 하는 운동은 성명보다는 군사정권에 결정적 타격을 가할 수 있는 투쟁이어야 하고 그때까지는 핵심역량을 보존하고 더 확대하는 일이 급하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여러 조직들의 서명을 받으려면 오랫동안 여러 노동조합간부들과 안면을 익혀온 정일영이 나서 는 수밖에 달리 도리가 없었다. 결론은 해방이후 정치적 전환기마다 행해온 노총의 어용적 행각을 이번에도 그냥 지나치는 역사적 과오를 범할 수 없다는 데로 모아졌다. 서명자는 동조하는 노동조합 위원장과 핵심간부들로 정해졌다. 결국 성명서 서명에는 노동조합 간부가 아니어서 공개활동이 어려운 나와 이상학은 제외하였고, 홍순계가 장문의 전투적인 성명서를 부드럽고 간단한 내용으로 바꾸었다.”

언론보도가 무엇보다 중요하였다.

회의에서 여러 의견을 수렴한 홍순계는 밤샘작업을 하여 부드러운 문구로 순화시킨 간략한 성명서를 작성하여 다음날 정일영에게 건네주었다.

한일투자금융 노동조합에서 허장과 정일영이 타이핑한 성명서에 먼저 서명하였다. 다른 조합의 서명은 정일영이 혼자 다니면서 받기로 하였다. 있을 지도 모를 탄압에 대비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였다. 두 명이 먼저 서명한 다음 성명서를 호주머니 깊숙이 집어넣고 범한화재노동조합, 현대해상화재노동조합, 대한보증보험, 유화증권노동조합을 차례로 방문하였다.

본격적인 서명에 앞서 정일영은 이상재와 함께 지금까지 여러 차례의 투쟁과정에서 자문과 도움을 받았던 장명국 석탑노동연구원장을 찾아갔다. 앞으로 서명을 확산시킬 계획에 관해서도 설명을 하였다. 그는 반박성명을 ‘깨지더라도 지는 싸움이 아니다.’면서 적극 지지하고 격려하면서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하였다. 생산현장노동조합에 대한 상담활동을 많이 해 온 그는 몇 가지 조언도 곁들였다.

성명을 발표할 주도세력이 학생운동 출신을 다소 포함하고 있는 금융·사무직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수도권 의 화학노련, 금속노련 소속 노동조합들로 확산시키기 전에 광주지역 노동조합을 먼저 서명운동에 참여케 하고 그 다음에 수도권의 생산현장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서명운동도 성공하려면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효과적일 것이라며 광주지역의 남해어망노동조합 임미령 위원장을 소개하여 주었다. 언론의 협조를 얻는 방법에 대해서도 여러 각도에서 조언을 하였다.

서명을 받은 노동조합에다 성명서 복사본을 남기고 정일영은 다음 노동조합으로 향했다.

"혹시 제가 정보기관에 연행될 경우 이 용지를 신문사로 보내주십시오. 모든 책임은 저에게 미루어 주시고 다른 것은 일체 모른다고 해주십시오."

수출입은행 김동균 위원장, 신용보증기금 장평기 위원장, 신한은행 김하원 위원장 등 은행권의 노동조합도 동참하였다. 정일영은 한 조합의 서명이라도 더 받기 위해 온 힘을 기울였다. 대규모 노동조합의 동참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김국진과 함께 나섰다. 흔쾌히 서명하기도 하였지만 오랜 시간의 설득과 권유에도 방법과 내용상의 문제를 들어 거절하기도 하였다.

신한은행 김하원 위원장이 제안한대로 상업은행 이용득 위원장을 만나러가다가 회사와 집으로 연락을 해본 정일영은 누군가에게 쫓기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다른 조합에도 들러야했지만 마음이 조급하였다. 자칫 지금까지 받은 서명마저도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성 명 서

우리는 1987년 4월 23일자의 한국노총의 “4. 13 대통령 특별담화 지지성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천명한다.

1. 노총성명은 노동자의 권익을 증진시키는 정치제도에 대한 진지한 고려 없이 정부의 일방적 요구에 의한 것으로서 노동자의 입장이 아니다.

2. 노총성명은 의사결정에 있어서 지극히 비민주적인 과정에 의한 것으로서 전체 회원조합 및 조합원의 견해가 아니다.

3. 노총은 구태의연한 정치적 자세를 탈피하고 이번성명을 즉각 철회하라.

1987년 5월 8일

전 국 금 융 노 동 조 합 연 맹

신동아화재해상보험노동조합	위원장	허 장
한일투자금융노동조합	위원장	정일영
범한화재해상보험노동조합	위원장	박이준
현대해상화재보험노동조합	위원장	김형철
유화증권노동조합	위원장	정무기
대한보증보험노동조합	위원장	김국진
현대해상화재보험노동조합	부위원장	홍순계
신동아화재해상노동조합	부위원장	현기대
범한화재해상보험노동조합	쟁의부장	송해주

범한화재해상보험노동조합	회계감사	김광성
현대해상화재보험노동조합	사무국장	곽태원
한일투자금융노동조합	부위원장	이호용
한국산업리스노동조합	위원장	최재호
비시카드노동조합	위원장	남을우
저축추진중앙위원회노동조합	위원장	하균홍
금융결제관리원노동조합	위원장	김은규
한국수출입은행노동조합	위원장	김동균
신용보증기금노동조합	위원장	장평기
범한화재노동조합	교선부장	이상재
신한은행노동조합	위원장	김하원

성명서 추가서명자 :

한일투자금융 김성인, 황희선, 이동길, 양용식, 우경오, 김지희, 김복영, 임영식,
 도석록, 조현필, 김의원, 이육근, 김석동, 유제화, 안세준, 박봉점,
 하여주

현대해상화재 백수관, 이정애, 이영희, 이혜영, 김기선

범한화재해상 김성호, 김진희, 이희근, 김진구, 박점순

신동아화재해상 손혁준, 김하동, 김인배, 류인주

더 이상의 추가서명을 포기하고 다음날 아침 일찍 신문사로 향하였다. 동아일보, 조선일보, 한국일보, 중앙일보 등 4대 일간지편집국을 차례로 방문하였다.

"보도해 주시겠습니까? 보도하기 곤란하다면 편집국장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자신에 넘치지는 않았지만 모두 보도를 약속했다. 언론기관의 보도협조를 마친 정일영은 유화증권 노동조합에서 미리 대기하고 있던 박이준, 허 장, 김형철, 정부기 등 노동조합 대표자들과 함께 한국노총을 방문하였다. 성명서를 본 김동인 노총 위원장은 '진정으로 노총을 위한 충고로 받아들이겠다.'고 하였다. 성명서를 전달하고 정일영은 동료들과 헤어져 광주로 향했다.

민주화의 본고장 광주

남해어망 임미령 위원장으로부터 지방관 동아일보에서 반대성명관련 기사가 삭제된 사실을 전화로 확인한 정일영은 신문 가판대에서 동아일보를 한 부 더 샀다. 광주에 도착하여 성명서 복사본과 반박성명 기사가 실린 신문을 임미령에게 건네주며 광주지역의 더 많은 노동조합들이 반박성명에 동참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남해어망 임미령 위원장은 이미 광주에서 ‘노동조합민주화추진위원회’ 모임을 하고 있었다.

“모임에 늘 도움을 주고 있었던 정득용 전도사로부터 갑자기 전화연락이 왔다. 서울에서 연락받은 것이 없었냐는 것이었다. 정일영의 연락 건이었다. 먼저 정 전도사를 만나 반대성명에 대한 내용을 듣고 서울에서 내려온 정일영을 만났다. 5월 8일 서울에서 발표된 성명내용을 보고 나는 함께 활동해온 삼양견업 안명순 위원장 광주어망 이명순 위원장 성화제망 위원장(?)과 광주 남동성당에서 모임을 갖고 일단 노동조합 명의의 성명을 발표하기로 합의하고 성명서를 작성하였다. 쉽게 성명발표에 합의할 수 있었던 것은 5.18 때의 마음의 빚도 있었지만 특이하게도 광주는 노동조합 운동보다는 민주화 운동이 훨씬 수월한 분위기였기 때문이기도 하였다. 작성한 성명서를 가지고 각 자의 사업장에 돌아가 간부회의를 열고 이 문제를 토의하여 간부들의 동의를 받은 4개 노동조합은 성명서를 언론에 공개하였다. 이 성명은 당시 광주에서 발행되었던 2개의 지방 신문에 보도되었다.”

광주에서의 호헌조치 반대성명에 함께했던 임미령 위원장의 기억이다.

또한 이 성명에 동참했던 삼양견업 안명순 위원장은 이렇게 간부회의 때를 기억하고 있다.

“남동성당에 모인 광주지역 ‘노동조합민주화추진위원회’ 4개 섬유노동조합 위원장은 임미령이 보여준 서울에서의 성명서를 보고 비슷한 내용의 성명서를 작성하여 각 자 사업장에 돌아가 간부들과 성명발표 건을 토의하였다. 워낙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던 때라 간부들은 이 성명이라도 발표하여야 앞으로 민주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성명서 발표를 적극 지지했다.”

성 명 서

“ 4.13 대통령 특별담화에 대한 4월 23일자 한국노총의 지지성명에 반대하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첫째, 노총성명은 회원조합 및 조합원 의사가 아닌 정부의 일방적 요구에 의한 관제적 성명이다

둘째, 노총의 지지성명은 전체 회원조합 및 조합원의 견해를 묻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으로서 비민주적이고 비자주적인 만큼 즉각 철회를 촉구한다

셋째, 노총은 관제의 굴레에서 벗어나 1천만 노동자를 위한 헌신적 권익보장기구로서 민주적, 자주적 활동방식의 영역을 스스로 확보할 것을 촉구한다

넷째, 정부는 노동자의 복지증진 및 노동조합 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노동관계법을 근본적으로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

1987. 5. 14

전국섬유노동조합연맹

남해어망 노동조합

삼양견업 노동조합

광주어망 노동조합

성화제망 노동조합

노동조합 소식지를 통해서

공동성명이 여의치 않았던 슈어프러닥트(위원장 김경자), 삼성필프(위원장 황대현), 세진전자(위원장 김정희, 사무국장 문광주), 삼성제약(위원장 김은임), 한국화학품(위원장 문춘화) 등의 노동조합은 자체소식지 등을 통하여 4.13호헌조치 반대입장을 천명하였다.

호헌조치반대 성명에 서명한 각 노동조합은 각자의 역량에 맞게 사업장내에서 은밀히 지지서명을 확대해 갔다. 하지만 반대성명에 공감하면서도 공개적인 기명식 서명에 참여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다. 우선 이미 서명에 참여한 각 노동조합의 간부들부터 서명에 참여하도록 서명을 확대하고 이어 조합원들까지 서명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범한화재노동조합에서도 간부회의를 소집하였다. 참석한 노동조합간부들에게 4.13호헌조치 반대성명에 대한 설명을 한 후 서명이 곤란한 일부 간부를 제외한 모든 간부가 서명에 참가하기로 하였다.

현대해상의 홍순계는 일차 성명에 서명한 후 간부회의에서 위원장이던 김형철이

“노동조합과 서명참가자의 안위가 걸린 일인 만큼 모든 간부가 함께 뭉쳐 어려움을 돌파해야한다. 아울러 전 노동조합간부가 서명하여 우리의 단호한 의지를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

라고 한말을 기억하고 있다.

성명서를 기안했던 홍순계로서는 기명식 공개서명의 위험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문제가 생길 경우 누구보다도 자신이 먼저 책임을 져야한다는 것을 굳게 결심하였다.

이영희 역시

“평소 부서에서 모범적으로 생활해온 홍순계와 김형철을 믿고 두려웠으나 올바른 일이라고 생각하여 선뜻 서명에 동참했다.”고 하였다.

“당시 비시카드사 사옥은 시청 앞 광장의 금정빌딩(과거 뉴코리아 빌딩)에 있었던 관계로 나와 비시카드 노동조합원들은 자연스럽게 1985년 5월 23일 미국문화원 점거사건과 1987년 6월 항쟁 등 역사적 사건 현장을 두 눈으로 생생하게 확인 할 수 있는 한 가운데 있었다.

미국문화원 점거사건 당시에는 노동조합이 설립되기 전이었고 당시에는 충격적인 반미운동의 현장이었던 관계로 밖으로 의사를 들어내지는 못하였지만 점심시간마다 롯데호텔 쪽으로 접근하여 미국문화원 창에 붙어있는 광주항쟁 관련 반미구호를 보면서 마음속으로 학생들에게 성원을 보내곤 하였다.”

비시카드 위원장 남을우는 반대성명 참여의 동기를 이렇게 말했다.

범한화재의 김진희도

“연대투쟁에서의 노동조합간부들에 대한 신뢰가 두려움을 극복하고 서명에 참여할 수 있는 힘이 되었다.”

고 하였다.

김성호는

“사실 처음 마음속에서는 겁이 났으나 다들 서명하니까 빠지기에는 좀 창피하고 해서 일단 서명을 했는데 나중에는 도리어 자부심을 느꼈다” 고,

유화증권의 정부기 위원장은 당시의 유화증권 노동조합 상황을 다음과 같이 기억하고 있다.

“우리 노동조합은 타 노동조합에 비해 자체 사업장 문제로는 이렇다할만한 쟁의가 없었다. 막상 4.13 호헌조치 반대성명에 전체 간부와 조합원의 기명식 서명에 참여하는 것은 심한 탄압이 있을 경우 단련된 소수의 인원은 감당할 수 있겠지만 오히려 나머지는 서명으로 인하여 더욱 위축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칫 노동조합마저 존립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위원장이 책임지는 선에서 대표로 서명에 참가하기로 하고 간부들은 위원장의 대표 서명을 조직적으로 뒷받침하기로 하였다.”

보도를 약속했던 신문 중에서 5월 8일자 석간 동아일보와 5월 9일자 조간 조선일보만 짤막하게 이 반박성명을 보도했다. 그것마저도 중간에 삭제되었다.

시국관련 내용이나 사건들은 보도지침에 따른 언론검열에 묶여 길들여진 언론에서도 제대로 보도하지 못했던 당시로는 이것은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그나마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가 이렇게나마 보도한 것은 대단히 용기 있는 일이었다. 조선일보에서는 며칠 후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가십도 게재하였다.

전국금융노련 소속 13개 노동조합이 노총의4.13특별담화지지성명에 대한 반박성명이 언론에 발표된 후 ‘당사자인 노총은 물론 주무부서인 노동부조차도 난감해하는 모습’, ‘그래서인지 노동부는 반박성명 이 발표되자마자 급히 성명서 원본을 구해보고 금융노련, 노총에 경위를 알아보는 등 분주’라고 하면서 87년 5월 10일 ‘노총은 묵묵부답 일관’이라는 제목으로 조선일보는 보도하였다.

겨우 두 개의 신문사만이 아주 짧게 보도했지만 그 기사는 폭발적인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금융노련 산하 13개 노동조합의 호헌반대성명은 여타 운동단체들의 반대성명과는

사뭇 다른 의미에서 큰 사회적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한국노총과 16개 산별노동조합의 지도부가 호헌지지선언을 한 가운데 제도권 노동조합들은 모두 침묵하고 있었다.

더욱이 재야단체, 종교단체, 학생조직 등에서나 반대성명을 발표하였지 합법적인 대중조직은 대부분 호헌지지성명을 발표하고 있었다. 그런 상황에서 한국노총에 소속된 노동조합, 그것도 안정희구 세력이며 중산층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금융권의 노동조합에서 전두환 정권에 반대하는 정치적 성격의 성명이 나왔다는 사실은 세간의 이목을 끌기에 충분하였다. 금융노련에 학생과 시민들의 격려전화가 쇄도하였고 서명에는 빠져있었지만 그동안 함께 해온 노동조합들도 환호성을 올렸다.

87년 5월 16일 “동트기 직전이 가장 어둡다”는 제하의 동아일보 칼럼에서 조영래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민주역량은 물처럼 스미는 것’

「<<전략>>작금 각계각층에서 표출되고 있는 우리 국민들의 민주역량, 물처럼 유연하면서도 스미지 않는 곳이 없어 마침내 모든 장벽을 허물고 제 갈 길을 가고야 말 것을 예감케 하는 우리 국민들의 힘, 그것을 믿기 때문이다. 작년의 개헌서명에 참여한 교수들이 그 후 당했던 갖가지 불이익을 고려한다면 13일 현재 전국의 시국선언 서명교수가 작년의 수준을 훨씬 넘어선 43개 대학 1천3백80명에 달했다는 신문보도는 어찌 보면 하나의 기적 같기도 하다.

이 대열에 대학교수와 성직자들만이 아니라 대학원생들, 문인들, 연극인들, 화가들, 영화인들까지도 대거 참여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새로운 시대를 향한 역사의 도도한 흐름을 실감한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금융노조 산하 몇몇 조합이 대한노총의 호헌지지 성명을 자기들의 뜻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나선 일이었다. 대기업에 소속된 봉급생활자들로서 이른바 「보통사람들」을 대변한다고 할 수 있는 은행원들이 보여준 이 같은 시민적 용기는 「현대자동차를 만들어 낸」 바로 그 한국민들의 높은 정치적 수준을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다 하겠다.

박해를 각오하고 발언할 수 있는 국민은 민주주의를 하기에 필요. 충분한 자격을 갖추고 있는 것이다.

요사이 얼마동안의 우울한 일들에만 사로잡혀 지나치게 낙담할 것은 없다. 원래 동트기 직 전이 가장 어두운 법이 아닌가.」

주례를 바꿔서 결혼식을 치러야 했다

서명조합에 대한 탄압도 만만치 않았다. 특히 신용보증기금, 신한은행, 수출입은행, 비씨카드, 대한보증보험, 금융결제관리원 등 정부 영향권의 기관이나 노동조합의 규모가 비교적 큰 은행권의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이 극심하였다.

그러나 탄압이 심할수록 노동조합의 호헌반대서명을 두고 조직화된 각 사업장에서는 그만큼 찬반토론이 활성화 될 수밖에 없었고 이것은 당시 암묵적으로 금지되고 있었던 개헌 논의를 전국적으로 조직화하는 근거를 제공한다는데 독재권력은 더 이상 탄압보다는

확산방지 쪽의 유화책을 쓸 수밖에 없었다.

당시 서명에 참여했던 비시카드 위원장 남을우의 얘기는 이렇다.

“이러한 와중에 국민 모두가 반대하는 4.13 호헌조치에 대하여 어용 한국노총이 지지한다는 성명에 대한 반대성명에 비시카드 노동조합이 참여할 것인지를 논의 했으나, 조합차원에서는 서명에 참여치 않기로 결의가 되었다. 그래서 남을우는 개인 신분으로 서명에 참여했는데 나중에 “비시카드 노동조합 위원장 남을우”로 기록하고 서명을 하는 바람에 조합에서 위임하지 아니한 서명을 남을우 개인이 참여하면서 노동조합 직위를 사용한 것이 잘못이라며 격한 내분이 일기도 했다. 회사에 돌아오자 해고하겠다는 협박과 함께 사표를 종용했다.

반대성명이 발표되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모 은행의 저축부장이 어쨌든 회사의 여러 가지 탄압 속에 몸을 잠시 피신하기로 하고 제주도에서 8일간 피신을 했다.(회사 규정상으로는 비 전임자였기에 무단결근에 해당되었음) 회사에 돌아오자 해고하겠다는 협박과 함께 사표를 종용했다. 안기부에 불려가 자회사인 비시카드사의 노동조합이 성명에 참여한 데 대해 호되게 책임추궁을 당하였다. 회사는 위원장에게 해고위협을 하며 자진퇴직을 강요하였고 홍성호 부위원장, 정원용 정의부장, 이봉기 교선부장, 김승자 여성부장 등 노동조합 간부들의 가족까지 회유하여 노동조합의 자진해산을 획책하였다. 노동조합은 위기에 처했고 어쨌든 회사의 여러 가지 탄압 속에 몸을 잠시 피신하기로 하고 제주도에서 8일간 피신을 했다(회사 규정상으로는 비 전임자였기에 무단결근에 해당되었음) 5월 18일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이 박종철 고문치사 축소·은폐 조작사실을 폭로하면서 수세에 몰린 정권은 서명운동에 대한 탄압을 더 이상 할 수 없었고 그 후에서야 우리 노동조합은 위기에 서 벗어 날 수 있었다.”

신한은행 김하원 위원장과 수출입은행 김동균 위원장의 얘기에 의하면 이렇다

“반박성명에 참여하지 않은 은행권 노동조합 집행부의 경우 경영진으로부터는 극진한 대우를 받은 반면 이후 집행부 선거 때마다 4.13호헌조치를 지지한 ‘어용’으로 맹공격을 받는 등 4.13반박성명 참여여부가 가장 중요한 선거쟁점이 되었다.”

당시 신용보증기금의 장평기 위원장은 이렇게 밝히고 있다.

“금융노련 내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항상 앞장서 왔던 정일영 위원장이 내민 4.13반박성명서에 당연히 힘을 더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서명하였다. 언론에 이러한 사실이 보도되자 당시 조합원 숫자가 1,500명 정도였던 우리 노동조합 사무실의 전화기에는 불이 붙었다. 여론은 두 갈래로 나뉘었다. 하위직급에서는 용기 있는 행동이라며 격려하는데 반하여 상위 직급에서는 이 사태로 정부가 T/O나 예산을 삭감할 것이라고 우려하였다. 관계기관으로부터 홍역을 치른 안승철 이사장은 청와대, 재무부 등 관계기관으로 부터도 엄청나게 시달렸고, 노동조합 사무실과 우리 집 근처에는 건장한 사람들이 진을 치고 있었다. 서명을 같이 했던 김하원, 김동균 위원장과 함께 강남의 허름한 여관방에서 3일간 은둔생활을 했다.

당시 사면복권되기 전의 김대중씨 사무실이 공덕동 로터리의 우리 회사 앞 제일빌딩에 입

주해 있었고 그 주변에는 기관원들이 하루 종일 진을 치고 있었다. 관계기관에서는 고향이 광주인 나와 김대중씨를 연결시키며 4.13 반박성명을 동교동의 사주에 의한 것으로 몰아가는 것이었다. 87년 5월 8일 성명 발표 후 15일후인 5월 23일에 나는 결혼식이 예정되어 있었다. 주례를 맡기로 되어 있던 이중재 국회의원에게 이 사실을 말씀드렸더니 4.13호헌조치의 부당성과 신랑의 용기를 주례사에서 언급할 뜻을 비치며 무척 기뻐하였다.

그러나 청첩장을 돌리기 며칠 전 남산에서 낯선 사람이 찾아와 이중재 국회의원을 주례로 모시면 결혼식이 원만치 못할 것이며 감사원으로 하여금 회사를 특별감사를 하여 직원 수백 명을 잘라버리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평생 한 번의 결혼식은 둘째 치고라도 직원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 노동조합 위원장이 오히려 수많은 직원을 위태롭게 할 것이라 생각하니 마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었다. 이중재 의원께 상황설명과 함께 양해를 구해 주례를 바꾸어 결혼식을 치러야 했다. 한편으로는 회유책도 병행되었다. KDI원장 출신의 안승철 이사장은 노사관계에는 다소 권위적인 분이였으나 이 사건으로 인해 아들 나이 또래인 위원장의 처신이 자신의 거취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였다. 노동조합의 대외활동을 삼가 달라고 당부하며 내부적으로는 노동조합의 요구를 미리 들어주기도 하였다. 전국에 독신자합숙소 설치, 신입사원의 2박3일의 노동교육시간 배정, 정년연장, 점포장급 해외연수, 국내 금융기관 중 최고의 임차보증금과 주택대여금 도입, 직원주택조합설립추진 등 굵직한 수확들이 있었다.”

4.13호헌조치 반대성명의 의의

5.8 호헌반대 성명은 여타의 운동단체들의 반대성명과는 다른 의미에서 사회적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제도권 노동조합들이 모두 침묵하는 상황에서 한국노총에 소속된 노동조합, 그것도 보수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금융노동조합에서 전두환 정권에 반대하는 정치적 성격의 성명이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이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에 충분하였다. 당시 신문에서도 금융권 노동조합들의 호헌반대 성명을 다루었다.

대학교수와 성직자들, 대학원생들, 문인들, 연극인들, 화가들, 영화인들의 연이은 시국선언에도 불구하고 개인이 아닌, 그 많은 합법대중단체 중 이름을 내걸고 호헌조치 반대의사를 표명한 조직은 전무하였던 때에 금융업종 소속 노동조합 간부들이 기명식 호헌반대성명을 발표하였다는 것은 ‘개헌’이라는 말도 꺼내기 어려웠던 당시로서는 충격적인 일이라고 밖에는 말할 수 없었다.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한 ‘4.13호헌조치 반대성명’은 소위 중산층으로 학생과 지식인, 성직자 중심의 기존 반정부 세력에 조직을 바탕으로 하는 노동조합 세력이 가세하면서 독재정권타도가 이미 서울의 심장부에서부터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전국적으로 알리는 계기가 되었고, 민주화를 위해 의롭게 투쟁해 온 이들에게 무한한 격려가 되었음은 틀림없다.

이것은 서울 도심에 본점을 두고 있던 대다수의 금융사업장내에서 개헌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공감대를 형성하게 하는 촉진제가 되었으며 한국노총이 다수 노동자를 위한 조직이 아니라 ‘권력의 충성스런 시녀’임을 폭로하는 확실한 계기가 되었음은 물론이다.

성명이 발표된 다음날 5월 9일~10일 한국노총 안양 연수원에서 개최된 현대해상화재의

조합원교육 및 단합대회에 서명노동조합의 간부들이 모였다. 구로동 여성간부들도 모였다.

서명조합의 간부들이 다음사태를 대비하기 위하여 모이기로 약속되어 있었다.

토요일 오후부터 시작된 수련회에 광주에서 돌아온 정일영은 저녁 늦게 참석하였다.

모두들 결의에 찬 눈빛이었다. 반박성명과 관련하여 어느 누구라도 연행될 경우 해당 노동조합은 자기사업장에서, 그 외의 노동조합은 금융노련 사무실에서 즉시 항의농성에 돌입하기로 결의하였다고 알려주었다.

일요일의 여러 가지 일정을 소화한 후 오후 늦게 연수원을 나선 이들은 인근의 포장마차에서 가진 뒤풀이에서 다시 한 번 결의를 다졌다.

"조국의 민주주의를 위하여 부라보!"

노래가 터져 나왔다. 범한화재 해고자 복직 싸움 때 부르지 못했던 노래도 포함되었다.

"왜 쏘았지! 왜 찢렸지!! 트럭에 실려 어딜 갔지!!! 망월동에 부릅뜬 눈....."

주변에서는 어디에서 왔는지 모를 몇몇 무리의 기관원들이 여기저기서 웅성이고 있었다.

"도산(도시산업선교회를 뜻하는 듯) 뺨치는 놈들이야...."

한일투자금융에는 이호용 부위원장을 비롯한 막강한 조합간부들이 버티고 있었다. 이들은 자신의 사업장에서는 물론 현대해상화재나 범한화재해상 투쟁에 까지 참여하여 상당한 투쟁경력을 쌓은 동지들이었다. 이호용 부위원장은 정일영의 연행에 대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는 노동조합의 간부전체를 포함 일부조합원들에게까지 반박성명서에 서명을 받아 놓고 있었다.

다음날 연행을 각오하고 출근한 정일영에게 고려대 선배라는 안기부 직원으로부터 전화가 걸려 왔다.

"지금 찾아 가면 뵈 수 있을까요? 어디 안 나가시나요?"

"예, 오십시오."

노동조합 사무실로 찾아온 안기부 직원과 정일영은 조용한 목소리로 다루고 있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의사표시를 하는 것도 죄가 됩니까? 찬성은 괜찮고 반대의견은 왜 안 됩니까?"

"의견은 괜찮지만 다음에 행동으로는"

"그러면 왜 서명조합을 탄압하고 있습니까? 지금 서명조합에 가해지고 있는 서명철회압력 말입니다."

"그런 거 없는데"

"서명을 철회하라고 회사를 통하여 노동조합에 강요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기부에 그런 정보도 없나요?"

"그래요?"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고 서명조합 계속 탄압하면 저도 그냥 있을 수만은 없지 않습니까?"

"더 확산만 시키지 말아주십시오. 나도 목 좀 안 달아나 게"

그 후 서명에 참여한 노조간부들은 아무도 연행되지 않았다. 줄기차게 가해지던 서명철회

압력도 얼마 후 중지되었다. 협박보다 정중하게 찾아와서 확산만은 말아 달라고 애원하는 쪽이었다. 줄기차게 가해지던 서명철회압력도 확산을 막는 쪽으로 바뀌어 가는 것 같았다.

제 2 절 명동네택이부대'의 출현

1987년 5월 27일 재야 민주화세력과 야당정치인까지 망라된 전 국민적인 조직인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가 결성되었다. 6.10을 기해 민주헌법쟁취국민대회가 선포되고 전 국민적인 항거의 깃발이 오르게 되었다.

항쟁의 불길이 타오르고 있을 즈음 을지로입구 사거리를 훤히 내려다 볼 수 있는 한일투자금융 노동조합 사무실과 광고를 내려다 볼 수 있는 범한화재 노동조합 사무실에는 시위상황을 지켜보거나 각종 정보를 듣기 위해 들르는 노동조합 간부들의 출입이 빈번하였으며 이곳에서 조합원들의 보다 많은 시위참여를 모색하는 모임이 자주 있었다. 6월10일 국민대회를 앞두고 반박성명에 참여했던 노동조합의 간부들은 모임을 갖고 일부 조합간부들만이 아닌 일반 조합원까지 국민대회에 광범위하게 참여케 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6월 10일부터 한일투자금융노동조합은 손님맞이로 분주했다.

한편으로 6.10항쟁과정에서도 한일투자금융노동조합은 석탑노동상당소와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한다. 도심의 시위상황을 석탑에 알려주고 석탑에서는 전국의 시위동향을 알려왔다. 이호용 부위원장은 근무시간 중 항상 자리에 앉아있어 종합상황실 역할을 하였다. 83년 노동조합 창립 이래 홀로 어려움을 겪어야 했던 그들은 금융권은 물론 여타 사업장의 분류에서도 참여해 온 관계로 여러 조합간부와 조합원들의 얼굴이 많이 알려져 있었다.

84년 이래 서강대학교 산업문제연구소 노동교육 등 여러 경로를 통해 생산직 노동조합들과도 교류를 다져온 한일투자금융노동조합은 여타지역의 노동조합 간부들이 도심시위에 참여하면서 자주 들르는 곳이 되었다. 을지로 네거리를 훤히 내려다 볼 수 있는 노동조합 사무실은 어디 쪽에서 시위가 시작되는지를 살피다 때맞추어 참여하기 좋았기 때문이다. 특히 세진진자, 가리봉전자, 슈어프러다트 등 구로지역의 노동교육동기생들은 대부분 여기에 들렀다 시위에 참여하곤 하였다.

골목골목 겹겹이 둘러쳐진 경찰병력에 막혀 명동성당 안에는 들어가기 힘든 상황이었다. 이상재는 성당으로 들어가는 일단의 수녀들을 발견하고 그들 뒤에 바짝 따라붙었다. 그러나 수녀들도 예외는 아니었다. 검문을 담당하고 있던 경찰은 '모두 천주교 신자인가'를 묻고는 찬송가를 불러보라고 하는 것이 아닌가? 앞에 있던 수녀들을 따라 입모양을 최대한 어울리도록 움직였다. 경찰은 눈치 채지 못하고 통과시켜주었다. 성당 안에는 많은 이들이 이미 들어와 있었다. 시민조에 편성되었다. 다음날 새벽에 성당 본당 옆 건물내부 통로를 이용하여 밖으로 나올 수 있었다. 이상재는 이때 인근에서 약국을 운영하고 있던 김재한의 지원으로 농성장에 최루탄 때문에 생긴 화상치료용 응급약품을 전달하기도 하였다. 농성 학생들은 몸에 수포가 생기는 등 온몸이 말이 아니었다.

비시카드 노동조합 사무실에서도 시위관련 내용이 화제로 떠올랐다. 시위과정에서 명동 부근의 빌딩에서 축포처럼 던지는 화장지 세레모니와 시위대를 공격하는 경찰들에 대한 시민들의 야유 등 시위관련 화제를 떠올리며 남을우와 함께 모인 노동조합간부들은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명동성당 부근에서 지지시위를 하기로 하고 시위대가 해산할 때까지 매일 점심시간과 퇴근 후에 명동으로 향하여 넥타이시위에 합류하였다.

노동조합 간부가 아니어서 당시 공개적인 활동에 제약을 받던 전재주는 당시를 다음과 같이 회상하고 있다.

『전두환 정권의 4.13 호헌조치와 그에 이은 전국적인 민중민주세력 및 학생운동 세력의 강고한 투쟁이 폭압적인 전두환 정권의 숨통을 조여오자 군사과소체제의 마지막을 향한 발악적 행위를 거듭하였다.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과 부천서 성고문 사건은 전두환 과소정권의 야수성을 폭로하였다. 학생들과 민주화 세력의 전두환 세력에 대한 공격은 갈수록 치열해졌고 서울시내는 민주학생들의 가두투쟁으로 최루탄과 돌맹이와 화염병이 뒤섞여 나는 것이 일상화 되었다. 시민들도 폭력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고 내성이 생겼으며 전쟁을 방불케 하는 가두투쟁도 일상의 일부분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전두환 정권의 비인간성을 폭로하는 각종 유인물이 은행 사무실에 흘러들어 왔고 이를 돌려가며 읽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었다. 특히 행원들은 대학을 나왔거나야간대학을 다니고 있어서 대부분이 학원을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던 반과소민주투쟁을 자연스럽게 접하였고 그에 동조하는 분위기가 고양되어 있어서 민주화에 대한 열망이 높았다.

1987년 5월 27일 재야 민주화세력과 야당 정치인까지 망라된 전 국민적인 조직인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가 결성되었고 6.10 민주헌법쟁취국민대회가 선포되었고 드디어 전 국민적인 항거의 깃발이 오르게 되었다. 6월 9일 오후 3시경 한일투자금융 노동조합 사무실에 정일영, 이상재, 홍순계, 전재주가 모여 다음날 있을 민주헌법쟁취 국민대회에 적극 참여하기로 하였다. 목표는 의식화 된 소수만이 아니라 일반 조합원들도 이번 국민운동에 적극 참여케 하자는 것이었다. 정일영은 구로동의 다른 노동조합과 연결하는데 적극적이었다. 이 당시 정일영, 이상재, 홍순계가 지도부로 일하고 있던 한일투자금융, 럭키화재해상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노동조합은 수차의 투쟁을 거쳐 단련된 조합원들로 구성된 선도적인 노동조합이었다. 이들은 6.10항쟁이 시작되기 이전부터도 열정적으로 각종 시위에 참여하였다. 정일영과 홍순계, 이상재는 조합원을 대규모로 이끌고 명동성당 농성장에 들어가 농성 투쟁에도 참여하였다. 그러나 내가 소속된 외환은행은 사정이 달랐다. 나는 당시 집행간부가 아니었고 노동조합민주화추진위의 조직원들도 현직에서 일하고 있었다. 따라서 조직과 조합원을 동원하여 시위에 참여하는 방안은 없었다. 조직원들이 각자 업무를 마친 후 개별적으로 시위대에 합류하는 것이 고작이었다.

6월10일 오후 6시를 기해서 전국적인 항의 시위가 있었다. 나는 회사를 일찍 나와 을지로를 걸어 내려와 국민대회 지도부가 있는 성공회 대성당 앞으로 이동해 보았다. 시위를 위해 나왔을 것으로 보이는 젊은이들도 많이 보였지만 경찰이 훨씬 더 많았다. 정해진 오후 6시가 되자 갑자기 자동차의 크랙션 소리가 울리기 시작하였다. 시민들이 호응하면서 전 도시가 커다란 크랙션 소리로 소연해졌다. 드디어 시민들이 전두환 정권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이다. 여기저기서 대기하고 있던 학생 시민들이 시위를 시작하자 시청 앞은 삽시간에 크랙션 소리와 시위 군중으로 뒤엎혀 교통이 멈추었다. 광고 일대는 경찰의 제지 없이 시민들이 거리를 메우고 시위에 참여하고 있었다. 거리는 시민과 자동차와 경적 소리로 뒤엉켜 있었다. 버스를 타고 있는 시민들도 창문을 열고 호헌철폐 독재타도의 구호에 동참하였다. 어떤 시위대는 일부 경적을 울리지 않는 자동차에 대해서 경적을 울리라고

압박을 가하고 있었다. 시경 앞에서는 경찰과 시위학생들 간에 격렬한 시위가 벌어졌다. 밀고 밀리는 학생과 경찰 간의 육박전으로 거리는 전쟁터처럼 변해 있었다. 나는 이날 밤 11시까지 시위에 참가하고 귀가하였다.

다음날 출근하는데 외환은행 옆 명동으로 들어가는 길이 경찰 바리케이트로 완전히 차단되어 있었다. 20층 내 자리에 올라와 보고서야 명동성당에서 농성이 진행 중인 것을 알았다. 시경 앞에서 거리시위를 벌이던 시위대가 명동성당으로 진입하여 농성을 시작한 것이었다. 외환은행 본사의 남쪽 사면에서는 명동성당 농성자들이 아주 잘 보이는 위치였다. 우리는 일하는 틈틈이 기회가 되면 창가에 몰려서 농성자들을 내려다보고 서 있곤 했다.

명동은 금융권의 본사가 밀집해 있는 곳이고 점심시간이면 수천 명의 은행원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식사할 곳을 찾는다. 6월11일에는 경찰병력에 의해 명동의 모든 골목이 차단되어 있어서 점심시간이 되자 일대는 완전히 마비상태에 이를 지경이었다. 점심식사를 위해 나온 나는 경찰의 제지로 유네스코 앞쪽으로 이동하는 것이 어려움을 알았다. 시민들은 경찰이 해산하고 돌아갈 것을 종용했지만 듣지 않고 군중을 이루고 경찰 바리케이드 주위를 둘러쌌다. 경찰이 유네스코 회관 앞길에 모여 있던 시민들을 향해 사과탄을 던졌다. 내 앞에도 사과탄이 날아와 터졌다. 그러나 시민들이 조금 밀리는듯하다가 다시 모여드는 기적이 일어났다. 시민들은 이미 경찰이나 사과탄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리고 누군가의 선창으로 호헌철폐 독재타도라는 구호가 터지면서 넥타이를 맨 시민들이 갑자기 시위대로 변하였다. 시민들과 경찰 사이가 다시 좁아지면서 호헌철폐 독재타도의 구호가 경찰 앞에서 메아리쳤다. 역사상 최초로 지휘자 없는 넥타이 부대의 시위가 발생한 것이다. 시민들이 시위대로 변하여 구호를 외치며 압박하자 경찰은 이를 해산하려고 사과탄을 더 터트렸지만 시민들은 흩어지지 않았다. 유네스코 회관 앞길은 1시간여 동안 넥타이 시위부대로 가득 차 있었다. 이 시위대가 직장인들로 구성된 시위임을 증명하듯 점심시간이 끝나면서 시위도 자연 소멸하였다.

농성은 5월12일에도 다음날도 이어졌다. 경찰은 전날의 시민 시위에 당황하여 바리케이드를 뒤로 물렸고 명동성당으로 통하는 길을 제외한 다른 곳은 통행이 자유로워졌다. 바리케이드를 통과하여 명동성당 앞으로 가 보았다. 6월의 거친 태양 아래서 농성자들의 얼굴은 검고 거칠게 변해 있었다. 그러나 이미 시민들의 호응이 크게 일고 있었다. 주변의 상인들은 농성장에 라면과 빵과 식수를 공급해 주었다. 수많은 격려의 글들이 성당 앞에 대자보로 내 걸렸다. 나는 당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적은 것을 자책하고 있었다. 외환은행 노동조합민주화추진 조직을 동원한 조직적인 시위 참여도 어려웠다. 회원들은 뿔뿔이 지점에 흩어져 있었다. 그날 오후 사무실에서 창가에 서서 명동성당 시위를 지켜보고 있는 순간 곁에 있던 박래운이 말하였다. "형님, 모금하면 어떨까요?" 나는 즉각 받았다. "그러자!" 당시 나는 외환은행 사무관리부 분회장이었고, 분회원들의 모임을 주도할 수 있었다. 모금은 박래운과 흥연식이 도와주었다. 우리는 짧은 시간에 즉흥적으로 제안하였고 사무실을 한바퀴 도는 것으로 모금은 종료되었다. 조합원이 아닌 간부를 포함하여 많은 직원이 십시일반 돈을 내 놓아 16만8천원이 모였다.

나는 농성자들을 격려하는 "우리는 애국학생들과 시민들의 민주화투쟁을 적극 지지합니다. 여러분의 굵힘 없는 투쟁으로 우리 시민들 가슴 속에도 민주화의 소망이 커지고 있으며 함께 동참할 방법들을 찾기 위한 토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비록 작은 정성이고 소극적인 방법이나마 85명이 모금한 돈입니다. 민주화와 민족자주의 밑거름으로 써주십시오. 외환은행 민주노동자 일동" 의 취지의 격려문을 작성하여 돈과 함께 명동성당 농성자에게 전달하

였다. 당시는 모든 길이 차단되어 있었기 때문에 계성고등학교 옆 골목 담장을 통하여 편지와 돈을 써서 던져 주었다. 편지는 즉각 대자보로 작성되어 명동성당 정문에 게시되었다. 그날 점심때 성당 앞 정문에서 나의 대자보를 보는 순간 나는 상당한 흥분을 느꼈다. (당시의 이 편지는 월간 조선87년 7월호에 실려 있다.)

외환은행 민주노동자 일동' 명의의 모금운동 대자보는 외환은행 내에 즉각적인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본점부서의 많은 사람들에게 모금운동 사실이 화제로 올랐고, 사정기관 측에서 외환은행에 이 모금과 대자보를 작성한 사람을 색출하라는 통지가 왔다. 본점 부서의 사람들 사이에는 이 사실이 화제가 되었고, 1주일 정도 지난 후 사무관리부의 한 간부가 나를 불러 인사부가 고민하고 있다고 귀뜸해 주었다. 그러나, 외환은행 인사부는 끝까지 모금운동자들을 찾아내지 않고 버렸다. 그러는 사이에 노태우의 6.29선언이 발표되었다.

6월 13일 점심시간에 6명의 사무관리부 조합원들과 같이 명동성당 앞 외환은행 명동지점 앞 사거리 쪽으로 나왔다. 점심을 같이 하자는 것이 이유였지만 이들은 노동조합민주화 운동을 적극 지지하던 조합원들이었다. 나는 이들이 내가 뭔가를 할 것을 기대한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더구나 이들은 전날 돈을 걷어서 명동성당 농성장에 전달한 데 대한 일종의 흥분과 스틸을 느끼고 있었고, 자연스레 나를 따라서 농성대 지원에 합류하려는 의도도 강하게 있었다. 성당 앞의 경찰 병력은 철수하여 공간이 열려 있었다. 명동성당 정문에서는 시위대가 시민을 향한 선전활동을 하고 있었다. 사거리는 점심식사를 하러 나와서 점심을 먹으로 가지 않고 길옆에 서서 있는 수많은 시민들로 가득하였다. 나는 눈짓을 하고 사무관리부 직원들이 같이 사거리 가운데 주저앉았다. 순식간에 우리 주위에 있던 수많은 넥타이들이 동참하였고 상업은행 명동지점에서 명동성당으로 올라가는 오르막길이 시위대로 가득 차 버렸다. 우리는 지휘자 없이 구호를 외치며 노래를 불렀다. "독재타도 호헌철폐"의 구호를 외치다가 "흔들리지 않게" "우리의 소원은 통일" "아침이슬" 등의 노래를 불렀다. 그리고 이 농성은 넥타이부대만으로 구성된 가두 연좌시위가 되었다. 경찰의 제지 없이 시위지도부 없이 이루어진 연좌테모는 약 1시간 반 동안 진행되고 점심시간이 끝나는 오후 2시경 자연 소멸하였다. 한국사 최초로 흰 와이셔츠에 넥타이로 상징되는 화이트칼라 노동자들의 데모 참가는 반독재투쟁의 역사에서 한 획을 긋는 사건이 되었으며 정치지형에 충격을 주어 파쇼 세력이 가장 굳건한 자기세력의 보루라고 믿었던 물적기반인 화이트칼라층의 이반은 더 이상 군부, 관료, 독점재벌의 연합에 의한 민중지배가 불가능함을 드러내는 사건이 된 것이다. 이는 곧 전국적인 시민항쟁으로 이어져서 전두환 군사파쇼체제가 무너지는데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불씨’를 살리려는 간절함으로

한편 6월 12일 저녁 농성중인 명동성당 안에서는 저녁식사들을 막 마친 듯 어수선한 가운데 지도부는 급히 회의를 소집하였고 나머지는 삼삼오오 모여 앉아 앞으로의 일을 논의하며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지도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서로 이름을 밝히지 않고 활동하고 있었다. 경찰 프락치가 있다는 소문으로 성당 안의 농성에 참여하고 있던 사람들은 스스로 신분노출을 극도로 꺼리고 있었다.

날이 어두워지며 느슨해진 경계망을 뚫고 다수의 시민들이 성당 안으로 들어와 있었다. 석탑출판사의 최영희와 여성단체연합의 이미경도 함께 있었다. 학생들은 바깥에서 들어온 사람들에게 농성장의 상황을 자세히 얘기해 주었다. 성당 밖의 상황과 여론의 추이에 대해

궁금해 하며 언론보도 중 자신들에 대한 악의적인 기사내용을 걱정하고 있었다.

“전혀 걱정하지 말라! 이번은 다르다! 국민들은 당신들 편이다! 우리 같은 사무직들까지 여러분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것이 예전과 확실히 다르지 않느냐!”

양복에 넥타이를 맨 신사들의 격려가 학생들의 용기를 북돋아 주는 데는 대단히 효과적이었다.

밤이 늦어지자 지도부 두어 명과 성당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와서 들어온 시민들에게 나가기를 종용했다.

“지금 나가지 않으면 나갈 때 잡혀갈 우려가 있다. 성모병원 쪽으로 안전하게 나갈 수 있도록 안내할 테니 빨리 따라오라!”

순간 긴장감이 감돌았다.

“사무직 노동조합 간부들은 밖에 나가 더 중요한 일을 해 달라!”

고 하며 자신은 남아 있겠다던 최영희씨와 이미경씨가 일어서자 모두들 함께 나섰다.

6월 14일은 일요일이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성당으로 몰려왔다. 성당은 미사객을 위해 자유롭게 열려 있었다. 저녁에 회의를 거쳐 내일 새벽에 해산할 것이라는 소문이 자자했다. 자칫 항쟁의 열기가 수그러들 우려가 있었다. 뜻있는 사람들은 80년에 광주를 홀로 내버려두어 처절하게 당하게 했다는 뼈저린 교훈을 되새기며 명동농성이 허망하게 끝나지 않도록 곳곳에서 노력하고 있었다. 열기가 수그러드는 시점에서의 농성해산은 악수를 두는 것이다. 어떻게든지 월요일까지 농성을 이어가야 한다. 월요일까지만 버텨 준다면 열기는 다시 확산될 것 같았다. 최영희는 농성해산을 막아보려고 시간을 끌며 안간힘을 쓰고 있었다.

6월 15일 새벽까지 계속된 조별토론을 거쳐 농성을 계속하기로 마무리되어 갈 무렵 성당 측이 여러 상황을 종합해 보아 해산하는 것이 좋겠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세 번의 투표를 거치며 논란을 거듭한 끝에 해산이 결정되자 성당 안은 울음바다로 변했고 서로 간에 갈등이 심했다. 하지만 대부분 투표결과에 승복하고 해산식을 한 다음 미도파 앞까지 행진한 후 해산하기로 했다. 아침에 한 시민이 갖다 준 카네이션을 한 송이씩 머리띠에 꽂고 농성참가자들은 성당을 나섰다. 그러나 해산식을 하는 동안 성당 앞은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점심시간에 식사도 잇은 채 흰 와이셔츠에 넥타이를 맨 사람들이 시위대로 변하여 명동전체를 꽉 메우고 있었던 것이다. 박수와 환호 소리 그리고 “호헌철폐! 독재타도!”가 빌딩 골짜기를 울림통 삼아 명동을 통째로 뒤흔들었다. 성당 언덕에서 출발한 행렬은 성당 바로 앞의 로얄호텔을 지나지 못하고 멈출 수밖에 없었다. 성당 안으로 되돌아간 농성학생들은 학교에서 보내준 버스를 타고 각각의 학교로 되돌아가고 해산을 반대한 시민들과 일부학생들은 성당 언덕에 자리를 잡고 시위를 계속했다.

근무시간 중에 학생들이 농성을 풀고 각 학교로 복귀했다는 소식을 접한 금융권의 노동조합 간부들은 명동성당 농성을 긴급히 복원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산발적으로 거리시위에 참여하고 있던 노동조합들에 백방으로 연락을 취하였다. 온 국민의 이목이 집중되었던 명동성당의 농성은 그 상징성이 매우 컸다.

한일투자금융, 범한화재, 현대해상, 신동아화재, 비시카드 등 명동·을지로 주변의 노동조합간부와 조합원들이 몰려들었다.

여의도에서 유화증권 정부기는 박태영, 유동조, 서승만, 서화영, 장정예, 이정남, 이양익, 남궁갑 등과 저축추진중앙위 하균홍은 여성부장을 포함한 조합간부들을 이끌고 동참했다. 4.13 반대성명 때 함께 논의했던 구로동의 노동조합에서도 달려왔다.

6월 10일부터 줄곧 신세계 앞 광장과 남대문 등의 도심시위에 조합원을 이끌고 참여하던 세진전자의 문광주는 이명숙, 송연희, 김연옥, 이재금, 박은미, 박말례, 이정임, 전정옥, 윤복현 등과 함께 연락을 받고 달려왔다. 광고, 종로 일대에서 거리시위를 하다가 신고 있던 운동화가 표적이 되어 연행될 뻔한 다음부터는 하이힐과 외출복으로 바꿔 입고 한일투자금융, 현대해상, 범한화재 등의 남자조합원과 '데이트시위'를 하던 슈어프러닥트의 김경자와 이현숙, 장복식, 박임순 등도 참여하였다.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다. 석탑의 장명국 원장, 전태일 열사의 동생 전순옥, 이미경 등도 보였다. 전재주도 어느새 정덕행과 함께 들어와 있었다. 성당의 문은 모두 잠겨 있어서 정문계단에 걸터앉아 노래와 구호를 외쳤다. 학생들은 철수했으나 더 많은 시민들이 비탈진 성당계단을 짝 메웠다. 진행은 철수하지 않고 남아있던 학생들이 앞에 나서서 맡았다. 성당인사들이 해산을 요구하였으나 듣지 않고 농성을 계속 이어 간 것이다.

농성자들 틈에 끼어든 경찰 프락치들이 이들을 체포망으로 유인하려는 기만책을 쓰고 있었다. 탈출로를 가르쳐 주겠다거나 앞뒤 맞지 않는 말로 자꾸 농성을 해산하자고 하는 등

그러나 서로를 잘 알지 못하는 학생조직과 달리 이전부터 상호교류를 통해 서로의 얼굴을 익히 잘 알고 있던 이들에게는 통할 리가 없었다. 따지기 좋아하는 홍순계가 지도부라고 자칭하는 의심스런 행동의 한 학생을 조용히 뒤로 불러냈다.

"어디 소속이시요?"

"부산 쪽의 대학교....."

"언제부터 여기 농성에 참여하였소?"

"6월 5일부터요."

"뭐라고요? 농성이 10일부터 시작되었는데."

"....."

"지도부가 심각하구먼!"

조합원들의 싸늘한 눈초리가 집중되자 그 가짜학생은 슬그머니 뽕무니를 빼고 물러갔다.

농성은 며칠간 철야로 이어졌다. 대개는 밤을 꼬박 새우고 다음날 새벽 출근하였다가 퇴근 후에 다시 오기를 반복했다. 이들은 참여여부를 상호 체크하고 다음날 근무시간 중에 서로 연락하여 저녁에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하였다. 성당과 직장을 오가며 며칠간 노천에서

밤을 새운 이들 중에는 근무시간에 졸다 의자에서 넘어지거나 화장실에서 깜박 잠이 들어버린 경우도 있었다.

명동은 전투 중, 주먹을 불끈 쥐고 오른팔을 펴고

“6월 10일, 노태우가 차기 대통령으로 사실상 확정되는 민정당 대통령 후보 선출대회가 있는 바로 그 날, 서울 광화문 성공회에서 국민운동본부 주최로 ‘박종철 고문살인 은폐조작 규탄 및 민주헌법쟁취 범국민대회’를 개최하기로 되어 있었다. 광화문 교보빌딩에서 일하던 이상학은 바쁜 숨을 몰아가며 성공회 쪽을 걸음을 재촉하고 있었다. 그러나 성공회로 향하는 길은 경찰들이 차지하고 있었다. 숨 막히는 긴장 속에 자꾸 손목시계로 향하던 눈길이 12시에 멈추어 섰다. 그런데 성공회 주변에는 아무도 없다. 아니다. 경찰들이 길을 막아 접근할 수가 없다. 실패구나! 하는 생각에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가고 있던 바로 그 순간 광화문을 지나던 차량들이 경적을 울리기 시작하였다. 독재 권력의 막강한 힘 앞에서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되던 일이 기적처럼 시작되고 있었다. 이렇게 6월 항쟁은 되었다.”

라고 이상학은 기억하고 있다.

6.29 직후 노동조합이 없어 스타디그룹 조직보전을 위해 4.13반대성명에 참여하지 못한 이상학은 도심시위에 함께한 교보생명 직원들과 노동조합의 결성에 성공했다.

4.13 호헌조치 반대성명에 앞장섰던 유화증권의 정부기 위원장은

“6.10대회부터는 노동조합 간부로서 노동조합의 투쟁력 강화를 위하여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것으로 하고 노동조합 간부회의를 열어 매일 10명 이상 조를 편성하여 간부들과 조합원을 명동에 집결시켰다. 상대적으로 여의도 지역은 시위의 열기가 낮아 조합원들의 투쟁의 교육장으로 명동에서의 가두시위 경험이 더욱 중요했다”

고 말하고 있다.

유화증권 노동조합은 범한화재 연대투쟁에서도 노동조합의 단련을 위해 매일 10여명 이상이 연대투쟁에 의무적으로 동참하였다. ‘호헌조치 반대성명’에 참여한 이들의 6.10항쟁 참가는 자연스런 귀결이었다.

6월 10일 이후 범한화재노동조합 간부들은 서둘러 퇴근하여 광고와 을지로입구에서 도로를 점거하는 학생시위대에 합류하였다. 을지로 입구의 한일투자금융 노동조합 간부들은 회사를 나서면 거기가 바로 시위의 중심지였다. 광화문에 있는 현대해상화재의 김형철, 홍순계, 광태원, 백수관, 이정애, 이영희, 이혜영, 김기선 등은 늘 을지로 입구까지 와서 시위대에 합류하였다. 신동아화재 허장, 현기대, 손혁준, 김하동, 김인배, 류인주 등은 근무지에서 가까운 신세계 쪽으로 나가 남대문 쪽 학생시위대에 합류하였다. 넥타이를 맨 보통사람들이 시위대열에 들어서자 학생들은 그들에게 맨 앞장을 서달라고 부탁하였다. 시위대가 이제 학생들만이 아니라는 것을 독재자들에게 보이고 싶었으리라!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이내 그렇게 하였다. 이들도 수 년 전 학창시절에는 시위를 해 본적이 있었다. 학생신분을 떠나 직장을 가지게 되면 대다수가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자체를 잊어버리는 것이 공식처럼 되어 있었으나 이제는 달랐다. 이승만도 박정희도 모두 장기집권을 위해 국민들을 속여 왔다. 이제 안 속는다! 세 번은 안 속는다! 함께 어깨 걸고 나아가는 이들의 가슴 가슴은 조국의 민주주의를 위한 열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가슴속을 밀어 올려 눈시울을 넘치게 하는 감격의 눈물이 최루탄 눈물을 말끔히 씻어 내렸다.

을지로3가역 근처에서 시위를 하고 있던 김성호는 학생 수십 명이 전투경찰에 포위되는 것을 목격하고 함께 시위에 참여하고 있던 시민들과 함께 “풀어 줘”, “풀어 줘”라고 구호를 외치며 전투경찰을 에워쌌다. 그러자 겁먹은 전투경찰은 학생의 체포를 포기하고 물러날 수밖에 없었다. 고 전했다.

이영희는 홍순계 부위원장과 함께 근무시간에는 회사일보다도 퇴근 후 시위에 함께 참가할 이들에게 약속장소와 시간을 연락하느라 전화통화에 몰두하였다.

눈물 자국과 콧물로 범벅이 된 해괴한 물골이었지만, 그래도 김진희는 그때가 너무 좋았다고 했다.

“해고자 복직투쟁 때 우리 노동조합을 도와주었던 너무나 많은 금융권 노동조합 동지들의 얼굴을 볼 수 있어 무척 반가웠고 그 동안 서로의 안부와 상대방 노동조합의 시위참가 상황을 서로 얘기하며 뜨거운 동지애를 나누었다.”

또한 범한화재 여조합원 오영화는 가끔은 머리카락에 하얀 최루탄가루를 묻힌 채로 마치 신들린 것처럼 6.10항쟁 내내 가두시위에 참가했던 여투사로 사내에서는 이미 유명인사였다. 한미은행 여성간부였던 황문영 또한 연일 시위에 열정적이었다. 이미 회사에서도 점심시간이나 퇴근 후 직원들 상당수가 거리시위에 참가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동료들을 불러 모아 하루도 빠짐없이 시위대열에 참여한 이혜영은 시위학생을 연행해 가는 전투경찰을 보자 “제발 살려달라!”며 그를 온몸으로 감싸 끌어안았다. 젊은 여성이 허리를 잡고 늘어지자 당황한 전투경찰이 그 학생을 풀어주지 않을 수 없었다. ‘나는 하고 싶어서 하겠느냐?’는 듯 그 묘한 표정의 전경 얼굴이 20년 지난 지금도 생생하다고 회상한다. 또한 이때의 시위참가 경험이 그녀의 인생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에 커다란 전환점을 가져주었다고 하였다.

금융노련 상근간부를 지내고 현업에 복귀하여 중소기업은행 서소문지점의 대리로 근무하면서 은행의 출입문서터를 이용하여 쫓기는 학생들을 보호하곤 하던 서수철은 산업은행 박승두, 국민은행 박백수 등 후배들이 찾아오자 이들과 함께 시청 앞으로 진출하여 시위에 합류하였다.

항쟁초기 학생들의 용감한 투쟁을 보면서 멀리서 박수를 보내던 직장인들이 서서히

시위대열에 참여하면서 “독재타도”를 외치고 온몸으로 실천하는 투사로 하나둘씩 발전해가고 있었다.

명동성당에서 배운 것을 가리봉오거리에서

항쟁의 불길이 서울 전역과 지방으로 번져가고 있었다. 그러나 노동조합 활동이 활발했던 구로동지역은 동맹파업 후유증의 여파였는지 비교적 조용한 편이었다. 학생·사무직 위주의 도심시위를 생산직 산업현장으로 확산시키기자며 석탑의 장명국 원장이 연락해 왔다. 6월 20일 가리봉오거리 시위에 많은 참여를 당부해 왔다. 명동성당 농성에 참여했던 2금융권 조합원·간부들은 여기에 적극 참여하기로 뜻을 모았다. 특히 세진전자, 슈어프리닥트 등 구로지역 노동조합에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하였다. 6.10항쟁의 불길은 이곳에서도 번지기 시작하였다.

6월 20일 세진전자 노동조합에서 상집회의가 있었다. 이들은 회의를 마치고 가리봉오거리로 향했다. 도심 시위에 참여하던 2금융권 조합원들도 시간을 맞추어 가리봉오거리로 향했다.

구로동 지역의 조합원들은 혹시라도 연행되어 조사를 받게 되면 ‘장 보러 왔다’거나 ‘떡볶이 먹으로 왔다’고 하기로 했다. 슈어프로닥트의 김경자도 이현숙, 박임순, 장복식, 문순덕 등과 함께 참여하였다. 금융권의 노동조합 간부들도 삼삼오오 가리봉 오거리로 향했다. 정부기, 이상재, 김광성은 슈어프리닥트 조합원들과 함께 움직였다. 각처에서 모여든 시위대는 나름대로 대오를 갖추려 하였으나 서툴렀다. 도심시위와 명동성당 농성에 참여해서 시위를 경험한 김정희위원장, 문광주 사무국장 등 세진전자의 조합원들이 나서 집회의 질서와 분위기를 이끌었다.

경찰이 몰려오자 시위대는 산발적으로 흩어져 분산적인 시위를 벌였다. 항쟁의 불길이 산업현장으로 번져가자 당국은 대단히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집회 분위기를 이끌었던 세진전자 조합원이 타켓이 되었다. 이날 시위에 참여하고 대림동 쪽으로 흩어져 귀가하던 문광주, 송연희, 김연옥 등 세진전자 조합원은 무사하였으나 구로동 쪽으로 무리를 지어 귀가하던 김정희 위원장과 윤애숙, 김옥렬, 오태옥, 박갑숙, 박말례, 임신 중이던 박정순과 그녀의 남편 등은 갑자기 들이댄 닭장차에 실려 남부경찰서로 무차별 연행되었다.

한편 슈어프리닥트 김경자 위원장을 비롯한 10명의 조합원과 함께 시위에 참여했던 정일영은 현대노사에서 일했던 대학동기 오상석을 시장골목에서 우연히 만나 귓속말을 나누다가 연행되었다. 오상석은 유신하의 긴급조치 9호로 구속된 이후 3차례나 감옥을 다녀온 친구였다. 슈어프리닥트 조합원들은 한꺼번에 달려들어 연행하는 경찰로부터 두 사람을 구출하려다 실패하자 울음을 터트리고 말했다. 두 사람은 체포하려는 경찰과 심한 몸싸움을 벌인 탓으로 무차별 구타를 당하면서 연행되었다.

이날의 시위로 남부경찰서에만 40명이 넘는 시위참가자가 연행되어 있었다. 경찰서는 시위연행자로 넘쳐나고 있었던 것이다. 연행된 조합원 중 시위사실을 시인한 세진전자의 윤애숙, 오태옥 등은 2~3일간 구류처분을 받았으나 대부분은 시위사실을 끝까지 부인하고 다음날 풀려났다.

명동은 우리땅



4.13호헌조치와 호헌조치 반대성명 발표로 인해 이미 금융권 사업장에서는 신문보도를 통해 사업장내에서 반독재 군정종식이라는 공감대가 널리 형성되어 있었다.

또한 직접적으로 성명에 참여했던 사업장에서는 호헌조치반대 성명보도 이후 기관과 사측의 성명발표에 대한 탄압이 사업장내의 개헌에 대한 토론을 더욱 활성화시키는 촉진제가 되었음은 물론이다.

지리적으로 명동, 을지로, 광고, 남대문 지역은 금융권사업장의 노동조합과 본사, 지점의 밀집지대였다. 한일투자금융, 범한화재, 비시카드, 산업리스, 외환은행, 신한은행, 신용보증기금, 그리고 6.29 이후 폭발적인 노동조합건설을 한 중금·투자금융 사업장 국민은행, 조흥은행, 기업은행 등 은행들 그리고 증권사들, 남대문 쪽에 있었던 신동아화재 광화문 현대해상 등 이 지역은 한국의 금융가였다. 명동 정당농성 ‘불씨살리기’ 철야농성이 끝나면서 시위는 매일 오후 광고와 남대문 사이 대로에서 시작되었다.

최루탄추방대회를 앞두고 군대가 출동할 것이라는 소문이 다시 돌았다. 모두들 개의치 않는 분위기였다. 침묵하던 시민들조차도 모두 호헌철폐를 주장하여 어느 누구도 집권세력을 거드는 사람은 없었다. 시위에 참여하는 등 양심의 행동 강도에는 차이가 있었을지라도 모두들 한 마음 한 뜻이었다.

최루탄추방대회 날이다. 군중들을 향해 최루탄이 날아오자 어느새 구호가

“호헌철폐”, “독재타도”에서 “쏘지 마”, “쏘지 마”로 바뀌어 가고 있었다.

날라 온 최루탄에 물을 붓는 이도 있었다. 어느 틈엔가 들통에 물을 담아 온 것이다. 아예 가게에서 고무호스를 꺼내놓고 물을 뿌리는 이도 있었다.

87년 6월 항쟁 당시 아직 노동조합이 없었던 대한화재에서 근무하였던 이환구는 그때를 이렇게 기억하고 있다.

“그 때는 내가 직장생활을 한지 7년차로서 한 가정의 가장이며, 남편이며, 한 아이의 아빠로써 대부분의 시간을 가정에서 보다는 회사업무로 정신없이 바쁜 날을 보내는 30대 초반의 직장인이었다.

돌이켜 보면, 그해6월 초순에는 서울대생 박종철군이 ‘탁치니 억하고 죽었다’는 말도 안 되는 경찰의 고문수사 결과발표에 분노한 학생들의 시위가 점차 서울 시내 까지 확산되던 때였다. 남대문 일대에서 시위가 벌어지게 되면, 그날 오후3-4시경이면 시내에서 산발적으로 시작된 가두시위가 시간이 갈수록 넓게 확대되고, 남대문 로터리, 신세계 백화점 .한국은행 본관 앞 로터리, 서울역 광장 일대, 시청 앞 일대가 가두시위와 이를 저지하려고 맞선 경찰의 최루탄 응사로 시끄러워졌다. 남대문일대의 상인들과 행인들이 최루탄 가스로 눈물 콧물이 범벅이 되고, 퇴근 무렵이 되면 교통정체 속에서 더욱 교통이 심해졌다. 퇴근하는 직장인과 일반 시민들이 학생들의 시위 보다, 경찰의 시위진압에 대하여 더욱 반발하였다. 군사정권의 부도덕성을 규탄하는 분위기 속에서 자연스럽게 학생과 시민이 결합하여 시위대가 형성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그 과정에서 나도 모르게 시위대열에 합류하게 되었다.

대한화재보험빌딩은 남대문 바로 옆과 남대문시장 입구에 위치하고 있어서 내가 근무하는 18층 사무실에서 밖을 내려다보면, 남대문 로터리와 서울역 일대까지의 시위현장이 한눈에

들어오는 위치에 있다. 학생과 경찰의 밀고 밀리는 시위장면을 업무시간 중에도 가장 자연스럽게 볼 수 있는 위치에서 내가 근무하고 있었던 것이다.

시위가 있는 날 오후의 사무실 분위기는 어수선하다. 박종철 학생의 죽음과 전두환 군부정권에 대하여 반대하는 학생시위가 시작되면, 사무실 직원들이 삼삼오오 고층빌딩 유리창 앞으로 모이면서 전두환 정권과 시위진압에 대한 비판 분위기가 서서히 고조되었다. 시위가 시작되어 격렬해지면 최루가스가 바람을 타고 빌딩사이를 맴돌다가, 빌딩 창문이나 출입문으로 최루탄가스가 올라오거나 들어오게 된다. 고층빌딩 내 사무실에도 매운 냄새가 스며들면 여직원들은 손사래를 저으며 기침하고 화장실로 달려가면서 사무실 업무가 일시로 중단되기도 하였다.

시위대의 함성과 경찰진압 부대의 마이크 소리 까지 가세하면 일대가 더욱 시끄러워진다. 도심에서 시위가 시작된 지 불과 1-2주가 지나지 않은 6월 중순경에는 넥타이를 맨 사무직 직장인들도 시위진압과 정권에 반대하는 격한 감정이 솟구치면서 자연스럽게 시위에 합류케 되었다. 시위 진압과정에서 학생이나 시민들은 경찰진압대가 쫓아오면 다급하여져서 남대문 대로변에 위치한 대한화재 빌딩 1층 로비로 삼시간에 밀려들어오곤 했다. 매운 최루탄 가스까지 가세해서 1층 로비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눈물 콧물로 얼룩이 범벅이 되곤 했던 것이 기억난다. 1층 로비 화장실은 최루탄 가루를 떨어내려고 얼굴을 씻으려는 사람들로 인하여 삼시간에 가득 차고, 수돗물로 얼굴을 씻어도 한참 동안 얼굴이 화끈거리고 눈, 코가 매워서 참을 수가 없었다. 어린아이를 안고 있던 한 아주머니는 아이가 자지러지게 울어대고 보채는 바람에 어쩔 줄 몰라 당황해 하던 모습이 생각난다. 최루가스에 휩싸인 대부분의 사람들은 얼굴이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되어 서로 보기가 민망스러웠던 일이 기억난다.

이러한 시위 분위기 속에서 나도 70년대 대학생 시절 유신 반대 시위로 다져진 경험(?)과 의분이 가세되어 처음에는 학생시위대와 경찰의 밀고 밀리는 공방전을 구경하던 자세에서, 점차 학생들이 외치는 구호를 보도에 서서 거들다가, 점차 시위대에 참여하면서 대오에 함께 하기도 하고, 갑자기 진압경찰이 몰려들면 대오에서 이탈하여 도보에서 일반시민들과 함께 시위를 관전하기를 거듭하다가, 며칠이 지나면서부터는 학생과 시민이 대형 태극기를 들고 애국가를 부르면서 자연스럽게 하나의 시위대가 되면서 부터는 나도 이들과 함께 시위에 참여하는 것이 당연한 일상이 되었다. 시위가 계속 될수록 경찰의 강경 탄압에 대한 거부감과 울분이 겹쳐지면서 나와 나의 직장 동료들도 자연스럽게 시위 대열에 합류하게 되었다. 남대문 일대에서 집회시위가 있는 날이면 거리에서 종종 동료 직원들을 보게 되고, 그 다음 날이면 서로의 무용담으로 꽃을 피우기도 하면서 다음번 시위 때에는 서로 연락하고 참여하자는 약속을 하기도 하였다.

6월 중순 어느 날인가? 유독 그날은 저녁 무렵부터 남대문 일대에서 시위가 격렬하게 확산이 됨에 따라 남대문에서 부터 삼성본관 앞대로와 시청 앞 광장에 이르는 10차선 도로가 태극기와 플래카드를 앞세우고 모여든 학생과 시민이 결합된 장엄한 민주광장으로 시위 규모가 확대되어 갔다. 남대문 앞에서 시청에 이르는 중앙도로 전체가 시위대로 채워지면서, 애국가를 함께 부르며, ‘호헌철폐 독재타도’를 외치고 ‘타는 목마름으로’ 민중가요를 목이 터지게 부르며, 시민 특히 넥타이를 맨 직장인들이 하나씩 둘씩 참여하고 확대되어 가면서 이제는 직장동료 또는 학교 선후배, 친구들과 함께 그 어느 곳이든 서울 시내 주요 도로에서 민주화와 독재정권에 희생된 박종철 열사에 대하여 애도의 마음으로 참여하고, 전두환 군사정권에 대한 비분강개로 시위에 참여하는 것이 당연한 일상이 된

것이다.

몇 시간의 시위가 끝난 늦은 저녁 시간에는 음식점이나 소주집에서 삼삼오오 둘러앉아 울분과 토론으로 늦게 까지 함께 하였던 일들이 생각난다.

6월 중순의 어느 날인가는 엄청난 시위대가 형성되어 시청 앞, 종로, 을지로, 퇴계로, 남대문, 서울역에서 거의 서울 지역 중요 도로에서 가장 큰 규모의 시위가 벌어졌다. 서울 시내 전역에 수십만의 시민들이 시위에 참여한 듯 보였다. 이에 따라 엄청난 규모로 경찰 진압대도 동원된 것 같았다. 시위는 더욱 과격하여졌다. 남대문시장에서 시위대와 경찰들이 쫓고 쫓기는 모습이 보였다. 한 대낮이지만 일찍 시위가 시작된 것이다. 퇴계로에서 서울역(서부역)으로 가는 고가도로 위를 시위대열이 점거하면서 서울역, 남대문, 시청, 을지로, 종로를 비롯한 서울 시내 전역에서 수십만의 시민들이 시위에 참여했다. 이제는 학생들 보다 시민이나 넥타이를 맨 직장인들이 시위대의 대세를 이루는 듯 보였다. 시민들이 참여하는 장엄한 시위대열 앞에서 진압경찰들은 힘을 쓰지 못했다. 많은 눈물을 흘리고 발목이 시리도록 수많은 서울시내 주요 도로를 뛰면서 6월 항쟁의 거대한 집회와 시위가 벌어진 것이다. 이제는 시민들이 민주주의를 쓰는 시대가 된 것이다. 특히 넥타이를 맨 사무직 노동자들이 시위에 참여함으로써 시민민주주의가 더욱 성숙해지고, 군사독재 정권이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참여민주주의의 승리를 가져오게 하는 계기가 조성된 것이다.

이제 나이 50을 넘긴 장년노동자인 나는 그 때를 돌아볼 때 마다 가슴이 뜨거워진다. 동시대를 함께한 사람으로서 무한한 긍지와 보람을 느끼게 된다.”

처음에는 신분노출을 꺼려 시위에 소극적이던 넥타이들도 시위대 속에서 흰 와이셔츠와 넥타이차림의 노동조합 간부들과 금융권 직장인들을 보게 되면서 갈수록 시위참가자가 늘어나 어느 순간 그들 스스로가 이제는 거리시위의 한 주역이 되어버렸다.

노동조합 활동을 통해서든 물론이거니와 금융교환시스템, 콜거래 등 금융기관간의 거래나 업무를 통해서 서로 안면이 있는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였다. 학교동창 등 학연이나 고향 선후배 등 지연을 통해 서로 안면이 있는 사람들은 물론 가족이나 친지를 만나는 경우도 많았다. 시위대열 속에서 서로의 진심을 확인한 이들은 서로에게 격려가 되었음은 물론 이제 마음껏 믿을 수 있는 동지가 되었다. 독재자를 비난만 하여도 좌경불순세력으로 신고되어 쥐도 새도 모르게 끌려가서 곤욕을 치르던 시절에 답답한 심정을 믿고 얘기할 수 있는 동지를 구한 셈이다. 혼자 가던 어두운 밤길에서 같이 갈 여러 동지들을 만난 것처럼 서로들 반가워하였다. 어제까지도 믿을 수 없었던 친구와 이웃이 이제 최루탄을 마시며 목숨을 걸고 같이 싸우는 전우가 되어 있었던 것이다.

상업은행노동조합 상근부위원장이던 최승남은 당시를 이렇게 회고한다.

“상급단체인 전국금융노동조합연맹과 한국노총이 4.13호헌 지지를 천명한 것에 대해 심한 충격과 부끄러움을 느끼고 이용득 위원장과 함께 젊은 간부들이 주축이 되어 이를 성토하였다. 거리시위에 조직적인 참여는 어렵다 하더라도 명동, 종로, 시청 앞 등의 집회에 개별적으로 삼삼오오 짝을 지어 적극 참여키로 하였다.

시청 앞이나 명동 일대가 집회의 집결지로 많이 이용되었기 때문에 쫓기는 시위대가 소공동 입구의 본점건물 안으로 밀려들어오는 경우가 빈번하였다. 백골단에 쫓기는

학생들과 시위대를 직원들이 나서 본점 안으로 피신시키고 건물서터를 내려 보호했다.

본점직원들은 일과 중 틈을 내어 근처에서 벌어지는 집회에 삼삼오오 참석하였다. 은행으로부터 불순세력으로 몰려 불이익을 당할 것을 염려하여 처음에는 집회장주변을 기웃거리기만 하였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친한 직원들과 함께 직접 시위에 참여하였다.

언젠가 노동조합 유영규 조직부장 등 간부들과 함께 종로집회에 참가했다가 백골단을 피해 버스에 올라탔는데 창밖에서 한 여대생이 백골단에게 개처럼 질질 끌려가는 광경이 목격되었다. 이때 버스 안의 노신사 한분이 창문을 열고 큰소리로 “야! 이 개새끼들아! 너희들은 어느 나라 국민이냐? 지금 모든 국민이 한마음이 되어 있는데 너희들만 정권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구나! 이 개만도 못한 놈들아!”라고 외쳐댔다. 이에 흥분한 백골단이 버스 앞을 가로막고 안으로 들어오려 하자 유영규 조직부장이 문을 걸어 잠그고 버텼으나 백골단은 운전기사에게 강제로 문을 열게 하고 들어와 욕설과 함께 그를 무차별 구타하며 문에서 떠밀어내고 그 노신사를 끌고 갔다.”

상업은행 노동조합 정책실장이던 김용준은 이렇게 회상한다.

“대학교 3학년 때 인 79년 부마항쟁에 참가해 본 경험이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시내로 진출하자 부산시민들이 합세하여 함께한 항쟁이었습니다. 진압방법상 다통으로 인해 유신이 종말을 고한 결정적 계기가 되기도 했다고 하고요. 그 때도 대단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도심으로 진출하느냐하는 문제가 승패의 관건으로 보였습니다.

우리 은행에서 내려 보면 신세계 앞 분수대가 바로 보이지요. 오후가 되면 학생 시위대가 순식간에 분수대를 점령해 버리더군요. 최루탄을 쏘아 해산시켜도 금방 다시 점령해 버리고요. 부마항쟁을 회상해 보면서 저는 이 싸움은 이기는 싸움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같이 근무하는 최재혁 동지 등과 함께 우리도 시위에 참가하였지요. 시위대로 인해 도로 교통이 마비되어 버스도 다니지 않으니까 교통 평계 대고 자연스럽게 학생들과 함께 시위를 하게 된 것이지요. 또 시위가 끝나서 교통이 재개될 때까지 소주도 한 잔 하면서 무용담과 고담준론을 나누기도 했고요. 우리 넥타이 부대가 처음에 앞장은 서지 않았지만 6월 항쟁의 승패가 갈라지도록 확실하게 힘은 보태었다고 생각합니다. ‘군정종식, 직선쟁취’라는 형성된 여론을 확실하게 밀어 준 것이 우리 넥타이부대가 한 일이었다고 기억합니다.”

80년 군복무시절 군복무중 계엄군의 일원이기도 했던 대한보증보험 신입사원 백종갑은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1987년 6월 26일 평화대행진을 한다는 것이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그날 내가 다니던 회사는 정상퇴근시간인 6시가 아닌 5시에 퇴근시켰다. 확인되지 않았지만 평화대행진에 참가하지 않도록 일찍 귀가시키는 것이라는 얘기가 있었다. 퇴근을 준비하는데 노동조합 위원장께서 우리 부서에 들렀다. 위원장과 나, 김혜숙은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 평화대행진에 참여하기로 하였다. 당시 나는 우리 부서의 노동조합 분회장 겸 노동조합 총무부차장이었고 김혜숙은 여성부장 이었다. 우리는 종로5가에 있는 회사를 나와 집결지라는 파고다공원으로 다가가려는데 종로4가에서 경찰과 대치하고 있는 넥타이부대를 만났다. 사실 대치라기보다는 경찰들이 몰려오면 골목으로 흩어졌다가 다른 골목에서 다시 나오는 술래잡기형태였다. 물론 그 술래잡기라는 것이 최루탄이었지만…… 최루탄이 뱅뱅! 온갖 매캐한 연기로 눈물 콧물 흘리며 이리저리 휩쓸리던 우리는 을지로로 이동하며 시청 쪽으로 올라갔다. 처음에는 돌 던질 생각을 안 했으나 최루탄

속에서 1시간여를 있다 보니 살기위해서인지 절로 근처 벽돌 부스러기에 손이 갔다.

도대체 우리가 왜 이런 시련을 겪어야 하는가? 나는 왜 계엄군이 되었어야 했을까? 내가 받은 국난극복기장은 무엇일까? 광주항쟁에서 순국한 사람들, 광주에서 전사하여 우리 부대로 공수된 군인들. 나는 왜 여기 나와 있는가?" 마치 영화에서처럼 이 모든 생각들이 머리를 맴돌았다.

우리는 시청 앞에서 경찰에 눌러 남대문 쪽으로 밀려갔다. 가다 보니 김국진 위원장께서 보이지 않았다. 인파 속에서 헤어진 것이었다. 남대문에는 서울역에서부터 밀려온 넥타이부대가 경찰들과 일진일퇴를 하고 있었다. 김혜숙과 나는 승례문상가 쪽으로 다가가려 했는데 김혜숙이 최루탄을 직통으로 뒤집어썼다. 우리는 건물 한 모퉁이에서 그의 등을 두드리며 잠시 숨어있었다. 그리고는 다시 길로 나가서 대열에 합류했다. 잠시 후 이번에는 내가 최루탄을 직방으로 뒤집어썼다. 그 괴로움! 눈물과 콧물 그리고 목이 타는 듯한 괴로움…… 이 모든 것이 현실 같지 않았다.”

제3장 직장 민주화를 위하여

6,29선언은 군부독재정권의 국민에 대한 항복 선언이었다. 1961년 5,16 군사쿠데타 이래 26년 동안이나 유지해 온 군부독재의 권위주의체제가 붕괴한 것이다. 그렇게 철옹성같이 보이던 군부독재정권의 항복은 우리에게 환희와 우려를 동시에 갖다 주었다.

7월 9일 이한열 장례식에 참여한 시청 앞 백만 군중은 ‘직선개헌 군정종식’이라는 시대정신을 군부 독재자들에게는 물론 88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예의 주시하던 전 세계에 다시 한번 각인시켜 주었다.

뜨거운 아스팔트 위 거리시위는 사라졌지만 권위주의체제에 억눌렸던 노동자들의 저항의 열기는 사무실에서 공장에서 다시 활화산처럼 솟아오른다.

권위주의 체제의 붕괴를 목도한 거리에서의 정치적 민주화 요구는 생활터전인 직장에서의 민주화 요구로 전환해 간다. 그 수단으로서 노동조합 결성이 전국적으로 들불처럼 번져간 것이다.

그동안 노동조합이 없던 사무직의 각 업종에서 노동조합이 결성되었다. 서울대 병원노동조합을 위시한 병원에서 노동조합이 결성되었다. 한신대학교에서 교직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였고 전 대학으로 번져 나갔다.. 한국일보노동조합을 필두로 신문사에서도 노동조합이 결성되었다. MBC 방송에서도 노동조합이 결성되었다. 산업연구원, 현대사회연구소등 연구기관에서도 노동조합이 결성되었다. 삼환기업에서 사무관리직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건설회사에도 노동조합이 결성되었다. 두산산업 등 무역회사에서도 노동조합이 결성되었다. 한국IBM등 외국 회사에도 노동조합이 결성되었다. 거의 전 업종에 걸쳐서 노동조합이 생겨난 것이다. 이 나라 각 업종 각 분야에서 노동조합이 결성되었다. 노동운동의 양적인 면이나 질적인 면에서 한층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주어진 것이다.

6월 항쟁에 참여한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7월 12일에는 노동조합민주실천위원회가 결성되

었다. 노동조합민주실천위원회는 ‘노총 위원장은 내손으로’, ‘노동법개정은 우리 힘으로’ 등의 구호 아래 노동조합민주화와 노동법개정을 위한 연대활동을 펴나간다.

위원회로서의 활동에 한계를 느낀 이 세력은 기존 금융노련 산하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1987년 11월 27일 한국자유금융노련연합을 결성한다. 한국자유금융노련연합은 곧 이어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8개월의 합법성투쟁 끝에 노총소속이 아닌 최초의 합법적 연합단체가 되었다.

제2금융권중 보험회사 일부가 분리되어 1988년 3월 3일 노총소속의 전국보험노동조합연맹을 결성하였다.

신문, 방송사 노동조합들이 모여 88년 11월 26일에는 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을 출범시켰다.

전국의 병원노동조합들이 모인 병원노동조합협의회가 88년 12월 17일에는 전국병원노동조합연맹을 탄생시켰다.

전국의 교사들의 조직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국민의 여망 속에 1989년 5월 28일 단일노동조합으로 출범하였다.

연구기관들의 연합단체인 전국전문기술노동조합연맹이 1989년 10월 14일 건설되었다.

건설회사 사무관리직 노동자들의 조직인 전국건설노동조합연맹이 89년 12월 16일 창립되었다.

전국의 대학노동조합들이 모여서 전국대학노동조합협의회가 1988년 2월1일 결성되었다.

민주출판언론노동조합협의회는 88년 1월 29일에 조직되었고, 외국기업노동조합협의회는 88년 12월 14일에, 전국시설관리노동조합협의회는 89년 1월 28일 결성되었다.

사무직 노동운동이 이 사회의 각 분야에서 비약적으로 발전해 갈 수 있는 새로운 지평이 열린 것이다.

제1절 노동조합민주화실천위원회

"사회의 민주화는 직장의 민주화로부터"

4·13 호헌조치 지지로 폭로된 한국노총의 어용성을 확인하고 더 이상 한국노총은 전체 노동자를 대표할 수 있는 조직이 될 수 없어 자주적 단결에 근거한 민주적이고 개혁적인 새로운 자주적 노동조합운동이 절실히 요구되었고, 이를 지속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새로운 연합단체의 필요성이 금융권을 중심으로 한 노동조합들에 의해 제안되었다.

"자주 없이 민주 없다."

"사회의 민주화는 직장의 민주화로부터"

"노총위원장은 내손으로", "노동법 개정은 우리 힘으로"

노동조합민주화실천위원회는

첫째, 노동조합의 민주화를 위한 가장 우선적인 사업으로 노총위원장을 비롯한 산별연맹 위원장의 직선제를 관철하고 노동조합의 실질적 민주화를 위한 제반활동을 하기로 하였으며,

둘째, 자주적 노동법개정은 당사자인 노동자 스스로의 민주적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노동자의 자주적인 힘에 의해 관철하고, 자주적 민주적으로 개정된 노동법은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노동조합의 실질적 활동을 보장하는 내용이어야 한다. 는 것을 주요 사업목표로 설정하였다.

노동조합민주화실천위원회 발족취지문

「서울을 비롯한 전국에서 거침없이 폭발한 국민들의 함성은 일정한 성과를 획득하고 다시 잠재화 되었다. 최근 정부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일련의 민주화 조치들은, 비록 형식적이거나 이러한 6·10 이후의 민주쟁취를 위한 범국민적 투쟁의 결과인 것이다.

전 국민이 몸으로, 함성으로 이룩한 이 전환의 시점에 서서, 정부주도의 민주화조치를 보다 실질적으로 내용 있는 민주화로 확보하기 위해 특히 우리 노동자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정립하며 방향을 설정하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하겠다.

돌이켜 보면 우리 노동자들은 60년대와 70년대 고도성장논리의 주역으로서, 산업사회의 역군으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죽어라 일만 했었다. 그러나 80년대 선진국의 환상은 불과 몇몇 사람에만 해당되었고, 열악한 근로 조건, 노동조합의 철저한 통제라는 대가만을 우리에게 선사하고 말았다. **우리의 손으로 이룩한 기적으로부터 소외당한 채 우리는 80년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 역사의 당연한 귀결로 주어지고 있는 민주화의 지점에 서 있는 우리는, 기만의 과오를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 노동조합의 완전한 민주화를 이룩하기 위해 실천적 과제를 생각하고 추천하는 적극적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전체 노동자의 존엄한 역사적 요구를 관철시키려는 노력은 무엇보다 현재의 노총에 대한 일정한 평가로부터 시작된다. 왜냐하면 현 제도 내에서 노총은 단위노동조합의 유일한 전국조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차마 일일이 열거하기조차 힘들 정도의 구조적·인적 부패상을 우리에게 서슴없이 보여주고 있는 한국노총은 특히 87년에 접어들면서 그 정도를 넘어 지극히 중대한 반노동자적인 과오를 저질렀으니 명백히 규탄받아 마땅하다.

첫째, 지극히 비민주적이고 비공개적으로 발표한 4·13지지성명이 그것이다.

노동조합의 대표라고 자처하는 노총이 전체노동자의 뜻에 반하여, 가장 비민주적으로 발표한 지지성명은 전 국민의 분노를 불러일으키고 노동자의 정신을 매도한 충격적 사건이었다. 더구나 온 국민이 몸으로 부당치며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4·13 조치가 이미 철회되어 버린 오늘에 와서도 노총은 뻔뻔스럽게 그 과오를 명백히 비판 반성하지 않고 어물쩍 넘어가려는 반역사적 작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둘째, 우리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또 한 가지 기막힌 사실은, 소위 노총에서 해고된 전문위원 문제이다. 노총의 부당한 해고를 상대로 해고무효소송을 낸 그들은 이미 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노총은 신규채용 운운하며 복직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노동자가 해고당하면 분명히 일어나 이에 맞서 투쟁해야 할 노총이 법원의 판결도 무시한 채 해고자 복직을 거부하는 것은 그들의 반노동자적 속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행위인 것이다.

셋째, 현재 노총위원장이란 사람은 민정당 중앙위원이며, 간부 대부분도 민정당 당원이라는 사실이다. 정치적 투

쟁을 통해 노동자의 권익을 향상시키고, 뽑아준 조합원들에게 봉사하기 위한 조직이 노총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정권의 비호 하에 들어가 개인적 영달을 꾀하려는 노총의 비민주적이고 정권 의존적 작태는 무엇으로 변명할 것인가.

넷째, 노동법 개정에 대한 형식적, 기만적 자세이다. 4·13 지지에 대한 반성 없이 6·29 직후에 나온 **파격적인 노총의 노동법개정안**은 그들의 기회주의적 속성을 만천하에 드러내 놓은 옷지 못 할 작태이다. 우리는 노총이 진정으로 노동자의 뜻을 모아 노동법을 개정할 의사가 없을 뿐만 아니라, 4·13지지성명에 대한 만회의 수단으로 노동법개정을 악용하고 있다고 규정한다. 만약 오늘의 민주화 상황이 바뀌어버리면 그들은 다시 권력의 비호 하에 들어가 몸을 도사릴 것이 자명하다고 우리는 규정한다.

이상과 같은 비민주적이고 비자주적인 노총의 반역사적·반노동자적 행위는 마땅히 역사의 심판대에 오르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단위노조를 비롯한 노총까지 모든 노동조합조직이 민주적, 자주적 단체가 되도록 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첫째, 노동법은 노동자의 손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즉, 노동법 개정에 전체노동자의 의견이 민주적으로 수립되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노동부가 주체가 된 일방통행적 조치나 비민주적 과정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노총의 기회주의적 노력은 필연코 상황의 발전에 따라 폐기될 수 있음을 우리는 경험으로 알고 있다. 노동법은 그 당사자인 노동자 스스로의 민주적 과정과 자주적 힘에 의해야만 관철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그러한 과정을 통해 마련된 노동법은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노동조합의 실질적인 활동을 보장하는 내용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산재방지시설의 의무화와 처벌규정, 해고제한 조항(근로자 귀책사유) 강화, 노동조합 설립 신고제의 실질적 확립, 단체협약 위반 시 처벌규정, 제3자개입금지규정폐지, 노동쟁의를 제한하는 독소조항 철폐 등을 통한 노동3권의 완전한 보장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노동조합의 자주화와 민주화를 위해 산별연맹을 비롯한 노총위원장의 직선제에 의한 선출이다. 민주화를 위해 대통령을 내 손으로 뽑는 것이 온 국민의 열망으로 확인된 상황에서, 노총의 진정한 자주화와 민주화를 위해서는 노총위원장의 직선제는 역사의 요구임이 명백하다. 그리하여 앞에서 열거한 것과 같은 반역사적 행위가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노동자의 가장 직접적이고 첨예한 문제에 직면해서 몇몇 뜻있는 조합 동지들이 한자리에 모여 노동조합 민주화와 노동법의 자주적, 민주적 개정을 위한 모임을 열게 되었으니, 우리는 위에 제시한 것들이 관철될 때까지, 역사가 가르치는 나침반에 결연히 대처해 나갈 것을 다짐하는 바이다.

1987. 7. 12

노동조합민주화실천위원회」

87년 7월12일 자주적인 노동법 개정, 사용자의 단체협약 위반에 대한 처벌 강화 및 제3자 개입금지규정 폐지, 노총위원장 직선제, 노총의 4·13 지지 성명에 대한 사과와 반성 등을 발족취지로 하여 노동조합민주화실천위원회가 37개의 노동조합의 참여하에 결성되었다. 여기에는 현대해상 등 금융노련소속 18개, 연세의료원 등 연합노련산하 4개, 세진전자 등 금속연맹 산하 4개, 한국슈어프로덕트 등 화학연맹산하 4개, 남해어망 등 섬유노련 산하 3개 사업장이 참여하였다. 의장에는 정일영이 선출되었다. 그러나 금융업이 차지하는 업종별 노동조합에서의 비중과 향후 수많은 노동조합이 참여하게 될 경우 새로 의장을 선출하겠다고 하는 뜻으로 '임시의장'이라 칭하였다. 본부는 범

한화재 노동조합에 두기로 하였다.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노민위는 5.16 이후 기존 관제적 노총체제를 부정하는 다양한 산업현장 사업장 노동조합이 공개적으로 참가한 최초의 자주적 협의체였다.

「노민위의 조직은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역량을 확충한다는 취지에 맞추어 실질적인 노동운동 역량을 흡수하는 구조로 계획되었다. 형태는 기존의 노동조합 조직과 비슷하였으며 특기할 것은 운영위원회의 설치와 그 임무이다.

운영위원회는 노민위 운영 전반을 책임지고 이끌어나가는 기관으로 회원 누구에게나 피선거권이 주어지도록 개방되었다. 당시 5인의 운영위원 중 3인은 노조위원장 중에서, 2인은 간부 중에서 피선되었으며, 위원장들의 모임인 상임위원회 대표들까지 참여해 실제로는 확대운영위원회의 틀에서 주요활동이 결정되었다.

회원가입은 노조 조직단위의 가입과 개별회원 가입이 병행되었다. 이는 당시의 구조 속에서 단위조직의 가입이 어려웠던 점과 노조가 없는 사업장의 노동자에게도 가입의 문을 개방하기 위함이었다.

노동운동의 자주성을 강화하고, 축적된 노동자들의 자주적 역량을 바탕으로 노동조합 간의 튼튼한 연대를 건설하기 위한 과도적 조직으로 발족한 노민위는 바람직한 의미로서의 노총이나 상급단체의 역할이 아닌 수평적 조직으로서의 한계를 안은 채 활동을 전개하게 된다.

노민위는 당시 전 노동자의 강력한 요구 중의 하나였던 노동법개정을 위해 ‘노동법개정은 노동자의 힘으로’ ‘노총의 민주화’ 등의 구호 아래 노동법개정운동과 함께 기타 연대활동을 펴나간다.»⁴⁾

이날 노민위는 미리 준비한 노동법개정안⁵⁾을 발표하고 7월 20 기관지인 ‘민주노보’⁶⁾ 창간호를 발간하였다.

7월 26일에는 노동조합 민주화와 노동법 개정을 위한 제 1차 공청회를 여의도 여성백인회관에서 개최하였다.

공청회에서는 법률적인 토론보다는 노동현장에서 발생한 생생한 현장사례를 중심으로 실제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남해어망의 임미령 등 노동자들이 직접 사례를 준비하여 발표하였다.

특히 각계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노동법개정에 대해 노동자들의 요구가 반영되어야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노동자들의 참여하에 노동법개정이 이루어져야함을 강조하고 아울러 노총 및 산별연맹을 노동자들의 자주적 민주적 조직으로 바꾸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노총 및 산별위원장 직선제를 통해 노동자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임을 주장하였다.

노동법 개정안(요약)

4) 럭키화재해상보험노동조합, 1989, 『하나는 모두를 위하여 모두는 하나를 위하여(소집단토의 방식에 대하여)』, 주야인쇄, 25쪽

5) 별첨부록: 노동조합민주화실천위원회 노동법 개정안

6) 민주노보 발간에는 외환은행의 전재주가 관여하였다.

■ 노동조합법

관련조항	노총청원	수정안	취지 및 비고
제13조 (노동조합의 설립)	1) 노동조합 조직형태의 자율적 결정 2) 설립최소인원 규정삭제 3) 설립신고서류 간소화 4) 행정관청을 노동부 장관으로 일원화	좌동	노동조합은 결성총회와 동시에 적법하게 설립된 것으로 간주되며 노동부에는 행정적 편의를 위해 신고함
제15조(신고증)	신고서 접수일로부터 2일 이내 신고증 교부 현역군인, 경찰공무원, 교도공무원, 소방 공무원은	신고서접수와 동시에 접수 중 교부	
제8조(노동조합의 가입과 제한)	가입 제한을 예외적으로 인정	좌동	
제33조(교섭권한)	행정관청의 승인 없이 상급단체에 단체교섭 위임	좌동	
제35조(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유효기간 1년으로 단축	좌동	
제39조(부당노동행위)	유니온샵 인정	좌동	
제12조의 2(제3차 개입금지)	삭제	좌동	
제12조(정치활동의 금지)	삭제	좌동	
제16조(규약의 취소변경)	삭제	좌동	
제21조(결의의 취소변경)	삭제	좌동	
제23조(임원의 선거 등)	②항 (제한 규정) 삭제	좌동	
제30조(행정관청의 검사 등)	삭제	좌동	
제32조(해산명령 등)	삭제	좌동	

■ 노동쟁의 조정법

법의명칭	노동쟁의 조정법	노동쟁의 보호법	현행노동쟁의 조정법은 노동쟁의에 대하여 국가의 간섭개입을 전제로 하여 사실상 노동쟁의를 봉쇄하고 있으므로 정당한 노동쟁의는 국가의 보호를 받아야 마땅하다는 취지에서 법의 명칭변경 (또는 신법 제정)
------	----------	----------	--

관련조항	노총청원	수정안	취지 및 비고
제4조(공익사업의 정의)	공익사업의 요건과 범위를 엄격히 제한	1. 수도·전기 및 가스사업 2. 의료사업 3. 통신사업	노총 청원보다 더욱 엄격히 제한
제30조(중재의 개시)	공익사업에 대한 직권중재제도의 폐지	좌동	
제12조(쟁의행위의 제한)	쟁의행위의 금지 및 장소 제한 폐지	① 조합원 또는 대의원의 직접비밀 무기명투표에 의한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를 행할 수 있다. ②,③항 삭제	

제3장 알선	알선제도폐지	좌동	
제40조(긴급조정 의 결정)	긴급조정의 결정을 대통 령 권한사항으로 함	좌동	※ 다른 의견(긴급조정의 대상을 공익사업으로 한정) 있음.
제32조(중재위원 회의 구성)	중재위원회 구성에 있어 관계당사자의 합의를 존 중함	좌동	냉각기간이라는 용어는 쟁의행위를 부당시하는 시각에 의한 것으로 (쟁의개시)유보기간이라는 용어가 객관적 임. ※ 다른 의견(일반사업:5일, 공익사업:10일) 있음.
제13조의 2(제3자 개입금지)	삭제	좌동	
제14조(냉각기간)	변동 없음	1. 냉각기간을 유보기간으 로 용어변경 2. 일반사업:10일, 공익사 업: 15일로 단축	

■ 근로기준법

제42조(근로시간)	8시간 노동제의 확고한 보장	평일 8시간, 토요일 4시간 1주일 44 시간 초과할 수 없다. 기타는 좌동	보편화되어 토요일 4시간 근무를 명문화하 여 확대 적용함.
제27조의2(해고의 예고)	해고예고의 적용제의 제 한	예고기간 및 임금지급 의무기간을 30 일에서 60일로 변경	재취업의 기회를 충분히 주어 직업안정을 도 모함
신설	제27의 3(해고 등의 구제 신청) 신설	좌동	
제30조의 2 (임금 채권우선변제)	질권, 저당권, 조세, 공과 금에 우선	좌동	
제12장 벌칙	변동 없음	벌금형보다는 체형위주로 체계조정 및 벌금의 상향조정	※ 형세사업장 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하여 근 로기준법 적용범위(시행령 제1조)를 확대하 는 것이 필요함. - 5인 이상 업체 적용

■ 폐기되어야 할 법

1. 노사협의회법 : 노총안과 동일

2. 기타

가) 노동위원회법은 상기관련법의 개정취지를 살리는 방향으로 노동위원회의 권한 강화 및 독립성이 보장되도록 개정되어야
함.

나) 노동조합법 제8조의 개정과 관련하여 국가공무원법 66조, 지방공무원법 58조, 공무원 복무규정 28조, 교육공무원법 43
조를 폐기 또는 개정하여야 함. 28조, 교육공무원법 43조를 폐기 또는 개정하여야 함.

7월 26일에는 다시 ‘노동법의 개정은 노동자의 참여위에 노동자의 손으로 이루어져야한다’, ‘노총위
원장과 각 산업별연맹 위원장을 전체 노동자의 손으로 직접 뽑는 것이 노동조합 민주화의 지름길’,
‘이러한 노동자의 자주적 민주적 노력을 방해하는 어떤 책동에 대해서는 천만 노동자의 힘을 모아 단
호히 대처함을 천명한다.’는 내용의 ‘노동법개정, 노총 위원장직선제’를 촉구하는 결의문⁷⁾을 발표하였
다.

8월 12일에는 현대자동차 노동조합 설립을 둘러싸고 야기된 한국노총소속 금속노련 조직부장의 이
해할 수 없는 행태로 야기된 현대자동차의 노사분규의 책임을 한국노총과 기업주들은 책임을 져야하
며 현 한국노총 집행부의 퇴진을 요구하는 ‘노사분규의 전국 확산을 보고’⁸⁾를 발표하였다.

7) 별첨각주: 결의문

8) 별첨각주: 노사분규의 전국 확산을 보고

다시 동년 8월 26일에는 한 노동자의 죽음을 두고 사용자의 철저한 반성을 촉구하는 ‘이석규 열사의 죽음을 애도하며’⁹⁾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수십 년간 비인간적 대우와 혹심한 노동 속에서 우리 2천4백만 산업 전사들은 조국건설에 몸바쳐왔다.

(중략) 끝으로 인간다운 삶을 요구하다가 먼저 가신 이석규 동지의 명복을 빌며, 우리는 동지가 못다 이룬 과제를 완수하기 위해 어떠한 희생도 불사하고 끝까지 투쟁해 나갈 것을 천명한다.

1. 대우그룹 김우중 회장은 2천4백만 노동자 앞에 공개 사죄하라.
2. 대우그룹은 목포조선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를 즉각 수용하라.
3. 정부는 이석규 열사의 사인을 공정하게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4. 위의 주장이 즉각 관철되지 않을 경우 우리는 모든 민주세력과 연대하여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응징할 것이다.」

노총의 폭력성에 대한 우려와 노총간부들의 집권 민정당원으로서 정치권력지향 성향

다시 9월 2일에는 ‘노총의 8월 27일 성명에 대한 우리의 견해’¹⁰⁾에서는 다음과 같이 노총의 폭력성에 대한 우려와 노총간부들의 집권 민정당원으로서 정치권력지향 성향에 대한 우려를 성명으로 밝히고 있다.

「(전략) 노총의 최근의 작태는 급기야 8월 27일의 망언성 성명서를 발표함으로써, 다시금 그 반 노동자적 성격을 만천하에 공개하고 말았다.

이 성명에서 노총은, 현재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노동운동의 방향과는 전혀 무관한 2가지의 선언을 하고 있는데 (중략)

첫째, 현재 전국적으로 가열하게 타오르고 있는 노동현장에서의 투쟁에 있어 사용자를 [전조직력을 동원, 단호히 응징] 하여야 할 노총이, 오히려 노동조합을 민주화하자는 간절한 요구로 어용노조 퇴진을 외치는 노동자들에 대해 [전조직력을 동원, 단호히 응징]하겠다는 주장을 하는 것은, 1백만 민주노동자의 대변인이기를 스스로 포기하고, 사용자를 벗 삼아 오히려 민주노조를 응징하는데 앞장서겠다는 선언으로 규정된다.¹¹⁾

둘째, 노총의 그간의 행적을 비추어 볼 때, 노총이 말하는 근로대중의 이익을 추구하는 정당에 대해서는 실로 많은 의문이 제기되지 않을 수 없다. 집권당인 민정당의 중앙위원인 노총위원장과, 대부분 민정당원으로 구성된 노총이 지지하는 정당이 어떤 정당인가는 명백하다. 더구나 민주노조를 응징하는데 앞장서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밝힌 노총이 근로대중의 이익을 추구하는 정당 운운하여 지지발언을 하는 도착적 행위는, 4·13호헌을 지지한 노총의 그간의 행적으로 미루어볼 때 집권당에 대한 완곡한 아부로 볼 수밖에 없다.

셋째, 이러한 노총의 반 노동자적 입장을 보다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어처구니없는 사실은, 노총이 주장하는 응징의 방법으로 1,000명의 각목부대를 동원할 수 있다는 발언이 보도된 사실이다.」

9월 11일에는 ‘9월 5일 임시국무회의 경영자폭행 허위사태 발표에 대한 우리의 입장’¹²⁾에서는 국

9) 별첨각주: 이석규 열사의 죽음을 애도하며

10) 별첨각주: 노총의 8월 27일 성명에 대한 우리의 견해

11)

무회의와 전경련의 노동자들의 경영자 폭행사례발표 조작의혹에 대해 그 진상이 올바르게 밝혀져야 하며 그에 따른 응분의 책임과 처벌이 수반되어야 함을 요구한다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 「1. 국무회의는 전경련을 위한 기관인가?
2. 거짓과 조작은 도덕성의 파탄에 기인한다.
3. 진실은 밝혀져야 한다. (중략)
 - . 기아기공...
 - . 현대중공업...
 - . 태성탄좌...
 - . 삼척탄좌 정암광업소...
 - . 대우자동차...
4. 국민을 기만하고 우롱한 처사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마땅히 응분의 처벌을 받아야 한다.
5. 구속 노동자는 석방되어야 한다. (후략)」

9월 18일 ‘현대중공업 사태와 9월 5일 임시각의 허위보고를 규탄한다’

「일부 언론과 정부, 전경련(재벌 등의 모임) 등의 노동자들의 민주노조 설립, 인간적 대우 요구, 근로조건개선 투쟁에 대한 일방적인 반노동적 태도와 허위사례 발표(9월 11일 노동조합민주화실천위원회 성명서 참조)는 실로 우리 2,400만 노동자의 생존권을 박탈하려는 기도이며 (중략)

이제 우리 노동자들은 우리 노동자의 스스로의 힘으로 전체 노동자의 생존권을 획득하고자 아래 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지속적인 투쟁을 전국적으로 전체 노동자와 함께 전개할 것임을 결의한다.」

10월 23일에는 동년 10월 23일에 있었던 노민위 가입한 노조간부들에 대한 폭력행위에 대한 규탄 성명 ‘민주적 노조간부들에 대한 노총의 폭행만행을 규탄한다’¹³⁾는 다음과 같이 ‘노동법개정 중앙궐기대회’에서 발생한 폭력상황을 폭로하고 노총의무금 납입거부운동 등을 제안하고 있다.

「10월 23일 한국노총은 현행정부와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시도지역협의회 및 산별연맹의 간부를 중심한 일부 노동조합들에만 은밀히 연락하고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대다수의 노동조합에는 알리지도 않은 채 “노동법개정 촉구 중앙궐기대회”를 기만적으로 개최하려 하였다.

이는 모든 노동조합의 의견을 민주적으로 수렴하고 전 조직이 모여 노동자를 위한 노동개정을 위한 집회가 되어야 한다는 상식에도 어긋나는 구태의연한 작태이다.

모든 노동조합의 여론이 반영되는 노동법개정을 위해 “노동조합민주화 실천위원회”는 연락 가능한 노동조합들이 궐기대회에서 ‘노동법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개정’ ‘구속노동자 전원석방’ ‘노동조합 탄압중지’ 등을 요구하고 결의하기 위하여 참여하였다.

대회가 시작되기 전에 현 노총 산하 조직인 단위노조 위원장과 간부들이 노총 및 산별연맹의 민주화를 주장하는 “노동조합 민주화 실천위원회”의 기관지인 “민주노조”2호를 배포하자 노총집행부는 이를 무력저지하고 집단 폭행하며 대회장 밖으로 몰아내었다. 이 과정에서 노민위 공보국장인 광태원(현대해상화재보험노동조합 사무국장, 31세) 씨가 주먹과 발길질로 집단폭행당해 안경이 깨어지고 철제의자로 난타당해 머리와 귀를 12바늘이나 꿰

12) 별첨각주: 9월 5일 임시국무회의의 경영자폭행 허위사례 발표에 대한 우리의 입장

13) 별첨각주: 민주적 노조간부들에 대한 노총의 폭행만행을 규탄한다

매는 상처와 전신 타박상을 입고 한일투자금융 노조위원장인 정일영(33세) 씨와 청계피복 노동조합 위원장인 김영대(31세) 씨 등 다수의 노민위 회원 노조위원장들이 옷이 찢어지고 구타당하는 등 집단 폭행을 당하였다. (중략)

1. 노총은 10월 23일의 집단폭행에 대해 신문지상에 공개 사과하라!
2. 노동은 폭력배의 명단을 공개하라!
3. 노총 및 산별연맹은 “노동조합 민주화 실천위원회”활동에 대한 방해책동을 즉각 중단하라!
4. 구속노동자 석방과 노조탄압저지투쟁에 앞장서지 못하는 현 노총집행부는 책임을 지고 즉각 퇴진하라!
5. 위 사항이 관철되거나 노총이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운동에 스스로 나설 때까지 범 노동조합적인 노총 의무금 거부운동을 전개해 나갈시다.」

10월 26일 ‘노동법 즉각 개정하라! 노동조합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¹⁴⁾

「6월, 7월, 8월 노동자를 비롯한 전 국민의 민주화투쟁과 요구를 양대 정당 및 정치인들은 외면하고 있다. (중략) 노민위는 모든 의존적 비민주적 자세를 거부하고 노동자들의 제반 민주적 권리를 쟁취하고 스스로의 힘으로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노동조합들의 연대를 더욱 굳건히 확대 강화시켜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이다.

1. 구속 노동자들을 전원 즉각 석방하라.
2. 해고 등의 노동자들을 복직시켜라.
3. 노동법을 즉각 개정하라.
4. 노동조합탄압을 즉각 중지하라.
5. 노동자탄압에 이용되는 쟁의조정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 국가보안법등 제반 악법을 즉각 철폐하라.
6. 민정당과 민주당은 이 요구사항에 대한 공식일정을 명백히 표명하라.」

11월 2일에는 한국노총 산하 연맹인 금융노련에 대해 10월 23일 발생한 노총의 폭력사태에 대해 금융노련 소속 노조를 72개 노동조합 명의의 ‘노총의 폭행만행에 대한 연맹의 강력한 대처를 촉구한다’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노민위는 노동조합의 대표자만으로 구성되는 단체가 아닙니다

「본 위원회와 뜻을 같이 하는 노동자를 중심으로, 노동조합의 대표자, 간부, 대의원, 조합원 등이 대등하게 직접 참여하여 결정하고 운영하는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단체입니다.

노민위의 활동은 다음의 기구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 0.총회: 전 회원으로 구성되며, 최고 의결기관입니다.
- 0.상임위원회: 회원 중 각 단위노조위원장으로 구성되며, 집약된 의견을 상임위원회의 대표단을 통하여 운영위 확대회의에 상정한다.
- 0.중앙위원회: 단위노조 간부로 구성된다.
- 0.운영위원회: 발족대회 및 운영위원회에서 선임된 위원들로 구성되며, 각 국의 업무를 총괄적으로 관장한다.
- 0.집행국: 본 위원회에서 활동하고자 하는 회원들로 구성되며 활동을 위한 제반실무를 집행한다.
- 0.운영위확대회의: 운영위원회, 집행국의 각 국장, 그리고 상임위원회에서 선임된 대표로 구성되며, 총회로부터의 위임사항에 대한 정책 결정기구이다.

14) 별첨각주: 노동법 즉각 개정하라! 노동조합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0.자문위원회: 필요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의해 둘 수 있다.

0.운영위원: 정일영(의장), 이석행, 김경자, 이상재, 장민석」

노민위의 한계

노민위는 한국노총의 민주화와 이를 통한 자주적 전국연합단체를 건설하기 위한 준비조직으로 건설되었다. 따라서 노민위의 활동은 노총민주화의 일환으로 노총위원장의 직선제와 노동법개정투쟁 및 노민위의 창립취지에 동의하는 조합원 및 조합간부들의 더 많은 동참을 통해 한국노총을 민주화하고 새로운 자주적 연합단체를 건설하고자 활동하였다.

또한 위원장 중심이 아닌 가입자 중심의 활동 역시 당시 대표자 중심의 운영이 대세인 현실의 벽을 넘어 노동조합내의 민주적 세력을 모으는 데는 또 다른 한계가 되었다. 우선 그동안의 성과인 금융권 노동조합만으로 전국적인 연합체를 구성하기로 하고, 한국자유금융노동조합연합 건설에 매진한다. 아울러 노민위에 참여하였던 금융 이외의 조직은 한국노총에 남아 한국노총의 민주화와 민주노조들을 결집하는 구심으로 활동하기로 하고 교류와 연대를 지속해 갔다.

제 2 절 들불처럼 피져가는 노동조합 건설

『 6.29선언으로 정치적 해빙을 맞아 민중운동은 급격히 분출했는데 특히 노동운동에서 두드러졌다. 7~9월 사이 1,000개 이상의 신규노동조합이 설립되어, 87년 6월 당시 2,742개였던 노동조합수가 그해 말에는 4,103개로 50%나 증가했다. 이에 따라 노동조합원수는 21%, 노동조합 조직율은 14.7%에서 17.3%로 증가했다.』¹⁵⁾

6.10항쟁의 결과로 대한교육보험에서 노동조합 설립을 앞당길 수 있었다고 대한교육보험 초대 위원장 이상학은 말하고 있다.

“여러 차례 노동조합 결성을 시도하였으나 실패한 경험이 있는 교보생명(대한교육보험)에 노동조합을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87년 가을 정도를 노동조합 조직 결성 시기로 예정하고 있던 이들은 6월항쟁으로 상황이 달라졌다고 판단하고 노동조합 결성에 박차를 가하였다. 달라진 사회적 분위기가 피해의식으로 노동조합결성에 심한 기피현상을 보이던 사원들을 조직하는 데에도 한결 용이한 상황이 전개되었고 노동조합 결성을 앞당기게 하였다.

5000명이 넘는 노동조합원을 가지게 되는 대한교육보험 노동조합은 7월 8일 6.29 이후 한국 사무직 노동조합의 새로운 시대를 알리는 신호탄이 되었다. 7월 9일 노동조합 결성을 선포하는 바로 그 시간, 길거리에는 고 이한열 장례행렬이 광화문거리를 가득 메우고 있었다. 직원들은 거리에서의 민주화와 일터에서의 민주화가 하나 되어 만나는 바로 현장의 주인공들이었다. 민주화 투쟁에 참여하면서 거리에서의 민주화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생활조직에서의 민주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리의 민주화를 일터에서의 민주화로”라는

15) 금융노동조합연맹, 『금융노동조합40년사』, 2000.8, 이장길기획, 603쪽

우리들의 구호가 이제 구체화되고 있었던 것이다.”

『1987년 6.29선언을 기점으로 비교적 자유스러운 정치 분위기 속에서 한국의 노동운동은 최고의 고양기를 맞이하게 된다. 또한 제2금융권내의 각 사업장에서 그동안 억눌려온 생존권적 기본권의 보상과 직장민주화를 달성하는 방안으로 노동조합을 결성하게 된다. 87년 6월 민주화운동에 동참했던 사무금융 노동자들은 직장민주화와 경제민주화를 이룩하기 위한 방안으로 신규노동조합의 건설을 급속히 추진하게 되었고 특히 사무직의 노동조합 결성이 괄목할 만큼 증가하였다. 1988년 3월 30일자 노동부에서 개최한 제 2차 전국기관장회의 회의 자료에 따르면 병원·의료기관노동조합이 57개, 방송·신문사 등 언론기관노동조합이 20개, 연구전문직기관노동조합이 9개, 은행, 투자금융, 보험, 증권, 투자신탁, 사회보장기관 등의 금융기관노동조합이 73개 설립되었다.』¹⁶⁾

6.29 직후의 금융권에서의 신규노동조합 건설현황은 다음과 같다.(87년 9월까지)

보험업종에서는 대한교육보험 노동조합을 필두로 국제화재해상노동조합(87.7.21), 대한화재해상보험노동조합(87.8.24), 해동화재해상보험노동조합(87.8.17), 제일화재해상보험 노동조합 (87.8.22), 대한재보험 노동조합 (87.8.25) 등 6개의 신규노동조합이 건설되었고, 투자금융업종에서는 한국투자금융노동조합(87.7.22), 대한투자금융노동조합(87.7.23), 고려투자금융노동조합(87.7.29), 제일투자금융노동조합(87.8.5), 한성투자금융노동조합(87.8.6), 금성투자금융노동조합(87.8.10), 동아투자금융노동조합(87.8.12), 부산투자금융노동조합(87.8.13), 인천투자금융노동조합(87.8.19), 중앙투자금융노동조합(87.8.24), 삼삼투자금융노동조합(87.8.24), 서울투자금융노동조합(87.8.24), 국제종합금융노동조합(87.8.24), 대구투자금융노동조합(87.8.24), 대구투자금융노동조합(87.8.24), 국제종합금융노동조합(87.8.24), 영남투자금융노동조합(87.9.15), 대우투자금융노동조합(87.9.15), 영남투자금융노동조합(87.9.15), 울산투자금융노동조합(87.9.23), 등 20개 노동조합이 건설되었다.

6월항쟁 이후 특히 폭발적 신규 노동조합건설이 이루어진고 있던 투자금융·증권업종에서 우선 업종협의회가 탄생하였다.

87년 8월 22일 YWCA 수련장 버들캠프(부천)에서 ‘투자금융노동조합합동수련회’를 개최하고 한일투자금융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을 비롯한 총 38명이 참석하여 ‘투자금융노동조합협의회’(의장 이호용, 한일투자금융 노동조합)를 발족하였다.

증권업종에서도 신규노동조합의 폭발적인 건설이 이루어졌다. 6.29 이전 홀로 민주화운동에 참여하고 이었던 유화증권 노동조합은 이제 그 외로움을 덜어버릴 수 있었다. 이들 증권업종 노동조합들도 ‘증권단노동조합협의회’를 구성하고 활동하였다.

동양증권노동조합(87.8.1)을 시초로 대한증권노동조합(87.8.7), 신한증권노동조합(87.8.7), 한국증권전산노동조합(87.8.13), 한신증권노동조합(87.8.19), 부국증권노동조합(87.8.20), 한양증권노동조합(87.8.25), 동방증권노동조합(87.9.7), 신흥증권노동조합(87.9.10),

16) 이영희, 『화이트칼라노동조합론』, 도서출판 녹진, 1988.10

서울증권노동조합(87.9.21) 10개 증권업종 신규노동조합이 건설되었다.

이외에도 한국기업리스 노동조합과 85년 7월 창립되었으나 해산된 의료보험조합연합회노동조합(1987.7.1)이 건설되었다.

제 3 절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권위주의와 불신의 시대를 청산하고 빛나는 민주의 새 역사를 열면서

1987년 7월 12일 설립된 노동조합민주화실천위원회 활동을 바탕으로 하여, 1987년 11월 27일 오후 8시 종로성당에서 한국자유금융노동조합연합¹⁷⁾은 45개 단위노조간부, 250여명이 참석하여 창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다음과 같은 ‘창립선언’과 함께 한국자유금융조합연합¹⁸⁾의 출범을 고하였다.

“권위주의와 불신의 시대를 청산하고 빛나는 민주의 새 역사를 열면서, 우리는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조합운동의 깃발을 높이 세워 인간의 존엄성을 고양하고자 한다.”

창립 익일 노동부에 설립신고서류를 접수함과 동시에 노정국장을 면담하고 노동부의 자유금융노련 창립에 대한 기본 입장을 청취하였다.

1987년 11월 30일에는 서울투자금융 9층 강당에서 47개 조합 250여명의 조합원이 참석한 가운데 자유금융노련 창립보고대회를 개최하였고 여기에는 2개의 노조가 추가로 참가하였다.

또한 창립대회직후 자유금융노련결성에 참가한 산업리스, 한일투자금융, 범한화재, 현대해상, 신동아화재 등 단위조합들은 자체 총회나 대의원대회를 소집하여 계속해서 한국자유금융노동조합연합을 상급단체로 변경해 갔다.¹⁹⁾ 한국투자신탁 등 자유노련창립 발기인이 아닌 단위조직들도 자체 총회나 대의원대회를 소집하여 새로 자유노련에 가입하였다. 이들이 합법적인 연합단체가 아닌 상급단체에 가입할 수 있었던 것은 ‘6월항쟁’과 무관하지 않았다.

자유금융노련의 창립은 4·19이후 태동된 사무직 노동운동이 군부의 정치개입으로 굴절되는 외적 영향과 노동자로서의 의식부족이라는 내적갈등 속에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던 현실 위에서 굳건한 일보를 내딛는 발전이라 할 수 있었다.

하지만 범한화재 해고자 복직투쟁에 함께했던 일부 보험권 노동조합들(한국자동차보험, 동양화재, 고려화재 등)은 한국노총 소속 금융노련에 그대로 잔류하여 후일 보험노련을 설립하였다. 또한 대한보증보험 노동조합은 금융노련도 자유노련도 아닌 중립적 입장을 고수하였다.

또한 자유노련 창립준비위원회에 참여하였던 소수의 은행권 노동조합들인 수출입은행, 한미은행, 은행유관기관 노동조합도 부득이 은행업종의 업무 특성상 그대로 금융노련에 잔류할 수밖에 없었다.

17) ‘자금노’, ‘자유노련’, ‘자유금융노련’ 등은 초기에 ‘한국자유금융노동조합연합’의 약칭으로 불렸다.

18) 5.16 이후 노동조합의 최초의 연합단체

19) 부록: 범한화재해상보험노동조합, 2007.4, 「조합동정제 20호 88.2.5, ‘한국자유금융노동조합연합 가입 88.1.23 임시전국대의원대회」 『초대, 2대 활동자료집(1986.5~1992.5)』

‘자주와 민주개혁의 기치를 높이 올리고’
‘하나는 모두를 위하여 모두는 하나를 위하여 이해와 입장의 차이를 극복해 나아간다’
‘상대방에 대한 이해와 신뢰를 자주적 노동조합운동의 원리’로 천명하고
‘민주개혁의 깃발을 높이 올려...’

한국자유금융노동조합연합 창립의 뜻

권위주의와 불신의 시대를 청산하고 빛나는 민주의 새 역사를 맞이하려는 문턱에서 우리는 오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조합 운동을 위한 하나의 깃발을 높이 세우고자 한다. 4.19민주이념을 계승하며 1960년 처음으로 이 땅에 태동한 사무직 노동자의 노동조합운동은 어언 4반세기를 넘었으나 아직도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연륜에 값하는 운동의 공간 확대와 질적 발전을 성취해 내지 못하고 있다. 국토분단과 민족분열의 현실이 드리우는 경직된 냉전사고 아래서 경제주체간의 진정한 역할 인정이 불가능하였으며, 우리 사회의 가장 큰 구성체인 노동자의 권익과 명예를 옹호하기 위한 노동운동의 사회적 기능과 역사적 의의에 대한 대중적 인식기반이 취약하였다는 사실이 문제의 일반을 이루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노동운동을 조직하고 지도해 나가야 할 노동조합 조직 내에서 운동의 민주적 발전을 저해하는 제도적 질곡이 단위조직은 물론 상급조직에 이르기까지 편만해 있다.

현 금융노련도 예외는 아니다. 10개 은행노조가 노련운동을 독점하고 100여개에 달하는 중·소 노동조합의 권익과 목소리는 철저히 외면·무시된 가운데 노동운동의 철학과 이념은 부식을 거듭해왔다.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는 까닭은 사회와 조직단위내의 비합리성을 개혁할 수 있는 평화적인 절차와 방법을 담보해 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 노련은 그 권력구조와 운영의 비민주성으로 인하여, 또 집행부의 노동조합 철학부재로 인하여 내부의 모순과 비합리성을 개혁해 나갈 내적인 힘을 결여하고 있다. 그러기에 노련의 비민주성을 시정코자 했던 그동안의 우리들의 노력과 몸부림은 실망과 좌절로 끝나지 않았던가?

그러나 이제 우리는 좌절을 딛고 민주화의 시대적 요청에 따르기 위해 **가을 하늘로 치솟아 오르는 솔개의 기상**으로 단위조합의 뜻과 희망을 **‘한국자유금융노동조합 연합’의 깃발 아래 결집시키고자 한다.**

1987. 11. 27

한국자유금융노동조합 창립준비위원회

『4.19민주이념을 계승하여 1960년 이 땅에 처음으로 출발한 사무직 노동자의 노동운동은 교원노조, 언론노조 그리고 금융노조를 탄생시켰으나 5·16을 거치면서 금융노조만 단체협약 체결이 가능하게 되어 지금까지 그 맥을 이어 오고 있었다. 60년대 이후 정치정세에 따라 부침을 거듭하여 오던 노동운동의 환경적 변수의 영향으로 80년대 중반 이후에야 사무직 노동운동도 조금씩 활기를 되찾기 시작하였으며 6·29이후 노조결성 및 활동에 있어서 폭발적인 발전을 경험하게 되었다.

우리나라 금융산업은 60~70년대 고도성장 정책의 과정 속에서 양적팽창을 거듭해 왔으며 은행 이외에 보험·증권·투자금융 등 비은행금융기관이 대거 출현하여 그 질에 있어서도 상당한 발전을 이룩하여 왔다. 이러한 금융산업의 팽창, 발전은 경제규모의 확대에 따른 당연한 귀결이었으며 금융산업 종사자의 증대는 물론 금융시장의 구조를 변화시켰다. 이로 인해 금융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 간의 상대적 위치도 사업장에 따라 다양하게 차별화되었다. 은행과 보험, 단자회사 등은 영업환경, 근무조건 뿐만 아니라 종사자의 급여수준에 있어서도 상당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노동조합활동의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되는 교섭대상에 있어서, 은행은 그 소유자가 ‘공공의 성격’을 띠고 있는데 비해 비은행금융기관과의 대부분은 재벌그룹에 속해 있거나 ‘개인의 소유’이므로 노동조합과 사용자 간의 교섭에 있어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었다. 이와 같은 교섭조건에서의 차이점을 전제치 않고 은행

과 비은행금융기관의 노동조합을 은행 중심으로 구성된 기존 금융노련에서 총괄적으로 지도하기에는 그 구조적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었다. 기존 금융노련은 제2금융권(비은행금융기관)의 교섭을 지도해 낼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하였다.

기존 금융노련의 운영이 10개의 은행노조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대부분의 비은행금융기관 노조는 노련의 의사결정과정에서 철저히 소외되어 있어서 그들의 특수한 이익을 대변할 기회를 봉쇄당하고 침묵만을 강요당하여 왔다.

사실 금융노련과 제2금융권 노조 간의 불신의 뿌리는 상당히 깊다. 85년 가을 당시 금융노련 산하 56개 노조 위원장의 서명으로, 금융노련 규약의 '최소한 노조 당 조합원수가 400명 이상이어야만 노련의 대의원 자격을 갖게 된다.'는 것에 대해 '대의원대회 대표자격조정'을 안건으로 상정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부결되었고 86년 대의원 회의에서도 제2금융권 노조위원장들이 연맹의 비민주성에 대해 통박한 일도 있다.

또한 노총의 413지지성명에 대한 규탄성명과 87년 10월 23일 한국노총궐기대회에서 발생한 노총집행부에 의한 노민위 관계자들에 대한 폭력사건에 대한 72개 단위 노조의 연대성명에서도 잘 나타나 있듯이 금융노련이 산하 단위노조의 의사를 대변하지 못한 채 현실안주적인 태도를 견지해온 데 대한 불신은 지속적으로 누적되어 왔다.

결국 기존 금융노련의 민주적 운영을 위한 노력을 일방적으로 묵살, 방해하는 모습은 기존 금융노련이 노동운동에 대한 철학과 이념이 부재함을 뚜렷이 보여주고 있었다.

84년 5월 한일투자금융 노조의 탄생 이후 계속 확대된 제2금융권 노조의 건설은 87년 7·8·9월 노동자대투쟁을 거치면서 급속히 늘어났다. 그러나 늘어나는 노조 조합원들의 자주적 지향과 요구를 기존 금융노련이 올바르게 실현해낼 수 없음을 명확하고, 노동자들이 단결을 이루어 낼 수 있는 구심체의 형성이 중요하게 제기되었다.

사무금융노련의 탄생 배경에는 이러한 구심체의 형성이 투쟁 속에서 준비되었다. 84년 5월 한일투자금융 노조 분쇄저지 투쟁을 비롯하여, 85년 2월 현대해상화재보험 노조의 노조와해를 위한 부당한 인사발령에 반대하는 농성투쟁, 87년 3월의 범한화재해상보험 노조의 해고자 복직투쟁 등이 있었다.

특히 범한화재해상보험 노조의 부당해고 철회 투쟁은, 위원장을 비롯한 노조간부 4명이 단식농성을 벌이던 농성장의 금융노련 사무실에 구사대가 난입하여 이에 제1금융을 포함한 각 노조간부 450명이 규탄대회를 공동으로 조직하면서, 그간의 미미한 연대의 틀을 일정정도 안정적이고 확고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더 나아가 노총의 413호헌 조치 지지성명에 대한 제2금융권 노조들은 그들이 민주화에 대한 지향과 의지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87년 7월에 '노동조합민주실천위원회'를 건설하였다. '노동조합민주실천위원회'로 이어지는 과정은 범국민적 민주화운동을 구체적으로 직장 내에서 실현하여 민주화운동의 대중적 저변을 보다 확대하였으며, 제2금융권 노동자들의 민주적 지향과 요구를 올바르게 수용하고 조직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내용과 형식을 갖추어 나간 것이었다.

또한 7·8·9월에 새롭게 탄생한 많은 민주노조들은 6월 항쟁의 기간 중에 가장 열심히 싸웠던 사람들 중의 하나인 제2금융권 노동자-명동에서의 투쟁에서 적극적으로 학생들을 지지·성원하고 적극 동참한 사람들이다-들이 민주화에 대한 지향과 결의를 자신들의 생활 속에서 구현하고 조직하였다. 민주화에 대한 이러한 노동자들의 요구를 올바르게 실현해 내기 위해서는 보다 강력한 연대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제2금융권 노조들을 '노동조합민주화실천위원회'로 담아내어 각 노조 간의 실질적인 연대를 이루어 내고 '사무금융노련'(전 자유금융노련) 탄생의 직접적 토대를 마련하였다. '노동조합민주화실천위원회'가 '자유금융노련'으로 발전하게 되는 것에는 '노동조합민주화실천위원회' 자체가 가지는 한계에 기인한다. 자주적 연합단체 건설을 위한 중간 단계로 제안된 '노동조합민

주화실천위원회'는 그 조직적 위상에서 협의체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함으로써, 간고한 투쟁 속에서 높아진 노동자들의 자주적인 적극적 참여와 요구를 조직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데서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노동조합민주화실천위원회'는 노동자들이 요구하는 지도성과 집행력을 조직적으로 담보하지 못하는 한계를 안게 되었다. 당연히 이러한 내적인 문제의 해결이 곧 '자유금융노련'의 탄생을 낳게 되었던 것이다.』²⁰⁾

한국자유금융노동조합연합 창립준비위원회

● 강 령

- 우리 자유금융노련은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인간생활을 바탕으로 발전의 주체가 되고자 하는 노동자의 조직이다.
- 우리 자유금융노련은 하나는 모두를 위하여 모두는 하나를 위하여 모든 利害와 立場²¹⁾의 차이를 극복해 나간다.
- 우리 자유금융노련은 노동자의 창조성과 자발성을 기본 정신으로 실천하는 노동자상을 정립한다.

한국자유금융노동조합연합의 창립과도 집행부는 다음과 같다.

- 위 원 장 최재호(한국산업리스 노동조합 위원장)
- 부위원장 박이준(범한화재 노동조합 위원장)
- 부위원장 이상학(대한교육보험 노동조합 위원장)
- 부위원장 이호용(한일투자금융 노동조합 부위원장)
- 부위원장 장석범(서울투자금융 노동조합 위원장)
- 부위원장 강희철(럭키증권 노동조합 위원장)
- 부위원장 조창현(현대증권 노동조합 위원장)
- 부위원장 김동균(수출입은행 노동조합 위원장)
- 부위원장 최성수(한국개발리스 노동조합 위원장)
- 회계감사 허 장(신동아화재 노동조합 위원장)
- 회계감사 김일태(한미은행 노동조합 위원장)
- 회계감사 박문식(대한증권 노동조합 위원장)
- 사무처장 김형철(현대해상화재 노동조합 위원장)
- 정책실장 이상재(범한화재해상 노동조합 사무국장)
- 홍보국장 곽태원(현대해상노동조합 사무국장)
- 조직국장 정일영(한일투자금융노동조합 위원장)

우리가 찾은 革命을 마지막까지 이룩하자

한국자유금융연합 창립은 5.16 군사 쿠데타 이후 정권의 필요에 의한 급조된 한국노총 독점체제를 보장하기 위한 노동법을 무력화시키고, 복수노조가 법으로 금지되어 있던 상황에서 자주적 실천으로

20)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1989, 『활동보고 제1차 전국정기대의원대회 1987. 11. 27~1989. 3. 31』, 주야인쇄, 329~332쪽(사무직·전문·기술직노동운동, 민주화운동 직장청년회(준비위)편, 서울 백산서당 PP.27~55, 백산선서 67호)

21) 이해와 입장은 계급과 계층이라고 바꾸어도 된다.

노동법을 개정해 나가려는 의지가 담겨있는 실로 의미 있는 일이었다.

자유노련 창립을 자유노련결성 보고대회 대회사에서 위원장 최재호는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대 회 사

자유금융노련의 깃발아래 모인 존경하는 조합원동지와 간부동지 여러분!

권위주의와 상호불신의 시대를 청산하고 빛나는 자유와 민주의 새 시대를 맞이하려는 역사의 전환점에서 노동조합의 민주성과 자주성을 지키고 확대하려는 간절한 뜻과 희망이 결집되어 우리는 「자유노련」의 깃발을 높이 들었습니다.

지난 28일 공포된 개정노동조합법은 왜곡된 산업체계의 길을 열어주었고 1회사1조합주의(유일조합주의)를 채택함으로써 전반적 정치의 민주화 흐름과는 역류하는 느낌이 듭니다. 우리들의 우려는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안국화재 노동자들이 29일 노조를 결성하고 개정노조법에서 요구하는 상급단체가입 인준증을 발급받는 과정에서 발생한 잡음은 노조설립 초부터 하급단위조합에 대한 상급조직의 비민주적 개입 가능성을 현실로서 확인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유일조합주의는 우리나라 헌법 제33조가 보장한 단결 선택의 자유와 상충되고 경쟁적 노동조합의 출현 가능성을 배제함으로써 조합민주주의의 실현을 불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유노련」 동지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들 마흔 다섯 개 단위조합의 공고한 연대를 바탕으로 우리들의 모든 민주적 역량과 성의를 결집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는 모두를 위해 모두는 하나를 위해 연대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각 개체의 자율성과 특수성을 보장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사회학자 라이트 밀즈는 **현대사회의 '화이트칼라'를 지칭하여 체계적인 신념이 결핍됨으로 해서 개인의 수준에서는 도덕적으로 무방비 상태에 놓여있으며 집단의 수준에서는 정치적으로 무력한 존재이다.** 라고 간파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적어도 오늘 여기 자리를 함께한 조합원 동지 여러분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양심과 도덕으로 무장하고 사람과 사람, 조합과 조합 간에 연대하여 인간생활의 향상을 위하여 투쟁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유노련」 동지 여러분!

우리 자유노련은 이해타산에 따라 모인 도당적 모임이 아니라 민주노조의 이상을 쫓아 모인 연합체입니다. 우리는 인간의 자유와 존엄을 높이기 위해 서로 격려하고, 서로 도우며 함께 싸워 나아갈 것입니다. 옛글에 맹쥬도 삼발에 나면 붙들어주지 아니해도 저절로 곧아진다. 그러므로 군자는 사는 곳을 가리고 놀 때는 어진 선비를 따르는 것은 사벽한 것을 막고 올바른 것을 가까이하려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자유노련」 동지 여러분!

우리 모두 우리들의 자랑일 수 있도록 자유노련의 깃발을 확고히 세울 때까지 소승적 이해와 입장을 극복하면

서 민주적 역량을 결집해 나아갑시다.

「시를 쓰는 마음으로
꽃을 꺾는 마음으로
자는 아이의 고운 숨소리를 듣는 마음으로
죽은 옛 戀人을 찾는 마음으로
잊어버린 길을 다시 찾은 반가운 마음으로
우리가 찾은 革命을 마지막까지 이룩하자」

11,946명 중 9,608명이 찬성

88년 3월 9일 산하 조직 전체조합원을 대상으로 연합위원장과 사무처장에 대한 직선제투표를 실시하여 위원장에 최재호, 사무처장에 허장이 당선되었다. 이는 노련의 운영에 대의원 중심이 아닌 조합원이 직접 대표자 선출에 참여하는 자주적운동의 모범을 창출하고자 하는 자유금융노련의 이념의 구현이고 대의원 중심의 한국노총체제를 극복하고자 하는 자주적 단결을 향한 의지의 산물이었다.

1988년 1월 19일 오후 4시 대한 교육보험에서 개최된 제 4차 운영위원회에서는 담보상태인 보험계 노조 통합협상 등 현안 문제 타결을 위해 창립 후 2개월 이내에 실시하기로 한 위원장 직선 선거를 실시해야 한다는 강한 제안이 있었으나 참여의 폭을 넓이기 위해 그때까지 가입하지 않은 조합들(보험권 일부노조)에게 기회를 주는 뜻에서 1주일 후 1월 26일 운영위원회에서 동 건을 재론키로 하고 자유금융노련에 참가조합들은 보험에 잔류하고 있는 조합들을 열과 성을 다해 설득해보기로 하였다.

그러나 끝내 보험권 노동조합 통합에 실패하자 1월 29일 비상운영위원회에서 교착상태에 빠진 현상타개를 위해 위원장과 사무국장의 직선제 선거를 실시하기로 확정하였다. 2월 10일 6차 운영위원회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구체적인 선거일정을 확정하였다.

『87년 11월 27일에서 ~ 88년 3월 2일까지의 시기에 있어서의 특징은 ‘자유금융노련’ 창립 이후 그 합법성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의 길을 여는데 있었으며, 위원장과 사무국장의 조합원 직선선출은 이 투쟁을 힘 있게 떠밀고 나갈 강력한 지도의 중심을 세우고 그 대중적 토대를 강화하는 데 있었다.

이러한 합법성쟁취투쟁의 과정에서 사무·금융노동자들의 단결된 힘에 확고히 기초하고 못함으로써 노총이나 노동부의 양심에 호소하거나 국회에 의존하려는 경향도 이었다. 그러나 노조가입대상을 같이 하는 ‘보험노련’의 결성 움직임이 나타나는 등 ‘자유금융노련’ 결성에 장애와 방해가 심각하게 나타나자 기존의 방식과 내용에 대하여 반성하고 1988년 1월 29일 비상운영위원회에서 ‘자유금융노련’ 노동자들의 단결된 힘에 근거하여 투쟁의 차원을 높일 것을 결의하였다.

이 날 결의한 내용은 교착상태에 빠진 현상 타개를 위해서는 위원장 선거를 치러나감으로써 정통성을 확립해야 하며, ‘자유금융노련’이 기틀을 잡아가는 과정에서 권력이 노리는 노·노싸움을 피하고 노·정싸움으로 운동의 차원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었다.

위원장에 대한 조합원 직선선출의 결의는 ‘보험노련’ 결성의 움직임이 그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으나, 전체적인 투쟁의 과정에서는 투쟁을 벌여 나갈 중심을 확고히 세우는 과정이었으며 또한 그 대중적 결의를 새롭게 다져 이

후 본격적인 투쟁의 토대를 다지는 과정이었다.

또한 투쟁의 기본방향과 중심내용에서도 권력이 기존의 '금융노련' 또는 '노총' 그리고 이후 '보험노련' 결성의 움직임 등과 같은 속에서 '자유금융노련' 노동자들의 투쟁을 왜곡시키고 그 힘을 약화시키려는 기도를 분쇄하고 투쟁의 기본방향과 중심내용을 독재권력으로 맞추어 독재권력으로부터의 합법성을 쟁취하자는 내용이었다.

1988년 3월 2일 위원장 및 사무국장을 총 투표자 11,946명 중 9,608명이 찬성함으로써 득표율 80.4%로 압도적인 지지에 의해 선출함으로써 이후 본격적인 합법성 쟁취투쟁을 벌여 나갈 조직적 기틀을 정비하였다.』²²⁾

88년 4.16-4.17 제1차 전국임시대의원대회에서는 위원장, 사무국장 선거후 자유노련을 이끌어 갈 임·역원을 선출하고 창립준비위원회체제에서 자유노련의 정식집행부를 구성하였으며 자주적 연합단체의 기틀을 더욱 확고히 하였다. 이날 의결된 규약개정 내용에 따라 4월 20일 노총을 상급단체로 하는 가입신청서를 노총에 제출하였다.

일 시: 1988. 4. 16 ~ 4.17

장 소: 영동유스호스텔

참석자: 재적대의원 101명중 67명

안 건: 규약개정(업종별 부위원장 선출 등), 임원선출²³⁾, 예산안, 사업계획 승인

부위원장 증권 4, 보험 2, 투자금융 2, 기타 1, 회계감사 보험, 증권 각 1명

최초의 위원장 직선에 이어 개최된 제1차 임시전국대의원대회에서 확정된 조직도에서 특이한 점은 '각종 업종별협의회'와 '지역협의회'를 두고 있으며, 이것은 다양한 금융업종 사업장의 특성상 대부분 사업장이 전국지점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에 기인한다. 따라서 노련 소속 각 사업장의 지방지점 조합원들을 위한 지역협의회 조직 역시 필수적이었다.

보험업종 노동조합의 분열과 자유금융노련의 합법화과정

자주적 노동운동의 기치를 올리고 출범한 한국자유금융연합의 합법성쟁취 과정은 한국노총을 통한 노동통제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노총 독점체제유지의 근간인 노동조합법 중 복수노조금지 독소조항 철폐투쟁이었고, 4·13호헌조치반대와 명동네티아부대의 6·10항쟁만큼이나 또 한 번의 멀고도 험한 9개월에 걸친 긴 항해의 시작이었다.

「자금노는 창립에 이어 한국노동조합 역사상 최초로 연합 차원의 노조위원장을 직선제로 뽑는 등 민주적 노조 운영을 실행함으로써 대표성을 확립하고 조합원의 참여도를 높여 현재 102개 노조, 4만여명의 조합원이 활동하고 있다.

그리고 그 창립의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자 한다. 첫째, 10여개 은행노조에 의해 독점되어 온 금융노련은 1백여개 중소기업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철저히 외면해 왔으며(대의원 선출은 조합원 4백명당 1명으로 대의원을 한명도 과견할 수 없는 중소기업노동자가 상당히 많음), 둘째 제1금융권(은행)과 제2금융권 노동조합은 그 교섭대상과 내용이 각기 다르다는 점, 셋째 4·13호헌조치 표명에서 나타났던 바와 같이 기존의 금융노련이 관에 대한 의존적 자세를 벗어나지 못함으로써 전 금융노조를 지도할 수 있는 역량에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22)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1989, 『활동보고 제1차 전국정기대의원대회 1987. 11. 27~1989. 3. 31』, 주야인쇄, 334~335쪽(사무직·전문·기술직노동운동, 민주화운동 직장청년회(준비위)편, 서울 백산서당 PP.27~55, 백산선서 67호)

23) 별첨각주: 임·역원 및 조직도

그러나 노동부의 입장은 달랐다. 즉 자금노의 창립에 참여한 단위노조 총회를 통한 규약개정을 요구하며 신고서를 반려한 것이다.

이에 자금노는 서류를 갖춰 다시 설립신고서를 제출하였고(88. 2. 5)²⁴⁾, 초점이 되었던 조직대상 중복의 문제는 금융노련이 정기대의원대회를 통해 제2금융권을 조직대상에서 제외시키기로 결정함으로써(88. 2. 5), 노동조합법 제13조에 따라 3일 이내에 노동부로부터 설립신고증을 교부받는 일만 남아 있었다.²⁵⁾

금융노련의 새 규약이 효력을 발하기 3일 전(88. 3. 2) 한국자동차보험노동조합을 포함한 9개의 보험회사노조는 전국보험노동조합연맹(이하 전보련)을 발족시켰다. 자금노는 3월 3일, 전보련은 3월 4일 각기 노총에 인준증을 신청하였는데, 인준증은 하루 늦게 신청한 전보련에만 주어졌다.

보험노조의 내부를 들여다보면 자유금융노련에 9개사, 전보련에 9개사로 엇비슷한 숫자로 나뉘어 있었다.

『87년 11월 28일 ‘한국자유금융노련’은 처음으로 산별노련 설립신고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노동부는 노동법 제3조5항의 조직대상 중복 등 법적 요건의 미흡을 이유로 반려하였다. 88년 2월 4일 이를 수정하여 노동부에 2차로 산별노련신고서를 제출하자 금융노련은 문제의 초점이 되고 있는 조직대상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제2금융권을 제외시키는 규약을 개정하였다. 그러나 금융노련은 업종별 조직대상 제외효력이 규약 개정 당시 보험업노조의 과반수가 탈퇴의사를 결의할 때부터 가능하고 증권, 단자투자금융, 리스는 88년 3월 5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규약경과조치 단서 조항을 붙였다. 그러자 22개 보험노조 중 ‘자유금융노련’에 가입된 8개 노조를 제외한 14개 노조에서 8개 노조가 금융노련 탈퇴를 결의하였다.』²⁶⁾

4월 12일 한국노총의 인준증을 근거로 노동부는 전국보험노동조합연맹에 설립신고증을 교부하였고 위원장에는 권세원(한국자동차보험 노동조합), 부위원장은 황원래(동양화재해상보험 노동조합), 부위원장 진상완(제일생명보험 위원장)으로 보험노련이 출범하였다.

「노동부의 요구대로 4·13지지를 표명한 노총으로서의 자금노의 존재가 매우 불편한 것으로 자금노를 분해시키기 위해서 4·13 반대운동에 참여치 않은 조직을 중심으로 한 전보련의 결성을 적극 지원하여, 인준증과 신고증을 교부하는 무원칙 행정을 일삼았다. 당시 2~3개의 조직으로 ‘증권노련’결성의 움직임에 다시 개입하고 있는 형태는 법을 초월한 횡포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창립 9개월여에 걸쳐 이유 없이 신고증을 교부받지 못하고 있던 자금노는 다양한 형태의 합법성쟁취운동을 떠나갔다.

먼저 4월 9일 ‘2천만 연대하여 노동자 권리 쟁취하자’는 구호 아래 단결권쟁취 결의대회를 열고 정부당국에 공개질의서를 보냈다. 그 주요내용은 첫째, 정당한 이유 없는 신고증 교부를 지연하는 것은 노동자의 자주적 단결권을 저해하는 위헌적 행위가 아닌지, 노동관계법 중 헌법정신에 위배되는 독소조항을 개정할 의사는 없는지, 셋째, 자금노를 연합단체로 인정함으로써 제도권내로 수용할 의사가 없는지의 3개항이었다. 이어서 4월 2일 행정관청의 고의적 규정위반과 신고증 교부해태의 이유를 물어 노동부장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소하는 한

24) 88. 2. 5를 88. 2. 4로 바로잡음

25) 럭키화재해상보험노동조합, 1989, 『하나를 모두를 위하여 모두는 하나를 위하여(소집단주의 방식에 대하여)』, 주야인쇄, 27쪽, 87을 88로 바로잡음

26)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1989, 『활동보고 제1차 전국정기대의원대회 1987. 11. 27~1989. 3. 31』, 주야인쇄, 333쪽(사무직·전문기술직노동운동, 민주화운동 직장청년회(준비위)편, 서울 백산서당 PP.27~55, 백산선서 67호)

편, 5월 10일부터 10만 명을 목표로 ‘설립신고증 즉각 교부, 안기부의 노동조합 관여중지, 노동조합 민주화’를 내용으로 한 성명에 대한 지지서명을 받고 있다.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운동을 떠나가기 위해 선행되어야 할 과제로 노동조합의 합법성쟁취를 주장하고 있는 자금노는 4월 22일 이현재 국무총리 면담을 요구하며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정문에서 연좌시위를 벌였으며, 6월 23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신고증 교부의 노동악법 개정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인 후 곧바로 52일간의 철야농성에 들어갔다. 또한 농성중인 6월 30일과 7월 1일에는 1백여 명의 조합원이 을지로, 명동, 여의도 등지에서 신고증 교부를 촉구하며 가두시위를 벌였다. 그러나 노동부는 노총의 거부하는 조직에 신고증을 내줄 경우 제2노총이 출현할 위험(?) 때문에 신중한 정책적 판단중이라고 하였고 노총은 명분 없는 조직대상 중복만을 되풀이 변명하고 있었다.」²⁷⁾

『그간 조직대상의 중복, 명칭변경, 한국노총에서 인준증이 없다는 등으로 인하여 차일피일 미루어 온 신고증 교부 문제는 7월 20일 국회노동위원회에서 최명현 노동부장관이 신고증교부 약속을 함으로써 일단락되었다.

드디어 8월 13일에 노동부는 상급단체의 가입요건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노총이 인준증을 발부하지 않자 한국 역사상 최초로 상급단체의 인준증 없이 ‘전국사무금융노련’에 산별노련설립신고증을 교부하였다.」²⁸⁾

합법성 쟁취를 위한 9개월간의 투쟁일지

- 87. 11. 27 자유금융노련 창립대회 개최. 45개 가입조합에서 250여명 참석 성황리에 출범
 - 11. 28 노동부에 설립신고서류 접수
 - 11. 30 창립보고대회 개최. 서울투자금융 9층 강당. 약 250여명의 조합원 참석 2개 조합 추가 가입
 - 12. 4 노동부로부터 신고서류 보완 요청 공문 접수
 - 12. 11 노동부에 보완서류 접수
 - 12. 18 노동부 노정국장 면담(위원장 12개 노조 위원장)
 - 보완서류 접수 후 3일 이내에 신고증을 교부하지 않고 있는 노동부의 부당함을 지적함. 빠른 시일 내 신고증교부 요청
 - 12. 28 노동부로부터 신고서류 반려 통보받음
 - 12. 29 “송년의 밤” 개최
- 88. 1. 12 노동부로부터 반려된 설립신고서 수령
 - 1. 22 국회본회의 방청(최재호 위원장)
 - 제2금융권의 노련결성 허용여부에 관한 국회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이현기 노동부장관은 보험노련의 결성 움직임이 있다고 답변함으로써 “자유금융노련”의 이미지 부각을 막으려 하였음.
 - 1. 26 제5차 운영위원회 개최
 - 위원장 선거실시논의를 하려 하였으나 잔류 보험노조 측의 호의적 협상의사가 보고됨으로써 선거실시 결정을 보류하기로 결정
 - 노동법입고예고에 대한 “자유금융노련”의 의견서 및 노동조합설립 신고서 반려취소신청서를 노동부에 제출함
 - 1. 26 노동법 입법예고에 대한 “자유금융노련”의 의견서 및 설립신고서반려취소 신청서를 노동부에 제출
 - 1. 29 비상운영위원회 개최
 - 보험노조협의회 전체회의에서 미 참가조합은 연맹 잔류의사를 끝까지 고수함으로써 통합에 실패했다고

27) 럭키화재해상보험노동조합, 1989, 『하나는 모두를 위하여 모두는 하나를 위하여(소집단도의 방식에 대하여)』, 주야인쇄, 28~29쪽

28)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1989, 『활동보고 제1차 전국정기대의원대회 1987. 11. 27~1989. 3. 31』, 주야인쇄, 334쪽(사무직·전문·기술직노동운동, 민주화운동 직장청년회(준비위)편, 서울 백산서당 PP.27~55, 백산선서 67호)

보고됨.

연맹의 규약개정 논의를 위한 협의회의장회의(15:00)에서 상기내용이 확인됨.

교착상태에 빠진 현상타개를 위해서는 위원장선거를 치러 정통성을 확립해야 한다고 의견이 모아짐.

선거일정 공고와 선거규약 제정을 선거대책반과 상임위원회에 일임키로 결정. 또한 ‘자유금융노련’이 기틀을 잡아가는 과정에서 당국이 노리는 노노싸움을 피하면서 노정싸움으로 운동의 차원을 높여야 한다고 보고 이를 위해서 노동법 설명회를 개최하고 노동관계법이 위헌성을 밝혀 독소조항 개정운동을 전개키로 결정

‘자유금융노련’의 조직대상을 예상되는 연맹규약개정을 감안하여 ‘전국의 제2금융권의 단위노동조합과 기타 유사한 사무직의 단위노동조합’으로 규정키로 의결

1. 30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거일정 논의 결정
2. 1 선거일정 공고
2. 4 노동부에 노동조합 설립신고서 2차 제출
2. 5 노동부 방문
노련 간부 10인 방문, 설립신고서 2차 제출에 따른 배경을 설명하고 노동부의 적법하고 타당한 신고서 처리를 강력히 요청함.
2. 9 민화위에 자유노련의 설립신고제 확립 및 복수노조설립 보장을 촉구하는 노동관계법령에 관한 의견서 제출
2. 10 제 6차 운영위원회
보험노조 통합 무산으로 당 노련의 정상활동을 강화하고 동시에 선거를 실시키로 함
선관위 구성 및 인선완료
2. 12 민정당에 노동조합법 시행령에 관한 의견서 제출
설립신고제 확립과 복수노조 설립 보장
2. 20~21 자유금융노련 산하 가입조합간부단합대회 개최. 고양 유스호스텔에서 100 여명 참석. 향후 대책 토의 및 단합의 시간을 가짐
3. 2 위원장 및 사무국장 직선 실시. 전 조합원 11,945명 투표함으로써 투표율은 80.4%, 총 투표자의 86.6% 찬성으로 당선 확정
3. 3 한국노총에 가입신청서 제출(금융노련과의 가입대상 조직중복 확인 건)
2. 5 전국금융노련 제24차 정기전국대의원대회에서(제2금융권 조직의 분리, 독립을 허용하는 규약개정)
3. 4 노동부에 설립신고서류 보완 제출함으로써 그동안 제기되어 왔던 모든 법적요건을 완벽하였음
3. 30 한국노총 가입신청 건에 대한 노총의 회신(보험노련과의 조직대상 중복 등의 사유로 반려)
4. 9 노동자 단결권 쟁취 결의대회 개최. 명동성당 문화관에서 500여 조합원 참여하여 성황리에 개최
4. 13 사무실 입주식
4. 16~17 전국대의원대회 개최, 위원장, 사무국장 외의 임원 선출
4. 22 국무총리 면담요구 정부종합청사 앞 시위, 노동부장관에 대한 직무유기 고소
5. 10 “노동부는 한국자유금융 연합 와해공작을 중단하고 설립신고증을 즉각 교부하라”는 제하의 성명서 발표, 합법성 쟁취를 위한 서명운동 전개
6. 23 국회의사당 앞에서 신고증교부 촉구 결의대회 및 평화대행진, 노조위원장 및 간부 100여명 참석. 무기한 철야농성 돌입, 노련사무실에서
6. 30 ~ 7. 1 점심시간에 조합원들이 풍물을 앞세우고 여의도, 명동, 을지로 등지에서 가두시위
7. 4 발기인 총회를 개최하여 명칭 및 조직대상 변경 후 노총에 가입신청서 보완 제출
노련 명칭을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으로 변경하고, 조직대상에서 보험업은 88년 6월 30일 현재 가입한 노동조합에 한한다는 단서조항 신설
7. 6 노동부에 노련 명칭 및 규약변경에 따른 설립신고서 보완제출
7. 16 자유노련 합법성쟁취대회 개최, 경희궁터(구 서울고 자리)에서 조합원 500여명 참가
7. 29 야권 3당 노동법 개정 공청회 참석
8. 1 국회사무총장 명의의 ‘진정서 처리결과 통지’ 공문 접수

관할 행정관청에서 적절히 검토하여 처리토록 촉구하였으며, 국회에서 입법활동 및 관계국정 심의 시 참고토록 하겠음

8. 13 전국사무금융연맹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음.

노동법 개정투쟁은 사무노련의 합법성 쟁취투쟁과 동일선상에서 중요한 노련의 활동의 한 부분이었다.

1987년 12월 15일 자유금융노련소식(제1호)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자유노련의 노동법개정 입장을 밝히고 있다.

개정된 노동법²⁹⁾의 허와 실

「지난 10월 30일 노동조합법·노동쟁의 조정법, 근로기준법, 노사협의회법 등 노동관계법 개정안이 국회 보사위의 의결을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으며,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11월 29일 공포되었다. 노동관계법은 노동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 행동권을 보장하여 노동자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 향상과 권익 옹호를 도모키 위한 법으로서, 노조의 설립과 형태의 자유로운 선택권이 노동자에게 주어져야 하며 단체 행동권을 포함한 노동3권은 완전히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번에 개정된 노동법을 살펴보면 그동안 노동자의 노동3권을 철저히 제약해온 제반 독소 조항을 근본적으로 삭제치 않고 문제의 핵심부분을 호도하거나 은폐시키기 위해 문제조항을 일부 개정하는데 그쳤을 뿐만 아니라, 민주적인 노동조합의 정당한 주장을 봉쇄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개정된 노동법의 몇 가지 문제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노사관계의 자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하에 행정관청은 뒤로 빠져 노정 및 노사관계를 축소하고, 노총이나 산별연맹의 권한을 강화하여 노노관계에 집착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산별연맹가입을 의무화하고 복수연맹 허용을 금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단위조합 자체 내의 규율 및 통제기능을 강화함으로써 기업별 노조의 기능을 약화시키고 산별연맹의 기능을 강화하였다. 이는 노동자 의식의 성장 및 정치세력화를 저해하려는 것이다.

둘째, 대의원 및 대의원회를 강조하여 조합원의 직접참여와 의사전달을 제한함으로써 시대적 흐름인 직접 민주주의에 역행하고 있다.

셋째, 공익사업에서 택시·보험·증권·관광 등은 제외하여 쟁의에 관한 제한을 일부 완화한 것처럼 보이나 현실적으로 합법적 쟁의는 불가능(사유발생 시부터 45일후에나 가능)하며 단체 행동권의 규제조항이 삭제되지 않았다.

넷째, 쟁의 조정법이 철폐되지 않은 채 쟁의에 관한 사항, 대표자와 임원의 규약 위반에 대한 탄핵에 관한 사항, 규율 및 통제에 관한 사항(연합단체가 지부·분회를 사고지부로 판정하여 통제가 가능)을 규약에 명시케하여, 합법적 쟁의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조합원의 절대적인 지지를 얻은 결의에 의해 행할지라도 후에 규약위반의 시비 발생 소지가 존재한다.

다섯째, 조건부 유니온 슝 제도가 채택되어 근로자의 2/3이상이 조합원인 경우에 단체협약을 통해서만 조건부로 유니온 슝(취업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조합원이 되는 제도)이 허용되게 되었다.

여섯째, 규칙을 두어 현재의 노총 및 산별연맹을 유지 강화시키며 공포하기 전에 맺은 단체협약은 유효기간이 3년간 가능하도록 하였다.

29) 별첨각주: 사무금융노련신문 노동법개정투쟁

이 외에 임금 3개월분의 우선변제, 해고자의 조합원 자격인정, 신고증 교부기간 단축 및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단축(3년에서 2년)등 일부 개선된 점도 있으나, 근기법 시행령 제1조에 의하면 16인 미만의 영세업체에 종사하는 수많은 노동자를 아무런 법적 보호 없이 열악한 근로조건 속에 그대로 방치하고 있으며, 근기법 시행령 제10조는 악법 중에 악법으로 근로자의 귀책사유를 명시하여 단지 기소만 되었어도 해고의 사유가 되며 그 외 항목도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바 당연히 철폐되어야 함에도 아직 개정되지 않고 존재하고 있다.

노동조합에 있어서 교원노조의 불인정, 제3자 개입금지, 정치활동금지 조항 등은 노동쟁의 조정법과 함께 마땅히 철폐되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노동자의 권익과 직결되는 노동관계법이 민주화시대에 역행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 더욱 어려운 여건 속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하게 되었으며, 노동자의 의사와 전혀 무관하게 개정된 노동법을 올바른 방향으로 개정시키기 위하여 전체 노동자들은 대동단결하여 우리의 역량을 발휘해야 한다.」

자유금융노련은 88년 6월3일 종로5가 기독교회관에서 열린 노동법개정을 위한 공청회에 참석하였고, 87년 10월 개정된 노동법의 독소조항 폐기에 중점을 둔 노동법 개정투쟁에 초점이 모아졌던 88년 6월에는 하반기 노동법개정투쟁을 위해 전국적 노동자 연대 조직인 '전국노동법개정투쟁본부'를 결성하였으며 아울러 연맹 내에도 '노동법개정특별위원회'(위원장 대우증권 위원장 최정현)를 설치하였다.

조직현황

1987년 11월 27일 금융권 45개로 출범한 사무노련은 1988년 8월 13일 신고증 교부시점에서는 55개 조합 2만여 명으로 조직이 확대되었고, 합법성쟁취 이후 활발한 조직사업으로 1988년 9월 30일 64개 조합 2만 2천여 명의 조합원이 가입하였으며, 1989년 3월 31일 94개 조합 3만여 명이 가입하였다. 이중 남자조합원은 18,228명 여자조합원은 12,149명으로 남성비율이 높은 편이다. 이외에도 보험단노동조합협의회(의장 박이준 럭키화재), 증권단노동조합협의회(의장 조창현 현대증권), 투자금융 노동조합협의회(의장 이호용 한일투자금융)가 조직되어 업종별로 활동하였다.

한국IBM노조는 연맹합법성쟁취 이후 최초 연맹가입노조이고, 두산산업노조는 타 연맹을 탈퇴하고 연맹에 가입한 노조로 이로 인해 노동부는 당 연맹에 일반사무직의 가입을 제한하는 행정지도지침을 발표하였으며, 이 영향으로 벽산본사노조 등이 타 연맹을 상급단체로 택할 수밖에 없었고 금강제화판매사무직 노조는 금강제화 구사대가 연맹 사무실에 난입하여 허장 사무처장, 하창환 부위원장, 정일영 조직국장 등 연맹간부를 무차별 폭행하는 등 폭력 사건으로 89년 사무노련에 시련을 주기도 하였고, 89년 4월 조직대상중복여부와 관계없이 '1기업 1노조 원칙'을 노동부가 발표하여 사실상 사무직·판매직 노조설립을 제한하여 사무노련의 조직확장을 방해하였다.

설립년도를 살펴보면 1987년 6월 29일 이전에 설립된 노조가 17개인 반면 77개의 노동조합이 6.29 이후에 설립되어 가맹한 것을 볼 수 있다.

구 분	1987.11.27	1988.8.13	1988.9.30	1989.4.30	총 합
보 협	8	8	8	8	-
증권·투자신탁	14	20	21	23	9

투자금융·종금	13	20	21	29	16
신용카드	1	2	3	3	2
리 스	4	4	4	8	4
사회보장관련	-	1	4	15	15
일반사무직	-	-	3	8	8
은 행 권	5	-	-	-	△5
계	45	55	64	94	49

1989년 3월 기준 조직현황 (조합수 단위 :개)
 자료: 『1989년도 활동보고』, 전국사무금융연맹,1989

제4절 전국보험노동조합연맹

제2금융권의 분열 - 통합노력도 수포로 돌아가고

1988년 3월 3일 전국보험노동조합연맹이 출범하였다. 금융노련에 소속되어있던 자동차보험노조, 화보협회노조, 동양화재보험노조, 고려화재보험노조, 국제화재보험노조, 제일생명보험노조, 흥국생명보험노조, AHA노조, SIGNA노조등 9개 노동조합이 자동차보험 강당에 모여서 창립대회를 가졌다. 임원으로는 연맹위원장에 자동차보험노동조합의 권세원 위원장이 부위원장은 제일생명보험노동조합의 진상환 위원장과 동양화재보험노동조합의 황원래위원장, 회계감사에는 전광우 고려화재위원장이 각각 선출되었다.

이에 앞서 금융노련은 88년 2월5일 정기대의원대회에서 보험, 증권, 투자금융 등의 업종을 규약상 조직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제2금융권은 금융노련과 노동조합법 제3조 5호 단서조항의 조직대상의 중복에 해당되지 않게 되었기 때문에 합법적인 상급단체 설립이 가능하게 되었다.

전년도에 설립된 자유금융노련과는 달리 보험노련은 합법적인 분가의 형태를 취한 것이다. 자유금융노련에도 이미 현대해상화재노동조합, 범한화재노동조합, 신동아화재노동조합, 대한화재노동조합, 재보험노동조합, 해동화재노동조합, 제일화재노동조합, 대한교육보험노동조합 등 8개노동조합이 가입되어 있어서 보험회사 노동조합은 양분되어 있었다.

3월 5일 한국노총은 회원조합 대표자회의에서 전국보험노동조합연맹의 노총가입건을 통과시키고 당일자로 인준증을 발급했다. 반면에 동시 상정되었던 자유금융노련의 노총가입신청건은 부결시켰다. 노동부는 보험노련과 사무금융노련이 보험노동조합과 관련하여 규약상 조직대상이 중복되었기 때문에 설립신고증을 교부하지 않았다. 노동부를 항의방문하는 등 1달이 지난후인 4월12일에야 보험노련은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았다.

보험노련은 설립대회에서 다음과 같은 선언과 강령을 채택하였다.

● 선언

민주와 자유를 달성하기 위한 역사의 정의 앞에서,우리들 보험산업의 각 단위노동조합은 그 힘을 모아 새로운 연맹체를 탄생시킴에 있어, 조직의 체질강화, 보험노동자의 권익신장, 실질적인 노사평등체제 확립을 위한 우리들의 확고한 결의와 불퇴전의 용기를 천명하면서 한국 노동운동사에 빛나는 공헌을 할 것을 엄숙히 선언한다.

1988년 3월 3일

● 강령

1. 우리는 연대의식의 고양으로 조직의 기반을 공고히 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민주화에

앞장서서 활기찬 노동운동을 전개한다.

2. 우리는 조직의 전문성을 함양함으로써 보험 산업에 종사하는 전체 노동자의 권익신장에 공헌하며, 노동운동의 주체성 확립으로 실질적인 노사평등체제를 구축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

3. 우리는 국민경제에 있어 보험산업의 시대적 사명을 깊이 인식하고, 1천만 노동자의 새로운 가능성을 향한 진일보의 선구자적 역할을 수행한다

보험노련은 독자적인 사무실 확보를 위해 단위 노동조합을 독려하여 조합원들로부터 직접 기금을 모금하였다. 보험업계의 근로조건 개선은 물론 보험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한다는 명분에 힘입어 조합원 1인당 1만원 씩 할당하여 1억원에 조금 미달하는 ₩95,605,000원을 모금하였고 연맹 사무실은 충정로에 마련하였다.

제2금융권 노동조합들은 이렇게 사무금융노련과 보험노련으로 분열되었다. 거기에다 통합을 주장하면서 양연맹 어디에도 가입하지 않은 보험 쪽의 보험감독원이나 보증보험, 증권 쪽의 증권금융, 증권거래소, 국민투자신탁등 10여개 노조를 감안하면 세 갈래로 나누어진 셈이다.

보험노련의 황원래 전부위원장은 보험노련과 사무금융노련의 분리된 배경을 이렇게 이야기 하고 있다.

" 87년 6월 항쟁과 7,8,9 노동자 대투쟁을 겪으며 고양된 민주화의 열기와 함께 금융노련 내에는 신생노조들 사이에서 노조민주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높아졌습니다. 제1금융권 은행노조 중심의 연맹활동에서 소외를 받아왔던 제2금융권 노조들은 관료화된 노조운동에 대한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으나 이들 독과점식의 카르텔을 깨기에는 물리적으로 불가능 했습니다. 따라서 금융노련을 탈퇴하여 새로운 연맹을 결성하자는 생각들이 신생노조 사이에서 생겨났는데, 이들이 서로 함께 모여서 같이 고민하지 않다 보니 서로의 생각이 조율 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노총의 개혁활동과 신생업종연맹과의 교류

보험노련은 노총의 개혁을 위해 노력한다. 대표적으로 88년 11월 8일 노총 임시대의원대회를 앞두고 “노총은 정녕 구르지 않는 수레가 되고 말 것인가”라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노총의 행태를 질타한다. “-----우리 노동운동이 작년 6월 투쟁과 7,8월 노동자 파업 이래로 이미 새로운 단계로 접어 들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현 노총은 노동귀족들의 이권추구와 비리의 온상이 되어 더 이상 나빠질 수 없을 정도로 오염되었고 심부까지 부패되어 있음은 새로운 사실이 아니다. 따라서 앞으로 들어설 집행부는 시대의 요청에 부응하여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확고하게 견지하고 민주적 운영을 통해 전체 노동자로부터 신뢰를 회복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현 체제와 같이 구각을 벗지 못하는 노총이 지속된다면 최악의 경우 노총과 결별도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우리 보험노련의 조합원들간에 광범위하게 비등하고 있음을 노총은 직시해야할 것이다.----- ”하고 노총의 새로운 모습으로 재탄생을 촉구한 것이다.

한편으로는 비노총의 신생 업종 연맹 및 협의회와 교류도 강화한다. 89년 1월 13일 설

립된 금강제화 판매사무직 노동조합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투쟁하던 중 구타대가 사무금융 노련 사무실에 쳐 들어와 난동을 부렸다. 이러한 불법행위를 응징하기 위하여 3월 3일에는 금강제화 판매 사무직 노동조합 합법성 쟁취 및 구타대 폭력규탄대회를 금강제화 판매사무직 노동조합과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이 공동 개최하였다. 이 대회 이후 단체인구로서 전국 보험노동조합연맹 전국병원노동조합연맹, 연구전문기술직 노동조합 협의회 전국외국기업노동조합협의회 전국대학 교직원노동조합협의회, 민주출판언론노동조합협의회 전국건설노동조합협의회, 전국시설관리노동조합협의회, 서울지역노동조합협의회, 한국여성단체연합, 서울교사협의회 등 신생 업종 연맹이나 협의회등이 참여하였다.

보험노련은 한국노총 소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89년 10월28일(토) 오후 3시에 장충단공원에서 개최된 참교육을 위한 국민 걷기대회에 참가한다. 당시 전국교직원노동조합뿐만 아니라 주최 단체가 대부분 합법성을 부여받기 전이었기 때문에 전교조를 대신하여 권세원 보험노련 위원장이 대표로 집회신고를 제출하기도 하였다(보험노련 1990년 대회보고 137쪽).

참교육을 위한 국민걷기대회 공동위원회에는 전국보험노동조합연맹,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전국전문노동조합연맹, 전국병원노동조합연맹, 전국시설관리노동조합협의회, 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 전국외국기업노동조합협의회, 민주출판언론노동조합협의회, 건설노동조합협의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 전국 대학강사 협의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등의 단체가 참여하였다.

그리고 참교육 걷기대회 이후로 업종모임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기 시작한다.

89년 보험노동조합 임투공대위- 분열은 되었지만 투쟁은 공동으로

89년 최초로 시도된 보험노동조합 임투공대위 활동은 노동조합이 근로조건 개선이라는 자체의 목적을 달성해나가는 과정에서 대중적 기반에 근거하여 통일단결의 기운을 어떻게 드높일 것인가에 대한 풍부한 고민을 던져준 당시로서는 가히 성공적인 사례였다. 보험노동조합이 보험노련과 사무노련으로 분리되어진 조직의 현실 속에서 각개 약진을 통해서 승리 불가능하다는 공통된 인식하에 1)조직적이고 적극적인 연대투쟁, 2)자주적인 단체행동권의 수호, 3)무보수노동의 근절 및 8시간 노동제의 확립, 4)조합원범위 확대를 통한 단결권의 수호, 5)문란한 모집질서의 개선, 6)공대위 결의사항의 준수 및 89 임투승리 등 6개항을 결의하고 임투일정의 통일, 타결 하한선의 설정, 통일적인 임투전진대회, 공동의 교육, 공동의 쟁의 발생신고 등을 통한 공동투쟁을 전개할 것을 결의하였다. 공동 임투를 위한 한시적인 기구로서 회칙을 정하고 25개 보험사 노동조합이 참여하여 보험노동조합 임투투쟁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였다..

공대위는 제시된 투쟁목표를 관철하기 위해 양연맹을 대표하여 보험노련에서는 제일생명 노동조합 진상환위원장과 동양화재노동조합 황원래 위원장이, 사무금융노련에서는 현대해상 노동조합 홍순계 위원장과 교육보험노동조합 이상학 위원장등 각 2명과 무소속인 보증보험 노동조합 김국진 위원장을 포함하는 5명의 공동의장단을 선임하였다. 실무집행을 총괄하는 간사의장에는 황원래 동양화재위원장을 선임하여 통일적인 지도 중심을 세우고, 기획조사국, 교육홍보국, 쟁의대책국으로 구성되는 실무집행부서에 담당의장이 결합하고 각 노동조합에서 선임된 10명의 간부를 배치하였다. 교섭이 본격화되는 시점인 4월 1일부터 5월 말까지 보험노련 사무실에 상황실을 설치하고, 실무집행부서 요원이 교대로 파견 근무하는 체

제를 구축하기로 하였다, 공동 교육, 투쟁 지원 등 공대위 운영을 위한 각 조합의 분담금 납부를 신속히 마침에 따라 조직 거점 자금 등의 공대위 실질적인 운용을 위한 기본적 요소를 갖추었다.

공대위는 결성 선언문의 결의를 구체화시켜, 임금 인상 요구율로 28.7%+ α 를, 타결하한선 22.4% 달성이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한편 3월31일 임금인상요구서를 일제히 제출하였다. 임금수준은 금융업계 하위권에서 중위권 진입이라는 추가적인 목표를 내놓았다. 또 조합원 범위는 손해보험은 과, 차장까지, 생명보험은 영업소장까지 가입시키기로 하는 단체협약갱신을 임금협상과 연계시켰다.

공대위는 제시된 목표 달성을 위해 개별 사업장의 개별 교섭과 투쟁을 축으로 하되 개별 사업장의 교섭력 강화와 공동 행동의 조직을 위해 3월에서 5월까지 3 달에 걸친 공대위 임투 일정계획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3월 6일 공대위 결성-3월 17일 교섭위원 합동교육-3월 28일 임투 전진대회-4월 1일 요구안 제출-4월 2일 상황실 가동-4월 10일 1차 교섭 개시-5월 15일 공동 쟁의 발생 신고-5월 25일 총파업 돌입-5월 31일 승리쟁취보고대회라는 공동 일정계획을 제시하였다

공대위 일정은 약간의 시차는 있었지만 차질없이 진행되었다 .3월 25일 동양화재 강당에서 개최된 교섭위원 합동교육에는 각 조합의 교섭위원 100여명이 참가하였다. 3월 31일에는 임금인상요구서를 일제히 제출하였다. 4월2일 북한산 등반의 임투전진대회에는 각 조합에서 1000여명의 조합원이 참여한 가운데 쟁의행동대 발대식도 가졌다. 4월11일에는 동시에 제1차 임금교섭에 돌입하고 공대위 상황실이 보험노련에 설치, 가동되었다. 4월12일에는 대표자회의를 개최하여 1차 교섭 결과보고와 함께 타결하한선 22.4%를 결정하였다.. 5월 6일에는 한남동 소재 성프란시스코 피정의 집에서 각 노동조합 쟁의요원 7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쟁의요원 합동교육을 실시하였다. 공대위는 두 차례에 걸쳐 속보를 발행해 공대위의 존재와 활동을 조합원에게 홍보하는 한편 5월 한 달간은 매일 교섭진행 현황표를 팩스로 전송하여 개별사업장의 교섭추진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했다.

5월 15일 쟁의발생 신고는 며칠의 차이를 두고 8개 사업장이 공동보조를 취함으로써 공대위의 마지막 공동행동으로 기록되었다. 그리고 5월25일 총파업 돌입은 상당수 조합의 타결과 타결 임박, 그리고 파업 돌입을 위한 전열정비 미흡으로 지켜지지 못하고 해동화재만 5월말 파업에 돌입하였다. 5월 31일 예정된 승리쟁취보고대회도 생략되었다.

그러나 공대위에 참여한 25개 보험사 노동조합 모두 타결 하한선 22.4%를 돌파하는 상당한 전과를 올렸다. 처음에 세웠던 목표인 임투 일정을 통일하고 홍보함으로써 시기의 집중을 통하여 조합원의 관심과 힘의 결집을 가져올 수 있었고 사용자들에겐 큰 압력이 되어 교섭력도 강화되고 쉽게 타결할 수 있었다. 단체교섭위원 교육에 100여명이 참가하고, 쟁의요원 교육에 70여명이 참석하는 등 공동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간부들의 의식고양과 자질향상은 물론 적은 자금으로도 집행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었다. 후반부의 공동쟁의와 지원 부분 등 투쟁의 집중은 타결 사업장이 많아지므로 미흡하였지만 거의 모든 사업장이 처음의 약속을 지켰다. 조합원범위 확대와 관련하여서는 손해보험인 동양화재, 보증보험등에서 과·차장까지 조합원범위가 확대되는 소득을 거두었다.· 최초로 시도된 공대위 활동으로서는 성공적인 작품이었다고 볼 수 있었다. 아울러 단결하여 투쟁하면 승리한다는 교훈은 양 연맹의 보험노동조합 분리를 해소, 통합하라는 대의원대회 결의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보험노동조합 분리해소 활동-통합만이 살길이다

보험노동조합이 양 연맹으로 분열되어 있으므로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한계와 문제점은 한 두가지가 아니었다. 89년 공동임투를 진행하던 보험노동조합 임투공대위는 공동의장단 명의로 “양 연맹 통합을 위해 나섭시다” 라는 성명서를 4월 24일에 발표한다.

그 성명서에서 양 연맹의 대의원 대회를 앞두고 첫째는 양 연맹의 통합에 관한 건을 의안으로 채택해 대회에 상정해 줄 것, 둘째로는 양 연맹은 양 대의원대회가 끝난 한달이내, 즉 적어도 6월말 까지 어떤 형태로든 통합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합의를 보고 통합대의원대회를 열 것을 결의해 줄 것, 셋째로는 양 연맹은 대의원대회에서 통합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하여 양 연맹 위원장께 그 직을 걸고 합의를 도출해 내도록 전권을 위임하고 이를 실무적으로 추진할 5명이내의 추진위원을 선출해 줄 것을 요청한다. 아울러 통합을 방해하고 좌절시키려는 어떤 기도와도 결연히 투쟁할 것도 천명한다.

이어서 양 연맹에 분산되어 있던 지역의료보험노동조합 위원장들도 양 연맹의 통합을 추구하고 나섰다. 상급단체에 가입하지 않은 채 무소속으로 남아 있던 보험감독원노동조합과 대한보증보험노동조합도 통합을 추구하고 나섰다.

양 연맹은 보험노동조합 분리 해소의 건을 대의원대회 안건으로 채택하고 ‘보험노동조합 통합의 전권을 연맹위원장에게 위임하되 6월말을 그 시한으로 하고 위원장은 그 직을 건다’는 안을 통과시켰다.

89년 6월 30일 보험노련과 사무노련은 통합된 상급집행부를 구성하여 서로 통합하기로 합의했다. 통합된 상급집행부의 명칭은 ‘보험사무금융노련연합’으로 하기로 하고 대표자는 사무노련 최재호 위원장이 맡기로 하고 권세원 보험노련 위원장은 상임고문을 맡기로 하였다. 의결기관은 연합대의원대회로 하고 집행기관은 별도로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그리고 부의장은 10인 이내에서 선임하기로 하였다. 양 연맹은 이같은 합의원칙에 따라 1)1989년 12월 말일까지 공동사무실을 사용하고 2)교육훈련사업(연수원 설치등) 3)대외활동사업(성명서 대정부,대사용자 활동등) 4)별도의 의무금 징수(공동재정 관할) 5)공동선언, 강령 및 규약제정 등 사업을 하기로 합의했다.

제 5 절 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

1988년 11월 26일 서울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

“전국 언론사에 종사하는 1만3000여 언론노동자들은 이제 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을 결성하면서 삼가 두려운 마음으로 역사와 국민 앞에 서 있습니다.”

방금 전 이 자리에서 선임된 권영길 초대 언론노련 위원장이 「국민에게 드리는 글」을 읽어내려 가자 열기로 가득찼던 장내가 숙연해졌다. 전국 41개 언론노조 122명의 대의원들은 자신들이 마침내 언론노동자의 연맹체를 결성했다는 흥분에서 벗어나 그에 따른 사회적, 역사적 책임을 가슴에 새겼다.

● 언론노련 창립선언문

오늘날 우리 사회는 민주화를 위한 거센 진동을 겪고 있다. 지난해 6월 학생, 민주시민에 의해 시작된 민주화투쟁의 물결은 이제 사회 전 분야로 파급돼 보다 철저하고 근본적인 변혁을 추구하고 있다. 그러나 구시대의 권위주의적 질서를 유지하려는 수구세력의 힘은 아직도 강고하며 이 땅의 민주세력이 이들 수구세력을 무너뜨리고 민주사회와 자주통일국가를 이룩하려면 이제부터 멀고도 험난한 길을 가야만 할 것이다. 이에 전국 41개 언론노조의 1만 3천여 언론노동자들은 언론민주화가 사회 전체의 민주화에서 차지하는 엄청난 영향력을 깊이 자각하면서 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이하 언론노련)을 발족시킨다.

지난해 10월부터 시작된 개별 언론노조의 사내민주화 및 편집권 독립 투쟁의 성과를 이어받고 올해 4월에 결성됐던 전국언론노조협의회에 의한 공동투쟁의 경험을 발전적으로 계승한 '언론노련'은 언론자유의 완벽한 실천을 통해 사회의 민주화에 이바지하는 것이 제1의 목표임을 선언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우선 '언론의 자유경쟁시대'라는 허울 아래 언론자유의 수호, 실천이라는 이 시대 언론계의 최대 과제를 애써 외면하고 정치와 영합, 정치의 시녀로 전락한 채 기업의 생존 논리만을 강조하는 언론소유주의 자사 이기주의를 단호히 배격하고 '자유언론'의 기치 아래 각 언론사, 각 직종의 언론노동자가 굳게 뭉칠 것을 다짐한다.

또한 독재정권과 언론소유주의 야합에 의해 저질러진 대규모 기자숙청, 편집권의 제도적 침탈, 언론관계악법 등 왜곡된 언론질서를 척결하고 자유롭고 민주적인 언론질서를 수립할 것이다.

이와 함께 '공익'의 이름으로 노동자의 기본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제약하는 노동악법의 개폐투쟁을 전개함으로써 이 땅의 노동형태들과 굳게 연대하는 것은 물론 언론노동자의 정치, 경제,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할 것이다.

돌이켜보면 이 땅의 언론은 제3공화국 이래 수십 년간 예측과 굴종의 길을 걸어왔다. 그것은 정치권력의 강권과, 권력 및 언론소유주의 야합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언론 내부적으로는 보도 및 논평의 의사결정권을 언론소유주가 독점하는 현상으로 나타났다. 우리 언론노동자들은 이러한 예측적 언론풍토에 안주해 왔음을 솔직히 인정하면서, 또 최초의 언론노동운동의 단초가 우리들의 자별적 노력보다는 외부의 도움에 의해 주어졌다는 점을 마음속 깊이 부끄럽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즐기찬 투쟁을 통해 보도 및 논평의 의사결정과정을 민주화할 것을 다짐한다.

지난 6,70년대 언론인들에 의해 시작됐던 자유언론실천운동은 이제 모든 언론종사자들이 참여하는 언론노동운동으로 그 폭이 넓어졌으며 더 나아가 전국의 언론사 노조들이 하나의 조직체로 단결하는 단계에까지 이르렀다. 또한 우리 주위에는 이 땅의 민주화를 갈망하는 양심적 민주세력들이 각 분야에서 민주화투쟁을 벌이고 있다. 이 땅의 모든 민주세력이 힘을 합쳐 나아갈 때 그만큼 민주화의 그날은 빨리 다가올 것을 확신하며 우리 언론노동자들은 자유언론의 실천에 모든 힘을 기울일 것을 다시 한 번 굳게 맹세한다.

1987년 10월 29일 서울 종로 2가 YMCA회관 2층 친교실. 「영등포 조기축구회」 모임이 열리기로

되어 있었다. 약속했던 오전 8시가 가까워지자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들었다. 이들은 한결같이 흥분한 채 주변을 살피며 긴장하고 있었다. 일부는 아예 인근 여관에서 밤을 지새웠다. 친목 모임 참석자들이라기보다 오히려 비밀 결사에 참가하는 듯한 분위기였다.

드디어 오전 8시에 58명이 모인 가운데 모임이 시작됐다. 그것은 친목 모임도 비밀 결사도 아닌 한국일보사 노동조합 결성식이었다. 이날 창립총회는 국민의례, 성원 보고, 경과보고, 결성취지문 낭독, 노조 결성 찬반투표, 규약 채택, 임원 선출, 폐회로 이어지는 식순을 일사천리로 진행했다.

이들은 총회가 끝나자 서둘러 관계 서류와 설립 신고서를 갖춰 종로구청에 제출했다. 이 순간까지도 발기인들은 내내 긴장을 늦추지 못했다. 한국일보사는 1974년 유신 시절에도 노조를 결성했으나 당시 구청 측이 갖은 핑계로 접수를 거부하여 끝내 합법 노조에 이르지 못한 경험을 갖고 있었다. 하지만 6월 민주화운동으로 세상이 바뀌었다. 종로구청 직원은 제출된 서류를 꼼꼼히 살펴보고는 이를 접수했다. 이로써 2개월 간 비밀 첩보 작전 식으로 추진해 온 한국일보사 노동조합 결성이 정식으로 완료돼 1987년 민주화 이후 첫 언론노조가 탄생하였다.

언론노조의 탄생은 6월 민주화운동 덕분이지만 언론 민주화운동은 6월 민주화운동의 밑거름 가운데 하나였다. 언론노동운동은 이미 해방 이후부터 1960년대 초까지 계속됐다. 박정희 정권의 등장으로 언론노동운동은 사라졌지만, 유신 정권의 억압이 극에 달한 1974년 자유언론실천운동을 전개하다가 많은 언론인이 회사에서 쫓겨나고 심지어 옥살이를 해야 했다. 이들은 쫓겨난 이후에도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조선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등을 결성해 언론민주화 운동을 계속했다. 또한 자유언론실천운동의 와중에 동아일보와 한국일보에서는 노조를 결성하여 언론노동운동을 바탕으로 한 언론운동을 시도하기도 했다.

1980년 「서울의 봄」이 찾아오자 많은 언론사 기자들이 계엄 당국의 검열에 맞서 투쟁하다가 다시 수백 명이 강제로 해직되는 아픔을 겪기도 했다. 1986년에는 김주언 한국일보 기자가 「보도지침」을 폭로해 군사 정권의 언론 탄압에 저항했으며, 1987년 4월 13일 전두환 정권의 소위 「호헌선언」이 있자 여러 언론사에서 젊은 기자들을 중심으로 이에 반대하는 성명을 잇달아 내놓고 저항했다. 언론 내부의 꾸준한 몸부림은 6월 민주화 운동의 밑거름이 되면서 민주화 운동이 가져온 사회 환경의 변화를 언론노동운동의 부활로 이어갈 수 있었다.

한국일보사에 이어 언론사 노조의 설립이 잇달았다. 대체로 긴장 속에서도 큰 어려움 없이 진행되었으나 몇몇 언론사에서는 아직도 시대의 흐름을 거스르려는 사측의 탄압으로 시련을 겪기도 했다. 노조에 대한 사측의 거부 반응이 두드러진 삼성그룹 중앙일보사 기자들은 1987년 12월 1일 기습적으로 노조를 결성했다. 이에 사측은 간부들을 동원해 노조 탈퇴 활동을 벌였으며, 서류를 접수한 중구청은 중앙일보 사장 명의의 이의신청이 접수되었다며 설립신고서의 필증 교부를 거부했다. 기자들은 다시 비상 총회, 농성, 모금 운동 등을 벌이며 맞서 마침내 7일 사측이 물러서고 신고필증도 나왔다.

1988년 1월 결성한 목포MBC 노조는 사측에서 시청 접수창구를 점령해 접수조차 할 수 없었다. 기습 작전으로 사측을 따돌리고 접수에 성공했으나, 사측이 노조 와해 활동을 펴자 나영진 위원장이 사발, 단식에 돌입해서 고비를 넘길 수 있었다. 사측은 집요했다. 다시 노보를 문제 삼아 위원장은 물론 같은 직장에 있는 부인까지 해고했다. 이번에는 시민들의 지원까지 받으며 맞서 6월 민주화 운동 이

후 해고된 최초의 언론사 노조 위원장은 복직될 수 있었다.

전국언론사노동조합협의회

초창기 언론사 노조 간부들은 주로 기자들이었다. 각사 기자들은 서로 경쟁자이기도 하지만 동료 의식도 강했다. 그러므로 노조 설립 전부터 서로 교류가 활발했다. 노조 간부들은 일단 협의체 수준의 연대활동을 벌일 것을 결의했다. 법적 구속력을 갖는 연맹은 좀 더 많은 언론노조가 탄생할 때까지 미루고, 그때까지 공동 투쟁의 경험의 쌓아나간다는 생각이었다.

마침내 1988년 4월 6일 당시까지 결성됐던 7개 신문노조, 7개 방송노조, 그리고 연합통신 노조 등 15개 언론노조가 '전국언론사노동조합협의회'(약칭 '언노협')를 결성했다. 김종완 동아일보 노조위원장을 의장으로 하는 최초의 전국적인 언론노조 협의기구가 생겨난 것이다. 언노협은 결성취지문에서 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을 결성할 때까지 자유언론 실천과 권익 쟁취를 목표로 나갈 것을 천명, 이 조직이 연맹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한시적 성격을 띠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언론노련이 결성되기까지 200여 일 간 활동한 언노협은 비록 임의적인 협의체였고 조직력과 자금력도 취약했으나 나름대로 활발한 노력을 전개해 나갔다. 특히 부산일보와 경남신문, MBC에서 잇따라 파업이 발생함에 따라 언노협은 연대 집회, 격려 방문, 성명 발표, 투쟁특보 발간 등 활발한 지원 활동을 벌였다.

편집권독립 투쟁

『1988년 7월 11일 부산일보노조가 파업에 들어갔고 신문 발행도 중단됐다. 이 파업은 언론노조 최초의 합법적 전면 파업이었기에 언론계는 이 파업의 진행과 성과를 예의 주시하고 있었다. 이후 언론노조 파업의 향방을 가늠할 수 있는 잣대인 셈이다. 그러나 이 파업은 '최초'라는 역사성 주체로서만 주목을 받은 것은 아니다. 그보다는 오히려 파업이 담고 있는 내용이 더 큰 관심의 대상이었다. 이 파업은 편집권 독립을 제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부산일보노조는 편집국장 후보 추천제를 단체협상에 내걸었던 것이다.

(중략) 여기에 편승해 언론노조는 언론노동자로서의 정당한 권리를 찾고, 경제와 복지 차원에서 노동 조건을 개선하는데 힘썼다. 그러나 언론노조가 만들어지는 데는 노동자로서의 경제 투쟁을 위한 것 이외에 또 다른 목적이 있었다. 언론노동자들은 지난 시절 권력과 자본의 힘에 밀려 공정한 보도를 하지 못해 시민들의 외면을 받은 쓰라린 경험을 가슴에 안고 있었다. 실제로 대부분의 언론사에서 노조 창립을 주도한 기자들은 경제 조건의 개선보다는 오히려 공정한 보도를 위한 조건의 확보에 더 큰 무게를 두고 있었다. 따라서 언론노조를 만든 이후 이들이 공정 보도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 편집권 독립을 내세운 것은 당연히 수순이기도 했다.

편집권 독립 투쟁은 크게 두 가지 차원으로 전개됐다. 하나는 편집권의 의미와 소재에 관한 규정이다. 언론노조는 편집권이 실제로 뉴스를 만드는데 관여하는 편집·보도국 구성원들에 귀속된다고 주장하고 이를 명문화하기 위해 노력했다. 다른 하나는 편집권 독립을 구체화하는 제도의 마련이다. 제도의 마련은 편집을 책임지는 편집·보도국장의 임면에 편집국 구성원들의 의사를 반영하는 데 집중됐다.

결국 편집권의 의미와 소재를 둘러싼 투쟁은 편집권 독립의 이론적 기반에 관한 투쟁이고, 편집국장 임면에 관한 투쟁은 이를 실현하는 제도 마련에 관한 투쟁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편집권 독립 투쟁은 순조롭지 못했다. 언론사주와 경영진은 편집권이 경영권의 한 부분으로 자신들에게 귀속된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이전까지 관행적으로 이들의 주장처럼 행사된 것은 사실이다. 기자들이 이 문제에 관해 특별히 논의한 적도 없고 주장한 적도 찾아보기 어려웠다. 사측은 이러한 논리를 기반으로 편집·보도국장 임면은 사주와 경영진의 인사권에 속한다고 주장했다. 노조가 관여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편집권 소재를 둘러싼 투쟁

1988년 6월 16일 동아일보노조가 언론노조 가운데 최초로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언론계 최초의 단체교섭이기에 노사 양측 모두 대표 주자라는 부담을 안고 진행했다. 당연히 노조는 편집권 독립과 관련한 내용을 협상에 집어넣었다. 그러나 사측은 완강했다. 단체교섭은 이 부분에서 가장 큰 어려움을 겪었다. 마지막까지 진통을 겪다가 합의된 단체협약은 “조합은 회사의 경영권과 편집책임자의 편집권을 존중하고 회사는 조합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존중하며 (중략)”였다. 사실 이 문구는 언론노조의 처지에서는 불만스럽게 볼 수 있었다. 조합은 경영권과 편집권을, 그리고 회사는 조합의 단결권 등을 존중하는 대구로 이루어져 편집권을 회사 측의 권리로 인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동아일보노조도 이 부분이 쟁점이었는지 단체교섭 과정을 소개하면서, 이 조항에 대해 “상대적으로 공정보도에 대한 의지가 큰 타 언론노조일수록 동아일보노조가 선례를 잘못 만들었다는 불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중략) 노조는 회사의 경영권을, 회사는 노조의 노동 3권을 존중하는 내용으로만 타결하면 되는데 ‘편집권’이란 말이 문장 내용상 어색하게 끼어들어 잘못됐다는 지적이 많습니다”라고 아쉬움을 표현했다.

동아일보노조는 최초의 단체교섭을 무난히 수행했으며, 언론자유에 관한 조항을 비롯해 많은 점에서 타 언론노조에 좋은 선례를 남겼다. 그러나 편집권 독립에 관해서는 일단 사측이 승리한 셈이었다.

(중략) 한국일보 역시 편집권을 둘러싼 규정이 가장 큰 걸림돌이었다. 한국일보노조는 파업 돌입 당일 아침에 극적으로 타협했다. 그 결과 단체협약 총칙에 “조합은 회사가 사업을 경영하는 권리를 인정하며, 회사는 조합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인정한다. 또한 노사는 편집권의 독립을 인정한다”는 문구를 집어넣는 데 성공했다. 일단 편집권으로부터의 거리가 사측과 노조 모두 같게 설정되었다. 편집권은 사측이 전횡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점이 큰 성과였다. 한국일보노조는 쟁의특보에 올려서 성과를 자축했다.

한국일보의 단체협약은 이후 언론노조의 편집권 소재에 관한 투쟁의 전범이 되었다. 대부분의 언론사에서는 ‘노사는 편집권을 존중한다’는 내용을 단체협약에 명문화하여 최소한 편집권이 사측의 전유물이나 사측이 전횡할 수 없는 권리라는 것을 명시하게 되었다. 특히 국가가 소유해 통제하던 언론사에서는 ‘편집권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을 배제한다’는 내용을 명문화하였다. 7월 12일 단체교섭을 끝낸 경향신문은 “편집권은 외부의 부당한 간섭과 압력으로부터 독립되어야 하며, 회사와 조합은 편집권을 존중한다”고 명시했다. 또 8월 22일 타결된 연합통신의 단체협약은 “편집·보도는 공정해야 하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으로부터 독립 (중략)”을 규정했다.

편집책임자 선출을 둘러싼 투쟁

그러나 편집권 독립에 관한 이러한 규정은 선언의 성격을 지녔을 뿐이었다. 편집권 독립이 현실에서 실현되기 위해서는 선언을 실천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했다.

편집권이 편집에 직접 참여하는 모든 구성원들의 권리임을 주장하는 언론노조가 선택한 방법은 편집책임자, 구체적으로는 편집·보도국장의 임면에 편집·보도국 구성원의 의사를 어떤 형태로든 반영하는 것이었다. 현실적으로 편집·보도국 구성원 모두에게 편집권이 있다고 해도 언론 활동이 가지고 있는 집단적 성격에 비추어 최종적인 행사는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야 한다. 그것은 편집·보도국 구성원을 대표해 편집권을 행사한다. 따라서 이들의 선임에는 당연히 편집·보도국 구성원의 의사가 반영되어야 한다는 논리다.

하지만 편집권이 경영권의 한 부분이며, 인사권 또한 경영권의 일부임을 주장하는 사측이 이를 순순히 받아들일 리 없었다. 노사 양측이 편집권 독립을 존중한다는 규정은 해석하기에 따라서 노조의 편집권 침해를 금지한다고 볼 수도 있고, 편집권의 소재 자체가 사측을 떠난 것이라고 명문화한 것은 아니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선언적 규정이라는 점이었다. 그 규정만으로는 사측이 편집권에 관해 현실에서 양보하거나 잃는 것은 없었다. 하지만 편집책임자 임면 문제는 달랐다. 이견 사측이 주장하는 경영권이 직접적으로 침해당하는 것이었다.

(중략) 당시 상황은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를 잘 보여준다.

노사 간에 편집책임자 선출 문제가 최초로 쟁점화한 것은 한겨레신문에서였다. 1988년 5월 국민주주체로 창간된 한겨레신문에서 기자평의회는 편집책임자를 기자들이 직접 선출할 것을 요구하였다. 부산일보노조가 파업할 당시, 한겨레 기자평의회는 이 문제를 놓고 이사회와 줄다리기를 하고 있었다. 또 서울신문노조도 편집국장 직선제를 담은 단체협약안을 대의원 총회에서 막 통과시켜 놓은 상태였다.

단체교섭에서 편집국장 기자추천제를 최초로 요구한 곳은 코리아헤럴드 노조였다. 코리아헤럴드노조는 단체협약안에 “편집국장 임명 시 편집국 소속 조합원 3명 이내의 범위에서 후보자를 추천하며, 회사는 이들 중 1명을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협상 중이었다.

1988년 초에 잇달아 생기기 시작한 다른 언론노조들도 단체교섭을 준비하고 있었다. 이들 노조들도 대부분 편집책임자 선출을 요구할 태세였다. 모든 언론사 사측이 긴장하는 가운데 부산일보에서 정면 충돌한 것이다.

부산일보노조가 7월 11일 파업에 돌입하자 주로 사주들로 구성된 신문발행인들의 모임인 한국신문협회에서 그날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신문협회는 성명에서 “편집인이 편집의 방침 결정·시행 및 보도와 논평의 적정선 유지 등 편집 제작에 관련된 일체의 권능이라고 본다면, 이러한 권능의 행사와 책임은 최종적으로 신문 발행인 및 이사회, 구체적으로는 편집을 위임받은 편집인에게 마땅히 귀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문협회는 이어 “발행인 또는 그가 위임한 편집인이 그 사의 편집권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은 책임 있는 신문을 제작하기 위한 당연한 권리”라며 “일부 노조

가 편집국장 추천제를 요구하는 것은 편집권의 침해이며, 인사권 및 경영권에까지 간섭하는 것"이라며 부산일보노조를 정면으로 비난했다

신문협회의 성명에 대해 다음 날 기자협회가 반박하고 나섰다. 기자협회는 "그 동안 과연 신문협회 회원인 발행인들이 편집권을 공명정대하게 지켜 언론의 사명을 다해왔는가"라고 묻고 "민주화 시대에 맞게 발상을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언론노련의 전신인 전국언론노조협의회도 반박 성명을 내고 "편집권이 최종적으로 신문 발행인 및 이사회, 구체적으로 편집권을 위임받은 편집인에게 귀속한다는 주장은 '경영권이 곧 편집권'이라는 한국 언론의 비민주성을 그대로 노출시킨 것"이라며 "편집권은 신문사 내의 전 편집 제작인들에 의해 공유돼야 한다"고 밝혔다. 언노협이 이와 함께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부산일보노조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전국 24개 언론노조들이 연대해 단체행동도 불사하기로 결의했다. 그리고는 7월 14일 재경 언론노조 조합원 간부 100여 명이 서울 프레스센터 정문에서 부산일보노조 파업지지 시위를 벌였다.

부산일보노조는 윤임술 사장이 편집국장 추천제 수용은 물론이고 협상 자체를 거부하는 태도를 보이자 11일 윤 사장의 퇴임을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부산일보를 소유한 정수장학재단은 윤 사장 퇴임을 완강히 거부하다가 13일 "편집국장 추천제 주장을 철회하면 윤임술 사장을 퇴진시키겠다"고 제안하여, 재단을 대신해 노조와 싸우고 있던 윤 사장을 잘라내더라도 편집국장 추천제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노조는 즉각 재단의 제안이 사태를 악화시킬 뿐이라고 반박하며 추천제 수용을 촉구했다. 양측이 워낙 첨예하게 맞선대다가 전체 언론계 노조와 사측을 대리하는 싸움이다 보니 대립은 장기화할 듯이 보였다. 이미 파업에 들어가면서 신문 제작이 중단된 상태였다. 부산일보노조에서는 대신 쟁의특보를 매일 30만부씩 찍어 독자들에게 배달했다. 피를 말리는 선전전이었다. 타결의 전기가 된 것은 정수장학재단이 15일 하오 긴급이사회를 열고 윤임술 사장 해임, 임원중심의 사태수습위 구성 등을 결의하면서 부터였다. 이날 결의에 따라 바로 다음 날인 16일 상오 11부터 노조와 협상을 벌이기 시작했다. 부산일보가 파업에 돌입할 때 단체협약안 96개 조항 가운데 미타결된 조항은 모두 3가지였다.

편집국장은 편집국 조합원이 추천하는 3명중 한명을 사장이 임명, 유니언 슝 채택, 하후상박 임금 인상안이 그것이다. 이세가지 조항을 놓고 하오 7시 50분까지 마라톤 협상이 진행되었다. (중략) 편집국장추천제만은 절대로 양보할 수 없다는 자세를 고수했고, 마침내 이를 명문화하기에 이르렀다. "1.회사와 노조는 편집제작진의 편집권을 존중한다. 2.회사는 편집국장의 인사에 있어서는 노조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다. 구체적인 반영방법은 별도 협약서에 따른다."고 합의하고는 별도협약서에서 "지난날 미흡했던 보도와 논평에 대한 자성과 함께, 앞으로는 신문제작에 있어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언론의 본래적 사명을 다하기 위한 의지의 표현으로, 편집국장은 편집국 노조원이 추천하는 3인중에서 임명한다. (중략) 다음은 경남신문이었다. KBS가 1988년 9월 14일 TV·라디오·보도·기술본부장 3인 추천제를 도입했으며 대전일보는 1988년 9월 14일 편집국장 2인 추천제를 임기제, 기자탄핵권과 함께 도입했다. (중략) 편집책임자 임기제는 경인일보에서 처음 도입했다. 서울 MBC도 편성·보도·제작국장의 임기를 1년 이상 보장하도록 규정하는 등 이후 많은 언론사에서 임기제를 도입했다. (중략) 편집자 선출 방식과 관련해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직선제다. 편집국장 직선제를 처음 도입한 것은 한겨레인데 1988년 7월 27일 "이사회가 지면제작을 실질적으로 지휘 감독하는 최고 책임자의 임면에 관하여 결의를 하는 때에는 기자총원의 과반수이상의 추천(임명에 국한)또는 동의(면직에 국한)를 받아야 한다." (중략) 노조가 투쟁 끝에 단체협약으로 직선제를 명문화

한 것은 충청일보가 처음이었다. (중략) 직선편집국장을 탄핵할 수 있는 제도도 도입했다.

편집권 독립의 이론적 기반인 편집권 소재지가 1988년 6월 한국일보의 단체협약에서 사실상 확정 되었다고 한다면, 편집책임자 임면 문제도 언론노조 창립 이듬해인 1988년에 사실상 모두 틀이 만들어졌다. 편집책임자 임면에 해당 구성원의 의사를 반영하는 방식은 크게 네 가지로 분류됐다. 첫째, 한겨레와 충청일보가 채택한 직선제 둘째, 부산일보와 경남신문 등에서 채택한 추천제 셋째, 매일경제신문에서 채택한 임명동의제 넷째, 역시 매일경제신문과 서울MBC 등에서 채택한 탄핵제 또는 중간평가제가 그것이다. 물론 1988년 한 해에 모든 언론노조에서 편집책임자 임면에 관한 제도를 도입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한두 해 사이에 대부분의 언론노조는 관련 제도를 도입했으며, 그 형태는 이 네 가지 가운데 한둘을 택하는 것이었다.

먼저 직선제의 경우, 충청일보에 이어 제민일보가 1990년 7월 1일 첫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도입했다. 제민일보는 충청일보와 비슷하게 해임건의제도 도입했다. 그러나 직선제는 더 이상 확산되지 않았다.

추천제는 부산일보, 경남신문, KBS, 대전일보 등에 이어 서울MBC가 1988년 10월 31일 보도·편성·제작·TV기술 부문 국장추천제 시행에 합의했다. 매일경제신문은 1988년 11월 3일, 전북일보는 1989년 1월 24일에 각각 편집국장 2인 추천제를 도입했다. 지방 MBC도 대부분 서울 MBC처럼 추천제를 도입했다. 또 서울신문도 편집국장 임면 시 소속 국 기자 총의를 반영한다는 규정에 따라 1989년부터 사실상 편집국장 추천제를 도입했다.

임명동의제는 매일경제에 이어 무등일보가 1989년 3월 18일 도입했으며, 이 해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국일보, 코리아헤럴드, 한국경제, 광주일보 등에서 잇달아 채택했다.』³⁰⁾

부산일보 사태가 발발하자 언론노조 소속 서울지역 11개 언론사 노조 간부 150여 명이 7월 14일 낮 12시 반부터 서울 프레스센터 앞에서 시위 집회를 가졌다. 비가 내리는 가운데 진행된 이날 집회에서 참석자들은 「부일 사태 야기시킨 정수재단 자폭하라」 「언론노조 굳게 뭉쳐 민주언론 쟁취하자」 등의 구호와 「늙은 노동자의 노래」 「임을 위한 행진곡」 등의 노래를 부르며 30분 간 시위를 벌였다. 이날 집회는 최초의 언론노동자 연대 집회여서 언론인 150여 명이 시내 한복판에서 노래 부르고 구호를 외치는 모습이 당시 화제가 되기도 했다.

16일 밤에는 전국 24개 언론노조 간부 100여 명이 부산일보 쟁의 현장을 방문, 철야농성 투쟁을 벌이기로 했으나, 마침 이날 밤 단체교섭이 극적으로 타결돼 축제 분위기에서 부산일보 싸움과 언론노조의 역할에 대한 즉석 토론회로 바뀌었다.

부산일보 파업이 끝나기 무섭게 7월 28일에 경남신문이, 그리고 8월 26일에는 MBC가 파업에 돌입해 언론노조는 다시 연대투쟁의 경험을 쌓게 된다. 특히 MBC 파업은 방송사 초유의 파업으로 전파매체의 파업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에 대해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전국민의 관심사가 되었다.

30) 전국언론노동조합, 1999.12, 『언론노련10년사』, 51~59쪽

MBC노조의 파업은 황선필 사장 퇴진이 가장 큰 쟁점이었다. 회사 대표인 황 사장이 상견례 때를 제외하곤 한 번도 교섭장에 나타나지 않은 데다가 사측 교섭위원들은 아무런 재량권이 없어 단체교섭이 지지부진하자 MBC노조는 방송민주화 투쟁이 정권을 상대로 한 싸움일 수밖에 없다고 규정하고 정권이 관리자로 파견한 황 사장 퇴진 운동을 벌이게 됐다.

8월 26일 새벽부터 MBC노조의 역사적인 파업이 시작됐다. 조합원들은 전면 무기한 파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텔레비전의 아침 7시뉴스인 ‘여기는 MBC’가 제작되는 5층 뉴스센터의 복도 양쪽에 앉아 구호와 노래를 부르며 피케팅을 시작했다.

MBC 파업이 단행되자 언론협의 지원투쟁도 본격화했다. 재경 언론사의 노조위원장들은 거의 상주하다시피 하며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정의특보 발간, 성금 모금운동을 펼쳤다.

MBC노조 간부들과 언론협 간부들은 방송민주화 투쟁의 성패는 국민의 지지를 얻어내는 데에 달려 있다고 보고 대국민 홍보에 심혈을 기울였다. 이에 따라 ‘MBC투쟁특보’가 언론협 이름으로 발간됐다. 언론협은 방송인들보다는 신문인들이 특보제작에 능숙하다는 점을 고려, 편집기자들을 동원해 특보제작을 지원하는 등 긴밀한 협조 체계를 만들어 나갔다. 5일 동안의 파업은 황선필 사장의 퇴진으로 막을 내렸다.

언론의 역사적·사회적 책임을 깊이 인식하여 보도자유와 언론의 실현에 전력한다

몇 차례의 파업지원 활동을 통해 언론노동조합연맹의 결성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었다. 언론협은 실무추진위를 구성해 연맹 결성에 착수했다.

결성 추진은 비교적 순조로웠다. 조직 구성, 대의원 규모, 규약, 연맹 의무금 등을 심의하면서 외국의 언론노련 사례들도 검토했다. 문제는 위원장이었다.

1988년 10월 중순의 어느 날 저녁, 최해운 한국일보 노조위원장, 김종완 동아일보 노조위원장, 권영길 서울신문 노조위원장 직무대행, 조영동 부산일보 노조위원장 등 네 명이 서울 강남의 리버사이드 호텔 커피숍에 모였다.

이들은 먼저 기다리고 있던 박관일 언론노련 실무추진위 간사(한국일보 노조부위원장)한테서 이날 모임의 성격을 설명들은 뒤 자리를 옮겼다. 조용한 방으로 네 사람을 안내한 박 간사는 술과 안주를 넣어주며 “밤을 새워서라도 꼭 결론을 내려달라”고 주문한 뒤 그 자리를 빠져나왔다.

이날 밤의 4자 회동은 11월 하순으로 이미 창립 일정이 잡힌 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의 초대 위원장 후보를 단일화하기 위한 것이었다. 언론노련 추진위원들은 여러 상황들을 종합해 볼 때 초대 위원장은 경선이 아닌 사전 내정에 의한 추대 형식으로 선출하는 것이 좋겠다는 방침을 정해놓은 터였다.

이날 참석자 가운데 최 위원장은 최초의 언론노조 위원장, 김 위원장은 언론협 의장, 조 위원장은 최초로 파업을 통해 편집권 독립을 이끌어낸 노조위원장, 권 위원장은 언론노조 위원장 중 최고 선배라는 점에서 각각 「연맹위원장 감」으로 지목되었다. 물론 이 네 사람이 최종적으로 위원장 후보로 지목되기까지는 단위노조 관계자 등 다수 조합원들의 의견을 취합하는 과정이 있었다.

이날 밤 네 사람은 밤새 숙의를 거듭했다. 구체적으로 무슨 얘기가 오갔는지는 그 후에도 밝혀지지 않았다. 다만 올림픽 직후에 예상되는 정권의 강공책을 의식, 비장한 분위기였다고 전해진다.

밤을 새워서라도 단일 후보를 결정해 달라는 박 간사의 부탁은 이들이 이후 서너 차례 더 회동을 하

고 토론을 거듭한 끝에 이루어졌다. 권영길 서울신문노조 위원장직무대행을 추대키로 의견을 모은 것이다. 나머지 세 사람한테서 위원장 수락 요청을 받은 권 대행은 1주일의 시간을 요구했으며, 정확하게 8일 후에 수락할 뜻을 밝혔다. 이로써 언론노련의 탄생을 위한 마지막 진통이 해결되었다.

마침내 1987년 10월 29일 한국일보노조의 창립으로 시작된 언론노동운동은 1988년 11월 26일 불과 13개월 만에 41개 노조, 1만3000여 명의 조합원을 거느린 언론노련을 탄생시켰다.

● 강령

1. 우리는 언론의 역사적·사회적 책임을 깊이 인식하여 보도자유와 민주언론 실천에 진력한다.
2. 우리는 전국 언론사 노동조합간의 굳건한 단결력을 바탕으로 언론 노동자의 정치적·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과 권익의 보호 및 신장을 위하여 투쟁한다.
3. 우리는 민주적인 노동운동을 강력 지원하며 타 산업 노동자들과의 광범위한 연대를 통하여 민주 사회 건설에 기여한다.
4. 우리는 편집·편성권에 대한 정치권력이나 자본 등 어떠한 세력의 간섭도 거부하며 언론과 노동 등 자유로운 활동을 가로막는 제반 악법의 개폐투쟁을 과감히 전개한다.
5. 우리는 민주적인 조직 운영으로 조합원 대중의 폭넓은 참여를 보장하고 가맹 조합의 자주성을 존중한다.
6. 우리는 언론 내부의 권위주의적·비민주적 요소 척결에 노력하고 공동의 번영을 촉구한다.

● 연맹 합법화 쟁취투쟁³¹⁾

- 88년 11월 26일 연맹 창립대회에서 한국노총 가입 유보 결의
- 89년 1월 5일 연맹 노조설립신고서 노동부에 제출
- 7일 노동부 신고필증 교부 거부
- 7월 6일 문공부, 언론노보 등 5개 간행물 서울지검 고발7일 문공부에 언론노보 등록 신청
- 8월 10일 성명서 ‘언론노보 기소는 언론노동운동에 대한 명백한 탄압행위이다.’
- 11일 권영길 위원장 언론노보 발행 관련 불구속 기소
- 16일 제21차 집행위원회: 언론노보 발행인 불구속 기소에 대한 대책반 구성 결정
- 21일 문공부, 언론노보 등록 신청서 반려
- 23일 언론노보 등록 문공부에 재신청
- 24일 연맹 설립신고서 노동부에 재신고
- 29일 연맹 집행부, 노동부 장관 면담: 연맹 설립신고필증 교부 촉구
- 9월 18일 연맹 설립신고서 재반려
- 10월 6일 설립신고서 재반려 관련 행정심판 청구
- 90년 1월 12일 노동부장관 상대 노동조합 설립신고서 반려 취소 청구 행정소송 서울고법에 제기
- 2월 23일 정기간행물 등록 등에 관한 법률 7조 1항, 22조 3호에 대해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 서울지법에 제기
- 3월 15일 연맹 설립신고서 반려 취소 청구 행정소송 첫 재판

31) 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 1999.12, 『언론노련10년사 2·활동자료집』, 107쪽

- 4월 12일 연맹 설립신고서 반려에 대한 위헌 제청 신청 제기
- 8월 14일 연맹 설립신고서 반려에 대한 노동조합법 조항 위헌 제청신청 기각(연맹 합법화의 길 열림)
- 91년 3월 22일 행정소송 선고 공판
- 5월 30일 합법성 관련 행정 소송 연맹 승소
- 92년 12월 22일 연맹 합법성 관련 대법원 확정 판결: 연맹 승소, 합법성 쟁취

그러나 창립총회는 언론노련이 합법적 노동운동 단체가 되기 위한 시작일 뿐이었다. 노동부는 상급 단체를 기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고필증을 교부하지 않았다. 당시 산별노련의 상급 단체로는 한국노총이 유일했다. 언론노련은 한국노총이 1987년 4·13 호헌선언을 지지하는 등으로 권력의 편에서 어용적 모습으로 일관했다며 가입을 거부했다. 대신 언론노련은 4년여에 걸친 합법화 투쟁을 전개하였다.

노동부의 신고필증 교부 거부는 억지였다. 이미 사무금융노련이 한국노총에 가입하지 않고 설립신고를 필했으며, 평화신문 등 언론노조가 언론노련을 상급 단체로 기재해 신고필증을 받기도 했다.

“악법은 어겨서 깨뜨려라. 불법으로 투쟁하리라.”³²⁾

『민주노조운동 초기에 노동계의 사랑을 흠뻑 받았던 ‘노동 악법 철폐가’의 후렴구다. 이 노래의 가사는 민주노동운동사가 제3자 개입 금지조항 등 노동 악법에 대한 투쟁의 역사였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연맹의 역사도 노동 악법과의 투쟁사였음은 두말 할 필요가 없다.

권력은 연맹 출범 초기부터 법을 무기로 탄압해왔다. 연맹의 존재자체를 법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연맹이 출범 직후 노조설립신고서를 제출하자 노동부는 상급 단체 기재란이 누락되었다는 이유를 들어 신고필증 교부를 거부했다. 그리고 한국노총을 상급 단체로 인정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연맹은 “한국노총의 민주성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고 있는 현 상황에서 노총에 가입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는 한편, 언론노련의 합법화 투쟁이 한국 사회의 전체 노동운동에 끼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는 점에 주목해 아무리 오랜 기간이 걸리더라도 정부가 한국노총 가입 요구의 불법 부당성을 인정하고 이를 철회할 때까지 모든 방법을 동원해 정면 돌파해간다는 방침을 중앙위원회 결의를 통해 확정하였다. 이는 곧 정부가 노동자의 자주적 단결권을 인정하고 노동악법이 깨뜨려질 때까지 연맹은 불법 단체로 남겠다는 결의였다.

권력이 인정하지 않는 불법 단체. 그것은 부끄러움이 아니라 오히려 자랑스러움이었다. 연맹이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이 사회의 진보를 지향하는 민주적이고 자주적인 조직이란 것을 대내외적으로 반증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많은 탄압도 가해졌다. 권영길 언론노련위원장이 합법 단체가 아니라는 이유로 등록을 거부당한 언론노보 발행 때문에 문화공보부에 의해 고발당했는가 하면, 서울신문노조

32) 사실 이것은 1987년 중반 이후 금융권 노동조합을 비롯하여 87년 6·29 이후까지 몇몇 업종과 노동조합들에서 투쟁의 사실상의 지침이었으나 1988년 4월 언론에 보도된 ‘합법쟁의준수’라는 기사로 인해 적지 않은 타격을 받았다.

파업 지원 때는 서울신문사 측에 의해 제3자 개입 금지 위반 혐의로 고발당하기도 했다.

이에 연맹은 오히려 노동부의 설립신고서 반려가 위법임을 천명했다. 연맹은 이를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의 자주적인 단결권을 부정하는 초헌법적 태도로 규정하고, 1992년 12월 22일 대법원이 연맹의 합법화를 확정 판결할 때까지 4년여의 길고 지루한 합법성 쟁취 투쟁을 시작했던 것이다.

“어용 한국노총을 상급 단체로 할 수 없다”

연맹의 합법화 투쟁은 출범 이듬해인 1989년 1월 5일 언론노련 설립신고서를 노동부에 제출하면서 시작됐다. 노동부는 이틀 뒤인 7일 노동조합의 설립신고 시 소속된 연합단체의 명칭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노동법 제13조를 빌미로 신고필증 교부를 거부하고 보완 지시를 내렸다. 연맹은 한국노총을 상급 단체로 기재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하고 이를 거부했다. 연맹은 1988년 11월 창립대회에서 4·13 호헌 지지 등 정치적 격변기마다 한국노총이 권력의 편에 서는 등 어용적 모습으로 일관해 왔다고 지적했다. 특히 1987년 가을의 노동자 대투쟁 이래 계속돼온 노동자들의 자주적·민주적 노동운동 과정에서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중시해 노총이 노동자의 진정한 이익을 위해 활동한다고 판단될 때까지 가입하지 않기로 결정한 바 있었다. 연맹은 또한 언론노련 자체가 연합단체이므로 노총을 상급 단체로 기재할 필요가 없다는 법률적 판단을 내렸다. 실제로 노동부는 1988년 한국노총이 사무금융노련을 인정치 않아 사무금융노련이 신고서에 상급 단체를 기재하지 못했음에도 신고필증을 교부한 바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남은 문제는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였다.

연맹은 먼저 노동부의 신고필증 교부 거부를 “법이나 관행 차원이 아니라 언론노련을 약화시키려는 정권 차원의 음모”라고 규정하고 다음과 같은 투쟁 방침을 세웠다.

“일시적·대중적인 실력 행사가 아니라 법에 의한 절차를 밟음으로써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 자결권을 저해하는 법이나 관행을 선도적으로 깨뜨려야 한다.”³³⁾

대중적 실력 투쟁을 통해 정권의 양보를 얻어내는 제한된 투쟁이 아니라, 노동 악법과 노동부의 악의적인 유권 해석을 원천적으로 무력화시키는 법적 투쟁을 통해 전체 노동자의 자주적 단결권을 근본적으로 획득하는 투쟁이 더 효과적이란 판단이 섰던 것이다. 법률적 자문이나 국회 노동위원회 야당 측 의원들의 대 노동부장관 질의를 통해서도 노동부의 신고필증 교부 거부의 위법성을 확인할 수 있었기에 법 이론적으로는 충분히 승산 있는 싸움이었다. 언론노련은 노동부의 거부가 자신들을 약화시키려는 정권의 부당한 음모로 규정하고 정면으로 맞서기로 했다. 언론노련은 조영래, 조용환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소송을 제기했다. 노동부는 이례적으로 대형 법률 사무소를 대리인으로 선임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1992년 12월 22일 대법원은 “노동부는 언론노련에 대한 설립신고서 반려 처분을 취소하라”는 고등법원의 판결을 최종 확정했다.

언론노련의 승소는 단순히 언론노련의 합법성 쟁취에 그친 것이 아니었다. 무엇보다도 산별노련이나 단위 노조를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게 되어 한국노총 중심의 노동계 판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계기가 되었다. 한국노총을 노동자 대표단체로 인정하지 않던 업종회의, 전노협 등이 독자적으로 산별노

33) 전국언론노동조합, 1999.12, 『언론노련10년사』, 89~91쪽

조를 건설할 수 있게 되어 민주노총의 토대를 형성하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한 것이다.

제 6절 전국병원노동조합연맹

열악한 노동조건 개선과 평등의료 실현을 위해 병원노동조합의 깃발을 높이 들었다

" 87년 7, 8, 9 투쟁을 동지여 기억 하는가? 거제에서 구로까지..... "

그렇다. 우리 병원노동자들은 억압과 독재의 권력을 깨고 병원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쟁취하기 위하여 1987년 7월 이후 전국적으로 노동조합을 결성하기 시작하였다. 7월 31일 서울대병원 노동조합 결성을 시점으로 전국에서 매일 병원 노동조합이 결성되었다. 당시 노동조합을 만드는 병원노동자들의 주요 이슈는 "임금 인상", "병원 민주화와 권위주의 척결", "환자를 위한 의료서비스 개선" 등과 같이 열악한 병원의 노동조건 개선과 평등의료 실현이었다.

병원노동자들의 노동조합 건설은 일반 사람들의 눈에는 의아한 것이었다. 심지어 몇몇 생산직 노동자들은 "병원에 있는 사람들도 노동자냐"며 반문하기도 하였다. 일반적으로 병원이라고 하면 '백의의 천사'가 생각나듯이 일반 사람들의 생각에는 병원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이 열악하다는 것을 생각조차 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병원노동자의 노동조건은 암흑의 노동현장이라고 할 만큼 열악하기 그지없었다.

1987년 당시 투쟁을 선도했던 한양대병원의 경우, 87년 노조결성 전 간호사 초임이 기본급 195,000원 2년 후 89년에는 326,000원이었다. 미화원과 조리원등 기능직의 경우에는 월 평균임금이 13만원에 불과했다. 병원노동자의 임금 초임이 대학병원의 경우에도 10만원~20만원인 곳이 많았다. 저임금에도 근무시간은 하루 13시간을 넘고 있었다. 1987년 10월 한국노총이 제시한 최저생계비는 1인가족 여자 222,566원, 4인 가족 577,835원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병원노동자의 노동조건이 어느 정도 열악했는지 짐작할 수 있다.

병원 전체가 저임금과 함께 임금 호봉 체계도 없어 1년차와 10년차 간에 임금 차이가 없는 경우도 다반사였다. 호봉체계가 있더라도 편파적인 임금 인상을 하는 등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었다. 임금 인상 액수를 병원 마음대로 정했다.

물론 년차, 월차휴가(수당)은 없었고, 시간외 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대신 단지 하루 밤 당직비만 2,500원 지급되었다. 야식도 없이 계란 한 개가 전부인 병원도 있었다. 전국적으로 근로기준법을 지키는 병원은 한 곳도 없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한편, 임금뿐만 아니라 노동조건 역시 열악하기 그지없었다.

여성 노동자의 경우 결혼을 하게 되면 당연 퇴직을 해야만 했다. 동아일보 1987년 7월 23일자에 따르면 전국 병원을 조사한 결과 40%의 병원이 내규를 내세워 결혼과 함께 퇴직을 강요하는 '결혼퇴직제'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결혼을 해도 병원을 다닐 수 있는 대학병원 간호사들의 경우에도 결혼 후 병원을 다니는 것이 사실상 힘들었다. 왜냐하면 병원의 특성이 24시간을 환자곁에 있어야 하기 때문에 교대근무를 서야만 하는데 임신을 할 경우 밤 근무를 지속하기란 거의 불가능하였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임신이후 유산을 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설령 출산을 하더라도 2개월을 지급하도록 법에 명시된 분만휴가도 1개월밖에 주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분만을 한 여성들은 몸이 정상으로 회복되지 않

은 상태에서 다시 밤 근무를 서야 하는 고통에 시달려야만 했다.

노조결성 이후 당시 어느 노조위원장이 처음으로 분만휴가를 신청해서 자기 병원에서 병원 창립 이래 분만휴가 1호를 기록하기도 하였다.

1989년 병원노련 간준위에서 11개 지역 64개 병원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당시 간호사들은 법정인력 기준을 지키지 않아 월평균 25.29일을 근무하고 있었고, 밤 근무도 6일 연속 근무가 일상적으로 진행되었다. (참고로 노조결성 이후 밤 근무는 점차 줄어들어 최근에는 연속 3일 근무 내외로 조정되고 있다.) 그리고, N - off - D, E - D, N - E 등 무리한 근무스케줄로 교대근무자들의 노동조건은 최악이었다. 당연히 이직율이 높을 수밖에 없었다.

이런 열악한 노동조건에도 불구하고 당시 병원노동자들은 희생과 봉사, 무조건적인 친절을 강요받으면서 일해오고 있었던 것이다.

병원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건설한 이유는 앞서 언급한 열악한 임금과 노동조건 때문만은 아니었다. 이것은 '평등하고 인간적인 의료의 실현'이라는 병원노동자들의 바람을 병원 노동조합이라는 조직을 통해서 실현하고자 하는 열망의 표현이었던 것이다. 병원의 특수성으로 인해 병원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일반 사람들이 알기란 거의 불가능했다. 즉 병원은 베일에 싸여있었기 때문에 병원에서 근무하는 사람들 이외에는 병원에서 환자에게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아무도 알 수 없었다. 일반 사람들은 병원에서 다른 환자들이 먹다가 남은 밥으로 죽을 끓여 준다는 것도 알지 못했고, 2,000원짜리 약을 2만원이라고 해도 알 수가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병원노동자들은 환자들에게 부당한 대우가 돌아가고 부조리가 발생하는 것을 더 이상 참을 수는 없었다. 환자를 위한 '평등하고 인간적인 의료의 실현'은 곧 병원노동자로서 자부심을 갖는 길이었기 때문이다.

병원노동조합의 건설은 병원노동자들이 암흑의 노동현장과 잘못된 의료현실을 변화시키고 나아가 노동자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의 발로였다.

노조 만들 때 사측으로부터 항상 나오는 '선량한 근로자를 일부 불순세력이 선동했다는 말은 흑색선전에 불과하며, 실제 우리를 노조건설과 투쟁에 눈 뜨게 한 것은 그 누구의 선동이나 배후조정이 아닌 바로 우리들의 비참한 병원 현실, 암흑의 노동현장이었다.

노동자 대투쟁의 바람이 병원까지 거세게 불었다.

대부분 사무전문직노조가 그러하듯이 1987년 이전의 병원계는 노조의 무풍지대였다. 노동운동의 불모지였다. 당시 전국의 500개가 넘는 병원에서 노동조합이 있는 곳은 1963년 2월에 결성된 한국노총 소속의 연세대 세브란스병원노동조합과 그 이후 결성된 국립의료원노동조합, 원주기독병원노동조합, 그리고 1987년 4월에 결성된 전주예수병원노동조합 등 단 4개 밖에 없었다.

본격적인 노조 결성 전에도 사회 민주화에 앞장선 병원노동자들이 있었다. 1987년 1월 박종철 고문치사에 이어 4.13 전두환 대통령의 호헌선언에 맞서 '호헌철폐, 직선제쟁취' 투쟁에 460명의 간호사, 약사가 서명했다. 서명 작업은 학교 졸업 후 사회변혁을 위해 도시외곽 빈민촌이나, 공단지역의 소 진료소, 혹은 재야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던 간호사들이 주축이 되어 비밀리에 추진되었고, 병원에서 전덕례(서울대), 최경숙(서울대) 차수련(한양대) 한은정(고려대) 등이 간호대학 선후배 관계를 중심으로 조직하였다. 1986년부터 서명을 준비하면서 이들은 자연스럽게 1987년 이후 각 병원 노조결성의 주역으로 등장했다. 이들은 평가모임을 통해 서명운동이라는 개인 의사표현의 어려움을 새삼 느끼면서 노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공감대를 키워갔다. 하지만 당시에는 시기상조라는 의견에 묻혀버린다. 하지만 한국 사회는 사회민주화 요구가 거세지면서 그 흐름은 곧바로 직장민주화, 병원민주화로 이어

지고 있었다. 현장에서는 허위적인 전문직 의식이 점차 깨져나가면서 노동자 의식이 싹트기 시작했다.

병원계에서 노조결성은 87년 노동자 대투쟁의 영향을 받으면서 서울대병원(87년 7월 31일)을 시작으로 울산 해성병원(현 울산대병원 7/7), 중앙대병원(8/12), 한양대병원, 인천세광병원(현 사랑병원), 한국보훈병원, 한림대의료원(8/17), 경희대병원 (8/20), 고대병원, 서울기독병원, 순천향대병원(8/26), 인제대 서울백병원(8/27), 부천세종병원(8/29), 광주기독병원(8/31), 부천성가병원(9/1), 이대병원(9/3), 강남성모병원(9/11), 근로복지공사 중앙병원 및 산업재활원(9/14), 서울적십자병원(9/19), 원자력병원(10/17) 제주새한병원(10/20) 으로 봇물처럼 터져나갔다.

1989년 8월까지 전국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562개 가운데 211개 (37.5%) 병원에 노조 결성이 이루어졌다. 특히 1988년에는 3일에 한 개꼴로 노조가 결성되면서, 한 해만 100여개가 넘는 노조가 폭발적으로 만들어졌다.

노조 결성 흐름은 대병원에서 시작하여 점차 규모가 작은 중소병원들까지 급속히 퍼져나갔고, 노조 결성 후 1, 2개월 이내에 파업투쟁을 통해 요구를 대부분 쟁취하면서 크게 승리하였다. 물론 그 당시 는 쟁의발생신고(현 조정신청)도 하지 않고 파업하는 경우가 빈번하였다.

노조 결성 당시 화두는 ‘어용노조 타파! 민주노조 건설!’ 이었다.

‘노동자도 인간이다. 인간답게 살아보자!’ ‘수직행정 타파하고 병원민주화 쟁취하자!’ 는 구호가 곳곳에서 터져 나왔다.

전근대적이고 억압적인 조직문화를 타파하고 병원민주화를 위해 불법파업을 불사하면서 민주노조의 깃발을 하나하나 세워나갔다. 노조결성 초기에는 노동조합 활동보장이 주된 투쟁 요구였다.

대다수 병원들이 노동조합 만들고 나서도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자 병원 로비에다가 책상 하나놓고 노동조합업무를 시작하였다. 서울대병원 노동조합은 사무실 확보투쟁을 위해 2층 로비 현관 옆 어린이 보호소 자리에 진을 쳤고, 경희대병원 노동조합 역시 옛날 주차장 자리 병원 집을 한밤에 기습점거(?)하여 사무실로 만들고 사무실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밤샘 철농하면서 노동조합 사무실을 지켰다.

당시는 민주노총 건설 전이어서 노조를 만들면 한국노총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연합노련/ 위원장 김낙기)에 가입하였다. 연합노련은 55개 직종이 묶여있는 연맹으로 병원노조의 전문성을 챙겨 줄 수도 없는 연맹이면서 별도의 병원노련 결성을 막았다. 당시는 노조 이름 앞에 ‘민주’를 붙여 ‘민주 00병원 노조’ 라고 많이들 사용하면서 나름대로 기존의 한국노총과는 차별성을 부각시켜나가려는 노력들을 하였다.

노조 결성 초기 사측의 탄압으로 여러 병원 노조들이 위기를 겪으면서 한국노총으로서는 우리의 민주적이고 자주적인 노조를 지켜나가는데 한계가 있음을 절감하면서, 병원 노동자들의 민주적인 전국조직 건설의 필요성이 내부적으로 커져갔다.

초기에는 서울대병원, 고대병원 등에서 의사까지도 노조에 가입했으나 이후 탄압으로 전원 탈퇴하였고, 최근들어 2006년 8월 별도로 전공의노조를 건설하게 된다.

이런 노조 결성 붐과 함께 1987년 11월 21일에는 ‘인도주의실천 의사협의회’가 발족하고, 1988년 4월 24일에는 마포구 의료보험기관 강당에서 ‘건강사회실현약사협의회’가 발족하면서 의사, 약사들도 기존의 의협, 약협과 별도로 자신들의 조직인 진보적인 보건의료단체를 만들기 시작했다.

노조 결성 후 곧바로 병원자본의 탄압에 정면으로 맞서다!

노조 결성에 병원은 탄압으로 답했다.

1987년 9월 30일, 고대병원노조는 최은애 약사조합원이 안산병원에서 여주병원으로 일방 발령 난 것의 철회를 요구하며 구로병원에서 간호직, 약무직등이 전면 파업에 돌입했다. 500명중 400명이 동참했으며, 행정직까지 함께 노조에 가입하여 파업에 돌입했다. 당시 젊은 층이 대거 노조에 가입하면서 노조 투쟁분위기는 하늘을 찌를 듯 했다.

이 파업은 언론에 병원노조 최초 파업으로 기록되고 있다. 파업투쟁 승리 이후 사측은 집요하게 노조탄압과 와해 공세를 해왔다. 노조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도록 대폭적인 임금인상을 하면서 전임자임금은 미지급 하는 등 당근과 채찍을 같이 휘둘렀다.

병원은 1987년 12월부터 전임자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조합비 일괄공제를 거부하여 결국 1년만에 당시 이회관 사무국장이 8월 30일자로 원직복직하고, 이어서 한은정 위원장마저 9월 5일 간호사로 현장 복귀하면서 이후 1년 10개월 동안 노조활동이 중단되기도 했다. 노조 주동자가 고대 간호학과라는 이유로 본교 출신 간호사를 공채대상에서 제외시켰다가 논란이 일자 뒤늦게 따로 추가모집 하는 해프닝도 있었다.

병원노조 결성이후 혹독한 노조탄압은 서울기독병원에서부터 본격 시작되었다.

노조결성이후 사측은 탈퇴 압력등 지속적으로 노조탄압을 자행하다 끝내는 위원장을 부당해고 하였다.

이에 맞서 10월 5일부터 파업에 돌입한 140여명의 서울기독병원노조 조합원들은 추석기간에도 귀향을 포기하고 차디찬 병원바닥에서 철야농성을 하면서 강고한 투쟁을 벌인 끝에 10월 17일 오후 5시 '위원장 해고 철회와 노조 전임자 인정, 노조활동 전면보장, 노조활동 관련 강제부서 이동자 전원 복귀, 파업참가자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 로 합의하고 파업을 승리로 마무리하였다.

여성조합원에 대한 병원관리자들의 폭언과 구사대 폭행 등 부당노동행위, 인근 공사장의 인부를 고용한 농성장 난입, 무자비한 노조탄압에 맞선 서울기독병원 조합원과 서울지역과 수도권 병원 노동자들의 연대투쟁의 성과였다. 어려운 조건에서도 모범적인 투쟁으로 민주노조의 깃발을 지켰다.

각 병원노조들은 각 병원에 대자보를 붙여 서울기독 탄압 상황을 알려내고, 농성장 지지방문, 지지대자보 전달 등 낮은 단계부터 연대투쟁을 전개하였다. 서울기독병원 지원연대투쟁을 하면서 병원노동자 내부에서는 연대의식의 싹이 트기 시작했고 그것은 병노협 건설의 직접적 계기가 된다.

서울대병원노조는 국가중앙병원이라는 특성상 항상 병원 노사간 주요 이슈관련해서 치열하게 대립하면서 투쟁의 선봉에 섰다.

10월 22일부터 급식과 직원 77명이 파업하여 10/23 노사합의로 32명의 정규직 인력을 충원했다. 이전에 그만큼 인력이 부족했다는 반증이다. 87년 12월 1일 단협 체결을 위한 파업 투쟁이 8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2층 로비에서 8일간 진행되었다. 임금은 4급 기본급 8% 기능고용직 13.9%로 하후상박 방식으로 적용했다. 조합 전임자는 5인, 조합원 징계사항은 노사동수 특별위 구성하여 재심기로 합의했다. 또한, 노조 결성 전 3년간의 시간외, 휴일, 야간근무수당을 근로기준법 기준으로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병원측이 거부하여 3년치 미지급수당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다. 이 재판 결과는 이후 많은 병원에서 근기법 준수 투쟁을 촉발하는 계기가 되었다.

서울대병원노조는 1990년 1월 23일부터 지도부 단식을 시작으로 조합원 120명까지 집단 단식투쟁을 전개한다. 병원측의 인사경영권을 빙자한 교섭거부, 노동부의 직권중재 남용을 통한 과도한 편파행정, 등 노조탄압을 분쇄하고, 민주노조를 사수하기 위해서였다.

1990년 9월에는 급식과 조합원을 여청부실로 전보발령 내면서 추석연휴에도 귀향하지 않고 부당보

복인사 철회투쟁을 전개하였다. 하지만 85명 집단고소고발, 대기발령, 해고 예고에 이어 200여명의 경찰병력이 투입되어 63명 조합원을 연행하고, 김유미 위원장과 송보순, 서향숙 부위원장 2인이 전격 구속, 실형이 선고되기도 했다. 조합원들은 경찰서에서 풀려나자마자 다시 병원 2층 로비에 모여 철야농성을 전개했다.

한양대병원도 노조결성이후 숨 돌릴 겨를 없이 노조탄압에 맞서 결사항전 하였다.

3개월간의 노조민주화 투쟁이후 11월 27일 차수련 2대 위원장 집행부가 출범한다. 그리고 12월 11일 오전 8시부터 8일간의 임시총회(파업)투쟁에 돌입하였다. 2대 집행부 출범이후 임시총회를 가지려는 한양대병원노조에 대해 병원측은 원천봉쇄를 내걸고 병원로비 보호자 대기 의자를 이용, 통로 곳곳을 막아 버리고 모여 있는 조합원에게 소방호스를 들이대며 물벼락을 주고, 방화문을 닫고, 인의 장막을 치면서 탄압하였다. 지금의 병원 로비집회는 그런 탄압을 뚫고 정착되기 시작한 것이다.

5만원 인상요구에 사측은 노조 분열목적으로 간호부서에만 10%인상안 제시했지만, 노조는 이를 단호히 거부하고 전 직종에 2만 7천원 일률 인상 하고,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수당, 휴일, 근로조건의 전면시행, 노조활동보장(전임자 2명, 노조사무실, 게시판 확대, 방송시설 이용)을 쟁취했다. 특히 사측이 노조결성이후 미화원등에 대해 용역화 등 협박에 췌기를 박으면서 용역을 도입하지 않겠다는 노사합의서를 작성했다.

사측은 파업투쟁 승리이후 며칠도 채 지나지 않아 교환시설을 수동에서 자동으로 교체하면서 9명의 교환원을 해고하면서 또다시 도발을 해왔다. 해고된 조합원들은 노조결성의 주역들이었다.

이에 맞서 1988년 1월 7일부터 시작된 교환원 9명 부당해고에 맞선 강력한 복직투쟁은 차수련 위원장의 단식 투쟁 돌입 4일 만에 전원 복직을 쟁취하면서 마무리되었다.

이 투쟁은 당시 사무전문직 노조에서 사무 자동화로 인한 해고 등 구조조정에 맞서 승리를 쟁취한 소중한 사례로 남아있다.

8월 19일 노조 결성한 인천세광병원(위원장 송석환, 이후 병원노련 사무처장 역임, 현 사랑병원)은 집행부 불신임 후 새로운 집행부 선출 후 심각한 노조탄압, 5차례 교섭요청 거부에 맞서 12월 15일 파업투쟁에 돌입하였다. 사측은 영하의 날씨에 농성장에 전기 수도 난방을 차단하고 구사대 폭력을 동원하는 만행을 저질렀고, 2달간 휴업신고서를 행정관청에 제출하기도 했다. 노조 파업투쟁은 결국 15일만에 타결되어 12월 30일 휴업 신고를 철회하고, 단협 노조안대로 시행하게 되었다. 2월 15일부터 진료가 개시되었으나 사측이 3월분 임금을 체불하자 조합원들은 “내 돈을 달라”는 명찰을 달고 근무하기도 했다.

합법적 상급단체인 연맹이 없어 지원, 연대의 한계가 노출되고, 일부 중소병원은 각개격파 당하는 상황도 발생하였다. 노조가 생기면 폐업했다가 다시 다른 이름으로 병원을 경영하는 위장폐업 사례도 다수 발생했다.

고려남훈병원 (아현동 굴레방다리), 제주새한병원 (제주 소득 3위), 녹십자병원(현 마포 한마음병원), 부천제일병원, 부산강남병원의 위장 폐업에 맞선 투쟁이 가열 차게 전개되었다. 병원의 특성상 병원장(의사)의 보수적이고 전근대적인 노사관으로 노조 결성과 투쟁을 인정하지 못하고 탄압하다 안 되면 결국 폐업이라는 극한 수단까지 동원하였다. 따라서 중소병원의 투쟁은 초기 노조인정투쟁에서 위장 폐업 철회투쟁으로 많이 전개되었다.

병원노동자들은 의료민주화 투쟁을 통해 민주노조의 또 다른 과제를 받아 안았다.

1987년 노조결성을 통해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은 노조들은 곧바로 1988년부터 의료민주화투쟁을 시작했다. 1988년 고려남훈병원이 무면허진료, 부당 진료비청구를 고발하면서 사회여론화 시켰고, 1988년, 89년 서울대병원의 '병원 존지거부 운동' '약품처방전의 성분명화' 투쟁, 1990년 6개 노조 의료민주화 요구 - 병원내 시설개선, 1991년 1노조 1의료민주화 요구, 28개병원에서 '환자, 보호자 편의시설 쟁취' '환자 대기시간단축' 투쟁, 1993년 병원내 금연운동으로 의료민주화투쟁은 이어졌다.

당시 서울대병원노조는 병원 존지거부운동을 시작하면서 병원에 만연한 존지 거부 투쟁을 촉발시키면서 의료민주화 운동을 선도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김유미 위원장(이후 병원노련 위원장 역임)은 의약품 랜딩비, 리베이트비를 사회 문제화시키다가 구속되는 상황까지 발생하였다.

연대투쟁의 성과로 '병노협'이 건설되다!

노조결성 후 병원자본에 맞선 투쟁들은 자연스럽게 상호 정보교류와 연대, 부당노동행위에 공동대체의 필요성을 공감하면서 상설 공동연대체 구성 논의로 나아갔다.

하지만 임금자료조차 서로 교류하기를 꺼릴만큼 폐쇄적이던 시절이라 연대 사업은 어렵게 시작되었다. 재정도 없어 임원진들이 개인 돈을 써가면서 조직활동을 전개했다.

특히 당시 병원노조의 법적 상급단체였던 연합노련은 병원노조운동에 대한 지도역량과 전문성이 없었으므로 병원노조에게는 자신들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해주고 주체적으로 싸울 수 있는 자신들의 조직이 절실했다. 그것은 병원노조협의회(병노협) 건설로 구체화되었다. 병노협 건설의 중심에는 양건모(이대), 전덕례(서울대), 김선재(경희대), 이근선(부천세종병원), 차수련(한양대), 한은정(고대), 장정덕(서울백병원), 오무석(연세의료원), 최방식(서울대), 최경숙, 최성희(서울기독병원 위원장) 등이 있었다.

당시 병노협을 만들 때 주축이 되었던 노조들은 이대, 서울대, 경희대, 한양대, 고대, 부천세종병원, 인천기독병원, 백병원 등이었다. 주로 회기동에 있는 경희대병원 노조사무실과 연세의료원을 오가며 수차례 회의를 하였다. 이런 연유로 병노협 창립대회도 경희대병원 강당에서 개최했다. 당시 연세대병원 노조(위원장 오무석)도 병노협 창립준비 회의에 계속 참석하고, 병노협 창립식까지 참석했지만 끝까지 함께 하지 못하고 한국노총에 잔류했다.

1987년 9월 10일(목) 오후 7시 경희의료원 노조사무실에서 15개 병원 위원장 간담회를 통해 노조간 공동연대를 약속하고, 10월 3일 마르스타 수도원에서 서울시내 병원노조 집행부 연합교육이 있었다. 당시 수차례의 교육에는 민주노총 지도위원이자 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신 김금수 선생, 현재 민주노동당 국회의원으로 활동하고 계신 천영세 선생이 주로 해 주셨다. 87년 노조가 처음 생겼을 때 노동자란 표현조차도 거부감을 갖던 간부들이 교육과 연대활동을 통해 노동자 의식을 체득하고 책임성 강한 노조간부로 성장하게 되었다. 10월 10일 병원노조협의회 구성을 위한 준비모임이 경희의료원에서 개최되어 서울, 인천지역 20여개 병원노조 대표자들이 모여 협의회 구성을 위한 준비위원회 구성에 합의하고 각 병원별로 홍보활동과 준비위원 2명 선출을 결정했다. 10월 17일 준비위원회가 본격 출발하고, 10월 24일에는 병원노조 연합교육이 진행되었다.

이런 과정을 거쳐 1987년 12월 12일 경희의료원 강당에서 70여개 노동조합이 참여한 가운데 전국 병원노동조합협의회(약칭 '병노협')가 공식 출범했다.

임원진은 의장에 당시 가장 조직력이 안정적이었던 이대병원노조에서 양건모 위원장, 부의장에 안덕호(부산 백병원 위원장) 한은정(고대의료원 위원장) 이근선(부천세종병원 위원장), 사무국장에 차수련(한양대병원 위원장), 회계감사에 차영보(인천기독병원 위원장), 나명순(충무병원 교선부장)이 맡았다. 병노협은 87년 대투쟁 이후 제조업, 사무직 노조 가운데 가장 먼저 만든 최초의 업종별노조 연합조직으로서 큰 의미를 갖는다. 이것은 이후 대학, 연구전문, 언론, 건설등 사무전문직 업종별노조 협의회의 효시가 되었다. 초기 사무실은 이대병원노조 사무실 한 귀퉁이에 있었고, 위원장과 최경숙 사무차장 2명이 상근하였다. 이후 노조 사무실 마련을 위한 특별기금을 모금해서 사무실을 얻었다. 당시 보건의료전문지에서는 '병노협은 태풍의 눈', '병노협이 개입하면 병원 망한다'며 병노협의 움직임에 예민하게 반응했다.

당시에는 노동악법으로 상급단체마저 복수노조가 허용되지 않았으며, 노동악법인 '제 3자 개입금지' 조항이 있어서 파업할 때 가서 연대사를 하거나 집회를 함께하면 노동법 위반 범죄자가 되는 상황이 자주 발생했다. 87년 수 십개 병원에서 파업이 벌어지면서 병노협이 만들어져서 나름대로 많은 지원을 하였지만 합법적인 상급단체가 아니라 어려움이 많았다. 교섭도 들어갈 수 없었고, 지원연대를 가면 제 3자 개입이라면서 법적 처벌을 받았다.

병노협 출범으로 본격적인 연대투쟁이 시작되었다!

병노협 결성이후 부당인사에 맞선 이대병원 28일간 파업투쟁이 병노협 차원의 연대투쟁으로 발전하면서 가장 모범적이고 의미있는 투쟁이 되었다.

1988년 5월 13일, 병원은 모범상까지 탄 30년 근속 최고참 간호사를 세탁실로 발령을 냈다. 부당한 인사에 항의하여 '부당인사 철회', '징계위원회 노사동수'를 요구로 내 걸고 투쟁에 들어갔으며, 7월 13일 기본적인 합의로 노사가 타결 직전까지 갔다. 그러나 조인식을 앞두고 병원협회에서 이대병원을 지원하겠다고 개입하였다. 이것은 병원측이 조인을 거부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결국 투쟁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병노협 의장이 있는 노동조합은 깨야한다'는 병원협회의 의도처럼 병노협 의장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전면 탄압이 들어오면서 이대병원투쟁은 병노협과 병원협회간 힘의 대결 양상으로 치달았다. 당시 임원으로 활동했던 노조들은 대부분 강도 높은 파업투쟁이 있었고, 사측 또한 강경하게 탄압하면서 대응하여, 간부들의 해고, 구속이 빈번했다.

7월 21일 병노협 산하 600여 조합원 연대집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인근 서울대병원 조합원 100여명이 거리행진을 하면서 집결하였고, 한양대병원 조합원들도 버스로 100여명이 집결하였다. 이 투쟁에는 당시 서울지역 노동자들도 함께했다. 평화행진과 총장 항의 방문투쟁 후 병원측은 교섭을 요청해왔다. 이로써 그동안 투쟁의 쟁점이 되었던 농성기간 중 무노동 무임금 철회, 부당인사 철회, 그리고 징계위원회 노사동수 구성이 노사 합의되면서 결국 병원노동조합협의회 사수투쟁은 승리하였다.

이 투쟁은 당시 업종을 뛰어넘어 서울지역 노동자들의 대표적인 연대투쟁으로 이어지면서 업종뿐만 아니라 지역연대투쟁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게 해준 모범적인 투쟁이었다.

한편 이 시점에서 1988년 5월 29일 서울지역노조협의회가 결성되어 80여개 노조가 여의도 여성 백인회관 강당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업종을 넘은 총단결을 결의했다. 하지만 창립총회에는 공식적으로 서울대병원과 한양대병원 2개 병원노조만이 참가했고 이후 경희대병원노조가 합류했다. 그 당시 업종 노동자들은 제조업 노동자와 다르다는 의식의 한계로 인해 지역연대활동에 적극 참여하지 못한 결과였다.

병노협 운동의 성과를 한 단계 더 발전시켜 '병원노련'을 건설하다!

1988년 12월 17일, 지난 1년간의 협의회 활동 성과를 계승발전하고 한계를 극복하기위해 93개 노조가 참여하는 병원노련(전국병원노동조합연맹)을 건설하였다.

병노협 창립 당시 60여개의 불과하던 것이 88년말에는 160여개에 달해 2.7배나 덩치가 커졌으며 병노협의 한계점이 많이 드러났다. 교육, 홍보, 조사연구, 쟁의 등 최소한의 요구를 충족시키기에도 기존의 협의회 규모로는 수용하기가 불가능해졌고, 의사협회, 병원협회 등에 맞서 강력한 정치적 대응 필요성이 증대하였다. 더불어 현장 노조업무와 겹침하지 않는 중앙 상근자의 증원 필요성과 재정 확보 문제로서 연맹 결성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었다.

건설까지 과정을 돌아보면, 1988년 1월 16일 전국병원노조협의회(병노협) 제 1차 중앙위원회를 개최하여 전국적 연대의 필요성과 연맹 결성의 필요성을 공감하면서 일단 병노협 회비를 조합원 1인당 100원으로 결정했다. 각 병원 임금비교표를 작성하고, 공동신문을 제작하기로 했다. 3월 27일 병노협 창립보고대회 및 문화제가 한양대 학생회관 앞 광장에서 개최되었고, 8월 17일 병노협 제 5차 중앙위원회에서 연맹 결성을 본격 추진기로 하였다. 11월 9일 제 7차 중앙위원회에서는 현 병노협 중앙위를 병원노련 결성실무위원회로, 상임집행위원회를 병원노련 실무소위원회로 전환하였다. 11월 26일 병노협 제 8차 중앙위원회 및 전국병원노조대표자회의에서 병원노련 규약, 강령, 예산, 사업계획서(안)를 검토하고 병원노련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12월 17일 경희의료원 기숙사 강당에서 150명의 발기인이 참석한 가운데 정식 결성식을 가졌다.

● 창립 선언문

87년 7, 8월 노동자 대투쟁은 위대한 인간 선언이었으며, 자주적 노동운동의 새 출발을 알리는 함성이었다. 공익사업이라는 미명하에 열악한 근로조건에 신음하던 우리 병원노동자들도 이 투쟁에 주체적으로 나서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서로의 연대와 투쟁을 위해 전국병원노동조합협의회를 결성했다.

그리하여 전국 각 지에서 병원노조의 수는 격증하였으며 투쟁 속에서 권익을 옹호하고 단결을 드높였다. 그러나 병원 경영주들의 위장 폐업을 비롯한 각종 부당노동행위와 권위주의적인 병원 경영은 우리들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통일과 단결을 위해 전국병원노동조합연맹을 결성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더구나 오늘날 의료사업은 대부분 영리추구를 위한 방편으로 전락하였고 국민 건강권의 확립은 뒷전으로 미뤄져있다. 따라서 우리는 그동안의 전국병원노동조합협의회의 활동을 발전적으로 계승하면서 병원 민주화, 병원노동자의 권익옹호, 평등한 인간적인 의료의 실현, 전체 노동자의 연대를 위해 전국병원노동조합연맹을 결성하며 그 기치 아래 대동단결하여 전진할 것을 엄숙히 선언한다.

● 선 언

권위주의와 억압의 시대를 벗어나 이제 민주주의의 새 시대가 노동대중의 위대한 각성과 더불어 시작되었다.

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담당하는 우리 병원노동자는 전국병원노동조합의 기치를 높이 들고 뜨거운 동지애와 굳건한 단결력으로 병원노동자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권익실현과 평등하고 인간적인 의

료의 실현을 위한 통일된 조직, 민주적인 조직을 결성하였다.

우리는 노동대중이 역사의 주인임을 굳게 믿으며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조합운동의 이념 아래 대동단결하여 노동자가 주인 되는 그날까지 전진할 것을 엄숙히 선언한다.

● 강령

1. 우리는 노동 3권을 비롯한 노동기본권의 확보를 위해 매진한다.
1. 우리는 노동조건향상과 생활임금 확보를 위해 투쟁한다.
1. 우리는 전 국민을 위한 평등하고 인간적인 의료의 실현을 위해 노력한다.
1. 우리는 노동조합의 통일과 단결을 위해 앞장서며 자주적인 민주노동조합운동의 선봉에 선다.
1. 우리는 조직의 민주화와 평화통일을 이룩하는데 앞장선다.
1. 우리는 세계노동자와 국제적 유대를 강화하여 세계평화에 공헌한다.

● 결의문

87년 6월 민주화 대행진을 이어받은 7, 8월의 노동자 대투쟁에 주체적으로 나서 노동조합을 결성한 우리는 인간적이고 평등한 의료의 실현과 병원노동자의 권익향상, 그리고 노동운동의 자주적 도약을 위해 작년 12월 12일 전국병원노동조합협의회를 결성하였고 그 후로 1년여 동안 힘찬 전진을 해왔다.

그러나 권위적이고 비민주적인 발상에 젖어 노동조합 탄압과 위장폐업 등 각종 부당노동행위를 일삼아 온 병원 경영주들은 막강한 재력을 바탕으로 권력에 빌붙어 의술을 상품화시켜가면서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고, 노동조합을 탄압하기 위해 노동법의 개악에 엄청난 물량공세를 펴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저들의 타락한 음모와 술책에 굳건히 대처하고 1년여 동안의 병노협 사업내용과 성과를 발전적으로 계승하면서 보다 높은 단결과 통일된 조직을 위해 전국병원노동조합연맹을 결성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

이에 전국의 병원노동자를 대표하여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전국병원노동조합연맹 발기인 일동은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우리는 병원노동자의 권익향상을 위해 매진한다.
1. 우리는 병원 경영주들의 위장폐업, 노조탄압을 분쇄하기 위해 투쟁한다.
1. 우리는 모든 병원노동조합들이 병원노련 산하에 가맹하도록 노력한다.
1. 우리는 병원노련의 합법성 쟁취를 위해 끝까지 싸운다.

초대 연맹 위원장은 그동안 병노협 의장으로 열심히 활동해온 양건모 이대병원노조 위원장이 맡았다. 약관 26세의 나이였다. 양 위원장은 이후 2대 위원장까지 연임하게 된다. 부위원장에는 안덕호(부산백병원), 이근선(부천세종병원), 이원조(가톨릭의대병원), 김은아(대전을지병원) 김상덕(의정부의료원) 채학용(광주남광병원) 동지가, 사무처장에는 최방식(서울대병원) 동지가 당선되었다. 회계감사는 정무영(울산동강병원), 이상춘(동산의료원), 유돈수(경희의료원) 동지가 맡았다. 서울지부장에는 김유미(서울대병원) 동지가 당선되었다. 지금 수석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해선(인하병원) 동지는 그 당시

경기지부장이었다. 1989년 6월 28일 제 1차 병원노련 정기대의원대회는 당시 노무현 의원(현 대통령) 이 와서 강의를 하기도 했다.

병원노련 사무실은 당시 노동교육협회와 함께 서울역 근처 광풍빌딩에 있었고, 이후 삼각지, 회현동 남산골 등을 전전하였다. 주로 사무실 임대료가 싼 곳을 골라서 이사 다녔다.

병원노련 결성 이후 연대활동은 한 단계 발전하였고 조직적 결속력 또한 높아졌다. 이런 과정에서 1989년 4월 19일 한양대병원에서 연월차 휴가를 사용한 파업투쟁이 32일간 벌어졌다. 서노협 차원에서 4월 시기집중투쟁의 일환이었다. 이 투쟁으로 병원에서 최초로 파업농성장에 백골단 100여명이 난입하여 사전 구속 영장이 발부된 차수련 위원장을 강제 연행하였다. 이에 병원노련은 전 조직 역량을 모아 연대투쟁을 전개하여 결국 승리로 마무리하였다.

병원노련 합법성 쟁취! 산별노조를 향해

1988년 병원노련 결성 이후 1989년 1월 5일 노동부에 설립신고서를 제출하였다. 하지만 노동부는 복수노조 금지에 해당된다며 반려하였다. 이에 병원노련은 합법성쟁취특별위원회(위원장 이근선)를 구성하여 다양한 투쟁을 하였다.

연합노련 사무실 밤샘 점거농성, 한국노총 위원장실 점거 단식농성, 당시 야 3당 단일안을 만들어내는데 가장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 공화당사 점거농성, 서명운동 등과 많은 가두집회를 개최했다. 이어 법원에 재판을 걸었고 당시 전문노련과 함께 합법성쟁취공동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공동투쟁을 전개하기도 하였다.

당시 김선수 변호사가 이 사건을 맡았으며 병원노련의 상대는 중앙노동위원회와 연합노련이었다. 법원에 증인으로 당시 합법성쟁취특별위원장인 이근선이 참석하여 증언하였다.

그 당시 병원노련이 별도로 가야 한다는 주장의 요지는 다음과 같았다.

외국에서는 노조의 단결권과 자주성을 인정하여 복수노조가 당연히 인정되고 있는데, 대한민국만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는 헌법에 보장된 노조의 자주적 단결권을 인정치 않는 것이다. 이미 병원노련은 PSI, FIET 등 국제 노동단체의 회원연맹이다. 노조 멤버 3개월이 지나면 자동 탈퇴 내지는 제명인데 계속 멤버도 안내는데 연합노련 조합원이라는 것은 말도 안된다. 병원노련은 이미 상급단체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 연합노련이 무엇을 해 줄 수 있는가? 법을 근거로 복수노조가 안된다고 하지만 연합노련에 중복된 화학, 섬유 등 여러 개의 연맹이 별도로 존재한다. 법을 근거로 한다면 연합노련의 조직 대상과 별도의 몇 개 연맹은 이미 복수노조인 것이다. 그런데 병원노조는 안 된다는 것이 안된다는 식으로 정당성을 주장했다.

재판은 무려 4년 6개월만인 1993년 5월 25일 대법원에서 승소하여 단위노조는 안되지만 상급단체는 복수노조가 가능하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6월 9일 신고필증을 교부 받았다. 당시 대법원에는 이근선 합법성특별위원장, 김태현 정책실장(현 민주노총 정책실장), 최방식 사무처장(서울대병원 출신, 시민의신문사 편집국장 역임)이 함께 있었다. 판결문을 들으면서 모두가 눈물을 흘렸다. 그간 상급단체 이면서도 법적으로 인정받지도 못하고, 제 3자 개입이라며 처벌 받던 것이 너무도 억울했기 때문이다.

당시에는 휴대폰이 없어서 재판결과를 공중전화로 긴급하게 사무실로 알려 기쁨을 함께했다. 이 결과로 인해 설립신고서를 못 받고 줄 서 있던 전문노련 등 다른 산별연맹들이 줄줄이 설립신고서를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이후 민주노총도 합법화되었다. 언론노련에 뒤이어 병원노련이 상징적인 재판 결과를 얻어냄으로써 복수노조가 인정되는 시대를 열었고, 그 이후 입법화 되었다. 합법성 쟁취는 병원노동운동의 정당성을 국민 속에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고, 민주노조운동의 노동법 개정투쟁의 부분적 성과이기도하다.

한편, 1991년 5월 21일에는 대구 계명대 동산의료원 이상춘 위원장이 18일 직권중재회부 된 것을 빌미로 노조측의 양보만 강요하는 의료원장의 악의 섞인 언동에 항거하며 할복을 기도했다. 1990년 10월 26일에는 인천기독병원장이 직권중재를 받기위해 쟁의발생신고를 해서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다. 병원 노동자의 파업권을 봉쇄했던 직권중재제도는 이렇게 파행적으로 시작되고 있었다.

1992년 5월에는 양건모 위원장이 서울대병원 노동조합 파업을 선동했다는 제 3자 개입 금지법 위반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병원노련은 병원노동조합의 상급단체이지만 복수노조 금지라는 악법조항에 의해 한 병원 노동자가 다른 병원노동조합에 격려를 하러가도 제3자 개입금지의 적용을 받았다. 구속영장 발부로 인해 양건모 연맹위원장이 여성 혼자서 몸으로 4개월간 힘겨운 수배생활을 하였으나 조합원 리본달기, 철야농성, 서명운동, 김철청앞 시위, 모금운동 등 전국 병원노동자들의 수많은 현장투쟁과 업종회의와 전노협, PSI, FIET 등 국제 노동단체의 입체적 지원투쟁으로 마침내 8월 28일 구속영장을 철회시켰다. 수배기간 중 주요업무처리는 직무대행인 이근선 부위원장, 최방식 사무처장이 버스, 택시, 전철을 바꿔 타며 미행하는 경찰을 따돌리고 모처에서 만나 논의하곤 했다. 수배기간 중에 전노협(전국노동조합협의회) 창립식이 성균관대 수원 캠퍼스에서 개최되었는데 양건모 위원장과 이근선 직대는 부부로 가장하여 경찰의 검문을 피하고 버스를 타고 서울대를 빠져 나왔다고 한다. 또한, 수배기간 중인 6월 25일 제 4차 정기대의원대회가 있었으나 양건모 위원장이 참석하지 못해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이근선 부위원장(부천세종병원)이 의사봉을 잡고 대의원대회를 진행했으며, 위원장의 대회사는 영상물로 대치하여, 함께 보는 대의원 동지들의 눈시울을 적시게 했다.

병원노동자들은 1993년 연맹 합법성 쟁취를 계기로 1994년부터 교섭권 위임을 통한 공동 교섭, 공동 투쟁을 본격 전개하였다. 이것이 바로 1998년 산별노조 건설의 중요한 토대가 된다. 병원노동운동 1기, 산별노조 前史는 이렇게 선배 노동자들이 만들어온 피와 땀과 눈물의 결정판이었다.

제7절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민족·민주·인간화 교육 실천을 위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결성-

1989년 5월 28일 오후 1시 경 비선의 연락을 받은 전교조 지도부는 경찰의 감시와 방어가 허술했던 연세대로 일단의 조합원들과 긴급히 진입했다. 그리고 곧 바로 학생회관 앞 계단에서 윤영규 위원장(당시 53세, 전남체고 윤리교사)은 휴대용 메가폰으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결성선언문을 당당한 목소리로 빠르게 읽어 내렸다.

● 전교조 결성선언문 (일부)

“겨레의 교육 성업을 수임 받은 우리 전국의 40만 교직원은 오늘 역사적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결성을 선포한다.

오늘의 이 쾌거는 학생, 학부모와 함께 우리 교직원이 교육의 주체로 우뚝 서겠다는 엄숙한 선언이며 민족·민주·인간화 교육 실천을 위한 참교육 운동을 더욱 뜨겁게 전개해 나가겠다는 굳은 의지를 민족과 역사 앞에 밝히는 것이다.(중략)

우리의 교직원노동조합은 민주시민으로 자라야 할 학생들에게 교원 스스로 민주주의의 실천의 본을 보일 수 있는 최선의 교실이다. 이 사회의 민주화가 교육의 민주화에서 비롯됨을 아는 우리 40만

교직원은 반민주적 교육제도와 학생과 교사의 참 삶을 파괴하는 교육 현실을 그대로 둔 채 더 이상 민주화를 말할 수 없으며 민주주의를 가르칠 수 없다. 누구보다도 우리 교직원이 교육 민주화 운동의 구체적인 실천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건설에 앞장선 까닭이 여기에 있다.

그 동안 독재정권과 문교부, 대한교련 등 교육 모리배들은 우리의 참 뜻과 순결한 의지를 폭압적으로 왜곡하고 짓밟아 왔다. 역사의 진로를 막으려는 광란의 작대가 춤을 추고 있다.

그러나 보라! 민족사의 대의에 서서 진리와 양심에 따라 강철같이 단결한 40만 교직원의 대열은 저 간악한 무리들의 기도를 무위로 돌려놓을 것이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저들의 협박과 탄압이 아니라 우리를 따르는 학생들의 해맑은 웃음과 초롱초롱한 눈빛 바로 그것이기 때문이다.

동지여! 함께 떨쳐 일어선 동지여! 우리의 자랑스런 제자의 해맑은 웃음을 위해 굳게 뭉쳐 싸워 나가자!

교육 민주화와 사회민주화 그리고 통일의 그날까지 동지여, 전교조의 깃발 아래 함께 손잡고 나아가자!

민족교육 만세! 민주교육 만세! 인간화교육 만세!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만만세!“

현장에 참여한 200여 조합원들은 “교육민주화와 사회민주화, 그리고 통일의 그날까지, 동지여! 전교조의 깃발 아래 함께 손잡고 나아가자!”는 위원장의 외침을 뜨거운 온 가슴으로 받아 안으며 ‘민족교육 만세! 민주교육 만세! 인간화교육 만세!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만세!’를 외쳤다. 마침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결성된 것이다.

뒤늦게 대회 장소를 알게 된 경찰이 최루탄을 마구 쏘며 대학 구내를 침입했다. 그러나 백양로의 학생들과 도서관에서 공부하다 비상 상황을 듣고 뛰쳐나온 기백 명 학생들이 벼락같이 편성한 저지선에 막혀 결성대회를 막지 못했다. 정권과 경찰은 그 전날부터 서울과 각 지역에서 계엄에 버금가는 원천봉쇄 작전을 펼쳤으나 전교조의 성동격서 전술에 보기 좋게 당한 것이다.

전교조 결성, 그것은 굴종의 삶을 거부하고 참 교사로 거듭나고자 나선 교사들과 교육을 권력의 이데올로기 통제 수단으로 삼고 교원을 말단 관료, 하수인으로 묶어 두려는 지배세력 사이에서 벌어진 한판 대회전이었다.

그런 상황이다 보니 정상적인 노조결성대회라면 응당 정식으로 심의하고 채택해야 할 노조의 강령과 규약은 조직적으로 논의하고 독회할 여건도 시간도 가질 수 없이 채택되었다.

● 전교조 강령

1. 우리는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확립과 교육 민주화 실현을 위해 굳게 단결한다.
2. 우리는 교직원의 사회, 경제적 지위 향상과 민주적 권리의 획득 및 교육 여건의 개선에 모든 노력을 기울인다.
3. 우리는 학생들이 민주시민으로서 자주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민족, 민주, 인간화 교육에 앞장선다.
4. 우리는 자유, 평화,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국내 여러 단체 및 세계 교원단체와 연대한다.

그 시각 경찰병력을 발목을 붙들어 놓은 채 건국대와 한양대에 모여 별도의 행사를 치르고 있던 수천 명의 조합원들은 노조 결성 성공 소식에 환호성을 질렀다. 그러나 곧바로 침탈한 백골단과 교육

관료들은 뒤통수를 맞은 분풀이를 하듯 교사들에게 무자비한 폭행을 가하며 ‘굴비 두름 엮듯이’ 연행했다. 관제언론을 동원하여 ‘교사는 노동자가 아니라 스승’이라고 강변하던 노태우 정권과 그 하수인들의 ‘스승’에 대한 대접이 그러하였다.

결성대회를 성공리에 치른 지도부 27명은 대부분 구속영장이 떨어져 민주당사에서 ‘전교조 인정과 조합원 탄압 중지’를 요구하며 10여 일 간 단식농성을 한 후 자진출두 형식으로 구속된다. 그리하여 5월 28일을 전후하여 벌어진 대 드라마의 제1막이 끝났다.

전교조 결성 참여로 해고되었다가 복직을 앞두고 93년 작고한 교사 시인 정영상은 이 날의 감격을 이렇게 노래했다.

“(…) 아아 오늘에야 비로소/ 30만 교사들의 발목과/ 1천만 학생들의 이목구비에 채워졌던/ 독재교육의 쇠사슬과 자물통 끊기는 소리 들리고// 수많은 민주교육의 탄압을 떨치고/ 다시 일어서는 칠판 다시 일어서는 백목/ 파면·구속·원천봉쇄·의식화 매도 속에서도/ 다시 일어서는 교실// 드디어 민족교육의 부활을 위해/ 인간화교육 통일교육의 새 아침을 열기 위해/ 끌려가고 잡혀가는 저 참스승의 어깨 위로/ 짊어지고 가는 어둠이 걷히고/ 어금니 깨물며 두 주먹 다시 쥐며 참았던 눈물이/ 뜨겁게 흘러내리는구나.”

80년대 초 소수의 젊은 교사들이 시작한 교육민주화 운동은 전교조 결성까지 가파르게 전개되었다. 신분의 위협을 무릅쓰고 교사들을 움직이게 한 동인은 반교육의 현장에서 일상으로 겪어야 하는 굴종과 침묵의 고통이었다.

4·19혁명기 탄생한 한국교원노조연맹의 좌절 이후 약 20년 동안 우리 사회의 교육모순은 양심적인 교사로서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유신과 광주, 그리고 전두환 내란정권의 폭압통치’를 직간접으로 겪은 일단의 젊은 교사들은 학교를 변혁운동 또는 민주화운동의 중요한 현장으로 보고 조직화를 도모하였다. YMCA교사협의회, 흥사단교육문화연구회, 한국글쓰기교육연구회를 비롯한 몇몇 공개단체와 비공개 지역 소모임을 통한 실천 활동이 쌓여가면서 선진적인 교사들의 문제의식은 동료교사들과 폭넓게 공유되었다.

86년 5월 발표된 ‘교육민주화선언’은 교사운동이 대중투쟁의 양상을 띠게 된 첫 사건이었다. 투쟁에는 희생자가 생기기 마련이다. 79년 남민전 사건에서 87년 6월 항쟁까지 45명의 구속, 86명의 해직, 20명의 중징계가 나왔다. 이들 중 상당수가 참여하여 86년 5월 설립한 ‘민주교육실천협의회’는 교원노조의 실질적인 추진세력이 된다.

87년 <6월 항쟁>, 교사운동에 기름을 붓다

87년 6월 항쟁 기간 수많은 교사들이 퇴근 후 시위 대오에 참여했고 6월 29일의 승리를 함께 맞보았다. 당시 문교부장관은 해직교사들의 전원 복직을 약속하기도 했다. 하지만 약속은 말로 끝나고 당사자들의 치열한 복직 투쟁 끝에 88년 초 교단에 돌아간 수는 그나마 30여 명에 불과했다.

항쟁 직후 YMCA교사협의회와 민주교육실천협의회를 중심으로 전국적인 조직망을 갖고 있던 교사들은 ‘학교-교육민주화 방안’을 주제로 지역별로 9월까지 토론회를 개최하고, 여세를 몰아 전국교사협

의회(전교협)을 9월 27일 결성한다. 이때에도 독재정권은 교사들의 결사를 막기 위해 갖은 방해 책동을 동원했다. 교사들은 시민권으로서 '결사의 자유'도 박탈된 상황이었다. 86년 '교육민주화선언'에서 '자주적 교원단체 설립과 활동의 자유 보장'을 요구한 까닭이다. 어용 교원단체인 대한교련(현 한국교총의 전신)만이 배타적인 결사의 자유를 누리고 있었다.

교사들의 노동3권 요구는 87년 7월 25일 제2차 전교협 임원연수에서 처음 논의가 되었고 8월 13일 전교협 발기인대회에서 공개적으로 천명했다. 이는 7, 8월 노동자 대투쟁의 열기에 고무된 결과였다. 5.16군사쿠데타 세력이 '하나의 교육회'만 허용하고 교원의 노동3권을 박탈한 이후 여기에 오기까지 무려 27년이 걸렸다. 88년 6월 한 달 간 행한 전국 3,854명 교사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무려 80.3%가 노동3권 보장을 요구했다. (단체행동권만 유보는 15.9%).

87년 9월 약 3천 명 회원으로 출발한 전교협은 학교단위 평교사회 조직과 전국에서 활화산처럼 터져 오른 사학민주화투쟁을 바탕으로 하여 89년 3월 약 3만 명으로 조직이 커진다. 그러나 전교협은 88년 교원의 노동3권 쟁취 경로로 '선 법제화 후 조직 건설' 방침을 채택하고 교육악법 폐쇄 투쟁에 매진하였다. 주요 요구는 노동3권 보장 이외에 교사단체 결성의 자유 보장, 근평 폐지, 국정교과서 폐지, 사립교원 신분보장, 교장선출 임기제, 교무회의의 의결기구화, 학생의 권리 보장 등이었다. 이 투쟁은 전국적인 공청화·토론회·가두 캠페인·대국민서명운동과 지역별 결의대회를 거쳐 88년 11월 20일 여의도 광장에서 열린 '민주교육법 쟁취 전국교사대회'에서 최고조를 이루었다. 이 대회에는 사상 초유로 만 5천 교사와 예비교사가 모여 국회를 압박했다. 이날 참석교사들은 지역별로 나누어 서울 시내에서 차량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대회 이후에도 각 지역교협과 학교별로 학부모, 학생, 일반 국민을 상대로 전면적인 홍보활동에 돌입하였다. 아울러 전교협의 투쟁에 재를 뿌리고 물 타기를 하고 있던 대한교련 탈퇴 운동도 대대적으로 전개해 나갔다.

88년 12월 거창고에서 열린 전교협 간부 연수에서 교원노조건설의 결의를 드높였고, 이듬해 전교협 회장단은 89년 1월 20일 중앙위원회의 압도적인 결의에 힘입어 2월 2일 연두 기자회견에서 상반기내 교원노조 결성을 천명했다.

2월 15일자 전교협 기관지 「전국교사신문」은 사실에서 교원의 경제적·사회적 우대와 신분보장을 규정하고 있는 법(교육법제13조)이 교원을 우롱한다면서 (노동3권이 있는) '타 직종, 예컨대 전문직 연구원, 기자, 은행원, 병원종사자보다 우대받기를 원하지 않는다. 우대는커녕 동등한 대우라도 받기 위해, 우리 스스로 하는 일의 주체로 살기 위하여, 지배 권력의 폭압과 농간으로 철저히 유린된 교육과 교사들의 상처 난 긍지와 자존심을 회복하여 지키고자 노동조합을 만들려고 한다'라고 썼다.

이어서 2월 19일 제2차 대의원대회(단국대 학생극장)에서 참석 대의원 280명 만장일치로 상반기중 노조건설을 의결하였다. '선 노조건설 후 합법화 쟁취'로 전략을 수정한 것이다. 아울러 전교협은 국민들에게 교사들의 교육개혁에 대한 진정성을 바로 알리기 위해 '잘못된 교사-학부모 관계를 청산하고 제반 교육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부모와 함께 노력'하기로 하고, '촌지 거부 운동' 전개를 결의한다. 이어 2월 25일 전교협 제7차 중앙위는 교원노조건설특위(위원장 이규삼)를 구성하고 투쟁기금 모금, 개학 후 대중 선전 등을 결의했으나 노조의 형태(단일노조나 지역 연맹이나)나 결성 방식(선 중앙조직 후 지역조직이나 그 반대나)은 합의하지 못했다.

전교협의 투쟁과 결의의 성과로 89년 3월 9일 여소야대의 국회는 노동위에서 야3당 단일안으로 통과된 “6급 이하 공무원을 포함한 근로자(현역 군인, 경찰, 소방, 교정공무원 제외)는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고 단체교섭을 행할 수 있다”는 내용의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의결한다. 언론노련은 3월 14일 ‘교원노조 건설을 결의한 전교협의 결정에 전폭적인 지지와 신뢰를 보낸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국회문공위는 교직원 1200명과 학부모 8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서강대언론문화연구소와 공동)에서 교사 84.1%, 교육전문가 79.8%, 학부모 53.7%가 교원노조 설립 찬성이라고 발표하기도 한다. 그러나 노태우 대통령은 4월 1일 거부권을 행사, 합법적인 교원노조 건설 경로를 막았다.

4월 8일 전교협 제9차 중앙위(대전)는 조직형태를 전국단일노조로, 5월 14일 전국동시다발로 발기인대회를 열고, 5월 28일 결성 전국대회를 갖기로 일정을 최종 결의했다. 이 당시 조합원들 사이에 유행한 구호가 ‘악법은 어겨서 깨뜨리자!’였다. 5월 14일 연세대 노천극장에서 열린 수도권 발기인 대회에 초청받은 노무현 의원은 축하연설에서 “민중이 쟁취하지 않은 권리를 국회 스스로 입법한 예가 없다”면서 교원노조의 합법화는 교사들의 주체적 노력에 달려 있음을 강조하였다.

그 과정은 몇 단계를 거친다. 첫째 제도언론을 동원한 좌경용공 색깔공세, 둘째 교장 교감 학부모를 동원한 회유와 협박, 셋째 결성 전후의 물리적인 폭력행사, 넷째 지도부 대거 구속, 다섯째 가동이 가능한 정부기구, 정당, 어용단체 개인 등 모든 지배세력을 동원한 탈퇴 강요 등이다. 88년 총선 이후 대대적인 통일운동과 노동운동이 전개되자 이른바 89년 상반기 공안정국을 조성하여 민족민주운동 진영을 압박해 온 노태우 정권은 8월 5일을 시한으로 ‘전원 해직’의 협박을 가했다. 전교조 와해 작전에 정권의 사활을 건 듯했다.

전교조의 투쟁은 아주 짧은 기간에 교사들이 경찰서를 제 집 드나들 듯할 정도로 조합원들을 단련시켰다. 결성대회 당일 연행을 경험한 조합원들은 7월 9일 ‘부당징계철회 및 전교조 합법성 쟁취 범국민결의대회’에도 참가하여 1900여 명이 지도부의 ‘경찰서 연행 택(전술)’에 흔쾌히 따르고 목비권을 행사하는 투지를 보였다. 7월 13일 이부영 위원장 직무대행이 구속된 후 지도부는 명동성당에서 농성에 돌입했다. 학교에서 징계저지 투쟁과 탄압 항의의 단식투쟁하던 전국의 교사들 중 600여 명은 7월 26일부터 8월 5일까지 장소를 명동성당으로 옮겨 장마철 돌바닥에 비닐 천막을 친 노숙 단식투쟁을 10여 일 간 전개했다. 예비교사들은 “선배들이 피 흘린 자리에 설 수 없다”면서 발령을 거부했고 학생들은 대체 강사의 수업을 거부했다. 학부모들 상당수는 징계철회 서명운동에 동참했다.

교육주체들의 선도투쟁으로 형성된 89년 전교조는 그 자체 엄청난 전선이었다. ‘지지와 저지’로 진영이 짝 갈라졌다. 89년 4월 평양을 방문하고 돌아와 옥고를 치른 문익환 목사는 ‘89년은 전교조의 해야!’ 라고 한 마디로 전교조 결성과 투쟁의 운동사적 의미를 평가했다.

탄압과 저항, “89년은 전교조의 해”

그 해 국정감사에서 이철 의원이 폭로한 자료에 따르면 ‘교원노조 분쇄 대책’을 정권 차원에서 수립하여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와대를 정점으로 범무는 대검, 내무부와 안기부는 반상회에 이르기까지의 행정조직, 문교부는 전체 조직에다 산하 단체와 대한교련까지 포함하여 기획, 지원, 실행 체계를 가동하였고, 총무처 경제기획원 감사원 문공부까지 총동원했다. 대통령은 KBS 라디오 주례방송에서

교원노조를 비난하는 연설을 했고, 감사원은 교원노조 탄압 위한 무원칙한 회계를 목인했다. 경제기획원은 교원노조 반대 홍보 예산 13억원을 문교부에 지원하고 내무부는 전국 반상회에 '참교육은 위장된 민중교육'이라는 소책자 800만 부를 뿌렸다. 법무부와 대검은 공안차원에서 교원노조원을 대량 구속, 노조 지원금을 수사했고, 문공부는 교원노조를 좌경폭력혁명 세력으로 매도하는 VTR을 제작, 유선방송업체에 방영을 강요했다. 부산 이것도 부족했던지 지배세력은 전교조 분회를 정부기구가 하나씩 맡아 와해 공작을 펼 정도였다. 안기부는 태릉고, 감사원은 구로고, 경제기획원은 오류여중, 내무부는 신월중 이런 식이었다. 조합원들과 연고가 있는 공무원들을 총동원하여 탈퇴를 종용하게 했다.

그러나 전교조 지지 전선도 완강하게 구축되어 나갔다. 발기인대회 직후 '전국노동법개정 및 임금인상투쟁본부' 소속 각 지역·업종노조협의회 '병원노련', '전국사무금융노련', '전국언론노련', '전국대학강사협의회', '전국건설노조협의회', '참교육실천을위한민주학부모회', '제주여민회', '건강사회실천약사협의회' 등이 '전국교사신문'에 지지광고를 내어 동지애를 표현했다. 학생들의 지원투쟁은 조합원들의 단식수업과 농성, 해고 사태가 이어지면서 본격화된다. 전국병원노련은 7월 1차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전교조 적극 지지를 결의했다.

5월 26일 이른바 북침설로 음해하여 구속한 강성호 교사의 중복 제원고를 필두로 서울 남서울중, 광주 광덕고, 서울 신일고에서 불붙기 시작한 학생들의 항의 농성과 시위는 6월 언론의 각광을 받은 구로고 시위를 거쳐 '참교육 실현 및 참스승 지키기 운동'이라는 이름으로 2학기 해직교사들의 거리수업, 출근 투쟁이 진행되는 내내 그치지 않았다. 역사상 전무후무하게 8월 7일까지만 212개교 34만 6천여 중고등학생이 참여한 이 운동은 학생들 스스로 빼앗겼던 자신들의 권리 찾기 운동과 다르지 않았다. 고교동문회들도 모교 전교조 조합원 징계를 막는 활동을 전개하기도 했다.

6월 17일 오후 언론노련 사무실에서 전국노동운동협의회, 여성단체연합을 비롯하여 학부모, 종교, 예술인, 학자 단체 등 29개 단체가 '전교조탄압저지및참교육실현을위한공동대책위원회'를 결성하였고, 같은 날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는 계룡산에서 임시중앙위를 열어 교수들의 전교조 가입 추진을 결의했다. 아울러 학부모들의 조직화도 착착 진행되었다. 5월에서 7월에 걸쳐 전국적으로 민주학부모회 건설 작업이 추진되어 9월 22일 마침내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탄생을 보게 된 것이다.

7월 19일 서울대에서 열린 제8차 지역·업종별노동조합전국회의(공동의장 단병호 권영길)는 가중되는 정권의 탄압에 대한 전교조 투쟁을 노동악법 철폐투쟁의 주요 고리로 삼고 적극 지지하고, 구속교사 석방투쟁을 벌여나가기로 결의했다. 8월 4일 서울 종로 기독교회관에서 열린 전교조공대위 전국대표자 연석회의는 지역·부문별 공대위에 가입한 단체수가 천 개가 넘을 것으로 추산했다. 87년 6월 항쟁 이후 최대의 민주연합전선이 형성된 셈이었다. 8월 7일 '전교조대책 기독교공동위원회'(위원장 장기천 목사)가 발족하였고, 이날부터 시작된 '전교조 탄압저지 및 참교육실현을 위한 범국민서명운동'은 열흘 만에 20만이 넘는 서명을 받았다.

전교조 지도부 대다수(100여 명)가 구속되어 생긴 지도력의 공백상황에서 조직이 질서정연하고 조직적인 진퇴 방침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사이에 정권의 탄압은 분회와 명단을 공개한 개별 조합원에게 집중되었다. 물론 분회 차원에서 독자적으로 이 투쟁을 장기전으로 보고 조직적인 후퇴 결정을 한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서울 동북고, 광주 대동고 등을 비롯하여 일찍 분회를 결성한 상당수 학교에서는 '다 죽으면 다 산다!'는 신념에서 10명이 넘는 조합원들이 해직을 결의하기도 했다. 서울에서

는 발령 받은 지 여섯 달 만에 해직된 새내기 교사들이 많았다. 광주와 대구는 주로 사립학교 조합원들이 대거 해직의 길을 택했다. 그러나 나이가 든 기혼 조합원 중에 맞벌이 부부가 아닌 경우는 주변에서 현장에 남도록 권하기도 하였다.

결과적으로 발기인 대회 당시 만 4천여 명이던 발기인들 중 절대다수가 여름방학을 거치면서 온갖 비인간적인 탄압과 공작에 시달리며 강요된 탈퇴각서에 도장을 찍었다. 가족이 대리도장을 찍은 경우도 있었다. 탈퇴 여부와 관계없이 조합원들은 대부분 난생 처음 견디기 힘든 마음의 상처를 입었다. 번민과 자책의 눈물로 밤을 지새 조합원들이 한둘이 아니었다.

탄압의 결과 일시적으로 조직의 근간이 흔들렸다. 정권 당국은 9월 전교조 조합원을 3천여 명으로 파악했다. 탈퇴각서 제출을 거부한 1500여명과 9월 이후 탈퇴무효 선언에 참여한 조합원 등을 포함하여 최종적으로 1522명이 교단에서 축출되어 거리의 교사로 나서게 된다. 그러나 이 시련을 거치면서 ‘참교사’로 거듭났다고 고백하는 조합원들이 많았다. 이들은 전교조 사수 투쟁의 전위부대가 되었으며, 해직기간 한달 10여만 원의 후원금을 받고 사회 밑바닥 민중들과 함께 투쟁하면서 일상의 교직과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된다.

굴종의 삶을 떨치고 참교육 깃발을 휘날리다

결성대회 얼마 후 부부 교사 차봉숙(서대문중)과 주현신(구로중)은 전교조 역사에 길이 남을 노래를 만들었다. 차봉숙이 노랫말을 쓰고 주현신(현재 목사, 호주 거주)이 작곡한 노래 <참교육의 함성으로>는 89년 하반기 국민 애창곡이 되었다. 이 짧은 노랫말 속에 책 몇 권으로도 담아내기 어려울 당시 교사들의 봉기 배경과 지향점이 압축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굴종의 삶을 떨쳐/ 반교육의 벽 부수고/ 침묵의 교단을 딛고서 / 참교육 외치니 / 굴종의 삶을 떨쳐/ 기만의 산을 옮기고(반역의 어둠 사르고)/ 너와 나의 눈물 뜻 모아(이제 교육동지 굳세게)/ 진실을 외친다(단결 전진한다)/ 보이는가, 강물(함께 가세 이 길)/ 참교육 피땀 흐르는(아이들의 넋이 춤추는)/ 들리는가, 함성(함께 가세 이 길)/ 벽찬 가슴 솟구치는(사람 사는 통일 세상)/ 아! 우리의 깃발/ 교직원노조 세워/ 민족 민주 인간화 교육 만만세” (괄호 안의 가사는 2절)

2학기가 개학하자마자 해직교사들은 출근투쟁과 거리의 수업을 했다. 이는 해고의 부당성에 대한 항의의 표시이면서 쫓겨난 학교 현장과 거리를 좁히기 위한 전략이었다. 학생들은 교문 앞이나 길거리, 심지어 해직교사의 집에 찾아가 수업을 받기도 했다. 현직에 남은 조합원들 중에는 징계철회를 요구하는 서명을 조직하기도 하고 해직교사 후원회를 만들어 나갔다. 해직교사 후원회는 교사뿐만 아니라 지역에 따라서는 일반 시민과 민중들이 참여하기도 했다.

9월 24일 전교조는 전교조공대위와 참교육학부모회와 더불어 ‘전교조 탄압저지와 합법성 쟁취를 위한’ 제2차 국민대회를 서울 대전 천안 청주 원주 강릉 광주 목포 진주 울산 부산 대구 구미 제주 등 전국에서 동시다발로 개최하였다. 전국사무금융노련 소속 조합원들, 서노협, 전국노운협, 한국기사련, 산사연, 작가회의, 인의협, 학술단체협, 서총련 등의 전교조지지 열기는 각종 집회에서 확인되었다. 전국 21곳에서 4만 여 명이 참가한 이 대회 이후 전교조는 조직 사수기에서 조직 복원기로 들어감을 선포했다. 지역업종별 노동조합 전국회의는 제9차 회의 결의에 따라 ‘노동자학부모회’ 조직 ‘전교조 설명회 및 서명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했다. 전국적으로 2천 회가 넘게 조직된 설명회는 일반 노동

자들에게 교육에 대한 열등감을 씻어내고 교육문제를 사회구조적으로 인식하는 계기가 되어 전교조와 더욱 강한 연대를 이루게 해 주었다. 전농의 전신인 전국농민협회 소속 지역 농민회와의 연대도 갈수록 강화되었다.

‘구국의 강철대오’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은 참교육과 전교조의 정당성에 대한 대국민 선전전, 전교조 지지, 탄압 저지 연대 집회 조직, 모교 방문, 지지 농성, 신문 광고 게재, 모금운동 등 일상적 지원·연대활동을 전개했다.

기존의 고교 동문회가 전교조지지 청년을 중심으로 민주동문회로 재조직되는 활동도 돋보였다. 이와 같은 각계각층의 지지연대와 시군구까지 꾸려져 있는 전교조 공대위의 활동은 전교조 투쟁의 장기화를 전망하면서 교육을 매개로 한 범국민운동으로 자리 잡아 갔다. 명동성당 단식농성장에서 격려 공연을 했던 가수 정태춘은 전교조 활동 기금 마련을 위해 전국 16개 도시 순회공연을 하기도 했다.

10월 들어 전교조의 조직 복원에도 가속도가 붙었다. 발기인 수보다 더 많은 조합원을 확보한 지회가 생겼고, 대부분 70-80%의 복원율을 보였다. 삼천리 방방골골 ‘움직이는 선전홍보부대’로 나섰던 1500명 해직교사들의 치열한 선전·조직 사업의 결과였다. 해직교사들은 지부별로 조를 짜서 밤낮으로 뛰었다. 대도시에서는 <전교조신문>이나 지부 신문, 선전지 등을 담은 무거운 가방을 메고 교문 앞에서 아침 일찍 출근하는 선생님들에게 나누어 주었고, 도 단위 지부에서는 시골길을 걷거나 오토바이로 달려 학교를 방문하여 흩어진 조직을 추스르고 후원대를 늘려나갔다.

□ 조합원/후원회원 수의 변화

	시 기	조합원	후원회원	총 대중세
1989년	4 월	18,762	0	18,762
	5 월	17,143	0	17,143
	7 월	12,370	0	12,370
	9 월	3,030	0	3,030
	11 월	8,611	20,000	28,611
	12 월	9,307	22,747	32,154

* 자료: 한국사회연구소, 1989.12.20, 『노동조합조직연구』, 백산서당

이즈음 국내에서는 서울지방법원이 교원의 노동3권을 봉쇄하고 있는 사립학교법을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 제청을 했고, 노동조합법 개정을 국회에 청원했다. 국제적으로는 유네스코가 한국 정인식 문교부 장관을 부회장으로 뽑은 것을 항의했고, 워싱턴에서 9월 28일 열린 미국 교원연맹(AFT) 국제대표회의는 전교조 지지와 한국정부의 탄압을 비난하고 구속교사 석방과 해직교사 복직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11월 15일 윤영규 위원장은 옥중에서 ‘전세계 모든 교육노동자에게 호소한다’는 공개서한을 발표, 전교조 투쟁을 알리고 독일 GEW를 비롯한 전세계 교육노동자들의 전교조 합법성 쟁취 투쟁 지원을 호소했다.

이런 상황 속에서 10월 28일, 29일 전교조 관련 집회가 처음으로 정권의 방해받지 않고 열리게 된다. ‘참교육을 위한 국민 걷기 대회’가 바로 그것이다. 사무금융노련, 언론노련, 병원노련, 연구전문

기술노련, 대학직원노협, 전국대학강사협, 참교육학부모회 등 노동과 교육부문 단체들이 중심이 된 ‘걷기 대회’는 전국 18개 시·도 45개 지역에서 중·고생 1만 여 명을 비롯하여 4만이 넘는 시민과 교사들이 ‘한 명 두 명 전교조, 한 발 두 발 참교육’ 펼침 막을 앞세우고 참가했다. 특히 ‘참교육을 받고 싶어요’라고 쓴 펼침 막과 풍선을 든 학생들이 ‘참교육 실현하자’를 연호하여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켰다.

5월 28일 결성대회에서 하루도 쉼 없는 투쟁의 나날을 보내며 숨 가쁘게 달려온 전교조는 12월 10일 또 한 번의 성동격서 전술로 경찰의 감시를 완벽하게 따돌리고 제2차 임시대의원대회를 성사시켰다. 당국의 눈을 경북대로 돌려놓고 ‘배추(현직) 무우(해직) 연탄(내빈)’의 암호를 쓴 김장작전으로 인천 제일감리교회에서 치러낸 대의원대회에서 이만호 위원장 권한대행은 “우리 조합원 동지들은 공안 통치의 칼날 아래서 눈물겨운 투쟁으로 기어이 전교조를 사수하였다”고 선언하였다. 이 대회에서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시도부의 원직복직을 확인하고, 규약 규정개정안, 조합비 분담금 조정 등 안건을 말끔히 처리하고 전교조의 위대한 승리와 조직 재건을 대내외적으로 선언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에 따라 6월 17일 발족하여 전국 53개 지역에 조직을 갖추고 활동한 ‘전교조 공대위’도 12월 12일 6개월 동안의 활동을 정리하고 해소식을 가졌다. 공대위는 활동기간 소책자 6만부, 농민용 기획선전물 90만부, 스티커 10만장, 전단 4회 30만장, 포스터 5회, 대자보 만 5천 장, 소자보 6만 장, 서명용지 5만 장 등 엄청난 선전홍보물을 배포하며 전교조의 당위성을 알리고, 지지 지원을 호소하는 큰 투쟁을 전개했다.

이런 점에서 전체 민족민주 운동의 침체기에 참교육의 깃발을 세워 8개월간 치열한 전선을 이끈 전교조는 단순히 조합원 교사들만의 조직이 아니라 수많은 노동자 농민 청년 학생 일반시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이 배인 전체 민중의 조직임이 확인되었다.

제8절 전국전문기술노동조합연맹

87년 6월 항쟁과 민주노조운동의 부활 (전문노련)

6월 항쟁이 7~9월 노동자 대투쟁으로 이어졌지만 6월 항쟁의 현장에는 화이트칼라로 대표되는 사무직 노동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었다. 이는 자주, 민주, 통일투쟁으로 알려진 5.18광주민중항쟁의 현장에서 ‘노동3권을 보장하라!’고 외쳤던 조직되지 않은 현장 노동자들이 있었음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1987년 7~9월 노동자 대투쟁 이후 각각의 조건에서 폭발적인 노조결성이 이어졌다. 이는 가히 밀물처럼 밀려오는 노동자들의 행렬이었다. 업종, 지역, 대공장에서 노조가 결성되었다. 독재정권과 자본에 포섭되어 노동자 통제기구로 전락한 어용노조 대신 민주노조건설을 향한 노동자들의 투쟁은

계속되었다. 전문기술직노동자들도 자신의 직장에서 노조를 건설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들 노조가 모여 전문기술직 연맹의 한 축이었던 전국전문기술노동조합연맹(전문노련)을 건설하였다.

연구전문기술노동자들의 노조 결성과 활발한 활동

1989년 10월 연맹을 결성하기까지 2년여 동안 전문기술직 노조들은 개별 사업장에서 노조를 건설하고 협의회를 구성하면서 차근차근 연대해 나갔다. 초기 7~9월 노동자 대투쟁 이후 곧바로 건설된 무역협회와 산업연구원노조를 시작으로 연구기관과 전문기술기관에서 노조 결성이 이어졌다. 그러던 중 1988년 2월 6일 연구기관노조는 모임을 갖고 과기원노조의 투쟁사례를 토론하면서 연대의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이 논의는 구체적인 연대단위 구성으로 발전하였고 그 해 3월 12일 현대사회연구소노조(위원장 정관용) 강당에서 12개 노조(국토개발연구원 노조 외 11개) 150여명이 참석하여 '연구·전문기관 노동조합협의회(약칭 연전노협) 의장 박태주 산업연구원 노조위원장'를 결성하기에 이르렀다. 초기 연전노협은 과기원(KAIST)의 파업투쟁과 현대사회연구소(소장 허화평) 연구원에 대한 부당해고 철회투쟁을 중심으로 연대사업이 진행되었다.

연전노협은 4월 30일 제1차 정기대의원대회를 통해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상집위원회 구성 등 조직체계를 완비하였다. 그러나 상급단체 관련하여 어려움에 봉착했다. 상급단체를 명시하지 않고서는 단위사업장의 노조를 설립할 수 없는 소위 상급단체까지도 복수노조금지조항이라는 노동약법 때문이었다. 따라서 형식적으로 연전노협의 소속 노조들은 한국노총 산하 연합노련에 가입하여 노조설립을 마쳐야 했다. 그러나 연합노련은 인준증 발급을 회피하고 연전노협을 비난하였다. 이에 연전노협은 당시 같은 처지에 있었던 병원노협, 건설노련 소속 노조들과 함께 연합노련에 대한 항의투쟁을 전개하기도 했다.

6월 14일 연전노협은 다음 해 임금인상을 위해 '89년 정부출연기관 임금인상투쟁을 위한 임투공동대위'를 구성하여 공동투쟁을 준비했다. 아울러 정부의 노조활동규제방침에 공동으로 대응하였다. 그리고 조직 확대를 꾀해 7월 16일 기술직노조와의 통합으로 43개 노조로 구성된 '연구·전문기술노동조합협의회'를 결성하였다. 확대된 연전노협은 8월 5일 제1차 정기 위원장단 회의를 통해 활동방향을 설정하였다. 상집위원회 구성, 수련회 실시 계획, 회비책정 등을 통해 활동의 기초를 마련했다. 8월 27~28일 양일간 25개 노조 100여명의 간부가 참여하여 정신문화연구원 연수원에서 수련회를 개최하였다. 이후 흥릉연구단지내 연합풍물패를 구성하여 문화활동을 전개하였고 조합원에 대한 교육선전을 위해 편집위원회를 구성하여 9월 21일 연전노협신문을 창간했다. 또 그 시기 장기투쟁사업장이자 조합원을 전원 해고한 악덕사업주가 소장이었던 현대사회연구소노조의 파업투쟁을 집중적으로 전개하였다.

드디어 10월 15일 마포구 아현동에 연전노협 사무실을 마련하고 개소식을 가짐으로서 본격적인 활동을 전개하였다. 이후 소속노조의 투쟁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11월 15일 서울상공회의소 노조의 파업 돌입, 12월 8일 현대사회연구소 노조의 파업 돌입 100일 투쟁을 시작으로 12월 중에만 해도 인삼연초연구소, 정신문화원, KDI, 산업연구원, KAIST, 전자통신연구소, 여성개발원노조 등 파업으로 이어졌다. 1987년 제조업 노동자들의 7~9월 노동자대투쟁의 열기가 1년이 지난 뒤 연구전문기술노

동자들에게도 이어진 것이다. 당시 연전노협은 공동대책위 구성을 통해 연대집회, 철야농성, 지지방문, 대정부, 대사용자 항의방문 등 연대투쟁을 전개하였다. 이러한 연대투쟁의 성과로 대부분 단위사업장의 투쟁은 승리로 마감했다.

1988년의 투쟁의 성과를 바탕으로 1989년 2월 21일 연전노협 위원장단회의에서 ‘연맹준비위’를 발족하였다. 연맹준비위 발족으로 전문기술직노동자들의 연대의 폭은 넓어지기 시작했다. 안으로는 대우엔지니어링 노조의 민주노조 사수투쟁과 현대사회연구소복직투쟁을 중심으로 하면서 외부로는 전체 민주노조 진영과의 연대투쟁을 힘차게 벌려나갔다. 5월 메이데이 100주년 사수투쟁, 광주항쟁정신계승투쟁, 구속노동자석방 전국노동자결의대회 등 노동운동 초기의 활력이 살아 움직였다. 이 해는 전체적으로 노동조합 조직률이 20%대에 근접하고 각 지역이나 업종 또는 대공장 노동자들이 조직적 연대체를 고민하는 시기이기도 했다.

이러한 시기에 발맞춰 연전노협도 협의회를 연맹으로 전환하기로 하였다. 7월 1일 여성개발원 국제회의실에서 제1차 정기 전국대의원대회를 열고 제2기 집행부를 ‘연맹결성위원회’로 전환하였다. 이어 확대간부회의, 정기 위원장단회의를 개최하여 연맹결성위원회 구성 및 사업계획, 연맹결성기금을 확정하였다. 이후 11차례에 걸친 결성위원회 회의와 월례 위원장단회의를 통해 연맹결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진행하였다. 연맹 결성 직전 대중적인 결의를 다지기 위해 계룡산에서 ‘연맹결성 및 전진 등반대회’를 개최하였다. 드디어 1989년 10월 14일 예술의 전당에서 40여개 노조 140여명의 발기인이 모여 ‘전국전문기술노동조합연맹(전문노련)’(초대위원장 김문철 한국무역협회 전 노조위원장)을 창립하였다.

빠져리게 각성하여 전문기술노동자로서 사회적 역할과 역사적 책임을 깊이 자각

● 창립선언문 취지

노동자 대진군의 서막을 올렸던 지난 87년 7월 이래 이 땅의 1천만 노동형제의 도도한 발걸음은 남녘노소 지역 업종의 차이를 뛰어넘어 인간다운 삶의 쟁취를 향해 하나로 모아졌다. 해방된 뒤 반세기 동안 권력과 자본의 도구로만 기능하기를 강요당해왔던 이 땅의 노동형제들이 마침내 노동자도 인간임을 선언한 쾌거의 해로 87년을 역사에 기록한 것이다.

전문기술노동조합연맹의 모태가 된 연전노협은 이러한 노동자의 대진군이 가능하기까지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눈물과 피와 땀이 이 나라 강토를 적셔왔음을 심장에 새기면서 전문직 기술직 노동운동의 선봉으로 자리해 온 지난 2년 동안 내외의 기대에 성과적으로 부응해 온 바 있다. 전문직 기술직 노동자도 노동자임을 자각한 것을 시발로 근로조건 개선, 직장민주화쟁취, 노동자의 경영참여, 나아가 연구자율채취투쟁을 벌였던 것은 권력과 자본에게는 건디기 어려운 낭패감을 천만노동자에게는 자긍심을 갖게 한 뜻 깊은 활동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1989년 10월 오늘의 사회정치적 상황은 권력과 자본이 만들어낸 이른바 공안정국으로 요약되고 있고, 그 핵심은 민주노조 파괴와 분열기도로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우리는 저들의 탄압과 분열공작이 제 아무리 드세다 할지라도 우리가 쟁취해 낸 귀중한 결실을 효과적으로 보존하고, 지금보다도 더욱 크고 알찬 열매를 가꾸기 위해서는 협의회를 능가하는 강

력한 조직체가 절실히 요구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이는 노동자의 자주적 단결과 사회민주화를 위한 힘찬 진군에 제도적 걸림돌로 기능하는 기업별 노조의 틀을 극복하는 것이어야 하며, 그 실천적 성과가 오늘 전국전문기술노동조합연맹으로 모아진 것이다. 따라서 우리 전국전문기술 노동조합연맹은 87년 노동자대투쟁의 정신과 연전노협 1년 3개월 동안의 성과를 발전적으로 계승하여 작게는 전문직 기술직 노동자의 근로조건개선과 직장 내 민주화 실현, 나아가서는 이 땅의 사회민주화와 온 겨레의 열망인 통일조국건설을 향해 전진 또 전진할 것을 천만 노동형제 앞에 엄숙히 선언한다.

1989년 10월 14일

● 선 언

우리 전문기술 노동자는 과거 전문기술노동의 결과가 자본증식과 권력의 지배도구로 기능함으로써 전체 노동자와 국민의 복지증대와 국가발전으로 충분히 연결되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각성하여 전문기술노동자로서의 사회적 역할과 역사적 책임을 깊이 자각한다.

이에 전국의 전문기술노동자는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노동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향상을 도모하고 아울러 전문기술 노동의 결과가 전체 노동자와 국민 그리고 국가발전에 기여토록 하기 위하여 전국전문기술노동조합연맹을 결성한다.

우리는 전문가의 창조성과 혁신에의 의지를 모아 내일의 우리사회가 오늘보다 나은 것이 될 수 있게 하기 위해 노동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우리사회에 내재해 있는 구조적 모순을 극복하는 것이 산업사회의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는 공통의 인식아래 조국의 통일과 민주화를 열망하는 세력과 연대하여 조국의 평화적 통일에 앞장설 것을 선언한다.

우리는 자유와 평등의 가치를 존중하는 전 세계의 모든 노동자와의 유대를 통하여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세계평화를 위해 부단히 노력할 것을 천명하며,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구체적 행동강령을 채택한다.

1989년 10월 14일

● 강 령

- 우리는 전문기술 노동자들의 자주적 단결을 통하여 노동자의 기본권 신장과 조합원의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향상을 위해 투쟁한다.
- 우리는 전문기술 노동자로서 그 사회적 역할과 역사적 임무를 깊이 자각하고 노동의 자율성을 확보함으로써 우리들 노동의 생산물이 전체 노동자와 전 국민에 기여하도록 노력한다.
- 우리는 이 땅의 모든 노동자들과 굳게 단결하여 자본과 권력의 지배와 탄압에 맞서 투쟁하고, 노동조합의 정치참여를 통하여 민주사회건설과 노동해방의 선봉에 선다.
- 우리는 조국의 통일과 민주화를 열망하는 세 세력과 연대하여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통일조국에 앞장선다.
- 우리는 자유와 평등의 이념을 바탕으로 전 세계 노동자들과 국제적 유대를 강화함으로써 세계평

화에 기여한다.

● 연맹가: 더 높은 곳에서 하나 될 전문노련가

억눌린 채로 더욱 강하게 숨죽인 채로 더욱 굳세게
끝내 이어갈 노동의 역사로 건설할 미래를 위해
흔들린 채로 더욱 강하게 눈물인 채로 더욱 빛나게
천년 이어갈 투쟁의 역사로 건설할 참 세상 위해
마른 대지엔 함성 비되고 흘린 땀만큼 더 아름다움
이 땅 위에 노동자로 살아 살아 마침내 다다를 해방의 그날까지
더 높은 곳에서 하나 될 전문노련

전문노련은 ‘노동자의 자주적 단결과 사회민주화를 향한 힘찬 진군에 제도적 걸림돌로 기능하는 기업별노조의 틀을 극복하는 것이어야 하며, 그 실천적 성과가 오늘 전문노련 결성으로 (후략)’라는 창립선언문은 물론 ‘(전략) 이 땅의 모든 노동자들과 굳게 단결한다.’는 강령을 통해 민주노조운동의 원칙을 천명하였다. 전문노련은 출발과 함께 사회민주화와 민주노조 총 단결에 조직적 역량을 다해 복무하였다. 그러나 노태우 정권 아래 노동악법은 여전히 존재하였고 상급단체 복수노조 금지조항에 걸려 연맹은 합법성을 인정받지 못했다. 전문노련과 함께 병원노련, 건설노련 등은 합법성을 쟁취하기 위해 ‘업종연맹 합법성 쟁취 공동투쟁위원회’를 발족하고 투쟁을 전개했다.

한편 전문기술노동자들이 자주적으로 건설한 전문노련은 이에 굴하지 않고 사업을 전개하였다. 전문기술분과, 경제단체분과, 인문사회분과, 과학기술분과 등 4개 분과체제로 조직을 운영했다. 연맹은 무엇보다 대외연대와 국제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였는데 국제상업사무전문직연맹(FIET)에 가입하여 활동하였다. 1990년에 들어서면서 노태우정권의 공안탄압이 시작되었다.

제9절 전국건설노동조합연맹

1988년 전국건설노동조합협의회(건노협) 태동.

삼환기업노조, 사측 탄압에 맞서 87일 총파업

87년 노동자 대투쟁을 계기로 불기 시작한 민주노조 결성의 붐과 삼환기업노조 결성을 전후로 건설사에도 노동조합 결성의 훈풍이 일기 시작했다.

벽산건설, 고려개발, 국제종합, 대림산업건설, 대우건설, 벽산사무, 삼부토건, 삼환까무, 진로건설, 진흥기업, (주)한보, 한진건설, 현대건설노조 등이 87년 노동자 대투쟁 직후 생겨난 건설노조들이며, 이들을 중심으로 건설노조운동은 힘차게 시작됐다.

건설노조들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초기 연대활동을 위해 만든 전국건설노동조합협의회(이하 ‘건노

협)은 건설노조에 대한 탄압이 극심해지면서 이에 공동대처하는 공동성명서를 내게 되면서 그 첫발을 내딛게 되었다.

삼환기업노조 설립과 함께 사측은 부당노동행위와 노조탄압이라는 마각을 드러냈다.

사측은 발기인 53명의 명단을 파악, 이들이 소속된 부서장 및 과장급 이상의 관리자들을 동원하여 탈퇴를 강요하거나 회유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각 부서별로 한두 명씩 회사 밖으로 데리고 나가 탈퇴 강요와 노동조합 해산 설득을 계속했다. 또한 아직 가입하지 않은 직원들에 대해서는 노동조합원들과 함께 있는 자리를 고의적으로 피하도록 종용했고 노조에 대한 온갖 악선전과 흑색 루머로 노조가입을 방해했다. 노조 측의 강력한 대응으로 탄압공작이 실패로 돌아가자 사측은 이용식 부위원장을 방글라데시 준비요원(TASK FORCE: 해외건설본부가 가기 전에 예비작업을 하는 요원)으로 보복인사 조치했다. 다른 한편 회사 측은 사용자측 노사협의회 대표위원을 실세인 최용권 사장에서 날치기 대표이사인 조주목 부사장으로 교체해 버렸다. 이후에도 위원장 노조원 자격 시비, 항의 차 농성에 들어간 조합간부 5명 징계, 노조 공문 접수 거부, 단체교섭 기피 및 해태, 총파업 투표 방해 등 온갖 탄압 책동을 자행했다.

삼환기업노조 결성과 결성 이후 잇따른 노조탄압은 건설사에서의 노조결성과 조직 유지가 얼마나 어렵게 이루어지는지 단적으로 보여주기도 남음이 있다.

삼환기업노조는 민주노조 역사에 길이 남을 87일 총파업투쟁을 성공적으로 이끌면서 당시 횡행하고 있던 정권과 자본의 노동탄압에 일침을 가하는 쾌거를 이루었으며, 건설노동자들의 강고한 단결투쟁이 얼마나 큰 위력을 발휘하는지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현대건설 노조위원장 서정의 씨 납치사건

삼환기업노조가 출범 이후 계속되는 회사 측의 탄압에 맞서 싸우고 있을 때 현대건설에서는 노조위원장 서정의 씨 납치사건이 벌어져 커다란 사회문제가 됐다.

이에 (주)대우, 대림건설, 한보종합건설, 대림산업, 한보주택, 대림엔지니어링, (주)한양, 동아건설, 한일개발, 극동건설, 럭키엔지니어링, 극동건설, 삼환기업노조는 연명으로 “현대건설노조 설립 과정에서 저질러진 갖가지 협박과 회유, 납치극 등은 그 자체만으로도 이미 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한 단결권을 압살하는 반사회적, 비윤리적인 불법행위”라고 규정한 뒤 “현대 측과 노동부는 모든 진실을 온 국민들에게 솔직히 고백하고 사죄할 것과 이 사건에 연루된 당사자들을 한사람도 빠짐없이 구속 또는 인책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그동안 은폐되어 왔던 현대 경영진의 노조탄압이나 대재벌의 노조탄압에 발맞추어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접수한 서울시 당국, 사고처리 시 노동부가 취한 불분명한 태도 등 소위 국민의 수임자인 행정당국이 속칭 재벌들의 비위를 맞추거나 눈치를 보는 기회주의적 작태를 백일하에 폭로하고 일침을 가한 것이다.

대림산업 이란 캉간 현장 건설노동자들의 죽음

노동조합 결성을 방해하기 위해 저지른 현대건설 측의 과립치한 작태가 잊혀지기도 전인 7월 4일 발생한 대림산업의 이란 캉칸 현장에서의 많은 건설노동자들의 죽음은 전 국민을 경악에 빠뜨렸다.

특히 그동안 해외건설 붐으로 외화획득의 치부수단으로 은폐되어 왔던 건설노동자들의 해외현장에서의 죽음과 같은 노동의 실상이 여지없이 폭로되었다.

그러나 정부당국과 회사 측은 교전국에서 노동자들이 무참하게 죽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사건을 은폐, 축소하기에만 급급했다. 결국 힘없는 노동자들은 경제 고도성장이라는 미명 아래 먼 이역에서 처참하게 죽어간 것이다.

이러한 국내외 건설업계의 노조탄압에 직면하여 연대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었다. 현대건설노조의 문제는 현대건설 노조만의 문제가 아니다. 모든 건설업 노동자의 공통된 문제이며, 나아가서는 일천만 노동자 모두의 문제와 직결된다고 하는 자각에 눈뜬 것이다.

연대의 중요성 자각, ‘건노협’ 결성으로 이어져

건설노동자들의 이러한 자각은 그 뒤 전국건설노조협의회(이하 ‘건노협’) 결성으로 이어지게 된다.

건노협 결성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것은 87년 10월 건설노조 간부 간 4차례 순회모임을 가지면서 부터였다. 그 후 88년 8월 11일 대림건설노조 사무실에서 9개 노조 대표자가 모여 협의회 결성추진 위원회를 구성했다.

시공분야에 대림, 삼환, 한일, 설계분야에 대림엔지니어링, 삼우기술단, 중기분야에 대우, 현대 그리고 추진위원장은 한일건설의 김세영 노조위원장이 내정되었다.

그 후 8차례에 걸친 모임과 준비활동 끝에 드디어 12월 10일 22개 노동조합이 참가한 가운데 건설회관 2층에서 ‘전국건설노동조합협의회’를 결성하기에 이르렀다.

□ 건노협 결성 당시 건설노동조합 현황

조합명	위원장	조합명	위원장	조합명	위원장	조합명	위원장
경남기업	사태환	대림엔지니어링	반종수	삼우기술단	우장식	특수건설공업	문경섭
고려개발	유영복	대보건설	서병태	삼환까무	정완재	한국건설	정해택
고려산업개발	유규진	대우산업중기	안정호	삼환기업	배석범	한보종합건설	김현완
공간종합건축사	김제영	대한주택공사	김영도	세림개발	김중봉	한보주택	김규태
공영사	김진걸	대한지적공사	김귀남	영도건설	김영재	한양산업중기	김동식
국제종합건설	한무남	동아건설지부	박용재	우보엔지니어링	이광기	한일개발	김세영
극동건설	이중수	럭키엔지니어링	김용춘	정우개발	최성락	한국토지개발공사	고진석
대림건설	나상길	삼도건설	서정현	정우엔지니어링	조송근	한국해외개발공사	김한진
대림산업	방상희	삼부토건	나용환	진흥기업	유기택	한국도로공사	박창국
현대건설(주)	서정의	현대건설중기	강규열	현대산업개발	배상호		

● 전국건설노동조합협의회 창립취지문

우리 건설노동자들은 민주화 투쟁의 시대사적 흐름 속에서 노동자로서의 권익확보에 바탕을 둔 자율적, 민주적 노동조합운동의 지평을 확고히 하고자 연대결속의 필요성을 자각하고 승리의 깃발아래 부단한 전진을 위한 새 역사의 장을 열고자 한다.

이미 우리 건설노동자들은 산업화 사회의 필연적 과정을 노도와 같은 열기로서 체험하였고, 선진 조국창달의 마지막 관문이 곧 산업평화의 달성이라는 역사적 사실을 되새기면서 노동조합운동을 통한 세계 속의 민주한국을 정착시켜 나가는데 선봉이 되고자 뜻을 모아 분연히 발진하였다.

기실, 우리 건설노동자들은 건설보국의 내일을 위하여 지구촌 어느 구속이던 마다하지 않고 달려가 피땀 흘리며 산을 깎고, 바다를 메우는 투지의 노동대가로 국가경제 고도성장의 기틀이 마련되었음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근대적 노사관을 가진 기업인들의 경제적, 권력적 측면의 힘에 억눌려 가장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 인간적 피해를 수없이 당해왔던 것도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이제 굳은 신념과 뜨거운 동지애로서 우리의 권익을 최대한 쟁취해 나아가야 하며 각종 권위주의를 철저히 분쇄하여 우리의 일터를 민주적 현장으로 과감히 탈바꿈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는 건설노동자들의 건설보국의 정신을 계승하고 민주화 의지를 꽃피우는데 뜨거운 연대의식을 갖고 민주적 운영으로 앞장서 나가야 하는 책무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이와 같은 우리의 뜻에 대치되는 어떠한 탄압이나 회유책도 용서치 않을 것이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한 근로환경 보지를 비롯한 능력향상 및 건설품질 제고를 위하여 가열차게 전진해 나아갈 것이다.

● 전국건설노동조합협의회 강령

1. 우리는 민주노조간의 굳건한 연대와 우리의 단결된 힘으로 지난 날 정경유착을 통하여 우리 노동자들을 억압해 온 모든 관권과 자본의 구태의연한 태도를 단호히 배격한다.
1. 우리는 건설업 특유의 속성에서 비롯되는 제반 비민주적, 비인간적 요소를 과감히 제거하는 데 앞장선다.
1. 우리는 비록 미조직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건설현장의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시달리고 있는 전 노동자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인간다운 삶의 확보를 위하여 노력한다.
1. 우리는 창의와 협동을 바탕으로 부단히 연구 노력하며, 신공법 개발 등을 통한 건설품질을 향상 시킴으로써 건설산업 발전에 앞장선다.
1. 우리는 민주적이고 평등한 사회건설을 위해 노력하는 모든 양심세력과 적극적으로 협력하며 모든 불의와 억압에 대하여 이를 과감히 배척한다.

● 전국 건설업체 노동자 동지 여러분께 드리는 글

우리는 존엄한 하나의 인간으로서 역사발전의 주체이자 생산의 담당자이며, 아울러 민주와 평화의 애호자임에도 불구하고 돈을 ‘가진 자’, 권력을 ‘가진 자’에 의해 하나의 생산도구로 취급됨으로써 항상 정치적으로 억압받고 경제적으로는 착취당하며, 사회적으로는 멸시당하는 굴종과 모진 인고의 세

월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노동자들은 언제나 잠자고만 있는 민중은 아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자각된 힘으로 그 엄청난 억압의 사슬을 끊고 우리 근로자가 참된 역사의 주인임을 선언하고 진정한 인간화를 위하여 분연히 일어난 것입니다. 87년의 위대한 6월 민중항쟁과 7-8월의 노동자 대투쟁이 바로 그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대투쟁의 토대가 구축되기까지는 수많은 노동운동 선배들의 피와 땀 그리고 젊은 학도들의 눈물로 얼룩진 엄청난 희생과 과감한 투쟁이 있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진정 87년의 일련의 투쟁은 감동적인 것이었고, 우리사회의 민주화와 노동운동의 새로운 전기가 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완전한 승리의 그날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우리 앞에 너무나 많은 난관이 중첩되어 있습니다.

아직도 돈을 가진 자, 권력을 가진 자들은 지난 시대의 달콤한 유착관계의 향수를 저버리지 못하고 노동자들의 탄압에 온갖 방법을 더 동원하고 있고, 상황은 분명 변화되었는데도 그들의 본질은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직시해 보면 우리 노동자들이 더욱 단결하고 굳게 연대하여 줄기찬 투쟁을 계속해야 할 필요성은 새삼 절실해지는 것입니다.

사실 6·29 이전만 해도 우리 건설업체의 노동조합 조직률은 전무한 상태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월 항쟁이나 7-8월 대투쟁에 대한 조직적 기여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하기에 이것은 우리 노동운동사나 민주화 과정에 있어서 우리 건설업체 노동자들로서는 큰 부담임을 스스로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전국의 건설업체 노동 동지 여러분!

이제 우리 건설 노동 동지들도 지난날의 패배감을 떨치고 스스로의 힘으로 우리 모두의 권익신장을 통한 인간화의 실현을 위해 과감히 일어섰습니다.

그동안 많은 사업장에서 노동조합을 조직하였으며, 나아가 연대의 필요성을 절감하여 오늘의 건노협을 결성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한국 노동운동사에 있어 또 하나의 큰 획을 긋는 계기가 될 것이며, 그동안 우리를 억압해 온 모든 세력에 대해 일대 경종을 울리는 전환점이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단결”이란 어떤 운동에 있어서든 언제나 진리이겠습니까만 특히 노동운동 현장에서는 단결 그 자

체가 생명임을 명심해야겠습니다.

이제 우리 건노협은 오늘의 이 역사적 출발을 시작으로 하여 우리가 몸담고 있는 건설현장 도처에 독버섯처럼 만연한 모든 비민주적, 비인간적 요소들을 척결할 것입니다.

그리고 소위 노가다 회사에서는 그 정도는 어쩔 수 없다고 묵인되어 오던 제 모순을 과감히 타파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노동자가 진정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민주사회를 건설하고 나아가 이 나라 산업발전에 이바지하는 길로 매진할 것입니다.

전국의 건설업체 노동 동지 여러분!

우리 하나로 똘똘 뭉쳐 건노협의 무궁한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합시다.

1989년 12월 16일 낮 12시,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 강당

삼환기업, 대림건설, 현대건설 등 건설회사 27개 노조 대표 5백여 명은 이날 역사적인 건설노련 창립대회를 열고 전국건설노조협의회 의장이던 배석범 씨를 건설노련 초대위원장으로 선출했다.

건설노련은 이날 결성 취지문에서 “단위노조들 간의 협의체로는 위상 정립과 연대활동의 한계를 절실히 느껴 단위노조로서는 해결하기 어려운 건설노동자들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과 권익신장을 실현하고자 보다 강력한 구심체 역할을 할 연맹을 결성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 ‘사용자들의 각성을 촉구하면서’라는 성명서를 채택, “사용자들은 그동안 노동자들을 생산의 도구, 치부의 수단으로 삼은 나머지 극도의 인내와 굴종만을 강요했고, 왜곡된 분배구조 속에서 절대적 상대적 빈곤에 빠지게 했다”고 전제하고 “노동자들의 합법적인 조직체를 적대시하거나 불순세력 집단 인양 매도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정부에 보내는 메시지를 채택 “아직도 부당한 권력의 비호아래 갇은 부정부패를 자행하던 지난날의 향수를 버리지 못하고 타락한 자본가 천국을 되살리려는 기업주들이 도처에서 활개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하나뿐인 생명을 온갖 악조건 속에 맡긴 채 일 해온 노동자들에게 경기퇴조의 모든 책임이 있는 양 선전하고 공안정국을 만드는 등의 노조활동에 대한 위협을 중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전국건설노동조합협의회를 구성하여 활동을 해온 건설노조들이 협의체의 한계를 딛고 확고한 건설노조의 구심체 “전국건설노동조합연맹을 건설”하게 된 것이다.

건설노련 결성을 위해 많은 준비와 노력이 있었다. 1989년 10월 28-29일 강화도 화랑산업연수원에서 개최된 건노협 간부, 대의원 수련회(56명 참석)에서 전국건설노동조합연맹 결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건설노동자들의 공통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보다 건설업에 맞는 노동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형식적인 상급단체 - 건설업 노동조합이 법적으로 소속되어 있는 연합노련 등-에서 탈퇴하고 명실상부한 건설연맹을 결성하여야한다”는 합의가 도출됐다. .

이 논의 과정에서 “건설연맹을 결성한다”는 점에서는 이론이 없으나 건설 시기와 방법에 있어서는 2개의 대립된 의견이 있었다. 즉 법외조합일지라도 빠른 시일 내에 건설연맹을 건설하자는 다수의 의견과, 법외조합은 활동의 제약이 심하고 단위노조합의 처신 문제 등에도 어려움이 있는 만큼 시일이 늦어지더라도 기존 노동조합(한국노총 연합노련)으로부터 조직분리를 유도하여 법내 건설연맹을 건설하자는 소수 의견이 충돌했다.

이러한 조직적인 건설연맹 건설 작업과정을 통하여 마침내 1989년 12월 16일 대한건설회관 대회 의실에서 삼환기업노동조합을 비롯한 23개 건설노동조합이 참가한 가운데 창립대회를 개최하고, 초대 위원장에 배석범(삼환기업노조 위원장), 수석부위원장에 나상길(대림산업건설노조 위원장), 부위원장에 문차수(현대건설노조 위원장 직무대행), 강규열(현대중기산업노조 위원장), 사무처장에 정해택(한국건설노조 위원장), 회계감사에 김동식(한양노조 위원장), 조남경(대림산업노조 위원장) 씨를 선출했다.

건설노련 결성 배경

건설노동자들은 지난 반세기 동안 그 어느 업종보다도 열악한 근무조건과 사회환경 속에서 묵묵히 일해 왔다. 거역할 수 없는 역사의 흐름 속에서 건설노동자로서의 처지를 자각하고 권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각 사업장별로 노동조합을 결성, 투쟁의 깃발을 높이 들었다.

87년 이후 2년 동안 각 단위노조들이 기본권과 노동자로서의 정당한 몫을 찾는 투쟁을 전개했으나 단위노조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건설업 자체가 갖고 있는 원천적인 문제점 때문에 당초 의도한 만큼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건설업종은 공사수주로부터 노동이 시작되고 동종업체 간에 수주경쟁이 치열한 현실을 볼 때 단위노조 개별로는 목표한 임금인상이나 파격적인 근로조건 개선이 불가능하다. 더구나 각사 사용자들이 담합하여 임금이나 근로조건을 동결하게 되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이러한 단위노조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건설연맹을 결성하여 공동 대응할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게 되었다.

건설현장의 장시간 근로와 열악한 근로조건은 공사발주 및 수주조건이 장시간 근로에 기초한 공기산정과 낮은 노임단가 책정에 연유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건설관계법령 개정 및 건설시장 부조리 척결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단위노조의 투쟁만으로는 불가능하며 전 건설업노조가 연대하여 공동투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

건설업은 공사를 함에 있어 공사의 실질적인 권한을 발주자가 가지고 있다. 단위노조가 파업을 감행했을 경우 발주자는 시공업체를 바꿔 버리거나 공사를 중단해 버릴 수도 있다. 그러나 전 건설업이 연대체계를 가지고 상호협조하고 있다면 발주자의 횡포와 발주자를 빌미로 하는 사용자측의 꾀변을 사전에 봉쇄하고 노동자들이 원하는 목적을 쉽게 관철할 수 있다.

노동자의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노조활동 범위를 넓히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노동쟁의조정법 등 제반 노동관계법이 현실에 맞게 개정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각

단위노조의 연맹으로의 결속은 물론 연맹과 연맹이 총 연대하여 전체 노동계가 함께 투쟁해야 한다.

건설노동자들은 단위노조의 한계를 조금이나마 극복하고자 건설노동조합협의회를 결성하고 활동을 펼쳐왔지만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임의단체로서 각 단위노조의 문제에 직접 개입할 수 없었고, 전임자를 확보하지 못하고 재정도 빈약한 상태로써 홍수처럼 쏟아진 각 사업장의 사태에 대한 충분한 대책을 강구할 수 없었다. 또한 협의체 상태로서는 전 건설노조들을 결속하고 연대투쟁할 수 있는 응집력이 취약할 수밖에 없었다.

단위노조가 해결하지 못하는 건설업 특유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단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무시당하고 혹사당했던 지난날의 악몽에서 벗어나 당당하게 건설노동자의 권리를 주장하고 자주적으로 책임을 다함으로써 선진조국의 초석이 되며 새로운 건설노동의 역사를 창조하기 위해 전국건설노동조합연맹이 결성되었다.

● 건설노련 결성 취지(창립대회 자료집)

작금 우리나라는 각계각층에 누적된 불만요소가 동시다발적으로 분출되는 변혁기를 맞고 있다. 정치적으로는 더 이상의 독재를 단호히 거부하는 민주시민 의식이 고양되고 있으며, 경제적으로는 관권과 자본의 속물이기를 거부하는 주인의식이 붓물 터지듯 일어나 그동안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고 주면 주는 대로 받던 굴종의 삶에 머물러 있던 노동자들이 이제 이와 같은 종속관계에서 자유롭게 해방되고자 노동조합을 조직하고 연맹을 결성하여 산업별 조직체계로의 탈바꿈을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 건설노동자들은 단위노조들 간의 협의체로서는 우리의 위상정립과 연대활동의 한계를 절실히 느껴 단위노조로서는 해결하기 어려운 제반 문제점을 타파하고 건설노동자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과 권익신장을 실현시키고자 보다 강력한 구심체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전국건설노동조합연맹을 결성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 또한 우리는 국가 산업발전의 중추적인 업종인 건설업에 몸담고 있음을 긍지와 보람으로 느끼며, 우리 자신들과 전체 국민복지를 위해 더 이상 방관자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고 건설노동자들의 국민된 요구를 보다 조직적이고 대국적으로 사회에 접목시키기 위하여 건설노련을 결성하게 되었다.

민주사회 발전의 최대의 악은 방관과 체념이었음을 피부로 느낀 우리 건설노동자들은 건설노련의 깃발아래 굳게 뭉쳐 직장의 안정과 민주사회의 일원으로 희망찬 삶을 확보하기 위한 새 시대 건설의 삽질에 우리 모두 함께 참여할 것이다.

● 선 언

우리 건설노동자들은 건설보국의 역군으로서, 이 땅에 자유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노사평등의 산업민주주의 구현을 통한 복지사회 건설에 앞장서고자 전국건설노동조합연맹의 드높은 기치아래 뜨거운 동지애와 굳건한 단결력을 바탕으로 굳게 뭉쳤다.

우리는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운동을 전개함으로써 건설노동자들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권익을 신장시키고 건설기업인들의 전근대적이고 권위주의적인 노사관을 불식시켜 직장의 민주화와 안정

화를 도모하고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되는 새 시대를 창출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이제 전국의 건설노동자들은 연맹을 통한 굳건한 연대를 기반으로 건설업의 구조적 제반 문제점과 모순을 타파하고, 노사 공동체 의식을 근간으로 산업평화를 실현, 유지함으로써 이 나라 경제발전 및 민주주의 실현에 앞장 설 것을 엄숙히 선언한다.

● 강 령

1.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며 조국의 민주화와 평화적 통일을 실현하는데 앞장선다.
1. 우리는 건설노동자의 노동3권을 비롯한 노동기본권의 확보를 위해 매진한다.
1. 우리는 민주노동조합간의 굳건한 연대를 통해 노동자를 억압하는 모든 권력을 단호히 배격한다.
1. 우리는 건설업 특유의 속성에서 비롯되는 제반 비민주적, 비인간적 요소를 과감히 제거하여 직장의 안정과 민주화를 실현한다.
1. 우리는 노동자의 교육과 문화향상 및 복지증진을 강력히 추진한다.
1. 우리는 창의와 협동을 바탕으로 부단히 연구 노력하며, 신공법 개발 등을 통해 건설품질을 향상 시킴으로써 건설 산업발전에 앞장선다.
1. 우리는 민주 우방국의 노동자와 국제적 유대를 강화하여 세계평화에 공헌한다.

사용자들의 각성을 촉구하면서

우리는 오늘 뜨거운 동지애와 굳건한 단결을 바탕으로 전국 건설업체에 종사하고 있는 전체 노동자들의 결집의 표상이며, 구심점이 될 전국건설노동조합연맹 창립의 깃발을 높이 들면서 이 나라 역사발전의 주체이자 국가 경제발전의 원동력이 곧 노동자라는 자각 하에 우리는 노사관계를 결코 적대적인 관계로 인식하지 않음을 천명코자 한다.

이제 우리 건설노동자들은 그간의 모순된 구조적 병폐를 몸으로 겪어오며 스스로의 각성을 통해 새 역사 창조의 일익을 담당하고자 우리 스스로 우뚝 섰다. 사용자들은 지난 세월동안 우리 노동자들을 오직 생산의 도구 또는 치부의 수단으로 삼은 나머지 우리에게 극도의 인내와 굴종만을 강요하는 한편, 왜곡된 분배정의 하에서 절대적, 상대적 빈곤감에 우리를 전율케 하였을 뿐만 아니라 산업전선에서 희생된 노동자들에 대한 응분의 보상을 외면하는 등 비인간적이고 부도덕한 과오를 저질러왔다. 우리는 이제 사용자들에게 지난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새로운 노사관을 정립하여 새 역사 창조에 우리와 동참해 줄 것을 전체 건설노동자의 이름으로 요청하는 바이다.

이는 결코 과거에 집착하려 함이 아니고 역사적 과오에 대한 뼈저린 반성을 통해 앞날의 각성을 촉구하려는데 그 뜻이 있는 것이다. 이제부터라도 사용자들은 노동자들의 합법적 조직체를 적대시하거나 불순세력의 집단인양 매도하는 시대착오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야 하며, 권위주의적이고 전근대적인 노사관을 청산하는 한편 부도덕하고 부정한 권력과 유착하여 노동자들의 희생만을 강요하며 부의 축적을 쌓던 지난날의 향수를 과감히 떨쳐 버려야 한다.

또한 노사관계에 있어 가진 자들이 그들의 인격을 그토록 신성시 하듯이 노동자들의 삶 또한 존엄한 것이기에 노사관계는 결코 주종관계나 상하의 개념이 아닌 동반자의 대등한 개념이라는 것을 사용

자는 분명히 자각해야 하며 진정한 권위는 군림하거나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고 오로지 도덕적 정당성 위에서만이 형성된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흔히들 우리 경제가 선진국의 문턱에 들어섰다고 한다. 부분적으로는 긍정되는 부분도 있으나 지금까지의 전근대적 노사관계의 척도로 볼 때 향후 기업의 성패는 다름 아닌 건전한 노사관계의 정립 여부에 달렸다고 보아지며, 건전한 노사관계의 유지 발전의 전제는 노사자치, 노사자율, 노사자결임을 사용자들은 명심해야 한다.

“역사의 교훈을 망각한 자는 그 역사를 다시 체험하도록 벌 받는다”는 격언과 같이 우리의 사용자들은 87년 6월 민중항쟁과 7-8월 노동자 대투쟁에서 분수처럼 터져 나온 함성의 의미를 냉정히 그리고 겸허히 되새겨 보아야 할 것이다.

국내 많은 기업인들이 그리하겠지만 특히 건설업을 주 업종으로 한 기업인들이 축적한 부가 만에 하나 경영력의 뛰어난이나 합리성이 아닌 건설수요의 급격한 증가와 노동대가의 부당한 착취로 이루어졌다면 오늘날 건설노동자들의 자주적 단결은 너무나 당연한 귀결임을 깨달아야 한다. 어려운 시기에 그것도 맨 주먹으로 기업을 세워 이끌어온 창업자들의 공은 마땅히 인정되고 존중받아야 하지만 공정한 기업발전을 노동자가 아니면 그 누가 이룰 수 있겠는가? 기업이 특정인이나 극소수인의 전유물화 되어서는 안 되며 더구나 사용자들의 안하무인적인 독선의 놀이터로 전락하는 것은 더더욱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이제 전국의 건설 노동형제들은 1년 전에 설립되었던 ‘건설노동조합협의회’의 발전적 해체를 통해 창립된 연맹을 구심점으로 하나로 굳게 뭉쳐 이와 같은 반민주적, 비윤리적 시대역행에 대하여 과감히 맞서 나갈 것이다.

사용자들은 이 순간에도 국내의 건설현장 곳곳에 하나뿐인 귀한 생명을 천운에 맡긴 채 하루하루를 시름과 한탄 속에 살아가고 있는 많은 연약한 노동자들이 있다는 점을 똑똑히 기억하면서 하루빨리 이들의 근로환경과 처우가 개선되도록 노력함은 물론, 인류의 역사는 노동의 역사임을 재인식하고 진정한 노사공존 대열에 앞장설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정부에 보내는 메시지

건설업에 종사하는 우리 노동자들은 전국건설노동조합연맹 창립을 엄숙히 선언하면서 출범 3년째를 맞는 현 정부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오늘의 우리 사회는 과거의 모든 부조리를 깨끗이 청산하고 진정한 민주주의의 실현과 노동3권 확보를 통한 노동자들의 인간성 회복을 위한 변혁기의 진통을 겪고 있다.

그러나 전 노동자들의 열화와 같은 참세상의 욕구와 집념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사회 일각에는 반사회적 비리가 횡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부당한 권력의 비호아래 온갖 부정부패를 자행하던 지난 시절의 향수를 버리지 못하고 기회만 있으면 타락한 자본가 천국을 되살리려는 기업주들이 도처에서 활개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아무리 제6공화국 정부가 본질적으로 제5공화국 정부와 차이가 없다 하더라도 국민의 민주화 요구에 굴복한 6·29 선언으로 권력을 획득한 현 정부가 적어도 민주화의 첫걸음인 노동자의 인권향상과 생존권은 보장하리라고 우리는 기대했다. 그러나 이것은 정녕 꿈이었는가! 사용자의 반노동자적인 착취의 횡포는 전 정권과 조금도 다름이 없이 묵인되고 있는 반면 노동자의 정당한 요구나 노동활동은 끊임없이 탄압을 받고 있다. 심지어 현 정부는 비민주적이라고 비난받고 있는 공안정국을 급조하여 평화적 집회마저 원천봉쇄하고 정국불안을 내세워 비상사태라 여길 만큼 무장경관을 길거리에 배치하는 등 민주화 행진에 역행하고 있다.

특히 우리 건설노동자들은 지구촌 어디든 어떤 조건이든 마다하지 않고 정부와 기업주가 시키는 대로 하나뿐인 귀한 생명을 악조건에 맡긴 채 일하고 또 일해 왔지만 세계 건설경기의 퇴조에 따른 모든 책임이 마치 우리 노동자에게 있는 양 지금에 와서는 저임금과 대량감원으로 우리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우리로 하여금 직장의 불안정화에 따른 공포에 시달리게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부당한 처우는 기업주들의 안하무인적인 독선과 무책임하고 비인간적인 노사관계가 빚어낸 것이며, 거기에서 정부당국의 단편적 시책과 기업주 위주의 정책으로 말미암은 비민주적 행정의 소산물로 밖에 볼 수 없는 것이다.

과연 정부당국은 건설현장에 버려둔 수많은 열악한 노동조건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며, 고품질 요구에 따른 원가상승과 건설 기능인력의 절대 부족으로 인한 생산성 저하와 시공의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우려되는 바 크다.

이제 우리 건설노동자 일동은 건설노련을 구심점으로 노사관계의 건강한 증진, 기업인들의 잘못된 경영관 쇄신, 원가절감과 건설 품질향상을 위한 신공법개발 등 당면한 제 문제들을 지속적이고 실효성 있게 개선코자 어제의 협의회를 오늘의 연맹으로 발전시키게 된 것이다. 이러한 우리들의 뜻과 결의가 정부당국이나 세대의 변화를 아직도 인식하지 못하는 기업주에 의하여 방해받거나 방치될 때는 어떠한 투쟁도 불사할 각오임을 분명히 하면서, 이제 정부는 노사가 공존공영할 수 있는 정책을 입안하고 시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 창립대회 결의문

지난날의 굴종과 패배감에서 떨쳐 일어나 건설노동자의 권익과 인간성 회복을 위해 분연히 일어섰던 우리 건설노동자들은 뜨거운 마음을 한데 모아 전국건설노동조합연맹을 결성하게 되었다.

87년 노동자 대투쟁의 열기가 아직도 살아 숨 쉬는 오늘, 자본과 권력은 여전히 광범위한 유착을 통해 우리 노동자를 억압하고 있으며, 비민주적이고 반노동자적인 요소는 아직도 도처에서 횡행되고 있다.

우리는 단위노조의 한계를 극복하고 우리의 뜨거운 민주화 열기와 인간다운 삶에 대한 열망을 성취하기 위해 전국건설노동조합연맹의 드높은 깃발아래 굳게 뭉쳐 힘차게 전진할 것을 다짐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 우리의 결의

1. 우리는 전국건설노동조합연맹의 깃발아래 생사고락을 같이 하며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조직강화, 확대를 위해 총 매진한다.
1. 우리는 건설노동자들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과 권익신장을 위하여 끊임없이 협력하고 투쟁한다.
1. 우리는 자유로운 노동조합의 설립과 활동을 위하여 전 건설노동자들이 일치단결하여 노동악법 개정 및 노동3권 확보에 총력을 기울인다.
1. 우리는 노동현장의 권위주의적이고 비민주적이며 반노동자적인 제반 요소의 척결에 앞장선다.
1. 우리는 민주적인 복지사회 건설을 위해 일천만 노동자와 호흡을 같이 하며 적극 연대한다.

제10절 전국대학노동조합협의회

대학노동조합의 결성배경 -대학행정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쟁취하자

대학노동조합은

「교직원이 단순히 심부름꾼으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고 각 처·실장 개인에 의한 행정권의 남용을 막고 조직에 의한 조직운동을 이루기 위하여 교무위원회 같은 정책결정기구에 참여함으로써 행정권의 독립과 자주를 쟁취하고자 대학노동조합을 결성한다.」³⁴⁾

특히 사립대학의 경우

「인재 및 학문의 양성에 두기보다는 부의 축재수단으로 삼아 왔다. 또한 이 과정에 대학 외부의 세력들이 개입하여 대학의 자율성이 침해되었다. 학생의 등록금을 정상적인 대학교육 및 연구 활동의 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비용으로 보기보다는 일가의 수입으로 생각하였고 따라서 교육의 내실화보다는 부정편입학을 도모하는데 여념이 없었으며, 부정인사로 이러한 재산증식의 측면과 외부세력의 개입의 측면에서 조장되어온 면이 강했다. 대학의 노동조합은 이러한 사립대의 비리 및 인사부조리를 민주적이고 자주적이며 자율적인 대학운동을 통해 척결하고자 하는 목표를 그 한 면에 갖고 있다.」³⁵⁾

「또한 재단, 교수, 학생 등에 의하여 임금, 진급, 부서이동, 복지 및 후생 등의 모든 근로조건이 결정되어 매우 취약한 근로조건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있다.」³⁶⁾

87년의 6월 전국은 온통 민주화의 열기로 가득찼다. 학생과 시민들의 투쟁은 6.29 선언을 기점으로 소강상태에 접어든다. 이어서 전국을 뒤흔드는 역사적인 사건이 생겨난다. 이 사회를 진정 민주화 시킬 주역이 드디어 역사의 전면에서 나서게 된 것이다.

34) 이회동, 1992.12,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8쪽

35) 앞의 글, 28쪽

36) 앞의 글, 29쪽

한국경제는 과거 권위주의 정권의 성장위주 정책으로 비약적인 발전을 해왔다. 한강의 기적은 노동자들에 대한 저임금과 노동기본권의 박탈로 얻어낸 것이었고 그 결과 노동자들의 삶은 인간이하의 비참한 삶이었다. 그러나 1970년 전태일 열사의 분신투쟁과 70년대 후반의 원풍모방, YH사건으로 대표되는 민주노조 사수투쟁, 85년 구로동맹파업에 이르기까지 노동자들은 정권과 자본에 맞서 투쟁해 왔다. 그러한 투쟁의 역사의 일대전환을 긋는 투쟁이 바로 87년 노동자 대투쟁이다. 현대엔진노조 결성투쟁을 시작으로 울산, 마산, 창원 구로, 거제까지 전국적으로 노조결성투쟁이 이어졌으며, 운수, 광산, 사무전문직, 판매 서비스직까지 이어졌다.

6월 항쟁과 7,8월 노동자 대투쟁은 대학사회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그동안 ‘정권의 하수인’ 혹은 ‘재단의 앞잡이’라는 오명을 써고 있던 대학교직원들이 노동자 대투쟁의 한복판에서 노동조합을 결성하기 시작한 것이다.

교직원들의 노동조합 결성 배경은 87년의 사회민주화 흐름속의 화이트칼라로 분류되는 사무직 노동자의 노조결성 움직임에 상당부분 영향을 받고 있으며, 대학내적으로도 그 필요성이 존재하고 있었다.

한국의 사학은 전통적으로 대학을 국가와 인류평화에 기여할 인재 및 학문 양성에 두기보다는 부의 축적의 수단으로 삼아 왔으며 또한 이 과정에서 대학 외부세력(정권과 자본)들이 개입하여 대학의 자율성이 현저하게 침해되고 있었으며, 또한 대학내적으로도 교육의 내실화보다는 부정편입학 등의 입시비리, 부정인사 등으로 인해 학원민주라는 열망이 내재되어 있었다. 또한, 교수중심의 대학운영에 대한 교직원 사회의 피해의식과 교육의 일 주체로써 행정권의 독립과 전문화에 대한 자기 정체성의 요구가 사회민주화라는 거대한 물결 속에 서서히 발현되기 시작한 것이다.

87년 8월 21일 한신대 노동조합이 대학노동조합의 효시

대학 최초로 노동조합이 설립된 것은 1987년 8월 21일 경기도에 소재한 한신대학교이다. 한신대 교직원들의 노동조합 결성이 성공하자 대학교직원들의 노동조합 설립은 들불처럼 번져 갔다. 세종대(87.9.2), 청주대(87.9.7), 덕성여대(87. 9.19) 대전대(10.1) 서강대(10.13), 고려대(10.14), 한국외대(87.10.21), 경희대(10.30),목원대(11.7),성균관대(11.16), 한림대(87.11.18),서울여대(12.4)등 수도권과 지방 지방곳곳의 대학에서 노동조합의 깃발이 울려졌다. 이렇게 결성된 대학노동조합은 87년도에만 총 16 대학에 이른다. 88년도에 들어서서는 더욱 폭발력을 가지면서 67개 대학, 89년에는 22개 대학에서 노동조합이 설립된다. 이로서 불과 3년여 만에 200여개의 대학 중 105개 대학에서 노동조합이 결성된 것이다. 각지역별 연도별 노조 설립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지역별 연도별 대학노동조합 설립현황>

년도	서울	경기인천	대구경북	부산경남	호남제주	충청	강원	계
87년	11	1				3	1	16
88년	18	11	13	14	5	4	2	67
89년	3	3	1	2	8	5		22
계	32	15	14	16	13	12	3	105

대학 유형별로 살펴보면 종합대학이 55곳으로 가장 많고 단과대학(4년제)과 전문대학(2년

제)이 각각 27곳과 26곳으로 비슷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대학유형별, 년도별 노조 설립 현황>

구분	종합대학	단과대학	전문대학	계
1987년	13	3		16
1988년	39	11	17	67
1989년	3	10	9	22
계	55	24	26	105

대학노동조합 설립과정에 나타난 특징은 대학노동조합의 설립은 88년도에 가장 많이 이루어졌으며 89년도를 기점으로 감소세를 보여주고 있으며, 대체적으로 정치, 경제, 사회면에서 민감한 서울 등 대도시 지역에서 시작하여 지방으로 확산되는 양태를 보여주고 있으며, 종합대학에서 시작하여 단과대, 전문대학으로 확산되었다고 볼수 있다.

대학노동조합의 폭발적인 설립은 대학 내 교직원들의 억눌린 실정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대부분의 대학이 직원집단에 대해 교육의 일주체로 인정하지 않는 상황이었으며 그로인해 직원들은 대부분 원하지도 않는 대학당국의 방패막이 역할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부분은 <대학직원 노동조합에 관한 연구> (김종완, 연세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2년) 논문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 대학노동자들의 설문조사를 토대로 작성된 이 논문에서 교직원들의 노동조합의 가입동기를 묻는 질문에 직장 민주화를 위해서 61%, 임금인상을 목적으로 23%, 근로조건 개선 6%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노동조합이 해야 할 중요과제에 대해서도 대학민주화가 39%, 임금인상 17%, 경영참가 12% 조합원 고충처리가 10%로 나타나 이를 잘 말해주고 있다. 나아가 대학노동조합이 임금투쟁보다는 대학과 사회 민주화 운동에 적극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한 조합원이 71%나 차지했으며 반대한다는 의견이 17%로 나타났다.

한편, 년도별 쟁의 건수는 87년에 3개 대학, 88년에 5개 대학, 89년에 9개 대학, 90년에 7개 대학 91년에 6개 대학, 92년에 8개 대학이 파업투쟁을 전개했으며, 파업의 이슈는 초창기 불공정한 인사, 임금 문제 등이 중심이었지만 해를 거듭할수록 권위주의적 대학운영 및 비민주적 관료행정, 대학발전위원회 구성, 민주적 총장선출, 비인격적 대우 등 조합원들의 직접적인 불만과 더불어 대학민주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대학노동자들의 최초 전국조직 전대노협의 결성

초기 대학노동조합의 결성은 87년 우리나라 노동운동의 역사가 그러하듯 6월 항쟁 과정에서 상승한 시민의식과 초보적인 노동자의식에 기반하여 기본적인 노동자의 권익과 노동조합 활동 보장을 위한 투쟁으로 출발한다. 그러나 당시 시대상황에서 노동조합 활동은 사실상 대학 사회에서 소외받던 대학직원들의 자주적인 노동자 선언이자 대학민주화 투쟁의 시작이었다. 그러나, 대학노동조합 결성과정은 그리 순탄치만은 않았다. 노동조합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상황에서 노조결성을 거부하는 대학도 있었고, 결성된 노조를 무력화 시킬 목적으로 동문출신 직원들을 중심으로 직원협의회를 결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직적으로 방해하는 사례가 곳곳에서 나타났다. 그 외에도 직원의 조합 탈퇴압력 가입 만류 등 소극적인 방법부터 사무실 및 편의제공 거부, 조합 핵심 간부의 인사상 불이익, 한개 직종 전원의 가입거부 등도 있었다.

이와 같은 사용자들의 탄압이 거세게 나타나자 자연스럽게 노동조합 설립에 관한 기초적인 지식 경험 등이 결여되어 효과적으로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상위조직의 결성이 필요하였다. 또한 전국단위의 조직결성을 통해 불안감을 해소하고 자신감을 불어넣을 필요가 있었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면에서 미약했던 초기의 투쟁력을 보완하기 위하여 분산된 개별 단위 노동조합의 힘을 결집할 필요가 있었다. 이러한 필요에 의해 구성된 것이 1988년 2월 1일 발족한 『전국대학노동조합협의회』(이하 전대노협, 초대위원장 김선행, 세종대)이다. 전대노협은 세종대, 청주대등 초기 설립된 26개의 대학노조가 참가한 가운데 결성되어 이미 불붙기 시작한 대학노조 결성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다.

전대노협의 활동 -직장민주화와 사회 민주화 양점을 들고서

노동조합에 대한 일천한 경험을 보완하고 노동조합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설치된 전대노협은 모든 대학노동조합을 회원으로 하면서 광역시도 단위를 지부체계로 하는 형태로 운영되었다.

89년 7월7일 채택된 제 1차 규약을 보면 전국조직 구성의 목적이 잘 나타나 있다. 총칙 2조를 보면 “본 협의회는 조합 상호간의 협조로 전국대학의 노동조합 결성 및 원활한 운영을 통하여 교직원의 위상을 정립하고 대학의 진정한 자율성과 독립성을 수호하여 대학발전에 기여하며, 나아가 경제적 민주화를 위한 노동운동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여 조국의 민주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적고 있다. 즉, 전대노협은 교직원의 위상제고를 포함한 권익의 확보 및 직장 민주화를 통한 사회민주화라는 양대 목적을 위해 창립되었다고 볼수 있다. 전국조직 구성의 힘은 상당한 파급력을 가졌다.

창립당시에까지만 26개에 불과했던 대학노동조합은 창립이후 폭발적으로 노동조합 설립이 이어져 88년도에만 약 67개가 신설되었다. 이는 전대노협이 대학노조 결성지원과 이미 결성된 개별 단위 노동조합을 결합시킬 수 있는 틀을 제공하고 있음을 잘 보여주는 예이다. 전대노협은 사업체계를 정비하고 각 대학노조간의 자료 및 정보의 정리, 교환, 전달에 노력하였다. 또한 각 대학의 임금실태 및 단체협약을 취합해 모범안을 작성 배포해 핵심적인 대학노조 활동의 하나인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과 관련된 제반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 또한 조합간부들을 대상으로 간부연수 교육을 실시해 노조활동의 대한 이해를 높여 내기도 했다.

전대노협은 각 대학의 노동조합 건설을 적극 지원 유도하였을 뿐 아니라 홍익대, 국민대, 성심여대, 전주 우석대 등지에서 파업을 지원 또는 지도하고 대학노조에 대한 대외적인 탄압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하였다. 특히, 한림대학 노조탄압에 맞서 89년 3.10-11일 양일간 전국 34개 대학 약 400여명의 조합원이 참여한 가운데 한림대 노조탄압 규탄 결의대회를 진행해 대학노동자들의 공동대응을 실천하기도 했다.

전대노협은 대학의 자율성과 행정의 독립성 문제를 전면에 부각시키고, 이러한 맥락에서 직원의 총장선출 참여의 길을 터놓음으로서 직원의 위상을 제고시키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다고 볼 수 있다(예: 세종대, 조선대, 중앙대등). 이와 관련하여 총장선출에 관한 규정을 각대학에 발송하고 총장선출에 관한 특강을 숙명여대에서 실시하기도 하였다.

전대노협은 대학 자율성 수호차원에서 문교부 관계자 망언 규탄 및 단체협상 체결을 위한 쟁기대회(88.3.12) 문교부의 사립대학 특별감사 반대투쟁(89.9.11), 그리고 군사교관요원 대학전입 반대투쟁(89.11)투쟁을 전개해 내면서 정부의 앞잡이라는 오명을 벗어던지는 활동도

전개하기도 했다. 또한 전교조 합법화 투쟁, 해직교수 복직투쟁 등을 진행해 내면서 교육 노동자들 간의 연대투쟁에도 힘찬 발걸음을 내딛기도 했다.

이러한 활동을 중심으로 89년 12월 전대노협 대의원대회에 '대학노동자의 강고한 전국적 단결과 운동의 도약을 위하여 연맹결성준비를 제안 한다'는 건의서가 서울지역 13개 노동조합 명의로 발표되면서 전대노협은 협의체가 아닌 연맹체제로서의 대학노조운동의 발전전망을 전망을 밝히기도 했다.

그밖에도 각 업종별 노동조합들은 단위기업 차원의 노동조합활동을 한 단계 높은 수준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연대의 틀을 형성하고 동일업종 노동조합간의 일상적 교류와 연대투쟁을 조직하였는데, 그 결과 '외기노협', '민출노협', '유통노협', '시설관리노협' 등 이 동일업종 노동자들을 대표하는 상위조직으로서 활동하고 있었다.

제11절 업종회의까지 사무직노조의 연대활동 개괄

동지를 찾아가는 신설 노조들

6월 항쟁과 7,8월 노동자 대투쟁에 힘입어 노동조합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6월 항쟁 열기의 영향인지 사무직 노동조합의 결성이 두드러졌다. 87년 6월 이후 12월까지 서울시내에서 결성된 257개의 노동조합 중 87.7%가 사무금융기관, 병원, 언론 등 비제조업 분야의 사무직 노동조합이라고 하였다. 사무직 노동조합의 비약적 증가였다. 금융노련 소속의 제2금융권을 제외하고는 언론, 병원, 연구기관, 대학, 건설 등 기존에는 노동조합이 없던 새로운 산업이나 업종이었다.

신설노조들은 우선은 입장이 비슷한 업종별로 모여서 임금이나 근로조건 등 정보를 교류하고 모임을 가졌으나 한편으로는 투쟁에서 연대가 용이하도록 가까운 지역별로도 연대해 갔다. 업종별 연대와 지역별 연대의 경로를 동시에 밟은 것이다.

서울지역노동조합협의회가 1988년 5월 29일 조직되었다. 서노협에는 제조업 노동조합이 중심이었지만 언론사 노동조합, 연구전문기관노동조합, 병원노협의 의장인 양건모나 한양대 병원의 차수련, 사무금융노련의 임원인 교육보험 이상학, 대한재보험의 박용화 등도 가입해 활동하였다.

사무직 노동조합들은 환경이나 처지가 비슷한 업종별로 결속하고 연대해 나아가는 발전경로를 택한다. 업종별 단결을 주로 하고 지역별 연대를 중으로 채택한 것이다.

서노협이 결성되기 전년도인 1987년 11월27일 이미 제2금융권 노동조합의 상급단체인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이 출범하였고 88년 8월13일에는 신고필증을 교부받아 최초의 노총소속이 아닌 합법연맹이 되었다. 6월 항쟁에 참여한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다른 업종보다 일찍 상급단체 결성에 성공한 것이다. 단체교섭권 위임은 법적으로 합법연맹에게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 합법성을 표시하는 신고필증은 연맹의 활동에 대단히 중요하였다.

1987년 12월 12일에 기존의 연합노련에 전국병원노동조합협의회가 결성되었고 88년 12월 17일에는 전국병원노동조합연맹으로 발전하였다. 당시에는 노동조합 결성신고를 필하자면 상급단체의 인준증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한국노총의 16개 산별연맹이 아니면 인준증을 발급할 수 없었다. 소위 복수노조금지, 조직중복대상 금지조항에 따라 대부분의

사무직은 산업이나 업종으로 분류되지 않은 채 한국노총의 연합노련에 포함되어 있었다.

1988년 2월1일 전국대학노조협의회가 출발하였다.

1988년 3월 3일 노총소속의 전국보험노동조합연맹이 결성되었다.

1988년 3월 12일 연구전문기관노동조합협의회가 결성되어 1989년 10월 14일 전국전문기술노동조합연맹으로 확대 발전해 간다.

1988년 4월 6일 전국언론사노동조합협의회가 결성되어 동년 11월 26일에는 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으로 출범하였다.

1988년 12월 10일 22개 노조가 참여한 전국건설노동조합협의회가 조직되어 89년 12월 16일 전국건설노동조합연맹으로 확대 되었다.

1989년 5월 28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국민의 여망 속에 단일노동조합으로 출범하였다. 사무직 노동조합 중 1988년 말까지는 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언론노동조합연맹, 병원노동조합연맹이 결성되었다.

투쟁이 있는 곳에 연대가 있다.

투쟁을 하는 사업장에 가장 필요한 것은 내부적으로 조합원의 단결이지만 외부적으로는 투쟁의 정당성을 알리고 사회적 여론을 등에 업는 일이다. 많은 사람들의 지지가 절실한 것이다. 연대의 격려와 지지방문, 작은 성금이라도 투쟁 사업장의 사기를 돋우는 데는 큰 도움이 된다.

상급단체인 연맹의 활동이야 대부분이 연대활동이지만 사무금융노련의 주요한 몇가지 연대 활동을 살펴본다.

방송사 역사상 첫 파업인 언론노동조합협의회 소속 문화방송 파업에 대하여 1988년 8월 27일 '문화방송 노동조합의 방송민주화를 위한 파업투쟁을 지지하며'³⁷⁾라는 성명을 발표하고 공정보도와 방송민주화를 위해 투쟁하는 문화방송 노조의 투쟁에 동참할 것을 밝혔다

우리 사무금융노련은 방송민주화가 사회민주화를 위한, 나아가 진정한 민주화를 이룩하기 위한 지름길임을 인식하고 문화방송 노동조합의 공정보도와 직장민주화 사회민주화를 위한 노동조합의 파업투쟁을 적극 지지한다.

과거 언론이 권력의 시녀로 전락하여 공정한 보도나 국민의 알 권리를 무시하고 호도하여 특정이익에 봉사함으로써 사회의 비민주화가 가속되고 조장되어 왔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 공정한 보도는 보도국장 등의 직선제와 이를 통한 문화방송 전체직원의 건전한 양심과 긍지의 소산임을 확인하고 문화방송 노동조합의 방송민주화를 위한 파업투쟁은 우리 전체 노동조합과 국민을 위한 진정한 민주화의 길임을 공동 인식하여 우리 사무금융노련은 문화방송 노동조합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이에 동참할 것을 천명한다.

1988년 9월 22일에는 연진노협 소속인 현대사회연구소(소장 허화평) 노조의 연구자율쟁취 투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성명을 발표했다.³⁸⁾

37) 별첨각주: 문화방송 노동조합의 방송민주화를 위한 파업투쟁을 지지하며

38) 별첨각주: 현대사회연구소 노동조합의 투쟁을 적극 지지하며

우리 사무금융노련은 부당하고 철회와 노동조합 사수, 연구자율의 수호를 위해 굳세게 투쟁하고 있는 현대사회연구소 노동조합 조합원들에게 전폭적인 지지를 보낸다.…… 현대사회연구소는 주지하듯이 81년 사회정화위원회의 부설 연구기관으로 출발함으로써, 외형상의 독립된 형태와는 달리 독재정권과 긴밀한 관계를 맺어왔으며, 사회정화위원회가 주도하여 연구소의 운영과 연구결과의 엄격한 통제를 통해 연구의 자율성과 연구결과의 공개를 철저히 막아 독재정권의 이데올로기 생산 공장으로서 기능할 것을 강요하여 왔다.

…… 그러나 최근 현대사회연구소는 노동조합의 핵심간부이고 그동안 연구자율수호위원회의 대표로서 활동한 이석희, 김만홍 연구원에 대해, 단지 시말서를 늦게 제출했다는 이유만으로 내부 징계절차를 무시하면서까지 전격 파면해버렸다.…… 그리고 최근 연구소 측은 연구원의 연구계획서를 목살하고 독단적으로 “좌경 지하 출판물의 실태와 개선책 연구” “노동운동의 좌경성향에 관한 연구” 등을 문공부 용역 과제로 비밀리에 제출하였고, 연구보고서는 반드시 인쇄제작 전에 소장의 사전검열을 받도록 했으며, 언론과 야당에는 연구보고서를 일체 배포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연구의 자율성과 민주적 운영을 전면 부정했다. 이는 국민의 도도한 민주화 요구와 정당한 노동운동을 좌경, 용공으로 매도하려는 의도이며, 최근 사회에서 물의를 빚고 있는 국우 폭력세력의 움직임과 무관하지 않은 심히 우려되는 현상이다. 두 연구원에 대한 파면시기 또한 올림픽 평화법의 발효시기와 때맞추어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올림픽을 불모로 삼아 노조파괴를 계획적으로 획책했다는 점에서 더욱 경악을 금치 못하게 한다.……

이에 우리 사무금융노련은 노동조합 사수와 연구자율수호로 명실상부한 공익 연구기관으로 거듭 태어나 사회민주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현대사회연구소 노동조합의 용기 있는 선도적 투쟁에 다시 한 번 전폭적 지지를 보내는 바이며 다음과 같이 촉구하는 바이다.

1. 두 연구원에 대한 부당해고를 즉각 철회하라!
2. 연구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연구결과를 전면 공개하여 사회에 환원하라!
3. 현대사회연구소 소장은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
4. 정부와 사용자는 올림픽 평화법을 악용하는 일체의 노조탄압 행위를 중단하라!

1989. 3. 17 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 전국병원노동조합연맹,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은 공동으로 개정 노동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불가함을 성명³⁹⁾으로 밝히고 있다.

87년 11월 28일 공포된 노동법 개정이후,…… 이번 국회에서 통과한 개정 노동법은 노동현장의 수많은 투쟁과 희생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그 동안 자본과 공권력이 악용하여 왔던 노동법의 독소조항을 상당부분 폐기 또는 보완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개정 노동법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위협에 부닥쳐 있는 사실을 우리는 중대시 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정부 각 부서에서 국민의 공복으로서 묵묵히 봉사해 온 공무원들의 단체행동 가능성을 이유로 하여 거부권을 행사하려 한다면, 민주화를 공약으로 출범한 6공화국이 행정일선에서 헌신하는 공무원들마저도 믿지 못 한다는 말인가?

…… 우리 노동조합 연맹은 2천여만 노동 가족의 안정이 사회와 나라안정의 초석임을 확신하며, 개정노동법에 대한 거부권행사 저지 투쟁을 전체 노동자와 전 민주세력과 더불어 전개해 나아갈 것을 엄숙히 밝혀둔다.

39) 별첨각주: 87년 11월 28일 개정노동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행사에 대한 공동성명

1989년 3월 31일에는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전국병원노동조합연맹, 전국교사협의회, 전국건설노동조합협의회, 연구전문기술노동조합협의회, 민주출판언론노동조합협의회, 전국시설관리노동조합협의회 명의의 공동성명을 통해 현대중공업에서의 노조탄압을 규탄하고 현대중공업노조의 의로운 투쟁에 지지를 보냈다.⁴⁰⁾

작년 12월 12일부터 전면파업에 돌입한 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의 109일간에 걸친 처절한 투쟁이 마침내 노태우 정권의 공권력에 의해 동원된 1만여 명의 경찰에 의해 강제해산 당했다.

오늘날 한국 최대 재벌의 하나인 현대그룹은 정경유착과 노동자 탄압을 통해 …… 88년의 현대건설 노조위원장 납치 사건, 올해 1월 8일의 집단대피 난동, 2월 21일의 식칼테러 사건, 3월 3일 차량충돌과 위원장 납치기도 사건이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번에도 조합원 절대다수의 뜻에 따라 정당하게 선출된 민주노조 위원장을 절대 인정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55명을 무더기 집단 해고하고 파업기간 중 임금지급을 하지 않아 노동자들의 생계를 파산지경으로 몰아넣었다.

현 정권은 불법 무도한 악덕 재벌의 요청에 따라 노동자를 구속하고 스스로가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하라고 노동자에게 시켜 놓고 이제 와서는 이를 부인하였다. 더구나 이도 모자라 현대 재벌이 요구하는 대로 공권력을 투입해 농성노동자를 강제해산하고 회사 측을 위해 경비까지 서주겠다는 입장을 밝혀 노동자의 세금으로 현대 재벌을 비호하는 스스로의 모습을 백일하에 드러내었다.

…… 이에 악덕재벌 현대와 현 정권의 현대중공업 노동조합 전면파괴 공작에 대해 우리 자주적 산별노련 및 업종별 노동조합협의회는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히며 현대중공업 민주노동조합의 정의로운 투쟁을 적극 지지하는 바이다.

우리의 입장

1. 불법적인 폭력진압 책임자 이한동 내무부장관과 조종석 치안부장관은 즉각 퇴진하라.
2. 현 정권은 구속 노동자 석방하고 현대중공업 민주노조를 인정하라.
3. 현대 재벌은 노조탄압을 공개사과하고 해고 노동자는 즉각 원직 복직시켜라.
4. 모든 민주세력은 현대중공업 노동조합 지원 투쟁에 나서자.

업종 연맹들은 결성되는 과정부터 서로 정보도 교환하고 지원도 해 오고 있었다. 대표자끼리 사업내용도 설명해주고 지원 요청도 하고 있었다. 전교조 탄압국면을 맞이하여 전교조가 탄압을 이겨낼 수 있도록 전교조 지원에 업종연맹 및 협의회가 발 벗고 나서자고 의견이 모아졌다. 대외적으로 과시하기 위해서라도 강력한 지원과 함께 방어진선을 넓게 쳐 줄 필요가 있었다. 10월 28일 남산에서 ‘참교육을 위한 국민 걷기 대회’가 개최되었다. 사무금융노련, 언론노련, 병원노련, 보험노련, 연구전문기술노련, 전국대학직원노동조합협의회, 전국대학강사협의회 등 노동단체와 여러 시민단체가 참가하여 성공리에 마무리하였다. 이 대회를 기점으로 각 업종별협의회와 업종연맹은 이전보다 잦은 모임을 갖고 긴밀한 교류와 연대방안을 모색해 간다. 1500여명의 해직교사를 보유한 전교조는 어느 연맹 보다 상근 역량이

40) 별첨각주: 현대중공업노동조합 탄압에 대한 공동성명서

풍부하였으므로 업종별 연맹 모임이 업종회의로 발전해 가는 과정에 많은 기여를 한다.

민주노조운동 진영은 사무직노조들이 중심인 업종모임과 중소기업이 중심인 지역별노조협의회 전국 조직 건설 추진위 쪽으로 힘을 모아가고 있었다.

후일의 일이지만 권영길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렇게 술회하고 있다. “민주노총건설의 핵심축이 전노협과 업종회의였습니다. 물론 대기업연대회의나 현총련 등 여러 세력을 빼 놓을 수야 없지요. 그러나 중소기업 중심의 전노협과 사무직 중심의 업종회의가 결합해 모범적 연대를 이루고 총연합단체를 건설한 경우는 세계 노동운동사에서도 흔치 않은 모범적 사례입니다. 바로 그 출발점이 남산에서 열린 참교육을 위한 국민 걷기대회라고 기억 됩니다”.

89년 12월 28일에는 노태우 대통령에게 보내는 공개질의서를 채택하고 13개 업종 연맹과 협의회가 시국에 관한 성명을 발표하였다.

어렵고 힘들었던 시절이 연대를 불렀다.

간호사로 근무하다가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병원노련 초대위원장을 역임한 양건모는 이렇게 이야기 하고 있다.

‘처음에 노조를 만들었을 때 노조를 인정받는 것부터 어려웠어요. 병원의 인식수준이 노조가 있으면 병원이 망한다고들 했으니깐요. 그러니 노동조합 활동이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노총의 연합노련이 상급단체 이었는데 거기에 일하는 사람들 중에 병원의 특수성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병원 내부에도 직종이 다양하잖아요. 그러니 상담도 못하고 연합노련이 상급단체 구실을 못할 수 밖에 없었지요. 그래서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선 병원 노동조합 끼리 함께하자. 병원노조 끼리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고 하여서 병원 노조들이 함께 모이게 되었지요.

그 해 12월에는 병원노조협의회가 건설 되었습니다. 나이도 26살 밖에 안되는 제가 의장을 맡았어요. 협의회에선 의무금을 100원 받았는데 이 자금으로는 회원조합 통제와 지원이 불가능했습니다. 고대, 한양대, 남훈병원등 계속되는 노조 사수 투쟁 사업장 지원해야 하지요, 한편으로는 조합원과 노조운영이나 노사협상방법 등에 관한 교육도 하고 지원도 해야 하는데 너무 어렵고 힘들었어요. 협의회로는 약하다, 정상적 상급단체인 연맹을 만들자, 그래서 1년 만에 병원노동조합연맹을 결성하게 되었습니다.

연맹위원장이 되고 보니 또 다른 어려운 문제가 생겼습니다. 연맹기능에 이상이 생겼습니다. 연합노련과 조직이 중복된다는 복수노조 문제로 신고필증을 교부하지 아니 하였어요. 합법성을 인정받지 못했어요. 법외 노조의 취약점은 단체교섭권 위임이 불가능하다는 점이지요. .병원노련 위원장인 내가 산하 조합문제를 당연히 해결해야하는데 나를 두고 제 3자라고 개입하지 말라는 불상사가 벌어졌습니다. 병원노련의 합법성을 쟁취하기 위해 안 해 본 일이 없습니다. 노총 항의 방문이나 노동부 집회, 국회 설득, 소송제기 등 안 해 본 일이 없어요. 전문노련이나, 건설노련, 대학노련등도 함께 연대해서 싸웠지요.

88년 11월에 ‘전태일 열사 정신 계승, 노동약법 개정 전국노동자대회’를 준비하면서 제조업, 사무직 대표자들의 모임이 시작되었어요. 제조업은 지역별 협의회에 중점을 두었어요. 그래서 전국조직인 전노협은 제조업이 중심이 되잖아요. 반면에 사무직은 업종별로 전국조직을 건설해 갔었어요.

현대중공업 투쟁 같은 경우는 제조업, 사무직이 연대해서 투쟁지원을 하는 전선이 형성되기도 했지요.

89년에 제조업과 사무직이 연대하여 전국조직을 건설하자는 논의가 있었는데 참여를 유보했지요. 필요성은 인정하나 조합원들의 입장이나 의식의 차이, 노동자 의식도 미흡한 데 시기상조라고 했지요. 상급단체인 병원노련도 아직 불법인 데, 그 위의 조직은 더 어려울 것으로 보였지요. 그 때 어떤 제조업체 간부가 대중추수주의자니, 개량주의자니 하면서 몰아 부치더라고요. 그래도 웃고 말았지요. 제조업과 사무직은 투쟁 시 현실적 차이가 있잖아요. 제조업은 현장 동원력이 뛰어났어요. 그래서 제조업 쪽에서는 왜 사무직이 결의하고도 안 움직이느냐고 항의를 하지요. 반면에 사무직 노조의 투쟁에는 한계가 있었어요. 사전에 의견조율도 충분히 해야 했고요. 병원에서 환자가 아파 죽어 간다는 데 두고 나올 수가 있나요? 직업의식상 안되는 일이지요. 교사가 수업중인 학생을 두고 나올 수도 없고요. 은행원도 마찬가지로 갑자기 나올 수가 없잖아요. 사무직이 현장 동원력이 떨어지는 반면에 홍보에는 유리하다. 병원에 벽보를 붙이면 수만 명이 본다. 그러면 그 효과는 수백 명이 파업하는 것보다 더 유리하지 않느냐고 서로 서로 장점을 살려가자고 했지요. 그렇게 제조업과 사무직이 서로 이해하고 연대해 가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많았어요.

사무직을 중심으로 전교조의 ‘참교육을 위한 국민 걷기대회’ 지원 이후에 업종모임이 활성화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이름도 붙이지 않았어요. 그냥 업종연맹이 모이는 간담회라고 했었지요. 명칭은 없었지만 간담회를 자주 했어요. 최저 낮은 수준으로 실천 가능한 사안부터 연대활동을 해 간다는 방침이었지요. 그렇게 간담회 모임을 유지하다가 KBS 파업 지원 투쟁 이후에 업종회의로 발전 했어요.’

투쟁은 연대를 낳고 연대는 투쟁을 낳는다

『언론노련은 창립 당시 국민에게 드리는 글을 통해 민주노조진영과의 연대를 약속했다. 언론노련은 연맹이 창립된 다음 해 5월에 출범한 전교조 지원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였다. 전교조는 창립 당일부터 정부의 무자비한 탄압을 받아 범국민적인 전교조 지원운동이 일고 있던 때라 언론노련으로서는 당연한 행보였다.

전교조 지원투쟁에는 언론노련뿐만 아니라 다른 사무직 노조연맹들도 적극 참여했다. 1989년 10월 28일 남산에서 ‘참교육을 위한 국민걷기대회’가 열렸는데, 이 대회에 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전국병원노동조합연맹, 전국보험노동조합연맹, 전국전문기술노동조합연맹이 참여했다.

이 대회가 민주노총건설의 한 축인 전국업종노동조합회의 태동의 모태가 되었다. 대회에 참가한 6개 연맹 대표들은 이후 잦은 모임을 갖고 향후 연대방안들을 논의했다.

모임 횟수가 늘면서 전국건설연맹, 대학강사노동조합협의회도 참가해 사무, 전문직 노동자들의 연대기구에 대한 필요성이 점점 높아졌다. 연맹 대표들은 느슨한 형태라고 하더라도 공동 사업을 전개하면서 자연스럽게 조직이 만들어지는 데 뜻을 모았다. 이 합의에 따라 1990년 4월 8일 관악산에서 앞의 연맹 외에 민주출판언론노조협의회, 시설관리노동조합협의회, 외국기업노조협의회, 유통노조협의회, 화물운송노조연맹 등 13개 업종노동자들이 참가한 ‘노동운동탄압분쇄와 경제민주화를 위한 13개 업종노동자 등반대회’가 열렸다. 이어 업종 노조 대표자들은 KBS 투쟁 연대기구로 업종노련 비상대책위를 구성, 사무노련 사무실에서 무기한 철야농성 투쟁에 들어갔다.

업종회의 틀은 이 철야농성 과정에서 짜여져 마침내 1990년 5월 30일 유통노조협의회가 빠진 12개 업종연맹으로 상설 연대기구인 업종회의가 발족되었다. 업종회의는 전노협과 1990년 11월 11일 전국노동자대회를 공동개최함으로써 민주노조운동 새역사를 쓰게 된다』

업종회의 의장을 맡았던 권영길 언론노련 위원장은 ‘언론노련10년사’ 초대위원장의 회고담에서 이렇게 밝혔다.

업종회의는 회칙에서 “(중략) 노동자의 정치, 경제, 사회적 지위향상과 권익실현을 위해 공동투쟁하며 자주적, 민주적 노동조합의 발전과 통일을 목적”으로 규정하였다. 업종회의는 1992년 10월말 당시로 언론노련(결성일 88.11.26, 53개 노조, 17,000명), 사무노련(87.11.27, 125개 노조, 40,000명), 전교조(89.5.28, 단일노조, 15,200명), 병원노련(88.12.17, 125개 노조, 25,000명), 건설노련(89.12.16, 24개 노조, 13,000명), 전문노련(89.10.14, 53개 노조, 13,000명), 민출노협(88.1.19, 7개 노조, 300명), 전강노(90.4.28, 단일노조, 300명), 대학노련(92.8.30, 50개 노조, 7,000명), 화물노련(88.9.12, 14개 노조, 2,600명), 시설관리(89.1.28, 7개 노조, 1,500명)등 11개 조직, 135,000명이 참여하였다

마무리하면서

1. 한국 민주화 운동사에서 넥타이부대의 의미

87년 6월 항쟁은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 과정에서 확연한 분수령이 되었다. 1969년 대통령 중임제를 폐지하고 3연임을 가능하게 한 소위 3선 개헌은 집권 공화당 단독으로 야음을 틈타 날치기 통과되었다. 1972년 유신 시대부터는 대통령 직선제도 폐지되고 장충체육관에서 대통령선거를 실시했다. 박정희 대통령이 살해되고 서울의 봄이 오는 듯 하였지만 잠시 뿐이었다. 수없이 많은 생명을 희생시키면서 전두환 군사독재정권이 등장했다. 모두가 군부독재정권의 일방통행이었다. 5공 말기 부천시 성 고문 사건이나 서울대생 박종철군의 물고문에 의한 사망을 보면서, 부도덕한 군정을 끝장 내자고 일어선 것이 6월 항쟁이었다. 6월 민주항쟁 덕분에 16년 만에 여야가 합의하여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하게 되었다. 체육관에서 대통령 선거를 한지 16년 만에 다시 국민의 힘에 의해서 국민의 손으로 대통령을 뽑게 된 것이다.

이렇게 되기까지는 6.10항쟁에서 학생에 이은 광범위한 넥타이부대, 거리주변 상인들의 시위 가담, 택시기사들 차량경적 시위로 더 이상 호헌조치를 지탱하기 어렵다고 생각한 군사정권은 1987년 6월 29일 호헌조치를 철회하였다.

독재권력과 그들의 비호를 받는 재벌과의 투쟁에서 노동조합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치민주화 없이는 최소한의 자주적인 개인의 삶을 보장하기 위한 노동조합 활동조차도 불가능하며 노동조합과 근로자 역시 상호 광범위한 공감대 속에서 노동조합 조직을 기반으로 한 조직화된 민주화 투쟁 없이는 정치는 물론 경제사회의 민주화와 불평등 해소가 불가능하다는 교훈을 얻었다.

지식인과 명망가, 학생운동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독재권력의 강화로 이어지고 있었던 당시, 민주화운동이 최초 사업장내에서의 민주화와 근로조건 개선투쟁에서 촉발된 노동조합 운동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특히 금융업종에서의 특수한 토양 위에서 전개되었다.

첫째, 80년대 초 학생, 사회운동 경험자들이 사업장내로의 대거 유입되었으며, 이들은 노동운동 목적이 아닌 순수한 생계를 위한 직업인으로서의 존재의 정체성을 근간으로 자연스럽게 사업장에서 같은 조합원으로서 민주화의 주체로서 세력화되었고

둘째, 학연을 통한 광범위한 운동세력과의 교류를 통해

셋째, 중산층으로서의 역할과 독재타도의 공감대를 확산시키고 이를 실천하여

넷째, 초창기 대중조직인 노동조합의 틀을 근간으로 한 조직적 활동으로 구로지역 제조업 노동조합과의 연계투쟁으로 이어졌고

다섯째, 지역적으로 밀집되어 있었던 동일 업종인 금융업종의 근로자들의 공감을 얻어 "명동넥타이부대"로 발전한 것은 분명 금융업종 노동조합 조합원이라는 조직적 동일성과 넥타이부대라는 계층적 동질성상에서 당연한 일이었다, "명동넥타이부대"는 당시의 학생 지식인을 중심으로 한 반독재 운동의 한계를 극복하는 중요한 한축으로서 그 역할을 하였다.

넥타이부대가 6월 항쟁에 대거 참여함으로써 승패의 분수령을 갈랐다. 그렇게 민주화운동의 물길을 돌린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 자발적이지 비조직적이었던 넥타이부대는 6.29 항복 선언이 있자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간 것이다. 거리의 시위는 사라졌지만, 그 뜨거웠던 열기는 직장 민주화라는 새로운 관심을 갖게 된다.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직장에서 권위주의와 불공정, 불평등을 시정하는 직장의 민주화야말로 사회민주화의 기초로 보였기 때문이다 이 직장의 민주화와 사회 민주화를 실현할 수단으로서 각 분야에서 노동조합이 등장한다.

6월 항쟁까지 거의 유일한 사무직 노동조합이었던 금융노련 산하에서 일부 조직적으로 항쟁에 참여한 사무직 노동자는 노동조합민주실천위원회를 거쳐 상급단체인 사무금융노련을 출범시켜 노동운동의 지형을 바꿔간다. 7월 8월을 거치면서 넥타이부대로 통칭될 수 있는 새로운 사무직 노동조합들이 대거 등장한다. 기존에는 노동조합이 없던 대부분의 산업 또는 업종에서 노동조합이 출현한 것이다. 신문, 방송, 병원, 대학, 연구소, 교사, 건설 무역, 공공기관 등 거의 전 업종에서 노동조합이 결성된다. 이 새로운 사무직 노동조합들은 노동조합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바꾸는 계기가 된다. 노동운동 진영에는 종전과는 다른 노동운동의 깊이와 폭을 한층 넓히는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다.

사무직 노조들은 각 업종별로 고유한 특성과 해결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조합원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한 노동조합의 결성목표를 이 과제 해결에 두고 있는 업종이 대부분이다. 그래서 처음부터 사무직 노동운동은 과거 제조업 노동운동과는 다른 일종의 정치성을 띤 사회개혁운동이자 민주화운동이 될 수 밖에 없었다.

60년대에 결성된 은행 노동조합도 당시 자유당 치하에서 겪었던 부정축재기업에 대한 편중 대출, 정치권력과 유착한 부정대출과 부당한 정치자금 제공 등 부정과 비리에 대한 자성에서 출발한다고 하였다. 군부독재 시절을 거치면서 정치적 저항은 못 하였지만 금융자율화, 종업원대표의 경영참가요구, 낙하산 인사 반대는 끊임없이 주장해왔다. 지금 까지도 사용자의 고유권한이라고 하는 인사, 경영권에 대한 부정이었다.

병원노련 양건모 초대 위원장은 민주화운동사에서 사무직노조의 의미에 대해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 노동조합은 민주주의 학교이잖아요. 일상생활을 하면서 일어나는 문제들에 대해 비판의 식도 가지고 또 참여하면서 해결해 보기도 하고요. 비판과 토론, 참여를 통해 절차적 민주주의를 배우고 생활화 하게 되지요. 사실 우리가 병원에 다니면서 과장을 우리 손으로 뽑아

볼 수가 있나요? 병원장을 우리 마음에 드는 사람으로 선택해 볼 수가 있나요? 그런데 노동조합은 매년 선거를 통해 대의원을 선출하잖아요. 또 2-3년 마다 위원장 선거를 통해 자신들의 대표를 뽑기도 하고요. 생활 속에서 이런 사람이 우리의 대표가 되어야 한다는 선거의 경험을 제공해 주지요

노동조합이야말로 민주화의 초석입니다. 병원노련은 조합원의 근로조건 개선은 말 할 것도 없고요, 의료민주화 선언을 기치로 걸었지요. 의료민주화란 곧 병원의 권위주의를 척결하고 병원 민주화를 통해 평등의료를 실현하자는 것입니다. 병원에서 약값을 10배를 올려 받아도 아무도 알 수가 없지요. 환자가 먹다 남은 밥으로 죽을 끓여 주어도 아무도 모르고 말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이런 불평등 의료 상황을 시정해서 국민의 건강권을 지켜주자는 것이지요. 이런 대목들이 의료민주화의 내용입니다.“

사무직 노동조합이 민주주의를 배우고 실천하는 학교이자 민주화의 초석으로서 국민의 건강권을 지켜주고 삶의 질을 높이는 길이라고 보고 있다.

이부영 전국교직원노동조합 3대 위원장은 이렇게 밝히고 있다

“교사들은 전국교사협의회 소속 교사들이 6월 항쟁에도 퇴근후에 많이 참가 하였습니다. 전교조의 결성과 합법화 과정은 우리나라 민주화 운동사의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교사는 물론 수많은 노동자, 농민, 학생, 학부모, 시민 사회단체들의 피땀 어린 투쟁과 지원의 결과라고 봅니다.

우리는 과거 학교에서조차 아이들에게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어요. 반공교육이나 하였지 통일에 대한 교육은 할 수도 없었습니다. 민주시민으로 자라야 할 학생들에게 교원 스스로 민주주의의 실천의 본을 교실에서부터 보이면서 가르쳐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학생, 학부모와 함께 우리 교직원이 교육의 주체로 서서 민족, 민주, 인간화 교육 실천을 위한 참교육 운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전교조를 건설한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참교육의 실천이었습니다. 교육의 민주화가 우선되어야 이 사회의 민주화가 정착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참교육이 실천되면 시간이 흐를수록 민주화의 길은 탄탄해 질 것이다.

언론노련의 권영길 초대위원장은 언론노련을 출범하면서 3대 슬로건을 이렇게 걸었다고 한다.

“ 우리 신문과 방송은 공정한 보도가 생명이다. 그러나 부끄럽게도 과거 우리 언론은 정도를 견지 못했다. 언론이 오랫동안 권력의 시녀 노릇을 하고 독재자의 하수인 노릇을 해왔다. 우리가 언론인으로서 우리의 사명을 다하자면

첫째는 권력으로부터 해방이요,

둘째는 자본으로부터 해방이요,

셋째는 비리로부터 해방이다.

권력으로부터 해방되기 위해서는 권언유착을 끊어야 한다. 권언유착은 6.29 이후에도 한국사회의 과제이다. 그러나 한국사회가 어느 정도 정치적 사회적 민주화를 이룩하면 권력으로부터 독립도 어느 정도 가능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자본으로부터 독립하여야 하는데 지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권력의 언론 장악보다 재벌의 언론장악이 더 큰 문제일 수 있다. 자본으로부터 해방되기 위해서는 언론인 모두의 지혜를 모아 가야할 것이다.

언론은 무엇보다도 비리에서 벗어나야 한다. 비리에서 해방되기 위해서는 스스로 자정을 해야 한다. 예를 들면 과거 부처의 기자실은 권력과 유착의 표상이요, 촌지 받는 핵심 고리

로 간주 되었다. 이러한 비리의 의혹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은 우리 스스로 사명감을 가지고 공정한 보도를 하는 길 뿐이다.

언론이 권력과 자본, 비리로부터 독립하자는 이러한 사업 기조는 언론노련 위원장 재직 시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추진하였지요. 그러다보니 언론연맹은 활동 자체가 정치적 활동이요, 사회 개혁 운동이요, 민주화 운동일 수밖에 없었지요.“

6월 항쟁 직후에 출현한 신문, 방송사 노동조합이 권력과 자본 ,비리에서 벗어나 언론의 정도를 가는 날 우리나라는 선진 민주사회로 접어들 것이다.

2. 마치는 글

민주주의의 꽃을 피우려면 우선 심을 땅에 밑거름을 충분히 하여 비옥하게 만든 다음 씨를 뿌리고 가꾸어 가을에 수확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민주주의의 역사를 쓰는데 있어서 수확의 역사만 쓰고 밑거름이나 씨뿌리기의 역사를 외면할 수가 있다. 오늘의 민주주의를 위해 싸우다 열매는커녕 꽃피우기도 전에 산화한 분들이 수없이 많다.

간혹 수확만 한 자들은 그 과정을 무시하고 자신들이 추수한 노고만을 기술한 결과가 될 지 모른다는 점을 상기하려고 노력하였다. 또한 앞선 선배들이 겪어야 했던 성공과 실패를 거울삼아 슬한 일들을 이루었던 것이다. 실패를 거울삼아, 실패를 밑거름으로 또는 발판으로 하여 성공의 길로 가는 것이며 성공한 부분만의 연속이 역사는 아니다. 이 글이 하찮은 승리의 노래가 아닌 역사의 밑거름이 되어 주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한 바이다.

지금에 와서 20년이 지난 6.10항쟁의 역사를 기술하다 보니 아무리 객관적이고 교훈이 되는 역사를 쓰기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산 자들만의 기억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자신이 기여한 것을 중심으로 쓰게 되는 것 같아 선열 선배들에게 죄송스럽고 죄스러움을 금할 길이 없었다.

민주주의는 살아서 누리고 있는 우리가 이룬 것이 아니라 그 열매는커녕 싹을 틔우지도 꽃을 피우지도 못하고 오로지 밑거름이 된 선열 선배들이 이룬 것이다. 민주주의의 역사는 수확한 자들만의 목소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의 후손들은 민주주의를 그저 수확만 하면 되는 걸로 알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누가 그 일을 했느냐 보다는 어떻게 하여 성공하였고 어떻게 하여 실패하였는가가 더 중요한 것이다. 그 간의 활동에서도 민주주의의 ‘쉬운 수확’만을 위해 소리만 요란하게 이리저리 쫓아다닌 사람도 있을 테고 말없이 기여한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이 연구에 참여한

연구원 김국진은 83년 대한보증보험노동조합 위원장이 된 이래 사무노련 위원장을 거치면서 20년간 노동조합 상근 활동을 한 사무직 노동운동의 증인으로서

이상재는 87년 범한화재 쟁의부장 해고 복직 투쟁의 당사자이자 범한화재 위원장을 역임하고 6월 항쟁에 참여한 당사자로서,

연구원 정일영은 83년 한일투자금융노동조합 위원장이 된 이래 87년 4.13 반박 서명을 받으러 다니고, 6월 항쟁에 참여한 당사자로서 연구에 참여하였다.

6월 항쟁 이후 결성된 병원노동조합연맹은 이주호 병원노련 정책실장이, 전교조는 김민곤 전 사무처장이, 전문노련은 허영구 전 위원장이, 언론노련은 이원락 전 조직국장이,

건설노련은 나기주 전 정책실장이, 대학노련은 한정이 정책국장이 연구,정리하여 주었다.

또 언론노련 권영길 초대위원장, 배석범 건설노련 초대위원장, 양건모 병원노련 초대위원장, 이부영 전교조 3대위원장이 좌담회에 참석해 좋은 말씀해 주었다.

6월 항쟁에 참여한 외환은행의 전재주, 현대화재보험의 홍순계, 비시카드의 남을우, 유화증권의 정부기, 저축추진위원회의 하균홍, 상업은행의 최승남등 50여명이 글을 보내주거나 좌담회에 참석해 증언해 주었다.

우리의 기술내용이 기대에 못 미치지 않을까하는 두려운 마음과 진심에서 우리나라의 감사의 말씀을 전해 올린다.

이글은 이 땅의 민주주의를 위해 꽃도 피워보지 못하고 밀거름이 되어야했던 수많은 선열 선배들에게 바친다.

참고문헌

활동보고 제1차 전국정기대의원대회(1987. 11. 27~1989. 3. 31), 1989, 전국사무금융 노동조합연맹

금융노동조합40년사, 2000.8 금융노동조합연맹

활동보고 (1985.1.30~1990.12.31), 1991.1.30, 현대해상화재보험노동조합

범한화재 1~2대 자료집(1986~1992), 2007.4, LIG 손해보험노동조합

활동보고(1987~1992), 1991.5, 신동아화재해상보험노동조합

이월보, 2005.5 『한국노동운동100년사』,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영희, 1988.10, 『화이트칼라노동조합론』, 도서출판 녹진

한국사회연구소, 1989.12.20, 『노동조합과 조직연구』, 백산서당

6월 항쟁과 넥타이 부대 -80년대 금융·사무직 노동운동을 중심으로

발행일: 2006년 12월 28일

발행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KDF, Korea Democracy Foundation)

한국민주주의연구소 (IKD, Institute for Korean Democracy)

T: 02-3709-7500 E-mail: edit@kdemo.or.kr F: 02-3709-7520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빌딩 A동 6층

이 책자의 내용은 본 연구소의 공식견해가 아님
본 연구소의 승인 없이 전재 및 인용을 금함

한국민주주의연구소
INSTITUTE FOR KOREAN DEMOCRACY

